



결과 자료 집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3
FOR PEACE & PROSPERITY

CONTENTS

서문 • 006

개회식

- [개회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010
- [기조연설]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 • 012
- [기조연설]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 014
- [기조연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 020
- [축사]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 • 024
- [축사] 로즈매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 • 026

전체세션 • 029

- Visions for Indo-Pacific Cooperation: Toward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 030
- Expanding Global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 042
- [폐막세션]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문화 • 052

폐회식 • 059

- [제주선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060
- [폐회사]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 • 063

DAY1

• 065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 066
지속가능한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 071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 073
한반도 비핵, 평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 078
ROK's Strategy and Role in the Indo-Pacific: Views from the Region	• 085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제주 해녀 문화와 바다환경의 변화	• 094
제주4·3모델의 세계화-진실, 화해, 연대	• 097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접근: 젠더·생태·평화	• 106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비전: 한·미·중의 시각	• 117
글로벌 평화네트워크와 특구의 정치경제: 제주도 세계특구포럼 개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121
아세안 지역에서의 녹색성장 구현: 한국과 아세안의 시각	• 128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지속가능한 평화증진을 위한 평화도시연대의 환태평양지역으로의 확장	• 132
Human Rights across Asia: Dilemmas and Solutions	• 135
한반도의 통일·평화와 제주: 제주형 평화와 제주 도시외교 전략	• 152
한일역사화해와 대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 159
글로벌 경제위험과 회복탄력성 측정	• 165

CONTENTS

DAY2	• 171
동아시아 금융서비스 공급망의 재편과 제주 역외금융센터(OFC)의 가능성	• 172
Countering Rising Protectionism amid South Korea's Indo-Pacific Manifesto	• 177
수자원 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 19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참여와 인권보장 협력 방안	• 199
Dilemmas of Strategic Positioning: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Future of ASEAN	• 204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	• 219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 227
[Special Session for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Expanding the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 231
The Age of Transformation?: Asia Pacific vs. Indo-Pacific	• 242
Loss and Damage from Climate Change as a Growing Challenge to Peace and Prosperity: Where We Are and the Way Forwar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reas of Research, Policy, Financing and Technology	• 255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관한 외신 기자들의 견해	• 259
Rethinking the Role of Non-State Actors in Enabling the HDP Nexus Approach	• 263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세안플러스알파 비전 공유: 아세안을 넘어 아랍까지	• 270

DAY3

• 277

- 탄소중립과 한국의 전략: 국제규범 준수와 기업의 대응 • 278
- New Space 시대, 글로벌 우주 경쟁 속 한국 우주 외교의 방향 • 286
- 한반도 생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 289
- 2023 청년운동회: 청년자치의 새로운 도약 • 294
-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성공사례를 통한 혁신적인 지역개발 중심으로
“제주인에 의한 제주인을 위한 제주개발은 불가능한가?” • 302
-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방외교의 역할 • 306
- 주한 방송인의 눈으로 본 한류와 한국 • 314
-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 317
- 공동 번영을 위한 한·중 전략협력: 기회와 과제 • 320
-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동북아(한중일) 청년들의 목소리 • 329
- 문드라곤 대학의 지역인재 양성 경험을 통해 바라본 “제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준비” • 332
- 한국 경제성장 경험의 공유: K기업가정신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337
- 인도-태평양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도약 ESG경영을 통한 저탄소관광 전략-제주 복합리조트를 대상으로 • 341
-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전략 구체화 방안 • 343
- 다가온 초거대 AI 시대… 미래를 위한 인도-태평양 국가의 선택 • 351
-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와의 협력 전략 모색 • 354
- 청년,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 361

서 문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사흘간 총 58개 세션이 개최되었고, 65개국에서 정관계·학계·시민사회·기업 등 각계각층의 지식인 4,182명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주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인구의 65%, 세계 경제의 60%, 세계 해상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어떻게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확산시킬 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제주포럼은 아래와 같이 한 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포럼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였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에 걸맞게 이번 포럼에는 현직에 있는 국내외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 해외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 대통령 등이 개회식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외국인 참석자는 총 488명으로 지난해 대비 48% 상승하였습니다. 해외 언론의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워싱턴타임즈 특집기사 지면보도를 포함해 상주 및 방한 외신에서 31건의 제주포럼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둘째, 공공외교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는 원년을 맞아 우리의 핵심 외교 이슈와 연계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제주도의회, 기업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공공외교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포럼 최초로 우리 국회 차원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인도-태평양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아세안의 의원과 기업인 120여 명도 참가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외교의 새 지평을 개척하였습니다. 중국 하이난성 비서장, 일본 오키나와현 부지사 등이 참석한 지방외교 세션에서는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을 논의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의 국제교류 및 경제적 외연을 확장하는 정책인 '아세안플러스알파', 세계의 관심사이자 제주의 미래 산업인 수소경제와 뉴스페이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본 자료집은 금년도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주포럼의 파트너들과 이 행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에게 널리 공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제주포럼 현장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에 대한 회의 결과, 특히 협력 방안들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은 앞으로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장 겸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강 영 훈**

제 1 8 회 평 화 와 번 영 을 위 한 제 주 포 럼

개 회 식
Opening Ceremony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2023

개회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3년 4개월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를 끝내고 엔데믹 시대로 접어든 대전환 시점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지인 이곳, 제주에서 새로운 글로벌 평화와 미래를 논의하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18회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한덕수 국무총리님, 김진표 국회의장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님, 마르틴 로무알데스 필리핀 하원의장님, 각국의 주한대사님과 석학, 전문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한-아세안의 국회의원과 경제인 등도 참여해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 기대가 큼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종식되고 전방위 복합위기가 지구촌을 위협하는 지금,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를 뛰어넘어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체를 지켜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중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조되는 국제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식량안보 등의 현안 과제도 슬기롭게 풀어내는 지구촌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제18회 제주포럼이 새로운 미래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한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평화 질서를 재정립하는 협력과 연대의 장이 제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지구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법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 온 인류의 행복한 삶으로 꽃피울 수 있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GDP의 62%, 무역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중심지입니다.

나아가 빈곤과 불평등, 환경문제 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해 인도-태평양 역할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포럼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확대해 나가는 소중한 플랫폼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정치 지도자와 석학, 경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안 과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면서 혁신적인 해법을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기술 등 분야별로 제시된 제안들은 각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인도-태평양 협력 시대의 비전을 공유할 것입니다.

특히 한-아세안 지역의 상호 협력을 위해 국회와 외국의회 간 협력 플랫폼이 이번 제주포럼에서 첫발을 내딛는다면, 제주의 국제 교류 확대 지방외교 정책인 '아세안플러스알파' 비전도 공유되면서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세안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빛나는 미래를 열기 위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모두가 현시대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진솔하게 대화하고,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며,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수려한 풍광과 포근한 인정 가득한 평화의 섬 제주에서 뜻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실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님, 김진표 국회의장님,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님과 국내외 지도자와 석학 여러분께 각별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1년 시작된 제주포럼은 이제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과 오영훈 제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최근 국제사회는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고,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만큼,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지정학적 경쟁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의 의미는 매우 큼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 보건 위협 등에 함께 대응하는 등 이 지역의 공동번영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경제통상을 넘어, 안보, 전략, 글로벌 현안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명실공히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해나갈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연이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계기로한미동맹 70년의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G7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입니다.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한편, 세계 2대 경제 대국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주요 협력국입니다.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있어 우리의 핵심 파트너이자 긴밀한 이웃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 내 한국과 중국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국제 규범과 규칙을 따른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 성숙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조속히 정상화하여 역내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또 다른 축은 인도, 아세안입니다.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나 IT, 우주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인도는 전방위에 걸쳐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은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07년 체결된 한-아세안 FTA를 계기로 교역과 투자, 인적교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정치, 안보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다양화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주요국들과의 협력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주말, 최초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보건, 해양 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관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적극 참여하고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를 포용하고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지향합니다.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연대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함께 상생하고 번영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재주포럼이 이를 위한 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Keynote Speech

Jose Ramos-Horta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imor-Leste



Your Excellencies,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Excellency Prime Minister of ROK,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8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BAN Ki-moon, he was my boss twice. 2nd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OK Governor and Madam and Governor of Jeju Island.

Excellencies, Distinguished, Esteemed Delegates, I'm thankful for the kind invitation extended to me to take part in the 18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I have been to ROK in different capacities over many years and I am pleased to be back in Jeju, my third visit here. I thank Governor OH Young Hun and the people of this splendid island for your generous hospitality.

The Jeju Forum has gained reputation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or exchange of views on the challenges of our times, of fast developing regional and global issues, debt crisis, pandemics, sustainable development, digitization, AI, renewable energy, green economy, fresh water scarcity, food security, climate change, wars of aggression. We are gathering here to explore alternatives to war, peace, human fraternity. I should first pay tribute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 people I deeply admire. Colonized, invaded, occupied for many decades, ROK transitioned from abject poverty to peace and prosperity in only three decades. With a 5000 year rich civilization, hard-working, resilient, a very proud people, modern livable cities, world class economy, one of the best education and health care systems in the world, unrestricted democracy and freedoms, ROK stands out globally. Koreans have every reason to be proud of the dramatic achievements after the total destruction, millions of death and extreme deprivation caused by colonization and occupation, World War II and the Korean War.

Excellencies, COVID-19 pandemic, multiple natural disasters and the war in Ukraine caused the suffering and impoverishment of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particularly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The impressive gains of the last 20 years on the battles against extreme poverty have been lost, tens of millions of fellow human beings, including millions of children, were thrown back into the shackles of extreme poverty. Child labor went back up exponentially. Hunger has set in many countries. The rich industrialized countries mobilize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rescue European banks in the aftermath of the 2007-8 subprime financial crisis. Billions of dollars were quickly found for Ukraine. However, there has not been similar mobilization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shackled by external debt and the tragic consequences of the COVID pandemic. ODA which was dramatically reduced following the 2008 financial crisis has not returned to the previous modest figures. All OECD countries should increase to 1% of their GDP their contributions to ODA. There should be a global right off of all the debt of the non mineral and non oil rich developing countries.

Excellencies, in the midst of global turmoil - the senseless war going on in Myanmar waged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against its own people, the ongoing wars in Ukraine, Syria, Libya, Yemen, Afghanistan, Mali, Sudan, and natural disasters occurring almost daily everywhere - I am pleased to say my country Timor-Leste is a lighthouse, a port of safety, a twinkling light of peace and fraternity.

While in Myanmar the military are waging a brutal war against its own people, in neighboring Thailand and Timor-Leste, free and democratic elections were held very recently. I wholeheartedly congratulate the people of Thailand for their successful general elections and for the landslide victory of Move Forward Party led by the Hon. Pita Limjaroenrat.

On 21st May about 80% of our voters went to the polls to cast their vote for the party and leaders of their choice among the 17 political parties competing in the 21st May parliamentary election. The election was hail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observers as very peaceful, orderly, free and transparent. Clear winner is the CNRT party led by Mr. Kai Rala Xanana Gusmao, our most revered elder statesman, the Father of the Nation.

We cherish our young, vibrant democracy, for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During the period September 1999 to October 2003, a total of 3, 212 Korean Peacekeepers served in Timor-Leste. Five of them lost their lives in 2003 in a tragic river storm while serving in our country under UN. Last year I welcome in the Presidential Palace family members of the brave soldiers of peace and honored them.

Excellencies, democracy might not be the only legitimate form of government but a government freely chosen by the people, that respects fundamental human rights as enshrined in all democratic Constitutions of the world, with guaranteed right to dissent, that protects the sanctity of life, guarantees access to justice, education and health, remains the best form of government. The Economist magazine “Democracy Index” rates Timor-Leste the most democratic country in Southeast Asia, and Freedom House classifies it as "Free." World Press Freedom Index places Timor-Leste in 10th position globally. We are an island of peace, tranquility, tolerance and inclusion; political violence, ethnic and religious based tensions and exclusion are absent from our daily life. Our 98% practicing Catholics live side by side in harmony and fraternity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of the other two recognized religions in our country, Protestants and Muslims, who account for 2% of our population. While voting, our people displayed kindness such as helping the elderly, women with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to move to the front of the queue. Once ballots were in, thousands of citizens across the country crowded into open-air buildings despite the heat to watch them be counted.

Excellencies, many of us from conflict countries know too well that ending conflicts, restoring peace, reconcile divided communities, the United Nations and governing peacefully is never easy. Some believe in the security approach, the use of force to deter and quell dissent and conflicts. From day one of Independence we opted for dialogue to resolve disputes, through patient listening, humility, empathy, intelligence, tact, restraint, and forgiveness. For countries and communities involved in years of conflict, one path to peace and stability is dialogue,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We know that for many, the victimised families and communities with deep scars of wars and violence in their body and heart, the words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can be offensive.

The strength and motivation to reconcile with former enemies, and forgive, have to be found within ourselves and only wise and inspirational Leaders can help heal the wounds of the soul, inspire and help communities to free themselves from the shackles of conflicts and anger. Timor-Leste has its fragilities and residual anger that we are still addressing now. But we do not have political, ethnic or religious-based violence, no revenge killing, arbitrary imprisonment and killing for past political choices. We have an exemplary relationship with all our neighbors whatever the nature of past relationships, good and bad. We are able to have this relationship because we have put the past history of violence behind us, built mutual respect and trust and developed active bilateral cooperation. The multi ethnic, multi religious Indonesia, spread over

several time zones and thousands of islands, is an inspiring example for the world. Its journey from dictatorship towards democracy was a bumpy one in the beginning but in a very short span of time it emerged as a dynamic, multi party democracy, a tolerant, inclusive and increasingly prosperous country, a recognized regional power. Myanmar military should learn from the rich experiences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of Indonesia's democratic transitions from dictatorship to flourishing democracy, harmony and prosperity. I hope for the day when the Tatmadaw emulates the inspiring lesson of its own neighbors.

Excellencies, membership in ASEAN is a strategic goal for us. ASEAN membership-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eace and inclusive prosperity - is not only a "foreign policy priority", it is very much a pillar of our national life and agenda. Timor-Leste participated for the first time in a Summit of ASEAN Leaders held in Labuan Bajo, Indonesia, marking a new chapter in our country's history as we reach important milestones in our long journey towards regional integration.

Timor-Leste is now an Observer State with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ll ASEAN meetings including Summits. ASEAN leaders approved the Road Map for Timor-Leste formal accession as the 11th ASEAN Member State, formal admission as the 11th Member State may occur as we implement key milestones. The adoption by ASEAN Leaders of an objective criteria-based Roadmap for our Full Membership enables us to move progressively with sufficient time towards full membership in the near future. Timor-Leste is firmly committed to undertake national policy, and regulatory reforms, enhan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vest in strategic infrastructure that creates new opportunities for our economy and addresses common regional challenges in a spirit of cooperation and mutual respect. This would ensure that our membership benefits not only our country but the region as a whole.

Timor-Leste and ASEAN Member States share common interests in promoting durable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ctive cross regional strategies encompassing socio-cultural and economic dimensions. Integration into ASEAN provides opportunities for Timor-Leste to realize strategic development goals, investing in strategic pillars that would significantly improve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of our peop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oadmap in particular enhancing the pool of Human Resources, we are grateful as we can continue to count on the active support of ASEAN Member States and partners like ROK, Japan, China, Australia, NZ, the US, UK, Portugal, the EU. Dozens of Timorese officials are now undergoing capacity building in Indonesia. Singapore has launched a comprehensive plan to train up to 800 Timorese officials. We express our deep appreciation to all ASEAN Member States and external partners

who have launched capacity-building programs for Timorese officials covering a wide range of development.

Excellencies, while Asia continues to lead the world in growth and prosperity, dark clouds hang over our region, ranging from extreme poverty and inequality exacerbated by COVID-19 pandemic, man-made climate change, the war initiated by Russia against its neighbor Ukraine, food chain and international trade disruptions, commodity prices, inflation, external debt, and nuclear proliferation, North Korea, South China Sea, Taiwan.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remains unchanged over the times. Millions of human beings are deprived of basic human rights, are hostages of the totalitarian regime. In the meantime, I believe that the much desire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which many have tirelessly labored over decades will remain an unattainable goal. I would add more clearl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oes possess nuclear weapons. DPRK is already an armed nuclear power and I don’t see how a totalitarian nuclear power would willingly dismantle its arsenal.

Having said that, I submit that to help keep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foste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world, China and the US must reengage at Summit level, agree that strategic competition is inevitable, normal, to be expected even between friend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wider region should outweigh differences in other areas of competition and rivalry between the two superpowers. To help keep the peace in the region, the three Northeast Asian powers, China, Japan and ROK should continue their mutually beneficial exchanges, expand trade and investments, expand people to people contacts, and find ways to overcome the bitter legacies of the past. South China Sea should be declared a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free of permanent military facilities, and all must observe the provisions of UNCLOS on Exclusive Economic Zones. To keep the peace in the region, outside powers should refrain from making statements and/or taking actions in regards Taiwan that are considered provocative and contrary to the clearly established reality of one China policy.

The US and China must manage their economic, trade,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influence seeking competition so as not to weaken themselves as credible deterrents and guarantors of peace and stability in Asia and beyond. China, the region’s superpower, whose extraordinary rise as a global power, was made possible through peace with its neighbors and the world, its global expansion based on open skies and open seas, based on a world of rules of trade and freedom of navigation, should be in the forefront supporting a strengthened international rules based order. The same is to be said of the US, it should work to revitalize WTO and strengthen multilateralism.

We can applaud the unilateral imposition of sanctions only when the UNSC fails to sanction a country that violates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on non-use of force or when Security Council fails to take action against a regime that perpetrates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But as a principle unilateral sanctions of any nature should be discontinued and should not be applied as a political tool.

Conversations held annually at the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in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help us visualize paths to peace. This forum, now in its 18th year is driven by a central mission to build peace in East Asia by facilitating a multilateral dialogue on diplomacy and security. Since its inception, the discussions and topics have expanded to encompass a wide range of relevant and important themes and talks worth having. Peace is rarely, if ever, negotiated quickly, it takes careful planning, faith, perseverance and dialogues like the ones we are having here this weekend.

I thank you and God Bless All.

Keynote Speech



Ban Ki-Moon

8th UN Secretary General

The Honorable Oh Young-hoon, Governor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ank you for hosting this very important Jeju Forum at this quickly important timing. The Honorable Kim Jin-pyo,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H.E. Prime Minister Han Duck-soo, H.E. José Ramos-Horta, President of Timor-Leste, thank you for your inspiring speech. The Hon. Martin G. ROMUALDEZ,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 Gentlemen, it is my honor and privilege to deliver a keynote speech at this Jeju Forum 2023. Every time I visit Jeju Island, I find its natural beauty, reconciliation, and peac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is one of many symbolic events which this island can offer. Jeju Forum was launched in 2001 as a dynamic platform for timely dialogue that not only shares vis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East Asia, and the world; but also seeks creative solution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 Gentlemen, Humanity has always faced continual challenges and has eventually been successful in overcoming them. However, the global challenges before us now are unprecedented. They are multifaceted, complicated, and overwhelming in their scale and character. Therefore, any individual or country, however strong, cannot solve such problems alone.

The cascading climate crisis might represent the single most difficult transnational challenges for us all. We have learned many hard lessons from the COVID-19 pandemic over the last three years. We also experienced the magnitude of the negativ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our daily lives. Spectre of current COVID-19 is passing, but many scientists warn that others will emerge especially if the climate crisis continues.

And yet, we are facing another difficult and impending challenges in the area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ggravating antagonism and deepening the divide between the two bloc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lations of the two will cast a long and seismic impact on international politics, in particular within the Indo-Pacific region. Furthermore, the illegal Russian invasion into Ukraine in February of last year accelerated the momentum of the widening of the gap between these two blocs. Against this backdrop, we need to construct a solid ground of common wisdom under the spirit of unilateral cooperation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effectively.

In this respect, this year's Jeju Forum theme, "Working Together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can not be more timely or relevant.

Ladies & Gentlemen, as we all are well aware, the Indo-Pacific region is the most vibrant and dynamic in the global economy, as its population corresponds to 65% of the world and its economic output accounts for 60% of the world. If we want this region to continue its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we must address the challenges of climate crisis and the deteriorating US-China relationship.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pitomized by the 3Cs of competition, collaboration, and conflict. They are competing in the high tech area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more. They can collaborate in the area of inherently glob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the SDGs, terrorism, and cyber security. However, the risk of heightened conflict and clash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visualized by the Taiwan Strait and South China Sea.

In February 2021, the US announced its Indo-Pacific Strategy(IPS). It upholds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that is more connected, prosperous, secure, and resilient. The US views that China is attempting to upend the existing security architecture in the Indo-Pacific region with a view towards dominating the region. China officially rejected the US IPS as it directly threatened the One-China principle of China. China also identified this strategy as an 'Anti-China' campaign that will coerce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sacrifice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Acknowledging that the acute contrast of perception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w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two blocs, the G7 members gathered recently in Hiroshima, Japan and issued a compromising Communiqué on China.

It stated that they are not trying to harm China nor thwart China's economic progress and development. The G7 countries said they would build economic resilience for themselves, based on a strategy of "diversifying and deepening partnerships and de-risking, not decoupling."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however, responded to the Communiqué by saying that the G7, disregarding China's concerns, had attacked it and interfered in its internal affairs. We can presume that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continue until supremacy is settled between them. And this might take several decad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two countries are trying to gain more impetus from the Global South. In June 2021, President Biden presented the “Build Back Better World initiative,” which can meet the infrastructure needs of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This vision was further articulated in June 2022 as PGII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to close the infrastructure gap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trengthen the global economy and supply chains. Under PGII, G7 countries aim to mobilize \$600 billion in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by 2027. China, on the other hand, is also push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o earn more support from the Global South and has also presented three corresponding Initiatives, such as the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lobal Security Initiative, and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Through these three Initiatives, China aims to prov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public goods which they hope to replace the universal values suggested by the US in order to lead and define the world. The Republic of Korea finds itself torn between the US and China. We will be increasingly pressured to choose between one of them. Many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will also find themselves situated in the same complicated state of affairs alongside ROK.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strengthening the tr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Japan. This relationship is based on the shared values of liberal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value oriented relationship is inherently stronger than interests-oriented relationships. However, Korea should be careful in positioning value over interests, lest it should alienate China.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 Gentlemen, It is obvious that this relationship overwhelmingly influences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yes of China, North Korea's strategic importance is rising and this will function negatively for the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It is required that China and Russia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aliz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owever, under the current stalled situ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t will be difficult to find an exit solution to this long shadow-casting quagmire. Then, the question is asked. What role should the Republic of Korea play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under these very difficult circumstances? I am of the view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in an awkward, but unique,

position. We share values with the US, but share cultural traditions with China. US is our ally and China is our neighboring friend. As such, we can find a space to mediate the differences. We can exercise Asian wisdom of mutual accommodation. For example, the US and China can and should be united as one in order to overcome the most serious challenges of our time, including the climate crisis, the SDGs, and others.

I can tell you based on my experience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en negotiating the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It was just possible support from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These two leaders helped the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be with upon. At this point, we are facing many global challenges. First and foremost, climate change. There is no time to lose. The US and China should work together to solve these global challenges. We can find vital spaces for mutual collaboration in these areas. Today, as the unprecedented climate crisis is being felt everywhere around the globe, the space for collabo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an be widened. Indeed, we can develop carbon reducing technology together and expand assistance to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adaptation. We need to accelerate collective action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debt restructuring for vulnerable countries, and global health like Pandemic. We also need to devise global regul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ighly advanced Chat-GPT and AI-loaded robots are casting serious challenges for all of humanity.

In December of last year,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ed its own Indo-Pacific Strategy. It underlined the three core areas such as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 believe this will be carried out through the guiding principles of inclusiveness, reciprocity, and trust. This strategy does not target against any country in the Indo-Pacific region. This strategy should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mor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that will better serve the region, and the world. And this is how the Republic of Korea can become true Global Pivotal State in the Indo-Pacific region. We should actively contribute to creating a world order on the basis of the rules that the US, China, India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can be comfortably settled in. Lastly, I highly commend the successful efforts of the Jeju Peace Institute in organizing this Forum, particularly President Kang Young-hoon and the Institute staff.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축사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아름다운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귀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로 18회차를 맞이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포럼은 매년 세계 지도자와 각계 전문가가 모여서 외교·안보·경제에서 환경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아우르는 논의를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 협력,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제주포럼은 그동안 쌓아 올린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지역, 중동 지역과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한민국 국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제주포럼의 특별세션으로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및 우리나라 의원들과 기업인들이 100분 가까이 참석하셨습니다.

제주포럼이 제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에 대한민국 국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한-아세안 포럼은 앞으로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주포럼이 축적해 온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귀중한 학술적 성과와 수 많은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각국 의회·정부·민간과 교류하는 공공외교의 플랫폼으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각국 의원들과 정책적 입장과 견해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 기업 간 투자·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각국 의회와 기업, 정책의 영역과 실물경제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대하며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단단한 연대를 만들겠습니다. 다각적이고 유연한 소통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호혜적인 결론을 도출하며, 이를 다시 법률안과 예산의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제주포럼」 참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해왔던 제주포럼이, 보다 실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서 제주포럼 개최를 위하여 노고를 다하여 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포럼이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의 견고한 초석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그러한 여정에 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빈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Welcoming Remarks



Rosemary A. Dicarlo

Under-Secretary-General for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n today's interconnected world, we grapple with many complex issues that transcend borders. Climate change, global inequality, and political division, among other urgent challenges, require attention and concerted efforts from all of us. Alas, we also face increased geopolitical tensions and weakened adherence to international norms.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to achieve negotiated settlements to conflicts. Escalation and the risk of miscalculation plague efforts to bring together parties at odds. What was unthinkable less than a decade ago, the use of nuclear weapons, is now discussed as a possibility.

The state of our world today is why I consider occasions like the Jeju Forum so crucial. The strategic importance of Northeast Asia is obvious. The region is a strong engine of global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driven development. But it is also confronted with numerous challenge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The agreement has served as a legal foundation to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year also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irst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hich served as a platform to address contentious issues in a comprehensive manner. These milestones remind us, sadly,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yet to be achieved. I hope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resume regular in-person diplomatic contacts as well as respond positively to offers to engage in dialogue.

Excellencies, the United Nations firmly believes in the power of multilateralism. The Secretary-General's new agenda for peace, which is expected to be launched next month, will call for decisive action to revitalize our collective security system. It will highlight the significant strategic

challenges of our time and call to action member states to recommit to multilateral action for peace. The new agenda for peace will outline how member states can take action to re-engage, deescalate, rebuild trust, and recommit to diplomacy for peace. It will underscore the need to elevate conflict prevention to a political priority.

Regional platforms like the Jeju Forum have a critical role to play. They help increase trust and reduce misperceptions. They help insulate regional cooperation from great power politics. It is in line with the Secretary-General's priorities on the youth, peace, and security agenda.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will host a panel of young peacebuilders from your region at this year's Forum, outlining their priorities for a peaceful future and the partnerships they envisage. I hope their voices will resonate with policymakers, inspiring tangible actions and transformative change.

Colleagues, this is not the time to give up on diplomacy.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need platforms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Through events like the Jeju Forum, we can forge common understanding and explore avenues for joint action. I wish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the organizers for continuing year after year to uphold the spirit of collaboration and for carving out much-needed space for productive discussions.

Thank you.

제 1 8 회 평 화 와 번 영 을 위 한 제 주 포 럼

전 체 세 셴
Plenary Session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2023

Visions for Indo-Pacific Cooperation: Toward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Moderator KIM Jae Chu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Keynote PARK Cheol Hee Chancell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Discussant Scott A. SNYDER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Ramon PACHECO PARDO KF-VUB Korea Chair, Vrije Universiteit Brussel
Pongphisoot BUSBARAT Assistant Dea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Chulalongkorn University
PARK Jae Jeo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Keynote Speech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as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

● **PARK Cheol Hee** Ladies and Gentlemen, I am pleased and honored to deliver a keynote speech at the 18th Jeju Forum. “Working Together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is an overall theme of the Forum, which I think is extremely timely and meaningful. The Yoon government has already announced the Indo-Pacific strategy which stands on the spirit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The world we are living in is undergoing a rapid and complex transformation that

goes beyond the expectations of the previous generation. I think that at least three pillars of post-Cold War optimism have faded away.

First, after the end of the bipolar competition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e unipolar moment was expected to bring peace on the basis of Pax-Americana, where liberal hegemon plays a pivotal role to lead the world. However, as the advent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xemplifies, we are witnessing the return of great power politics. Geopolitical competition is getting intensified rather than weakened. Second, tearing down the walls of the marke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was expected to institute globalization of economy and commerce, where interdependence and multilateralism bring in a more prosperous world. Instead, what we

witness today is the emergence of economic security to cope with future competition as well as the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Third, with the waning of socialist ideology, democratic peace was expected to blossom. However, in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a few other countries, authoritarian regimes remain resilient.

The combination of all these changes leads to complex, unpredictable, and volatil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Risk society, once used to characterize advanced economies of the world, turns out to be a word indicative of an international society that is undergoing complex transformation.

Korea, like other countries, should navigate through these turbulent and risky changes in today's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challenges facing Korea are even bigger and run deep. North Korea is adding up security threats to us by rapidly upgrad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Korea remains largely dependent on China in terms of trade and investment.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encourages us to redirect and diversify business investment and trade practices.

The Yoon government adopted an Indo-Pacific strategy with a clear and renewed awareness that our external strategy should be reshaped in a way that revises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olicy orientation. The first awareness may be

that we should go beyond the Korean peninsula conundrum. Korea's geostrategic perimeter should be extended geographically to a wider regional landscape, considering that Korea is undoubtedly the 10th largest economy and 8th largest trading country in the world. Also, it is even for upgrading military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 working with the U.S., Japan, and other like-minded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constitutes a critical element. The second awareness is that Korea as a global pivotal state, should take a strategic posture toward the region and the world rather than simply remain a reactive, responsive, and adaptive country.

The Indo-Pacific is a region of economic vitality and social-cultural resilience as well as a region of strategic importance in the age of geopolitical competition. In particular, ASEAN countries are important strategic partners to work with in a number of issue areas, including maritime security,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rotection, biotechnology, energy supply, pandemic control, etc.

The third awareness might be that Korea should contribute more to global commons and international public goods. As a nation advanced to the DAC country that successfully overcame war, poverty, authoritarianism, corruption, and human rights abuse, Korea has a responsibility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upgrade their living standards. With its Indo-Pacific strategy, Korea

can find a way to contribute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Global South and the Global North.

By participating in the Indo-Pacific scheme and initiating its own Indo-Pacific vision, Korea has made clear strategic choices. The vision makes it clear that Korea upholds peace and cooperation and refuses to take sides with revisionist states attempting to disrupt the regional order by force. The vision also makes it clear that Korea is ready and willing to preserve and protect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decision stands on a belief that prosperity stems from peaceful and stable international order. Furthermore, the vision makes it clear that liberal democracy, not authoritarian regime, should be promoted. The respect for individual freedom and human right is a powerful force that encourages peace and prosperity.

Upon the basis of this clear awareness, Korea will spare no effort to forge stronger ties with likeminded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promote maritime security, freedom of navigation, economic diversification, trade openness, cultural enrichment, and social engineering with a collective and diversified approach. Together with our regional partners, Korea will promote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rotection, clean energy, green growth, pandemic control, new technology development, enhanced digital connections, sustainable supply chains, empowerment of

infrastructure, and more. For that purpose, depending on issue areas and cooperative agendas, Korea will not only participate in but also lead various mini-lateral, mid-lateral, and multi-lateral networks of countries.

If I may, I would like to add a couple of caveats before I conclude my speech. First, Korea's participation in the Indo-Pacific framework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we are giving up multilateral efforts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The Indo-Pacific framework is a supplement to global multilateral framework rather than a substitute for it. Second, Korea's proactive stance in the Indo-Pacific does not mean that we are trying to exclude a specific country. Korea will pursue an encompassing and inclusive order in the region.

Finally, I would like to once again emphasize that freedom and individual liberty stand at the core of the Indo-Pacific scheme.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at we know of is underpinned by the long-standing belief that the forces disrupting global peace and prosperity are protectionism, nationalism, and populism. Even at this moment, we should stand firmly against those disruptive elements against peace and prosperity. Thank you very much.

Panel Discussion

● **KIM Jaechun** We live in the era of the Indo-Pacific, where virtually every major nation in

the world has developed its own Indo-Pacific strategy. The Republic of Korea also presented its Indo-Pacific strategy in 2022, aligning with these like-minded nations that share a vision of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However,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e interests of these like-minded nations may naturally diverge to some extent. To realize shared visions, it is imperative to maintain an ongoing dialogue for cooperation.

“ The U.S. Perspective on the the Indo-Pacific Cooperation”

● **Scott A. SNYDER** The Biden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revolves around the contrast between autocracies and democracies, with a primary focus on China. It aims to defend the rules-based order and prevent a shift from a U.S.-led order to a Sinocentric one in the region. Secretary of State Blinken has outlined the strategy of invest, align, and compete, which emphasizes domestic investment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mocracy, alignment with like-minded democratic countries, and opposition to repression, unfair trade practices, and military coercion.

A significant focus has been building alignment with like-minded countries, leading to the emergence of values-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The administration has promoted the use of the Indo-Pacific framework for strategic approaches and established multilateral institutions such as the Quad, AUKUS, the Indo-Pacific Economic Forum, and the Chip 4 Alliance to achieve its objectives in the U.S.-China competition,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technology.

The Yoon administration has embraced a values-based alignment with the U.S. and bilateral alliance cooperation within the broader Indo-Pacific approach. The ROK's bilateral alliance with the U.S. has expanded to engage with other institutions, showcasing alliance capabilities and enabling cooperation on various issues like cyberspace, international development, public health, and new technologies. This deepening alliance strengthens the ROK's regional diplomacy and contributes to its aspiration of being a global pivotal state.

The cooperation with the U.S. benefits the ROK by embedding its capabilities in regional frameworks and furthering its engagement across the Indo-Pacific in both security and non-security areas. The pursuit of these aims has also strengthened the ROK's regional diplomacy, including its relations with Japan.

While the Biden administration seeks to intensify and shape the strategic environment related to China, it emphasizes that its approach is not about containment or decoupling but rather de-risking and diversifying. Maintaining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China to avoid miscalculations is crucial. The key challenge for the administration is to achieve its objectives while effectively managing competition with China, mobilizing common purpose among like-minded partners, and finding ways to manage confrontation with China.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relies on the U.S. presenting a common frame of reference and gaining the support of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Managing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with China remains a work in progress, and its future outcome remains to be seen.

“European Perspective on the Indo-Pacific Cooperation”

● **Ramon PACHECO Pardo** Over the past 15 years, Europe's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primarily focused on trade and investment. However, in recent years, European nations, including the E.U., Germany, France, Netherlands, and others, have developed their respective Indo-Pacific Strategies, highlighting both economic and security aspects. Despite not being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region, European nation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ng with partners in the Indo-Pacific.

ROK and Japan have emerged as crucial partners for European countries in the region due to their shared values, interests, and goals

as democratic nations with market economies. Moreover, Europe sees the ROK as possessing significant capabilities in terms of economy, military, and technology.

Recent visits by European leaders, including those from the E.U., Germany, Spain, Netherlands, and Portugal, to the ROK indicat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iscussing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the ROK. Economic security and de-risking, particularly reducing dependence on unreliable or threatening China, have become part of the European discourse.

The cooperation context is shaped b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hile Europe maintains links with China, it is naturally closer to the U.S. due to shared values and interests. Similarly, the ROK leans towards the U.S. due to the longstanding 70-year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nvasion of Ukraine by Russia is another crucial context that has brought Europe and the ROK closer. Nations like the ROK, Taiwan, and Japan openly supported Europe during the Ukraine crisis by providing aid, military support, and sanctions against Russia. This has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pe and the ROK.

Economic security, de-risking, and technology cooperation are additional contexts driving collaboration. Europe seeks to upgrade its technology and attract investments from ROK

companies, similar to the investments made in the U.S. Prime Ministers from Spain and the Netherlands visited Samsung Electronics' semiconductor campus in Pyeongtaek, reflecting Europe's strong sentiment toward attracting such investments.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the ROK in the Indo-Pacific include cyber and maritime security, addressing foreign interference and manipulation, and collaboration on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like green growth, climate change, energy, and health. The ROK is seen as a top partner for Europe in these areas.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many European leaders have visited the ROK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ROK.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pe and the ROK is evolving into a holistic partnership, encompassing not only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a shared focus on long-term security challenges. Europe, having lost the peace that it enjoyed for an extended period, recognizes the need to cooperate on security matters with like-minded partners, including the ROK. The emphasis on security cooper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Southeast Asian Perspective on the Indo-Pacific Cooperation”

● **Pongphisoot BUSBARAT** Southeast Asia views the Indo-Pacific region with different

nuances in their visions. Southeast Asia's focus for Indo-Pacific cooperation is on inclusivity, promotion, and strengthening.

Inclusivity means that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should involve a wider range of participants and not be limited to specific groups of countries. Instead of forming another bloc, addressing specific issues should encourage China's engagement in the region. Social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ocialization, narrowing the strategic gap between regional states, China, and other great powers. Building mutual trust and understanding is crucial. Decoupling from China is not feasible for Southeast Asia as the region benefits from China's economic growth, development, and stability. Confrontations that disrupt China would harm the regional economy, particularly in the post-pandemic period.

While China is seen by some as a potential challenge or disruptor of international order, engaging with China is more beneficial than alienating it. Increased dialogue with Beijing can help identify areas of dissatisfaction with the international or regional order, which may align with the interests of other Indo-Pacific countries. Reform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 issue pending for decades, is an example of a common interest. ASEAN can serve as a platform for constructive dialogue, utilizing its convening power and good relations with China.

Promotion entails ensuring that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adheres to the rules-based order and principles enshrined in the UN Charter, such as non-interference,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and non-use of force. Southeast Asia upholds these principles and seeks alignment with them to garner support from regional governments. Cooperation should not overly focus on defense and military security as it may breed distrust and fuel armed conflicts. Instead, the emphasis should be on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like economic security, maritime security, transnational crime, cybersecurity, health securit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Great powers in the region should support Southeast Asia and other regions on these issues as they are more conducive to cooperation with small and medium-sized states.

Strengthening existing regional mechanisms and cooperation frameworks in the Indo-Pacific is the third point. Utilizing these mechanisms, particularly the ASEAN framework, will attract more cooperation, empower ASEAN, and maintain its centrality as a platform for cooperation. ASEAN's non-confrontational and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has earned trust of dialogue partners and external powers. It has played a role in bringing North Korea to engage in dialogue through platforms like the ASEAN Regional Forum. ASEAN can contribute to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mid increasing great power competition, especially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criticism of ASEAN's efficiency and speed, its convening power has been instrumental in building regional architectur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ROK's Indo-Pacific Strategy acknowledging ASEAN and Southeast Asia as core parts of the strategy is a significant step toward enhanced regional cooperation. In this critical time of power transitions, the international order should be renegotiated in consensus with regional partners to foster a more prosperous and stable region, rather than being dictated solely by certain great powers.

“Korean Perspective on the Indo-Pacific Cooperation”

● **PARK Jae Jeok** The Yoon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released in December of the previous year, builds upon and enhances the previous government's New Southern Policy (NSP) while also introducing changes and different emphases.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three key aspects where differences can be observed: strategic thinking regarding the region, a strong commitment to comprehensive security issues, and a blueprint for promoting mini-lateral cooperation among middle powers.

The ROK government defines the Indo-Pacific region broadly, encompassing areas from the Pacific to East Africa. This expanded definition includes French and U.K. territories, considering

them as regional players. The rationale behind this broad view is that the 21st-century geostrategic competition is not solely between China and the U.S., but rather between China and the U.S.-led security network. This network comprises not only U.S.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but also major European states such as France and the U.K.

There is a growing connection between the U.S.-led security network and European allies, with Japan and Australia emerging as regional hubs. Japan has signed reciprocal access agreements with Australia and the U.K. and it is anticipated that France and Japan will sign one in the future. Japan has been inviting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European states, to conduct military exercises in Northeast Asia and on Japanese soil.

The Republic of Korea faces a dilemma regarding its participation in these military exercises. Joining them in Northeast Asia could potentially provoke China and hinder efforts to cooperate with China o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n the other hand, refraining from participation might lead to the U.S. prioritizing Japan over the ROK. This dilemma may explain why the government of the ROK is seeking to improve its strained relationship with Japan.

The emphasis is enhancing security cooperation within the U.S.-led network. The Yoon government has displayed a proactive approach to engaging

in comprehensive security issues in the region, particularly in maritime capacity building and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The Quad, a strategic grouping, has prioritized MDA, and the EU has used it as a justification for engaging with regional states. The ROK government is expected to increase its contribution to maritime capacity building, leveraging its advanced satellite technologies and retired naval ships.

The possibility of the ROK joining joint maritime patrols in the South China Sea arises as the Philippines and the U.S. agree to conduct such patrols, with Australia and Japan potentially joining as well. The ROK government's commitment to regional comprehensive security issues including maritime security, leaves the question open as to whether the ROK would accept an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ese patrols.

Additionally, the ROK's Indo-Pacific Strategy emphasizes the promotion of mini-lateralism among middle powers in the region. With countries like the ROK, Japan, India, Australia,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ASEAN as a group, there is a plan to foster mini-lateral groupings and coalitions among these middle powers. This approach serves as a mechanism to prevent the U.S.-led security network from outright containing China. Examples of potential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clude partnerships between the ROK, Indonesia, and Australia, or the ROK, Australia, and Vietnam. Additionally, the restored relations with Japan

offer opportunities for various forms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Japan.

Overall, the ROK government's Indo-Pacific Strategy introduces changes and emphasizes strategic thinking, comprehensive security engagement, and mini-lateral cooperation among middle powers in the region. The specific approaches and actions to be taken by the ROK within this strategy are yet to be seen.

“Contradictions of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 **KIM Jaechun**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 **Scott A. SNY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s have garnered considerable attention, highlighting the internal contradictions within the Biden administration concerning its aspirations for foreign investments and the presence of protectionist tendencies in Congress. These contradictions necessitate resolution, especially within the context of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imperative for the U.S. to uphol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n relation to the ROK, it is crucial to ensure equitable integration opportunities for ROK companies within the U.S. economy, avoiding the unfair treatment that ROK companies have encountered in China. President Biden's emphasis on win-win economic cooperation must be substantiated by concrete actions.

“Expectations of Europe from the ROK's Indo-Pacific Cooperation”

● **KIM Jaechun** What aspects would you like to see further emphasized in the ROK's foreign policy or Indo-Pacific strategy?

● **Ramon PACHECO PARDO** The emphasis is on moving from dialogue to action while maintaining ongoing discussions. For example, maritime security, cybersecurity, and capacity-building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European nations can be pursued. These examples include a coordinated maritime presence in the Indian Ocean, cybersecurity partnerships, and joint capacity-building efforts in Southeast Asia and South Asia.

“Southeast Asia's View on Engagement of Non-regional Partners”

● **KIM Jaechun** Is Thailand, as a key regional player, satisfied with the outcomes of geographically distant nations' Indo-Pacific strategies in the region?

● **Pongphisoot BUSBARAT** Southeast Asia welcomes increased attention from major powers and partners, which boosts confidence and allows for participation in regional architecture. Diversifying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layers align with ASEAN's approach of "the more, the

better" and strengthens its hedging strategy, providing alternatives to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Increased interest from Indo-Pacific partners in addressing internal security issues, particularly South China Sea disputes, supports ASEAN's strategies and post-pandemic recovery.

However, concerns arise regarding minilaterals that heavily focus on security as they can lead to a backlash among Southeast Asian states. Balancing between great powers is crucial, and an overemphasis on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may alienate countries and create a binary view of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distinction between autocracy and democracy may deter the full participation of less democratic Southeast Asian countries.

Domestic politics also influence perceptions, with positive views of China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leading to misinformation and negative portrayals of other major powers, notably rumors about U.S. military bases in Thailand. This is not good for the overall image of the Indo-Pacific Strategy.

“Directions for ROK’s Indo-Pacific Strategy”

- **KIM Jaechun** What are the immediate action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take to kickstart its Indo-Pacific strategy?
- **PARK Jae Jeok**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rioritize its contribution to maritime security

issues and pay more attention to regional comprehensive security. While we have our limitations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as a country aspiring to be a global pivotal state, it is important for us to actively contribute to regional security issues. In Southeast Asia, maritime concerns encompass not only territorial disputes but also human security,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issues. As a global pivot state, it is crucial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addressing these challenges in Southeast Asia.

“Southeast Asia’s View on the Security Alignment Approach of the ROK”

- **Scott A. SNYDER** What does the Republic of Korea's shift from a hedging strategy to an alignment approach in the Indo-Pacific look like from Southeast Asia?
- **Pongphisoot BUSBARAT** The Republic of Korea's Indo-Pacific strategy encompasses more than just security alignment. Southeast Asia values the emphasis on promoting ASEAN centrality, economic cooperation, and maritime security. Additionally, Southeast Asia desires humanitarian assistance, specifically in addressing the crisis in Myanmar,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contribution of medical supplies at the Thailand-Myanmar borders would be highly beneficial. There is an ASEAN

mindset of downplaying dissatisfaction with the security alignment strategy in order to prioritize cooperation. The adoption of a security alignment approach would necessitate extensive negotiation and discussion for ASEAN to fully embrace it.

“European Engagement in Southeast Asia”

● **PARK Jae Jeok** What is your assessment of European states' engagement in the Indo-Pacific?

● **Pongphisoot BUSBARAT** We appreciate cooperation with all partners, but we have concerns about the EU's intentions in security matters. During a discussion on the EU's role in Southeast Asia and the Indo-Pacific, a German politician expressed pride in Germany's ability to deploy fighter jets to the Republic of Korea or Southeast Asia within 24 hours. However, many of us in Southeast Asia questioned Germany's actual contribution in case of a conflict, as urgent needs require immediate assistance beyond that timeframe. While defense capacity is important in the Indo-Pacific, an excessive focus on the military might lead us to question European engagement in the region

[Q&A]

● **Jeffrey Schott** What is India's role and its value in terms of the economic context of the Indo-Pacific?

● **LIM Wonhyuk** If Europe considers Russian aggression as an existential threat, it would be prudent for Europe to prioritize security within its own region. The extensive efforts to exp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Asian countries seem questionable. While acknowledging that Europe is no longer as naive as it was after the Cold War, it appears unwise to address the security dilemma through unilateral military buildup, potentially provoking reactions from the other side. Europeans are aware of the historical consequences of such strategies, having experienced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s, as well as the Helsinki Process. Is there a component in European security strategy to establish comprehensive security measures, even in light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 **Ramon PACHECO PARDO** From a European perspective, it is crucial to focus on the Indo-Pacific region as the challenges faced in Europe today could occur in Asia tomorrow. By confronting Russia now, Europe aims to prevent potential issues with China in the future. Just as Asian partners cooperate with Europe, Europe should also collaborate with Asian partners as Asia may require European support down the line. Europe acknowledges the increasing links between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possibly Iran, emphasiz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events in Europe and the Indo-Pacific. Working closely with Indo-Pacific partners is essential,

considering their unique demands related to North Korea, Taiwan, and China. The goal i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recognizes the inseparability of these regions.

● **Pongphisoot BUSBARAT** India, although a member of the Quad, appears to be the most hesitant partner in the Indo-Pacific. India's historical strategic thinking and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contribute to its reluctance in promoting its role within the Quad. Disputes with China, particularly regarding its involvement in South Asia and Sri Lanka, further shape India's approach. While India is part of the Indo-Pacific and the Quad, it seeks to maintain its strategic autonomy. Recent efforts have been made by India to strengthen ties with Southeast Asian partners,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and connectivity, such as the ongoing road connection to Myanmar and mainland Southeast Asia. India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Southeast Asia in terms of shared values, cultural connectivity, and ethnic ties. While India acknowledges the Indo-Pacific concept, it values Southeast Asia for its own strategic autonomy.

● **KIM Jaechun** The objective of today's session was to foster a continuous and productive dialogue among experts from like-minded countries, aimed at realizing a vision of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With this fruitful discussion, we hope to take a significant step towards turning those visions into reality.

Policy Implications

- Freedom and individual liberty stands at the core of the Indo-Pacific scheme.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at we know of is underpinned by the long-standing belief that the forces disrupting global peace and prosperity are protectionism, nationalism, and populism.
- The success of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hinges on establishing a unified approach and securing regional support. Attention has been drawn to the inflation reduction acts, revealing internal inconsistencies within the Biden administration regarding foreign investments and protectionist inclinations in Congress, and the inconsistencies must be resolved by uphold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pe and the ROK is evolving into a holistic partnership, encompassing not only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a shared focus on long-term security challenges. For Europe, working closely with Indo-Pacific partners is essential as Europe recognizes the inseparability of security threats between the two regions.
- The ROK's Indo-Pacific Strategy acknowledging ASEAN and Southeast Asia as core parts of the strategy is a significant step toward enhanced regional cooperation. In this critical time of power transitions, the international order should be renegotiated in consensus with regional partners to foster a more prosperous and stable region, rather than being dictated solely by certain great powers.
- Balancing between great powers is crucial, and an overemphasis on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may alienate countries and create a binary view of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distinction between autocracy and democracy may deter the full participation of less democratic Southeast Asian countries.
- The ROK grapples with a dilemma in its involvement in Indo-Pacific military exercises. Participation in Northeast Asia risks provoking China and hindering coopera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le refraining may result in the U.S. prioritizing Japan. Consequently, the ROK aims to improve its strained relationship with Japan to navigate this challenge.

Expanding Global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Moderator **CHANG Eun Ha** Research Fellow,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Keynote **LEE Dohoon** 2n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OK

Discussant **Maria CASTILLO FERNANDEZ** Ambassador of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OK
Gandi Sulistiyanto SOEHERMAN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o the ROK
Amit KUMA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India to the ROK
PARK Jiyoun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eynote Speech

● **LEE Dohoon** Distinguished Guests, I am honored to deliver this keynote speech at this session. I trust it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exchange constructive views on “Expanding Global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Indo-Pacific, a vast region spanning two oceans, is becoming an arena for glob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recognition of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reg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resenting their respective Indo-Pacific strategies.

The Republic of Korea, an Indo-Pacific country, benefited tremendously from the rules-based order in the region and our next strides forward also depend on a peaceful and

stable Indo-Pacific. In this light, the Republic of Korea unveiled its Indo-Pacific Strategy last December. 2023 is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of our Indo-Pacific Strategy. Since we launched it, we have received warm support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those who share our core values, reflecting the heightened expectations for Korea’s international contribution. Today I will share with you how Korea plans to contribute to the Indo-Pacific region, focusing on four areas that require more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out of nine core lines of effort in our strategy.

First, we will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help to close the digital gap in the region. President Yoon

Suk Yeol emphasized in his speech at Harvard that we need a digital order that can ensure everyone a fair chance to enjoy the benefits of technology. In this light, we will seek to close the digital gap in the region and support digital transformation. With a staggering pace of advances,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I, quantum computing, and biotechnology have a massive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competitiveness. Responding to the global competition over technologies, we will work on building international norms on emerging technologies. We will pursu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with countries of common values.

Second, we will support the region's climate change response, energy transition, and energy security. The climate crisis is an existential threat for some of the Indo-Pacific countries. Major economies in the region are working to achieve their net-zero targets. Along with climate change, energy security has become an additional driving force for an accelerated energy transition after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Believing that nuclear power and clean hydrogen can bolster energy security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we are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and trying to build a hydrogen ecosystem in the region. We are also committed to helping green transition and reducing technological and financial gaps in the region. To this end, we will

raise our green ODA share to above OECD DAC average levels by 2025.

Third, we will enhance our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hips as important tools to pursue the above tasks.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has set a goal of increasing the ODA volume to reach the world's top ten levels and is actively increasing the ODA budget. This year's ODA budget has increased by 21% from last year but this might not be enough.

Last but not least, we will strengthen non-proliferation and counter-terrorism efforts across the region. In the face of a series of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e will work with partners in the region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Furthermore, we will actively contribute to strengthening non-proliferation norms in the Indo-Pacific region by engaging in multilateral discussions as well as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o build their non-proliferation capacity.

In this regard, we condemn North Korea's so-called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yesterday and clearly reaffirm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termination to denuclearize the North outweighs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Regardless of what the regime calls it, the launch constitutes a flagrant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resolutions, threatening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entire region, and beyond. Without a doub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poses a clear challenge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of the Indo-Pacific. To effectively address the challenges on a regional and global scale, we need to put our heads together.

During the Korea-EU Summit in Seoul last week, the two president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cooperate in addressing various issues in the Indo-Pacific. We will work with ASEAN countries in promoting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in line with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s (KASI). Also, on the sidelines of G7 Summit, President Yoon Suk Yeol and Indian Prime Minister Modi agreed on the need for aligning Seoul's Indo-Pacific Strategy and India's Act East Policy.

The Joint Declaration adopted during President Yoon Suk Yeol's state visit to the US reads: the two Presidents (...)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voice." I agree that the factor which matters most is what the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want. The first Korea-Pacific Islands Summit in Seoul this week is part of our efforts to understand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Indo-Pacific.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ambassadors from our key partn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as panelists. I hope this session will also enable us to truly hear "the Indo-Pacific voice." I look forward to your invaluable insights and perspectives. Thank you.

● **CHANG Eun Ha** In recent years, the world has experienced unprecedented challenges including conflicts, pandemics, climate change, and economic disruptions. Amidst this reality, the Indo-Pacific region has gained strategic importance. With a significant share of the global population and GDP, the region played a major role in pre-pandemic economic growth. ASEAN (2019), the U.S. (2021), the E.U. (2021), the ROK (2022), Japan (2016, 2023), and India (2010) all have presented their respective strategies regarding the region. There are also various multilateral entities such as the Quad, IPEF, and CPTTP. However, the Indo-Pacific also faces challenges like poverty, inequality, environmental issues, and disasters. In this context, concrete ac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re crucial.

● **Maria CASTILLO FERNANDEZ** For Europe due to its role as a critical trade route, with forty percent of European trade passing through this region, the daily transportation of goods via over two thousand ships between the Indian Ocean and the South China Sea underscores its economic significance. As economic ties between Europe and the Indo-Pacific strengthen, ensuring freedom of navigation becomes increasingly vital.

Europe cannot afford to be indifferent to threats to fundamental freedoms, openness, and the

rules-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Diminishing trust among partners and the weakening of international law and multilateral rules have contributed to a decline in global security. While Europe has observed a thirty percent increase in military expenditure, primarily influenced by the conflict in Ukraine since 2013, the Indo-Pacific region has experienced an even higher surge of forty-five percent. Recognizing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collective security, events in Europe hold importance for Asia just as develo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Taiwan Strait, or the South China Sea impact Europe.

In the face of shared challenges such as healthcare, supply chains, inflation, energy, technology, cyber threats, climate change, and ocean health preservation, Europe aims to enhance collaboration with partners in the Indo-Pacific. Strengthening alliances with countries like Korea, India, Indonesia, and other Asian partners is crucial to address these global challenges. Recent meetings such as the gathering of foreign ministers from India and Indonesia in Stockholm, demonstrate a strong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highlighting mutual security interests.

Understanding the interests of partners is paramount, and Europe is prepared to engage in comprehensive cooperation and establish enduring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region. Efforts include facilitating exchanges among younger generations to foster connections and

strategic investments through programs like the Global Gateway, targeting areas like hydropower, solar energy, railways, ports, and airports to enhance connectivity.

Europe is also committed to building a robust security and defense partnership in the region. This was emphasized at the E.U.-Republic of Korea Summit with a focus on maritime security through a naval presence in the Indian Ocean. Collaborative efforts tackle challenges like piracy, illegal drug trade, and arms trafficking as well as cybersecurity, counterterrorism, hybrid threats, and transnational crimes.

Digital partnerships play a significant role in norm-setting and bridging the digital divide. Collaborations with Japan, Singapore, and Korea aim to establish norms and promote digital inclusivity.

The Green-Blue Alliance with the Pacific islands and partnerships with Korea, Japan, Indonesia, and Vietnam contribute to achieving 2050 targets, promoting energy diversification, and addressing the dynamic and growing energy demand in the region.

Furthermore, Europe actively pursues free trade agreements with successful models like the agreement with Korea serving as an example. Progress has been made in negotiations with Indonesia, Australia, India, and Thailand while ongoing discussions with Malaysia aim to establish a mutually beneficial agreement.

In conclusion, Europe recognizes the

signific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and seeks to foster peace and prosperity. By addressing shared challenges, establishing partnerships, enhancing connectivity, ensuring security, and promoting sustainable practices, Europe endeavors to transform not only the Pacific but the entire world into a realm characterized by peace and prosperity.

● **Gandi Sulistiyanto SOEHERMAN** The Indo-Pacific has become a key global region, representing 60% of the global economy and 65% of the world's population. It is a dynamic and fast-growing area of significant geopolitical significance.

Indonesia as the biggest country in Southeast Asia, views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geographically, the location of Indonesia is of strategic significance to the Indo-Pacific. Second, its territory from West to East, connects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Ocean. Third, Indonesia has been engaged in man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such as ASEAN, APEC, ARF, FEALAC, an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Fifth, Indonesia has develop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ountries in the region, especially with the US, China, Japan, Australia, South Korea, and India. With all these facts, Indonesia lays the importance strategic of the Indo-Pacific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donesia assumes ASEAN Chairmanship

this year under the theme “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 This theme partly reflects both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faced by ASEAN. Indonesia came up with three pillars of ASEAN chairmanship. First, ASEAN Matters. Second, Epicentrum of Growth. Third, the implementation of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On the pillar of ASEAN Matters, Indonesia wants to strengthen ASEAN unity, ASEAN centrality, and ASEAN's capacity to address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That is why we have “Vision 2045.” ASEAN should be more responsive and adaptive in facing future challenges.

On the Epicentrum of Growth, Indonesia wants to solidify regional mechanisms in dealing with external economic shocks. ASEAN must become a peaceful region and anchor for global stability and prosperity not a proxy to any major powers. An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OIP pillar, Indonesia aims to build an inclusive regional architecture to have concrete cooperation in four priority areas, which are maritime cooperation, connectivity,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and economic and other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AOIP shows and ensures that ASEAN remains a platform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toward continued progress, peace, and prosperity.

During the 42nd ASEAN Summit in Labuhan

Bajo, 10-11 May 2023, ASEAN reaffirmed the common interest to maintain and promot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Southeast Asia and the wider Asia-Pacific and Indian Ocean regions. ASEAN leaders also agreed to engage with the wider Asia-Pacific and Indian Oceans to promote inclusiveness. With this idea, ASEAN aims to develop cooperation with the Pacific Island Forum (PIF) and the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

ASEAN will invite the Chair of PIF and IORA to the 18th East Asia Summit in November this year. This development shows that ASEAN aims to engage and expand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al organizations to creat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I believe that Indo-Pacific must be an inclusive regional architecture. This means that we have to engage all countries inside or outside the region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in this region. No country should be left behind or excluded. Small countries' interests must be respected. No country dominates or no country is dominated.

I also believe that Indo-Pacific must also be the region of dialogue and cooperation to solve challenges based on common interests. All countries must be engaged to tackle region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and food security, and others.

An inclusive region is the key to creating a peaceful, prosperous, and resilient Indo-Pacific

by building an inclusive regional architecture in Indo-Pacific. Cooperation can be intensified, distrust can be eroded, and miscalculations that can lead to open conflict can be prevented.

Thus, I believe that ASEAN can play a great role in building an inclusive regional architecture in the Indo-Pacific region. With ASEAN Centrality and ASEAN-led mechanism, ASEAN will be able to engage all countries and become an honest broker to mediate competing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 **Amit KUMAR** The Indo-Pacific region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and several countries and groups are formulating strategies and visions for the region. India's approach, as outlined by PM Modi at the Shangri-La Dialogue in 2018, emphasizes the need for a common rules-based order, access to global commons, connectivity, fair trade, and supply chain resilience.

Collaboration, sharing experiences, and exploring synergies are vital for advancing the goal of a free, open, and inclusive Indo-Pacific. The world has faced challenges like the COVID-19 pandemic,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and supply chain disruptions, particularly affecting developing countries. India's ongoing G20 presidency focuses on a "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 approach, highlighting the necessity for global collaborative solutions. India's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re demand-driven, with a consultative approach,

prioritizing transparency, financial sustainability, sovereignty,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aiming to empower local communities.

India also engages in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sharing experiences in areas such as digital technology, health, security, and climate change. Recent projects include constructing a convention center in Palau, waste management in Nauru, supporting cyclone-affected farmers in Fiji, and solar light projects in Kiribati.

In the health sector, India plans to establish a super specialty cardiology hospital in Fiji, and to provide advanced dialysis units, and sea ambulances to Pacific island countries. Efforts are also made to upgrade the Center of Excellence for IT in Papua New Guinea into a regional information technology and cyber security hub.

India extends development assistance to ASEAN countries, neighboring nations, Africa, and other regions. As a member of the Quad, India collaborates with the US, Japan, and Australia to promote a free, open, and inclusive Indo-Pacific, focusing on areas such as climate change, disaster management, strategic technologies, supply chain reliability, health security, maritime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Prime Minister Modi launched the coalition for 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 (CDRI) at the UN Climate Action Summit in 2019. CDRI aims to support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in achieving disaster resili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like the Infrastructure

for Resilient Island States (IRIS) under CDRI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workshops and have announced an infrastructure resilience accelerator fund.

PM Modi announced the Indo-Pacific Oceans Initiative (IPOI) at the East Asia Summit in 2019. IPOI focuses on practical cooperation across seven pillars, with different countries leading various areas such as connectivity, marine resources, science and technology, maritime security, marine ecology, capacity building, and disaster risk reduction.

India's ongoing transformations in digital public delivery and green growth initiatives along with its development experience, contribute to the cooperative agenda in the Indo-Pacific. Robust dialogue partnerships with the EU, Indonesia, ASEAN, South Korea, and Japan provide avenues for expanding cooperation in the region.

● **PARK Jiyoun** The Strategy for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unveiled by the ROK last year emphasizes digital cooperation in three key areas: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engaging in tailored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hips, and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Digital cooperation should be grounded in mutual understanding and contribute directly to overall societal development. It now extends beyond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ICT

infrastructure, encompassing the effectiv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a socially and culturally acceptable manner.

To facilitate effective cooperation, partners must establish a common language and agree on indicators that define an ideal digital transformation. Existing indexes have limitations in capturing social and cultural aspects, focusing mainly on infrastructure and human capacity. The need for a better digital inclusiveness index tailored to the Indo-Pacific is evident.

Digital inclusiveness goes beyond increasing mobile phone ownership or improving internet access for women. It involves understanding the cultural accepta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as reasons for low female digital activity vary across countries. Consumption of digital content in a culturally and socially relevant way should be part of digital cooperation.

This cooperation requires dialogue with local partners from the outset, establishing a social and cultural language of communication. By doing so, strategies and tasks can be developed based on an inclusiveness index that reflects social and cultural acceptability, fostering truly effective cooperation.

The initial project for the ROK and other Indo-Pacific countries should focus on developing a better digital inclusiveness index. Based on this index, partners can explore and promote digital cooperation together. Instead of providing a one-way approach, the ROK should prioritize the

needs of local communities. Collaboration with institutions like KOICA, which has experience with similar projects in Central Asian countries, can help establish close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region.

Mutual understanding remains key to successful digital cooperation.

Q & A

● Hideaki Otaka, Vice Chairman of Pasona Group Inc.

I hope Europeans will continue to support Ukraine. Should all regional countries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region, rather than relying on major powers?

● Student, Tama University in Japan

Is the primary motivation behind the presence of US military bases in Japan the pursuit of American national interests, including the expansion of economic influence in Asia, rather than for regional security?

● Jojin V. JOHN, Professor of Mahatma Gandhi University in India

What is the rationale behind ASEAN centrality, and what are the potenti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it?

● **Maria CASTILLO FERNANDEZ**

The importance of freedom is not a matter of West versus others, but a commitment to UN Charter principles. European countries pledge continued support to Ukraine. While each country has development responsibilities, our futures are interlinked, necessitating engagement with like-minded partners. Economy and security cannot be separated as the economy can be weaponized, as seen with Russia. Europe has reduced its dependency on Russian energy. ASEAN holds significance for all, serving as a central focus of Indo-Pacific strategies. Integration and appreciation of ASEAN's dynamism and cultural diversity are desired for the future.

● **Gandi Sulistiyanto SOEHERMAN**

ASEAN must be a peaceful region and an anchor of global stability and prosperity. Most importantly, ASEAN will not be a proxy for any major power. Indonesia values freedom and independence. We are not one-side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economic cooperation. It does not matter what country it is, as long as there is mutual benefit, friendship can be developed. With ASEAN Centrality, ASEAN will be able to engage all countries and become an honest broker, which means that it will not be partial.

● **Amit KUMAR** I agree that the economy and security are indivisible, and that many of the challenges in the world today cannot be

addressed alone but only through cooperation. In this regard, common principles such as access to the global commons, connectivity, fair and balanced trade, supply chain resilience, and others are important. We should consult each other but there is no need to repeat the process every time. We can see what has worked in other places and discuss how it can be adapted to a specific situation. We should keep the structure light and be heavy on practical cooperation.

● **PARK Jiyoun** I agree that we should not depend on superpowers. Instead, we need to cooperate all together. When we talk about cooperation, we talk about both peace and prosperity together as both economy and security matter.

● **CHANG Eun Ha** I believe the keyword for today's discussion is inclusiveness. Cooperation should be mutual and we have to listen to each other. The second keyword is people. Capacity-building is important and no one should be left behind. I would like to applaud our students in the audience today as they are the future of our cooperation. The last point is regarding the North Korean people. I sincerely hope that Indo-Pacific cooperation can help engage North Korea.

Policy Implications

- Indo-Pacific requires comprehensive cooperation as economic and security challenges in the region affect not only regional states but also geographically distant nations and many of these challenges can only be addressed through cooperation.
- ASEAN can play a great role in building an inclusive regional architecture in the Indo-Pacific region. With ASEAN Centrality and ASEAN-led mechanism, ASEAN will be able to engage all countries and become an honest broker to mediate competing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 Global cooperation for the region should be demand-driven, with a consultative approach, prioritizing transparency, financial sustainability, sovereignty,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aiming to empower local communities.
- Digital cooperation should be grounded in mutual understanding and contribute directly to overall societal development. It now extends beyond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ICT infrastructure, encompassing the effectiv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a socially and culturally acceptable manner.

[폐막세션]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문화



좌 장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
대 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장관

● **손지애** 제주도라면 가장 먼저 아름다운 자연과 깊은 문화, 전통을 떠올리게 된다. 제주의 가슴 아픈 역사를 볼 때 세계 어느 곳보다 평화의 소중함을 잘 이해하고 이를 위해 깊은 고민을 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평화를 향한 제주의 의식, 용기, 그리고 희생이 곧 4·3정신이자 평화문화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문화는 제주도의 정체성과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정신을 이제 제주를 넘어 세계로 전파할 때가 됐다. 특히 전쟁으로 얼룩지고 혼란과 불확실성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 모두에게 큰 교훈과 교감이 되지 않을 생각된다. 이런 배경에서 평화문화는 정체된 개념이 아닌 상호 간 이해 협력 관용 포용을 기반으로 다른 문화와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 이 소중한 평화 문화를 살펴보고 또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에 대

한 의견을 나누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장관 등 두 분을 토론자로 이 자리에 모셨다. 먼저 에반스 장관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한다.

올해 제주4·3평화상을 수상하시고 평화의 섬 제주에 방문하신 소감이 궁금하다.

● **Gareth J. EVANS** Coming to Jeju is always a deeply moving experience, especially after driving around the massacre sites and witnessing the tragic events that unfolded here seven decades ago. My previous roles as foreign minister and head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have taught me the crucial importance of fostering a culture of peace among policymakers and the wider public to prevent wars, mass atrocities, and the destruction of

lives.

So, what exactly does a culture of peace entail? It means recognizing the horror, misery, and devastation associated with war, civil conflict, and atrocities. The gravest threat to humanity is the existence of nuclear weapons, capable of indiscriminately annihilating life on our planet. We must acknowledge this reality and reject any notion that war and deadly conflicts cleanse, purify, or possess nobility. Instead, a culture of peace requires us to embrace cooperation over confrontation, reconciliation over revenge,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conflicts such as inequality, discrimination, and injustice.

Internationally, policymakers must commit to principles of cooperative security, seeking security through collaboration rather than against other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dialogue,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re vital for fostering goodwill and trust. A culture of peace does not imply defenselessness against aggression, but rather recognizes that security encompasses more than just military aspects—it encompasses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s as well.

Who is responsible for creating a culture of peace? Creating a culture of peace is a shared responsibility involving various actors and roles. National governments play a critical role in setting the tone and terms, while sub-state actors, including provincial governments like Jeju, can also make a significant impact. NGO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and Search for Common Ground, contribute through advocacy, analysis, and facilitating connections among divided communities. Norm-setting international commissions, like those addressing mass atrocity crimes by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or reinforcing the taboo against nuclear weapons, also play a role. Education at all levels, is paramount in creating the desired culture. Political leadership, formal education in schools and universities, and the efforts of organizations like the Jeju Peace Inseitute and the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which convenes the Jeju Forum, all contribute to fostering understanding, learning from history, and preventing the repetition of past mistakes.

The Jeju Forum serves as a crucially important vehicle for promoting discussion, debate, sharing success stories, and identifying peace role models. Education is key to comprehending our history, understanding past errors, and taking proactive measures to avoid their recurrence. As the famous philosopher George Santayana said,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Through these collective efforts, we strive to ensure a better future by avoiding the dreadful mistakes of the past.

● **손지애** 에반스 장관께서 강조하는 점은 마음가짐인 것 같다. 제주도에 와서 보고 느낀 점이 바로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전쟁과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큰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을 넘어 전 세계가 같이 합심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제주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셨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 면에서 전 세계에 이런 4·3 평화정신을 확산하고 또 이를 교육하는 것이 제주의 역할이라는 말씀이다. 올해로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18년을 맞이했고 이는 세계 최초의 국가 지정 법정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영훈 지사께서는 제주 특유의 평화문화에 에반스 장관의 견해처럼 세계로 확산하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 **오영훈** 저에게 4·3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 조부와 증조부가 70여 년 전에 4·3으로 희생당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당시 제 부친은 태어난 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모친이신 제 조모는 불과 26세이었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제 조모에게 평화는 무슨 의미였을까 잠시 생각해본다. 그건 아마 생존 그 자체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대를 잇고 살아가는 것이 곧 집안의 지속가능함이고 이것이 곧 평화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4·3의 피해자는 본인뿐만이 아니다. 3만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어떻게 책임도 묻지 않고 그들의 유족은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건 분명 생존이기 때문이고 우리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가야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3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아시아 국가 곳곳에선 여럿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됐다.

오늘날 제주에선 4·3의 아픔을 극복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고 있다. 당시 수형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무죄를 판결받는 등 과거사 청

산 역사에서 세계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집단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했던 곳은 그 어디도 없다. 대한민국이 과거사 모델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낸 모범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제주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18회를 맞은 제주포럼이 다시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역할은 이런 포럼을 더 체계적으로 잘 조직하는 것이 곧 평화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손지애** 올해 제주포럼의 주제가 보기에는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도지사의 말씀에서 비춰보니 지속가능한 평화는 어쩌면 단순하고 소박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희생을 겪은 제주도민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 의식과 생존에 관한 경험이 참 생생하다. 이런 제주의 경험을 어떻게 보는지 외부인의 관점에서 에반스 장관의 견해를 여쭙고 싶다.

제주가 걸어온 길은 매우 험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제주가 넘어야 할 과제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Gareth J. EVANS** I have been involved in the business of trying to make peace and encourage peace for decades now. I'm acutely aware of the many different kinds of obstacles that are in the path. To list some of them internationally, of course, there is the issue of nationalism. Pride in one's nation is a very strong and understandable impulse, but overdone nationalist chest-beating has often led to international disasters in the past. The Kremlin's invasion of Ukraine is

partly an example of that. I think we do have a potential worry with US nationalism, US exceptionalism, and the belief in its right to global primacy and perpetuity. I think that's fraught with future risks, particularly as it comes into conflict with China's very strong sense of nationalism, especially after witnessing a century of humiliation that ends in the West. So nationalism is one huge obstacle that we have to try to work on.

History can be another obstacle. I've already said that those who don'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On the other hand, past historical grievances can sometimes become so comprehensively and unshakably embedded in national communities' psyche that they become obstacles to peace. Sometimes we do just have to move on, and it's a real test of leadership to do so. There are historical grievances that need to be addressed, like the fraught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due to obvious historical reasons. We all know about the continuing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ina because of historical issues. Those issues can linger and become potential conflicts.

Politics, especially domestic politics, can be another huge obstacle. Competitive chest-beating can be an enemy of peace. The United States' domestic politics of the moment has raised tensions on China to unnecessary and dangerous levels. Jeju itself, of course, has had experience

with ideologically driven governments denying the historical truth of atrocities for decades and suppressing the possibility of 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process.

Another obstacle to peace is basic human psychology, which we have to recognize as a reality. There is an awful lot of psychological research indicating that humans are not very good at conflict-avoiding, peace-nurturing empathy. Experiments have shown that the pain we receive from someone else almost always seems worse than the pain we inflict on others. We tend to exaggerate the evil intentions of adversaries, not factoring in that they don't see the world as we do. At the same time, we tend to assume that others grasp the constraints that we feel. This influences our own evaluation of the chances for peace, and we psychologically tend to downplay the concessions made by the other side, attributing less value to them just because they were offered by the other side. So, all of these psychological factors are real, and those of us involved in peace-making and peace promotion have to be conscious of our own work.

A final obstacle, which is a variation on the psychological theme, is the obstacle posed by pessimism. Optimists like me try to nurture the instinct of cooperation with the hope and expectation that decent human values will ultimately prevail. However, skeptics see conflict of one kind or another as more inevitable. They

adopt a highly wary and competitive approach to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and community relations, and the ranks of policy makers. If you think of optimism as being self-reinforcing, it's not self-fulfilling. We don't get to change the world simply by believing optimistically in the possibility of change. We have to work for it in all the ways that we can. And I think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under Governor Oh's leadership, has shown us the way by doing just that.

● **손지애** 에반스 장관께서는 정치가 출신임에도 정치가 평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평화에 큰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관련해서 제주지사께 질문드리고 싶다. 에반스 장관께서 말씀하신 맥락에서 평화문화를 지키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4·3정신과 가치를 증진하는 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 **오영훈** 4·3 문제의 해결은 여러 과정을 거쳤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하고자 했던 운동과 흐름이 있었다. 또한, 법률제정을 통한 과정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제도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는 이런 과정을 국내 다른 과거사 해결에 모범사례가 수 있도록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4·3 관련 법 제정을 통해서 진상규명의 1차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것을 잘 기록하고 세계인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일 것이다.

제주는 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노력하며 문

화재청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거사를 성사하려면 단연 시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사건에 대한 사건 규명이 명료하게 돼야 한다. 미군정 책임자 등 당시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이 있다. 미국으로부터 4·3 관련 입장발표를 요구하는 것이 향후 우리에게 주요 과제로 보인다.

● **손지애** 4·3 기록에 관한 유네스코 등재의 의미를 잘 이해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시간이 있어서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다.

● **청중** As a native of Jeju Island, I have a question regarding your perspective on the Jeju 4·3 incident. Despite the presence of inevitable conflicts, you mentioned being optimistic about peace. I'm interested in understanding how you maintain this optimism.

● **오영훈** 제가 말하는 낙관론은 행동하는 낙관론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실천을 우리 나름의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하는지, 가령 제 조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낙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은 분이든 아픔을 겪은 분이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인류는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 **Gareth J. EVANS** Optimism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peace, but it is not sufficient. It is necessary because without believing that peace is possible, one would not even begin working towards achieving it. Without this belief, programs of reconciliation may take decades to come to fruition, or they may not even begin at all because of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useless, and people are condemned to perpetual hostility. However, optimism alone is not enough. Various other considerations must also come into play. Throughout my experience over the decades, I have been reasonably happy to see how some of the most challenging problems can be solved when people with good intentions work together.

The Cambodia peace process, in which I was heavily involved with my ASEAN colleagues, particularly Indonesia, remained unsolved for decades. The Khmer Rouge's horrific genocidal crimes and prolonged civil wars had plagued the population. However, it always appeared to me and others that there was a path forward, and eventually, we did find a solution. We engaged the United Nations and provided China with a face-saving opportunity to withdraw its support for the Khmer Rouge. This proved to be the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process.

During the 1990s, we witnessed a series of appalling atrocities, such as those in Rwanda and the Balkans. At that time, the world lacked consensus and appropriate strategies to respond to or prevent such acts in the future.

The Western countries and the Global North discussed humanitarian interventions and sending in the military, but the Global South rejected this notion, and no agreement on strategies could be reached.

In the process I was involved in, we shifted the focus from a militaristic approach to exploring other strategies, which eventually led to a global consensus around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rather than the "right to intervene."

This consensus was exemplified in 2005 at the World Summit, wher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from 150 countries unanimously endorsed this principle. Although its success has been somewhat limited, it instills in me a sense of optimism that significant achievements are possible when the right intentions are present and when the world unites.

● **손지애** 이번 제주포럼의 주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인 만큼 에반스 장관께서 말씀하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평화는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포럼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과거를 딛고 앞으로 희망찬 미래를 다짐하기 위해 제주가 평화확산을 위한 세계적인 장소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낙관적인 비전, 진취적인 행동과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문화의 확산이 중요하다. 평화문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여러 비정부기구(NGOs) 및 시민의 집약적 노력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교육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유일무이한 제주4·3의 과거사 모델은 세계가 갈등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여정에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4·3의 세계화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 제주포럼은 제주의 평화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평화 관련 시의적절한 이슈를 발굴하고 국내외 저명인사와의 토론을 활성화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보인 모범사례로서 제주를 세계평화의 확산지이자 대화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제 1 8 회 평 화 와 번 영 을 위 한 제 주 포 럼

폐 회 식
Closing Ceremony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2023

제주 선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사흘간 펼쳐진 제18회 제주포럼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포럼에서 진정한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 재건이 기후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를 이겨내고 지구촌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의 해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각국의 정치 지도자와 석학, 전문가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진심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제주도민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요충지인 이곳 제주가 새로운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거듭날 것을 여러분께 밝힙니다.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여러 담론과 메시지들은 대전환의 시대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평화질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제주에서 전하는 첨단 기술들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번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주포럼을 기점으로 제주는 포용적인 연대와 협력의 장이자 글로벌 평화와 네트워크 플랫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대전환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제주에서부터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지역기구,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넘나들며, 평화의 번영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지방외교의 새로운 시대를 제주가 앞장서 펼쳐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으로 참여하여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참여로 제주포럼의 위상과 격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도 정례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공공외교를 활성화하면서 경제계의 교류·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확대 정책이 아세안플러스알파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아세안을 넘어 아랍지역까지 외교무대를 확장시키고 제주의 경제영토도 넓히겠습니다. 글로벌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주, 프랑스 베르딩, 독일 오스나브뤼크가 함께하는 평화도시연대에 환태평양지역 도시들의 동참을 끌어내겠습니다.

오늘 일본 오키나와현이 평화도시연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대를 확대하여 환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체결한 글로벌 평화 협력 네트워크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방외교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공동사업을 발굴·시행하겠습니다.

제주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청정환경이 공존하는 녹색도시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며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균형있게 굴러가야 할 두 개의 핵심 축임을 깊이 인식합니다. 지금까지 제주가 이룬 신재생에너지 확충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평가된 만큼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세계화에 나서겠습니다. 4·3 기록물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4·3 기록물은 국가폭력에 의한 다수 민간인의 희생이라는 역사적인 진실은 물론 70여 년간 현대사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 온 모범적인 과거사 해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4·3이 평화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하고 곳곳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주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제주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연대와 교류를 통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을 선언하는 최적지가 '제주도'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최고의 인프라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 대전환 민간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의 육성은 APEC의 가치와 비전에 부합합니다.

제주가 걸어온 평화의 길을, 제주가 품은 지속가능한 번영의 비전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제주포럼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제주와 함께하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사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펼쳐진 ‘제18회 제주포럼’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지난 사흘은 활발한 토론과 교류가 이루어진 특별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이겨내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공감기 있었습니다.

내년 ‘제19회 제주포럼’에서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론의 장,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8회 제주포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1 8 회 평 화 와 번 영 을 위 한 제 주 포 럼

DAY 1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2023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좌 장 예종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고두심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
프레다 미리클리스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대표
토 론 양원찬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경애 비티앤아이그룹 대표이사 회장
기 록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고두심** 김만덕은 여성, 신분, 지역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어 성공한 최초의 여자 거상이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재난으로 굶어 죽기 직전의 제주 사람들을 살린 조선시대 최초의 자선사업가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 사람들은 육지로 나갈 수 없도록 했던 ‘출륙 금지령’을 깨고 정조대왕의 허락을 받아 국비로 육지를 다녀옴으로써 도민들의 살길을 터준 역사의 영웅이다.

우리는 김만덕의 나눔 정신과 도덕적이고 주체적인 삶에 주목해야 한다. 즉 스기생이었던 김만덕이 관가에 직접 호소해 기녀의 삶을 살지 않은 점, △남성 의존적 삶을 거부하고 평생 결혼하지 않은 점, △여자로써 직접 객주를 운영하면서 유통업에 뛰어든 점, △자신의 전 재산을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위해 내놓은 점, △제주 출륙 금지령을 사실상 해제시킨 점 등에 주목해야 한다.

김만덕의 신분과 살아온 과정에 비추었을 때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전 재산과 바꾸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일이다. 그녀는 평생 힘들게 쌓아온 자신의 성공에 자만하여 타인의 불행에 눈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김만덕은 시대와 환경을 넘어 자기 자신도 이겨낸 진정한 위인이라고 평가된다.

유엔은 오랫동안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동안의 노고를 과거로 되돌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소득과 기회에 대한 불평등은 더없이 불공정하고, 불건전하며 불행한 사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도 위협했다. 백신 제조기술을 공유해 더 많은 지역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분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억만장자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자산을 축적해 더 큰 부자가 됐고, 일부 기업은 유례없는 큰 수익을 올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던 2년간(2020-

2021) 새로 창출된 부의 63%를 상위 1% 슈퍼리치가 차지했다고 한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작년 5월 ‘고통으로 얻은 이익(Profiting from Pain)’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간(2020-2021) 새 억만장자는 30시간마다 1명씩 탄생했지만, 극빈층은 33시간마다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북 28배, 강남 60배가량 올랐다고 한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평균임금은 약 2배가 올랐다. 즉 이는 열심히 일만 해서 가난해진다는 말이다. 결국 노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얻어도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진심이 담긴 기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기부는 나 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세계 기부의 역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과 같이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를 의미한다. 지위나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나타낸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시모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제국의 2천 년 역사를 지탱해 준 힘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을 지칭한 바 있다.

제주도는 1980년부터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삶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김만덕상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1-2명씩 선정해 55명의 국내 여성에게 시상해 왔다. 이제 18세기 사회적 구휼 활동에 투신한 김만덕처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나눔과 자선활동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선의 여장부 김만덕은 제주의 김만덕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김만덕, 세계의 김만덕으로 재조명돼야 할 때이다.

부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눔과

봉사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은광연세’는 ‘큰 은혜의 빛이 세상에 가득 흐르다’는 의미이다. 이는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제주도민에게 추앙받던 김만덕(1739-1812)을 기리며 그녀의 후손에게 써준 글귀이다. 김만덕처럼 가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 용기는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지탱해 온 힘이다. 제2, 제3의 김만덕이 행한 은혜로운 빛이 온 세상에 퍼져갈 때 우리 인류에 닥친 위기는 평화롭게 극복되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김만덕상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김만덕국제상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후손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프레다 미리클리스** 김만덕은 한국 최초의 여성 CEO로서 항구 무역과 객주를 운영하고, 폭넓은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쌀과 소금을 구매하고, 궁극적으로 자선사업의 형태로 측은지심의 가치를 구현했다. 티케, 가문장아기, 김만덕은 모두 그들 앞의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깨달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길을 찾으려 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된 여러 가지 위기들에 직면해 있고, 가부장적 억압의 어두운 그림자도 계속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은 수 세기 동안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부정해 왔다. 우리가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 감히 상상해 보자면, 세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물결의 페미니스트 연대와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자신보다는 집단 전체를 생각하고 이것이 일어날 때

평화가 가능하고 더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여성 리더십이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역량 강화,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보다 낫고, 보다 친절한 세상을 위한 평화를 지원하는 네 가지 주요 역할을 해 왔다. 오늘 그 경험들로부터 배운 것을 나누고 싶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여성과 소녀가 목소리와 선택권과 독립성을 가지는 포용적인 영연방을 만들기 위해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비즈니스 여성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모으는 일이다. 다른 여성 단체들과 차별화되는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결집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인된 지위를 통해서 영연방 정부의 장관급 회의에 참여해서 정책결정자들과 논의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CBWN(Commonwealth Businesswomen's Network)은 정부, 민간 부문 및 여성 기업과 협력하면서 무역, 재능 및 교육훈련에 중점을 둔 활동, 이니셔티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연방 전역에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장려하고 정착시키고 있다.

호주-그리스 이니셔티브(THI)는 그리스 디아스포라와 그리스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동원하여 그리스와 그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과 재개를 지원하는 글로벌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건강, 사회 서비스, 교육 및 고용 경로 전반에 걸쳐 11개의 NGO를 지원한다.

TX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소외된 외딴 지역의 어린이, 특히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선 단체이다. TX재단은 교육을 위한 친절한 동행을 의미한다. 재단은 2016

년부터 이 조직을 주도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개 이상 커뮤니티의 78개 학교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에는 동유럽으로 발걸음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 지원인 것이다.

<박애를 위한 여성들>은 호주-그리스 이니셔티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박애주의 운동이다. 이 단체는 여성들(헬레네 또는 친헬레네)이 자신들의 열정을 활용해서 그리스를 도울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운동의 핵심 목적은 박애주의로부터 유래한 인류에 대한 사랑에 있다. 박애주의는 인류, 자비, 친절의 뜻을 지닌다. 이 운동은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영감을 주는 나눔과 영감을 주는 리더십의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는 글로벌 박애주의 운동이다.

우리는 티케, 가문장아기, 김만덕 같은 주인공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와 미덕을 통해 각인을 남겼고,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었으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도록 영감을 준다. 리더로서의 여성들은 보다 안전하고, 사랑하며, 더욱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김만덕국제상 제정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 **양원찬** 김만덕 기념사업은 1971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제주 출신의 뜻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김만덕을 기리는 사업으로 명맥이 이어졌다. 김만덕 기념사업으로 2007년 처음으로 김만덕 나눔쌀 천섬 쌀기를 개최하였고, 2009년 광화문광장과 2012년 서울시청광장에서 만섬 쌀기를 개최해 성공을 거뒀다. 이는 국가표준영정 지정, '거상 김만덕' 드라마 방영,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등으로 이어져 김만

덕을 전국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 사업으로는 베트남에 김만덕과 제주의 이름을 새긴 변푸만덕중학교와 칸호아제주초등학교를 건립해 기부했고, 남수단 아이들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지원하고 몽골과 캄보디아의 빈곤아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성장 발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김만덕상은 1980년 시작으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에 따라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베품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여성’에게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3회, 55명이 수상했다. 2006년에는 수상자의 자격이 제주도민이라는 벽을 넘었으며, 현재까지 제주도내 42명, 도외 8명, 해외 5명이 수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후보자 추천자격은 국내 행정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의 연서명으로 한정되어 있기도 하다.

김만덕의 나눔과 정신은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부자들에게는 각성과 사심 없는 기부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김만덕의 고향 제주의 아름다운 수놓음문화와 김만덕의 공존을 위한 실천,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한 도전정신을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김만덕국제상의 제정은 시급한 우리의 과제이다. 전 지구적 빈곤퇴치를 위한 활동에 헌신한 인물이나 단체, 사회환원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이나 기업)을 선정해 김만덕국제상을 시상하고자 한다. 이번 세션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김만덕재단 제3자간의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위한 TF(Task Force) 구성을 제안한다. TF에서 김만덕국제상 제정에 관한 전반(법적 근거, 예산, 제정위원회, 추천 및 심사 등)을 속도

감 있게 계획하고 실행해 빠른 시일 내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첫 번째 김만덕국제상 시상식이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 **양영철** JDC는 제주와 한국의 국제적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공기업으로 기관의 일차적 임무는 제주를 글로벌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JDC는 글로벌 성장을 위한 SOC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국제교류 활성화 기반 확대, 최첨단산업단지 운영 및 국제수준의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정착, 개방적 관광과 의료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내 청소년 대상 ‘제주국제학교 영어캠프’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23년도 기준, 약 1천명/10억 투자), 도내 청소년의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의 체험형 순방과 교류 실시 등 연간 약 160억 원에 달하는 제주도민 국제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만덕국제상 제정은 제주의 글로벌도시 경쟁력 강화에 미칠 영향력과 중요도가 매우 높다. 김만덕은 제주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로서 JDC가 김만덕 이미지를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김만덕국제상의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는데 JDC는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으며, 김만덕국제상이 지속 가능한 수준의 국제행사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겠다. 또한 김만덕국제상 제정 이후 JDC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

● **송경애** 1987년 25세의 나이에 자본금 250만 원으로 BT&I라는 여행사를 창업했다. 비즈니스에 매진해 매출 3,000억 원대의 규모로 성장시켜 2006년에 첫 여행사 여성 CEO로서 회사를 국내최초 MICE 전문여행사로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여성으로서, 기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업인으로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2010년 여성 CEO 최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고, 남편과 아들도 같이 동참하여 ‘패밀리 아너’ 가족이 되었다. 2011년에는 포브스 선정 아시아 기부 영웅 4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3년 제34회 김만덕상 경제인부문을 수상하게 되었다. 1980년에 시작된 김만덕상은 26년이 지난 2006년부터 제주도민이 아닌 사람도 수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지역을 뛰어넘는 폭넓은 인정과 참여를 가능하게 해, 나도 김만덕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2006년의 긍정적 변화가 그랬던 것 처럼, 이제 김만덕상이 세계적 위상을 가진 글로벌어워드로 도약해 더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취지에 여성기업인으로서 또한 김만덕상 수상자로서 강력히 공감하며 지지한다. 김만덕국제상이 제정된다면 그 뿌리가 되는 김만덕상 수상자로서 더욱 자랑스러울 것이다. 김만덕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K-나눔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날을 기대하며, 김만덕상 수상자로서 저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김만덕과 나눔의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만덕재단 간의 TF 구성
- TF에서 김만덕국제상 제정에 관한 법적 근거, 예산, 제정위원회, 추천 및 심사 등 논의
- 김만덕국제상 제정 이후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

지속가능한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좌	장	최수석	제주대학교 교수
촉	사	프란시스코 곤잘레스	주한 콜롬비아 대사 대리
발	표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토	론	플로렌스 로 리	글로벌전략경영원 대표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김창세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이영재	한국남부발전 수소융합처장
		정민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팀장
기	록	서광용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 주무관

● **문재도** 글로벌 수소 경제 규모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0% 이상으로 연간 1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수소산업을 하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인프라와 기본적 제도설계를 하는 공공기관과 정부, 국제사회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표준인증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 **플로렌스 로 리** 미국은 친환경 수소 시장 촉진을 위해 2021년 초당적 인프라 법안(BIL)에서 명하며 청정수소 프로그램에 95억 달러를 투자, 2022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보조금을 포함한 인플레이션억제법(IRA)을 통과한 사례가 있다. 그린수소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 공유, 정책 조율, 연구·개발협력 등을 통해 공통의 과제를 극복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 **김주진** 그린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이 낮다면 결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린수소의 활성화 조건과 활용 분야를 세심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이영재** 그린수소 시장이 형성되기 전까지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범국민적 홍보·교육 콘텐츠 발굴, 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정민규** 정부는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서 분리해 별도로 운영할 수소발전입찰시장 제도와 청정수소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청정수소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청정수소의 기준은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의 양이 4kgCO₂eq/kgH₂ 이하로, 보조금 지원 또는 차액보전 방식에 대

해 검토하고 있다.

● **김창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제주도는 3메가와트(MW)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과 12.5메가와트(MW)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실증사업을 통해 제주형 수소 경제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과제들을 잘 정리해서 청정수소 인증제 기준 제시 등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수소산업을 하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인프라와 기본적 제도설계를 하는 공공기관과 정부, 국제사회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표준인증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 그린수소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 공유, 정책 조율, 연구·개발협력 등을 통해 공통의 과제를 극복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 그린수소의 활성화 조건과 활용분야를 세심하게 논의해야 하며 그린수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 그린수소 시장이 형성되기 전까지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범국민적 홍보·교육 콘텐츠 발굴, 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수소발전입찰시장 제도와 청정수소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청정수소인증제가 곧 도입될 예정으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도 이 제도를 통해 그린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KOREA **KF**
FOUNDATION

개 회 사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좌 장 신호창 서강대학교 교수
발 표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기 록 김기영 프리랜서

● **김기환** 국제사회가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류 보편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관계가 대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한 상황에서 동맹국과 우방국 간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첨단기술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3 제주포럼의 세션을 통해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공공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부,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이상화** 한류의 인기와 정책 신뢰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공공외교가 중요하며, 특히 소지역별 기대를 감안한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류의 인기는 싸이부터 블랙핑크, BTS까지 하나의 현상으로 잡았다. UN에서 바라본 한국의 위상도 괄목상대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한류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서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치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 호주, EU, 인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에도 생각보다 뒤쳐져 있다. 무엇이 문제며 이것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우선 수요자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와 군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라카인이슈와 미얀마평화프로세스에 있어서 한국의 존재감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너무 약하다. 중국은 피스 메이커를 자처하고, 일본은 사사카와 재단 등을 통해 대규모로 지원한다. 단순히 하나의 시장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 나라가 가렵고 아픈 곳을 함께해 주며 존경과 마음을 얻는 공공외교 전략이 없으면 앞으로는 힘들다. 즉,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국가별 기대를 살펴보겠다.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은 핵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한국의 전략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또, 미국 혼자만 해서는 인태 지역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꾸기 어려우니 인태 지역 대상 아웃리치에 한국과 일본 등 이미지 좋은 국가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다.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등 소다자(mini-laterals) 협력에 있어서도 한국의 구체적 기여를 기대한다.

유럽은 어떤 주제를 다루든 간에 결론은 중국이었다. 라이벌이자 경쟁자, 파트너로서의 인식이 혼재되어 있다.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태 지역에 현실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럴 경우에 과연 인태 지역으로부터 얼마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편안한 속도로 협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를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과 기대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이한 기대 속에서 중국의 입장을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다. 중국이 인태전략 틀 내에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추정할 수는 있다. 작년 8월 외교부장관이 칭다오에 갔을때, 당시 국무위원이 5가지 응답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자주독

립,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 배려, 내정 불간섭,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 수호, 다자주의 존중) 이 안에 중국의 입장은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인태전략 틀 내에서 대중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 제언이다. 첫 번째는 행동, 역할,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의지 표명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구체적인 소지역별 기대와 수요를 감안한 역할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이런 과정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박근혜정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문재인정부 신남방정책, 현정부의 인태정책 등 이름이 계속 바뀌었다. 그런 입장에서 ODA 대폭 증액은 환영받을 만하다.

세 번째로 소지역별 수요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 추진이다. 현재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세 번째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을 내놓은 위상에 걸맞게 지역이면 지역, 이슈면 이슈 등 적극적 기여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다. 공공외교가 정부만의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 팀 코리아가 어우러진 공공외교가 펼쳐질 때 대중들에게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재천**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략 개념 이전에 중요한 지정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구상된 자연스러운 지역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적인 말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숙지해야 할 지정학적 변화가 있다. 미중 경쟁을 신냉전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일

까. 과연 신냉전으로 규정한다면 그냥 냉전과 신냉전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그런 맥락 안에서 인도-태평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인도-태평양이 전략인지 지역인지 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신냉전은 전형적인 강대국 경쟁으로서 옛날 냉전과 유사점이 있다. 세력권을 놓고 지정학적 경쟁을 하는 속성이 있다. 단지 구냉전의 지역이 유럽이었다면, 이제는 인도-태평양으로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념적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사점이 있다. 구 소련처럼 공산주의 이념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식 정치 경제모델이 자유주의 정치 경제체제의 대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유사성이 있다. 강대국의 경제는 진영화된다는 속성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수정주의 국가들이 뭉치고, 다른 한 축에서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뿔뿔 뭉쳐서 한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옛날 냉전에서 구 소련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미중은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보인다. 따라서 미중 경쟁의 성격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술 패권 경쟁으로 기정학(techno-political), 기경학(techno-economic)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실 신냉전과 구냉전이 얼마나 흡사한가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어떠한 중요한 속성이 있는가 정도만 보면 된다. 지금 강대국 경쟁 신냉전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하다. 모든 측면을 말할 수는 없고, 인도-태평양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에 대해 말하겠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은 10년 전이다. 호주 시드니 한 연구소 세미나에서 지금 남중국해만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도양이 굉장히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인도양이라는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중국의 부상으로 위기에 빠져있다고 표현했다.

인도-태평양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을 보면,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교역로이자 에너지 수송로로서 인도양과 태평양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중요한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인도양의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이 중국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중국은 진주 목걸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패권적인 지위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막아버린다면 국가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니, 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배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군사기지 거점 확보 전략을 추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인도양과 태평양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당연시 여겨졌던 연결성이 중국부상과 진주목걸이 전략 때문에 당연시할 수 없게 되니,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역 개념이라는 것이 아시아-태평양이었다면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지역 변화에 불만족한 국가들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지역 개념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은 전략 개념 이전에 자연스럽게 태동한 지역개념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 노무현정부의 동북아라는 지역 개념,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이렇게 다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은 국가들도 이야기하는 지역 개념으로 태동했다. 군사 안보적인 함의가 강해서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태동한 지역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50년이 되면 80%에 육박하는 GDP가 이 지역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을 구비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럽게 태동하는 것이다. 대중 견제라는 선입견 때문에 공공외교의 장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태동한 지역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공공외교의 장에서도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도 많은 차이가 있고, 오히려 캐나다 같은 나라는 대중 견제적인 측면이 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국의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전략 개념 이전에 지정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지역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공공외교의 장에서 인도-태평양을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이하원**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양국 정상의 관계가 중요하고, 양국 정상이 앞서서 하는 공공외교가 가장 효과가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신중한 인태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을 지역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데 주요한 협력 국가로 규정하고, 대통령실도 중국과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생각보다 더 소외시키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태전략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포용적으로 쓴 거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정도로 야당이나 진보세력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마일드한 정책을 취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인태전략에서 중국을 질서 파괴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표현은 자제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중국이 조금 더 잘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달 열린 G7 회의가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표현이나 티베트와 신장, 인권 문제 등 중국이 싫어하는 내용이 계속 언급되었다. 이후 중국의 반응이 거칠어졌다.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며 중국을 먹칠 공격하고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한다고 표현했다. 중국은 강렬한 불만을 표시하며, 일본과 한국에게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찬반 입장이 모두 존재하며, 언론에서도 두 가지 방향 모두 다루고 있다. 진보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힘에 기초한 평화론을 평화의 가면을 쓴 안보론이라고 하지만 사실 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공외교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오바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두 번째로 2010년 서울에서 열렸다. 오바마와 이명박 사이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다. 여러 가지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 손을 잡고 가면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 이번에 바이든이 윤석열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갔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세계 최강의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공공외교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봐야 할 것

은 아베와 트럼프의 브로맨스이다. 아베는 트럼프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 27홀을 치다 하루 3끼를 다 같이 먹었다. 처음 만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정상 외교를 본 적이 없다. 아베가 미국의 등에 올라타서 세계로 나가는 전략을 구축했고 이를 잘 실현했다. 그 결과 트럼프는 남북한 문제를 아베와 상의했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지 않게 생각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아베이다.

미일 협력하에 2019년 우주군도 창설했다. 지금까지 달을 밟은 우주인은 미국인밖에 없었는데, 아마도 두 번째는 일본 사람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아베와 사이가 좋아지면서 미국은 이 관계를 일컬어 보물 같은 미일 동맹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관계가 트럼프-아베로 끝난 게 아니다. 바이든-스카도 그대로 계승된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첫 통화에서 일본이 그렇게 원하는 센카쿠 보호를 언급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100점 만점이라고 표현했다. 과거에는 미국 주도의 미일 동맹이었으나, 이제는 일본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끌고 가는 측면이 크다. 오늘 인도-태평양이 화두인데, 인도-태평양 전략도 아베신조가 2006년에 제안했다. 아름다운 나라를 향한다는 책에서 언급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의 안보협력체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도 일본이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정상 관계가 중요하고, 이런 정상이 앞장서서 하는 공공외교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 한다. 일본의 공공외교 전략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 속, 인류 보편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 한류의 인기와 정책 신뢰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공공외교가 핵심이다.
- 인태 지역, 전략개념 이전에 자연스러운 지역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 양국 정상이 앞서서 하는 공공외교가 가장 효과적이다.

한반도 비핵, 평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좌 장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토 론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궁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부소장 이기태 통일연구원 실장/연구위원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기 록	김소연 통일연구원 연구원

● **민태은**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평가와 전망, 한미일관계, 한미관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은 인태전략이라는 지역개념 하에서 외교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최근 G7회의에서 미국의 전략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팅을 목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태전략의 목적은 대중국 견제이다.

미국의 인태전략 하에서 한미 협력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한미간 목표와 관점의 간극을 줄이기 쉽지 않다. 미국의 인태전략서에는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가시성 있는 군사협력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터리, 반도체와 같은 경제협력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라는 큰 틀 하에서 북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 및 북핵문제에 방점을 둔 안보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점의 차

이는 큰 구조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한미일 협력의 안정성과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인다. 한국이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한미관계가 중요한 한국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인태전략 추진이 한일관계 개선의 명분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시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시장과 무역 상대국으로서 일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인태전략이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한일관계가 가치, 인권, 국제법과 같은 문제에서 인태전략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 역시 어렵다. 한일관계 이슈를 보편적 기준에 기반해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인태전략의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의 인태전략은 사실상 북핵문제 해결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북핵문제는 후순위이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과의 협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미협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인태전략 하에서 한미관계 개선이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한미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국력 및 외교전략의 변화를 고려하여 외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외교적 기조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신냉전 구도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전략적 공간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북핵문제나 한일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태전략 강화의 최종점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미관계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스스로 향상된 위상에 걸맞는 외교전략 추구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같은 외교적 선택의 공간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정치나 북핵문제, 성장의 한계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외교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소에야 요시히데** 이번 발표는 일본의 인태전략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다. 아베 총리는 인도의 초청에 의해 새로운 지역 개념을 형성하였다. 초기 이니셔티브는 일본, 호주, 인도 삼각 협력으로 시작했고, 그 이후에 미국이 참여한 것이다. 초기에 인도 대미 전략의 독립적, 자율적인 성향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인도를 이니셔티브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1차 일본-호주-인도 고위급 3자 대화, 2차 3자 대화, 3차 3자 대화, 4차 3자대화, 제1차 일본-호주-인도-미국 인도태평양 4자 협의, 제2차 쿼

드 협의, 제3차 쿼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협력의 틀을 갖추어 나갔다.

쿼드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담이 올해 6월까지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헌신이 요구된다. 흔히들 쿼드 공동성명이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언급하지만, 관련국 협력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쿼드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보건 안보, 기반시설, 기후, 사이버안보, 핵심 및 신기술, 쿼드 펠로우십, 우주, 해양상황인지와 인도주의 지원 및 재난구호 등 전방위적 분야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는 쿼드를 한 국가에 대한 포용 또는 배제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하지 않고, 국제질서의 복합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정치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아세안 중심성, 인태 지역을 넘어선 파트너와의 협력 확장, 글로벌 아젠다 협력, 중국에 대한 경제 안보,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보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쿼드 프로세스는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과정을 이끌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쿼드 아젠다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긴 중간국가 간 중견국 협력을 필요로 한다. 쿼드의 확장성을 위해서 일본-인도-호주-미국 개념이 별도로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을 중견국 협력 어젠다에 끌어들이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김정**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기시다 정부의 인태전략은 수사적 중첩도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그 전략적 목표에서는 “Countering China” 혹은 “Deterring North Korea” 중 어느 쪽을 보다 중시하

는지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Countering China”에서도 “Decoupling China”와 “Derisking China” 중 어떤 전략을 보다 중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Jake Sullivan의 “New Washington Consensu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래 미국에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Washington Consensus”의 기초가 붕괴했다는 선언이 있었으며, 지구적 차원의 상호의존이 더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두했다. 이는 규칙 기반 질서를 교란하는 중국의 부상 및 글로벌 공급망의 사소한 교란에도 미국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팬데믹의 교훈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New Washington Consensus”로서 정부의 규제 및 투자 등 산업정책적 요소가 기반이 되는 경제 내셔널리즘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부상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및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적으로 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방기한다는 신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성장이 좋은 성장이 아님을 산업전략으로 천명하였다.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하거나 미국의 노동자들을 절망하게 하면 좋은 성장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과 맞닿는 발상이자, 국익에 부합하는 평등한 성장이 산업 전략의 목표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CHIPS 법안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이든 행정부 혹은 그 이후의 민주당 혹은 공화당 행정부 모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미국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국익 실현이 목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미국이 국제질서의 보존이라는 장기적 시간 지평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단기적 시간 지평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워싱턴 선언”의 배면에 깔려 있는 단기 국익 중시

의 미국의 전략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경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산업 전략 내셔널리즘에 확장역제와 관련한 NCG의 창설과 NPT 체제 의무 준수를 맞바꾸는 안보적 교환을 하며 전면적인 양보를 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심화 및 경제 양보 확대의 맥락에서 한미 관계, 한미일관계, 더 나아가 인태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국제적 가치 균열의 요소가 있지만 동시에 동맹국 사이에서 경제 내셔널리즘의 영합적 충돌이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로 전환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선택이 실제 국익 실현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취임 1주년 시점에서 지지율이 35%(부정 59%)라는 사실은 외교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이 허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국의 인태전략이라는 정책 선택이 실제 국익 실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한국 유권자가 대북정책 및 한미일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정치균열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태전략의 국내 지지 기반 확장 가능성은 대북정책 및 한미일 외교정책의 국내 지지 기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의 35%가 외교를 잘한다는 사실에서 오고 있고 부정 평가의 32%가 외교를 못한다는 사실에서 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사실이자, 동시에 당파적 양극화의 조건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이 국내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대적으로 외교정책과 관련한 국내적 합의 수준이 높은 일본이 비교적 원활하게 인태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인도태평양이 얼마나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이유가 양극화한 국내 정치에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 **궁키위** 현재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아세안, 그리고 영국, 프랑스 및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 등 점차 많은 국가들이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니지 않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인도-태평양” 대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미국, 일본, 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이 중국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반대로 중국을 상대하거나 중국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미국 정부와 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해 오고 있다.

제1열도선(First Island chain)과 현재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심지어 “대만” 등을 포함하는 동맹들 “3-4-5-7-10”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다자주의 기구나 매커니즘에 속한 파트너 국가들, 즉 오커스(AUKUS)-쿼드(Quad)-파이브 아이즈(Five Eyes)-G7-D10(현재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아세안 국가들과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차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와는 상반되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그리고 이를 통한 전세계의 진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하여, 역내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한국 역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작년에 개발하였다. 한국이 작년에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를 공식 외교 전략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인도-태평양”과 “아시아-태평양” 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기로에서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 분명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른바 ‘글로벌 전략’과 유사하다. 이는 큰 바구니와 같이 그 어떠한 것도 담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의 주변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아시아-태평양 버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될 계획인 반중국(Anti-China) 및 반복한(Anti-North Korea) 소규모 연대에 속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은 향후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관계를 발전시키고 안정화하는 것이며, 중국과 관련된 의제를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지이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을 찾기 어렵다. 중국은 2번만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은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한중일 삼자협력”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과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민감하게 우려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 즉 인도-태평양이든 아시아-태평양이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윈윈(win-win)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 우리는 여전히 대화, 상호 신뢰, 경제적 상호의존성, 그리고 평화와 안정의 공유 등을 필요로 하며, 이는 올해 제주포럼의 테마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 분의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소에야 교수님께는, 한국이 쿼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한국이 조만간 혹은 향후 쿼드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린다.

민태은 연구위원님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을 때로는 “탈중국화”(de-Sinicization)로 여기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여쭙고자 한다.

● **이기태** 일본은 1957년 외교청서에서 언급한 일본 외교 3원칙(유엔 중심주의, 서측진영일원, 아시아 외교)을 바탕으로 한 ‘전방위 외교’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발생하며 전방위 외교에서 미일동맹과 서측진영일원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더욱 강해졌으며, 특히 중국의 침공에 따른 대만 유사와 일본 안보의 관련성이 가장 큰 관심사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일본은 2022년 12월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3문서 개정을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로서 ‘자유국제주의 질서로의 회귀’ 보다 ‘규칙기반질서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아세안 및 아프리카, 남태평양 국가들 중에는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비록 ‘채무의 덩어리’의 위험이 있지만 중국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안보협력 강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만을 강조하기에는 우호협력국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규칙기반질서 구축은 모든 주권국들이 중시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의 가치관을 강조함과 동시에 ‘규칙기반질서 구축’을 국제질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과 함께 강조하여 왔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 일본이 주장한 ‘규칙기반질서 구축’ 논의는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을 ‘맞춤형 연합체’에 동참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주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가운데 ‘자유’ 등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규칙기반질서 구축’이라는 개념을 미국, 일본과 공유하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강대국에 대응하는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세안, 인도,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그러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견국 외교가 무엇을 위한 협력인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역내 Rule-based order를 지키기 위한 협력이라면 한일 협력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보안, 해상 안보, 재해, 재난과 같은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더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협력 관계보다는 조정(coordination) 관계이고, 현재 한국과 일본은 교육, 인재육성 등 중복적인 영역에서 개발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만의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금 절약을 위해 한일 간의 중복 투자를 조

정하고 축소해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전략일 것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한일 협력을 통해 견제 혹은 보완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틀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룰(rule)을 강조할수록 마이너스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다자간 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대리협력자세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나토, EU, 일본, 한국의 연계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일 안보협력 분야에서는 일본이 장점으로 갖고 있는 '비전통안보' 분야 교류 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 전통안보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대북 문제를 포함시키고 일본의 동참을 요구하고, 이후 대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안보협력 확대 및 제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 시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한중일 3국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상대적인 국력 약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하였다. 미중 경쟁 시기 힘의 균형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동등한 차원에서 경쟁할 수는 없으며, 미국과 중국 어느 한 편에 서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경쟁 구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미들파워'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미중을 견제하거나 관여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 **현승수**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은 미국이 전략적 목표 달성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둘째,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등을 통해 대 중국 견제 및 반중 연대 구축을 지향한다. 셋째, 인태전략 성패는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의 포섭이 관건이다. 넷째,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진영화를 추동하고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안정 심화 요인이다. 다섯째, 중·러 주도 유라시아 통합 프로젝트의 기회로도 작용한다는 인식이다.

2023년판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 속 러시아의 대응 전략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및 인도와의 양자 관계 강화,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 반서방 연대 확대 위해 RIC(러시아·인도·중국), SCO(상하이협력기구),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활용, 셋째, 유라시아 다자기구 내 러시아 위상 강화 모색, 넷째,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통해 인태전략 무력화 및 아태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장이다.

인도-태평양 전쟁에 대한 전망과 현 사태가 주는 시사점을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인도-태평양 VS 유라시아 구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대 서방 관계 단절, 경제력 약화한 러시아의 대 중국 의존도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사용권의 대 중국 양도의 의미를 고심해보아야 할 것이며, 북·중·러 연대의 경제적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북방정책이 좌초할 것인지 그 향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인태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진영의 정권 교체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 한국은 신냉전 구도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전략적 공간을 축소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의 국내정치나 북핵문제, 성장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경쟁 구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미들파워'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미중을 견제하거나 관여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쿼드는 포용 또는 제외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중견국들이 강대국 정치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다양한 어젠다를 논의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 한국의 인태전략이라는 정책 선택이 실제 국익 실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인도-태평양 대 유라시아 구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북중러 연대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정권 교체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윈윈(win-win)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여전히 대화, 상호 신뢰, 경제적 상호의존성, 평화와 안정의 공유 등을 필요로 한다.

ROK's Strategy and Role in the Indo-Pacific: Views from the Region



- Moderator** **CHOI Wongi** Professor/Head, Center for ASEAN-Indian Studie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KNDA)
- Speaker** **John BLAXLAND** Professo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ojin V. JOHN Assistant Professor, Mahatma Gandhi University, India
VU Le Thai Hoang Director General, Institute of Foreign Policy and Strategic Studies, Diplomatic Academy of Viet Nam
MA Sang-Yoon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OANG Thi Ha Senior Fellow, ISEAS-Yusof Ishak Institute
- Rapporteur** **CHO Won Deuk**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ASEAN-Indian Studie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KNDA)
LEE Hayoung Researcher, Center for ASEAN and Indian Studie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 **CHOE Wongi** An Important priority of Yoon's Strategy is the point that the Korean government made clear that we do have a strategic interest, in maintaining and bolstering rules-based order. In order to carry on this strategy, we should work with partner, like-minded countries outside the Indo-Pacific region.

● **MA Sang-Yoon** Last year, ROK emphasized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region, which is directly in the national interest of country. The name of Indo-Pacific is still unfamiliar to citizens; the term Asia Pacific might be more familiar. For starters, it's worth pointing out that over the past few years, the concept of the Indo-Pacific has quickly become an internationally accepted regional concept. Indo-Pacific, a geopolitical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has been used as an official strategic concept by the US since late 2017. Before that, Japan and Australia actively incorporated the concept into their respective diplomatic strategies. In particular, Japan actively introduced the concept to the US. Since then, ASEAN has published an Indo-Pacific Outlook report and the EU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UK also announced their Indo-Pacific policies. The popularity of Indo-Pacific terminology is largely due to the aggressive change in China's external behavior: the perception and prospect that a rising China is trying to modify the existing liberal world order have led many regional countries to feel the need to respond. In this sense, checking

China's revisionism is the hidden purpose of the Indo-Pacific concept.

The release of the Indo-Pacific Strategic Report by the ROK government is most significant in that it aligns us with several Indo-Pacific countries, especially the US. In particular, being highly conscious of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how to work with it seems to have been at the center of their thinking. However, the government's Indo-Pacific report identifies inclusion as one of the principles of cooperation in the region, leaving the door open for cooperation with China to the extent possible. In this respect, there is a certain difference with the U.S. Indo-Pacific strategy, which is strongly characterized as a check on China. Nevertheless, it is an inevitable setting for Korea, which cannot cut off all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at once. There seems to be no strategic consideration beyond positio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report lays out a vision of an "Indo-Pacific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and a principle of cooperation based on "inclusion, trust, and reciprocity," as well as nine priorities. They include "building an inclusive regional order based on norms and rules, cooperating to promote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strengthening nonproliferation and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and expanding comprehensive security cooperation". However, unfortunately, there is not enough explanation of how these visions, principles, and tasks will be

implemented.

While the geopolitical concept of the Indo-Pacific has emerged and become populariz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US-China rivalry, the role of other major players is also important to the evolution of regional order. The ups and downs of the US-China relations will, of course, shape the nature of the regional order. However, as both the US and China are actively seeking solidarity and alliances with other countries, how other major countries in the region respond and what role they play is also a variable that is hard to ignore. In this regard, there is room for middle powers like South Korea to take an active leadership role, and it requires a well-thought-out strategy. While the government's Indo-Pacific strategy report is essentially a vision statement, we hope that the government will follow up with a more concrete strategy to ensure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 **CHOE Wongi** Do you think that ROK's new strategy tries to challenge China? What are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ROK strategy and the US in that the ROK strategy is not intended to decouple Korea from China? In this respect, there could be tensions.

● **HOANG Thi Ha** Now ROK moved on from New Southern Policy("NSP") to Indo-Pacific Policy("IPS"), and I was able to compare and contrast both. ROK's IPS underwent foreign

policy adjustment under President Yoon. He defines ROK'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ery differently from NSP. For instance, the NSP focuses on South East Asia("SEA") and India, but IPS with a global pivotal state brand actually adopts a global outlook towards a different world. When I was at the airport, the ROK Pacific Island summit, it shows a geographic expanse of the IPS to reach out to. Although North Korea does not focus on the IPS, the strategy itself is driven strategically by the new administration policy refocusing on hurdles and responses to NK based on the US-ROK alliance. Peacemaking with North Korea("NK"), IPS hopes to broaden the strategic architecture of the ROK and promote ROK as an active and contributive global player.

The IPS underlines the alliance of the US foundational pillar of ROK's foreign policy, but it doesn't stop but aims to push the alliance beyond dealing with the security threat from NK and make a global comprehensive alliance by gradually building strategic alliance on relative issues, for example, sharing principle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cooperation security supply chain, and core technologies. So under Moon government, ROK tried to get away from the power politics and US strategic competition. The NSP lacked strategy and focused on economic functional cooperation but the IPS defines the ROK's interest in US-Sino cooperation, trying to stack out the Korean vision even on sensitive

issues like the South China Sea on Taiwan Strait.

With a signal of Korea's willingness to join US cooperation with like-minded partners (Japan, Aus, India, EU, and Canada), Japan hopefully closer US-Korea-Japan trilateral cooperation on important areas tackling US simultaneous cooperation go forward(Chip production, etc). This is a signal shift way from the Moon administration's strategic ambiguity US-Sino competition towards greater strategic alignment with the US. But at the same time, ROK did not antagonize China. The IPS highlights the inclusiveness of the Indo-Pacific region and China is a critical partner to regional prosperity, ROK recognizes and SEA countries recognize it in that sense. This is the reality of ROK foreign policy amid US-China competition. How can ROK align closer to the US and other Indo-Pacific partners, while maintaining a constructive and stable relationship with China?

On one hand, the Yoon administration has increasingly defined country security interests in alignment with US and Indo-Pacific countries, but at the same time economically ROK has entrenched and invested in a global supply chain with Asia Pacific economies, all these regional supply chains related to China. China is the largest trading partner with Korea and almost all Asia countries. ROK will continue to be an outlier among US Asia allies and partners when dealing with China because ROK doesn't view China as a security threat unlike Japan and India

and Australia. Although the Yoon administration has ideologically different, its relationship with China is not driven by ideological issues. Apart from this, it takes a contradicting pose within the NSP because it is trying to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and have a clear message towards different regions and groups, partners within one single partner.

For instance, the IP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haring liberal democratic values, when it comes to SEA which is not mentioned at all. So, this is the reality of ROK foreign policy which is not similar to SEA countries. Economically ROK arranged multilateral agreements such as RCEP, ROK ASEAN FTA, joining small multilateral groupings, and growing forward is important to see how ROK finds a balance goal objective. When the priority is set and the document is comprehensive, the implementation could be changed among partners.

● **CHOE Wongi** The key aspects of the Indo-Pacific strategy point to Indo-Pacific strategy about broadening strategic rivalry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ndo pacific strategy is not China's policy. The vision is not to antagonize China, and clear that we are ready to speak out what our interests and strategy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geopolitics are. ROK does not see China as a security threat; I would like to explore the more strategic perceptions of South Korea on China.

● **John BLAXLAND** Regarding the political dimension of Indo-Pacific, if you see the map from an Australian perspective, we can interpret this. With Canada, Australia also played a role with England, and had autonomy and survived. Canada, the US, and England supported us. Australia is very far away from ROK, but we do share a common interest. More than 17,000 Australians served in Korea during the war, suffered over 1500 casualties and more than 340 people were killed. We got the utility of collaboration and mutual defense, reinforcing UN, and utility back in the US. There is an important point when we think of very different circumstances today. In the end, the troops returned home and the ROK went through a remarkable transformation from being a war-torn and divided nation to being a leading global industrial and economic power. No one at the time in Australia appeared to realize what a significant partner Korea would become for Australia in the decades that followed. Today products from Samsung are more ubiquitous with amazing influence in Korea. We shared interests a long time ago. In terms of securities ties, we share many commonalities. Both are US allies. As a result, a high level of interoperability emerged as a result of common ties with the US, including procedures, techniques, mindsets, and approaches to the liberal rules-based order. When we talk about Indo-Pacific in academia, we share a lot of interest too. When we think

about the war in Ukraine, supplies from ROK are remarkably useful. President Yoon is thinking beyond the peninsula. ROK's Interest involves engaging ASEAN, Australia, India, Pacific in a mutually reinforcing manner that is helpful to country and regional order. Both as a middle power have interest in strong trade ties with China. Both value the utility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at contribute to the confidence and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highly. Both have interested security connections with the US, at the same time irritating China over the unnecessary competition. We don't want to irritate China. What to do? Look at the future, a lot of opportunity for collaboration. Both have seen the significance in investing in the various ASEAN and APEC-related forums to bolster confidence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band together in pursuits of common interests. Enormous complimentary, future remarkably broad, share challenges, share opportunities.

● **CHOE Wongi** About lots of utility and future relationships, you mentioned Australia's contribution toward Korean War. We will evaluate Australia's contributions. The rise of South Korea is remarkable and the size of ROK economy is natural, we also need to develop the mindset. Due to the Moon's NSP and Yoon's IPS, it is natural and inevitable growth in terms of longer perspective and ROK's strategic mindset.

We do care about regional prosperity.

● **VU Le Thai Hoang** ROK as a global player needs attitude and strategy. ROK's IPS, ROK has officially adopted the term Indo-Pacific and shared the common awareness of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region. I want to mention three duties. First, the IPS adopts a regional security approach and reflects the holistic approach of comprehensive security, not simply China's strategy. Some may regard it as China policy. In terms of the NK issue, it places within or above the country's regional strategy. Seceond, the concept of contributive diplomacy and vision reflects the country's uniqueness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 provider of public good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very broad perspective. Third, ROK's Indo-Pacific strategy is not just narrative, supporting ASEAN centrality and the KASI(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strategy benefits both ROK and ASEAN Countries. ROK's Indo-Pacific strategy itself independently respects the prosperity of SEA. I want to mention three uncertainties: 1. Potential risks in ROK like nuclear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2. Balance between strategic reassurance and engagement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world is very complicated and uncertain, and need balance, 3. Strategic overstretch and loss of its balance. If too strategically broad in its scope, it will lose

centrality and balance.

Last, I want to mention three expectations:

1. More effective message of the IPS and the KASI to be conducted; in the Korean way, we need to send more people to give a message, for example, the proposed establishment of the ASEAN Korea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and more tourism and student exchange. 2. How to maintain balance in approaches between East Asia and Indo-Pacific framework; now there are too many talks about Indo-Pacific, but we ne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East Asia approach in the Indo-Pacific framework, East Asia Summit and Strategic forum. Research and exchange activities between leading scholars and research institutions of the ASEAN, and the ROK's potential area need to be further enhanced. ROK's balanced approach towards mainland SEA and maritime Southeast Asia, particularly its commitment to contribute to the Mekong subregion, needs strategic autonomy 3. Expect the ASEAN ROK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o be established in the next Jeju Forum. Consider how to enhance national strategic autonomy of ASEAN, ROK-ASEAN and respect for ASEAN as a group, and independently balanced coordination is needed.

● **CHOE Wongi** You have mentioned three: beauty, uncertainty, and expectation. We have many polarized issues from which side our government changes its foreign policy to China

and NK. But now we agree that we have to focus on ASEAN. ASEAN is a key partner, and you pointed out great strategy and insights.

● **Jojin V. JOHN** Until recently, the maritime space was viewed as two separate regions, the Pacific Ocean and the Indian Ocean region in Interconnected global framework. India Congress made an important speech in 2007, and it recognized President Kim Young-sam's speech in 1996 that announced the Indo-Pacific region as an important one.

In connection with economic corridor, with the shifting of the economic growth center from East Asia to SEA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and with the rise of China, the emergence of India's repositioning of the US global posture linkages between the Indian and the Pacific Ocean regions, can no longer be ignored.

The COVID-19 and Russian War in Ukraine further accelerated geopolitical conflict and added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t is important to sustain the region, which needs different roles in the Indo-Pacific strategy. Participating in minilaterals is very interesting. The Indo-Pacific strategy is very ambitious, and this includes inclusiveness and needs principles. The concept has acquired greater sali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more countries adopting the Indo-Pacific framework, including ASEAN, Japan, India, Australia, US and European countries. ROK's approach to Indo-Pacific, this

concept reflected later and was adopted as 'strategic ambiguity' in the Moon administration. In the past India thought of strategic ambiguity because of China, but now it shares many visions with India's vision. This would become an important framework for India-ROK relations in the future.

● **CHOE Wongi** The place of India and Korea's Indo-Pacific strategy is very important, but I don't see many mentions in Seoul. So it is imperative for ROK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strategic areas with India's big challenge. India perceives its Indo-Pacific strategy. One challenge is how to strengthen the level of cooperation, strategic communications, and consensus.

● **CHOE Won Deuk** I would like to touch upon the importance of ROK's Indo-Pacific strategy. There are two takeaways; first, our strategy is middle power commitment about what to do and where to go by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Since 2017, regional challenges have intensified with China, especially the pandemic, and disruptive supply chain. So we have multiple challenges and great competition. In this sense, a lot of competitive responsible middle-power cooperation is very crucial to tackle instability and sustaining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Now, Korea is ready to pursue this. Second, Korea is not shy anymore. Korea strengthens solidarity cooperation with like-

minded countries. We are going to form lots of moments like trilateral partnerships with like-minded countries, and visions, then we can move together to tackle challenges in the Indo-Pacific region.

Q & A

Q. MA Sang-Yoon I question a tension between China's aggressiveness and inclusiveness of ROK. Yes, there is a tension in policy actions in ways forward, but our intention is that we are an Indo-Pacific country and we need rule-based order, but at the same time, we hope that countries like China incorporate the same principle if they have the same interests and benefit from them. Still, ROK needs to nurture cooperation with China but makes clear our principle identity. If China does not follow, there will be difficulty but we are aware of the principle and gradually separate connected relationships in our intimate way. But this would not take place and we need time. We need a gradual approach.

A. HOANG Thi Ha Vietnam and ROK are similar, but very different. Both were invaded by China thousands of times historically, but amazingly the Korean public has historical grievance which has been more targeted Japan. Vietnam has territorial maritime disputes.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public section of China and Vietnam. We also learned that these sanctions

and sentiments of Korea shifted. In terms of sanctions, Japan is very different from India. Vietnam is very similar to India and Japan. Korea with the NSP, Moon administration's progressive people, are quite favorable to China and is now very different. Bringing to the point, what will be Korea's idea in Yoon's administration after five years?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when we were all excited about the NSP, but will the Indo-Pacific concept be institutionalized after four years?

A. John BLAXLAND During the cold war, serious competition was influenced. We did not like a political media book. We are facing unrestricted competition in legally and psychologically through Media, and controversy is happening in Australia and Korea. Occurring in Media, how much US will support China's interest by pursuing a policy to undermine any other US alliance. We have to be mindful that we are under unrestricted competition.

A. VU Le Thai Hoang The idea is in mind. Asia has too much uncertainty. In terms of ROK-ASEAN cooperation, workshop, seminar launching or how to manage and blend strategic risk management is important. Strategic scenario building needs discussions and communications.

A. Jojin V. JOHN Now India and ROK are still too focused on economic partnership. Due to the

lack of strategic Korean foreign policy, India is not recognized as this particularly NSP because of the mostly economic part. But Indo-Pacific strategy, it would be different, but the document is not an economical one. More opportunities for strategic dialogue with Indian strategic partners are in sub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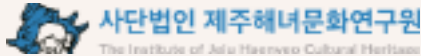
A. CHO Won Deuk Indo-Pacific strategy is not to constrain China. We articulate China as a cooperative partner, which means China as a partner, we share our concerns and interest with China. Based on national interest and principles, we can pursue an equal power partner between ROK and China.

A. CHOE Wongi I want to end up with two points. The Indo-Pacific strategy is not a confrontational strategy, and it is rather a regional comprehensive strategy. About regional engagement from ASEAN to Indo-Pacific, some say that Yoon tries to imitate US-Japan strategy but it is gross misunderstanding. Critical differences exist. It is an exercise strategy in the agency that we have, based on critical values such as national interest and strategic interest in rule-based order. ROK is the biggest beneficiary from the liberal world order, and we want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order.

Implications

- By examining the views of many similar countries on Korea's Indo-Pacific strategy, it is necessary to expand Korea's regional role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to seek ways to contribute to our national interests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the region.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제주 해녀 문화와 바다환경의 변화



좌 장 양종훈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 이사장
발 표 김계속 사단법인 제주해녀협회 회장
김태석 제주매일 대표이사
토 론 고송자 제주도 고내어촌계 계장
최희정 더 미카 커뮤니케이션 이사
기 록 김민정 제주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김계속** 나의 어린 시절은 여자에게 형편없던 시절이었다. 여자는 공부할 수 없던 시절에 살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시절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부보단 물질이 더욱 재미있었다. 처음 물질하던 때는 툇도 내 키보다 더 컸다. 그러나 20여 년 전부터 툇이 썩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양어장 텃이라고 생각했다. 모자반, 감태같은 것들도 썩어 없어지니 물질할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린 해산물을 지원받아 키워보아도 이제는 바다에 희망이 없음을 느낀다. 바다 오염도 심하고 백화현상도 심해 이제는 물질이 끊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힘들 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사를 접하니 이제는기가 막힐 노릇이다. 나는 무식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 그와 같으면 왜 그것을 바다에 방류하나? 일본 땅에 공원을 만들던지 일본의 산을 파서 오염수를 그곳에 저장하면 되

지않나? 위험하지 않다면 일본 농업용수로 쓰면 될 것이 아닌가? 나는 물질을 하면서 바닷물도 직접 마시게 되는데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바다에 버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 **양종훈** 물질을 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인가?

● **김계속** 물질은 삶과 죽음의 경계이다. 숨이 찰 때 더 잡아 보려 하다가 눈이 노래지고, 다리가 폭삭한다. 그럴 때는 “욕심을 버리자”, “한 번 더 가지 뭐” 한다. “물질할 때 등에 관을 지고 간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딸아... 내려갈 때 전복은 잡아도 올라올 때 전복은 포기해라”라고 말한다.

● **양종훈** 조상들의 삶의 지혜이며,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시대의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물질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

● **김계숙** 물건 많이 잡으면 재미있고,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고, 서방 술값 주고, 내 뒷돈 만들어서 좋다.

● **양종훈** 제주해녀로서 자랑스러운 점은 무엇인가?

● **김계숙** 제주 해녀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서 어떠한 일에도 술선수범한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내 몫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 **양종훈** 자랑스러운 제주해녀가 고령화 되어가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김계숙** 해녀학교 및 자체 해녀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해녀 후진을 양성해야 한다.

● **고송자** 제주도는 대대로 해녀 집안이 많다. 우리 집안도 3대째 해녀 집안이며, 아주망까지 4대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해녀는 소라 7cm, 전복 10cm, 해삼 200g 이상만 잡으며, 그 이하는 바다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다 환경 변화도 고민이지만 일본 오염수 걱정이 한가득하다. 어디 호소할 때도 없어 답답하다.

● **양종훈** 물질의 어려움보다도 바다 환경의 변화가 더 걱정임을 인지한다. 유네스코 해녀 무형문화유산 등재후에 해녀에게 더 나아진 점은 무엇인가?

● **고송자** 처음에는 기쁜 마음 한가득이었다. 지금은 이제나저제나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해녀 보존금을 지원받아 고정값 보조를 받은 뒤부터 입찰자들의 가격조정 단합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 **양종훈** 해녀들의 어려움을 관계기관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제주해녀로서 각오가 있다면.

● **고송자** 바다환경이 오염되고 물질이 힘들어도 제주해녀라 자랑스럽다.

● **양종훈** 자랑스러운 우리 제주해녀를 돕기 위한 기후와 바다환경의 변화, 탄소중립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김태석** “영원히 여성이신자 우리를 구원하신다.” 설문대 할망으로부터 전해지는 여성 정체성의 제주 정신을 잇는 우리 제주 해녀는 단일 노동자 그룹으로서 최초로 항일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강한 정신력의 제주 해녀가 이대로 바다 환경의 변화에 무너질 순 없다. 우리는 바다 환경을 독립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순환하며, 함께하고 있는 환경으로 바라볼 때 제주섬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제주농업의 친환경화, 제주농축산업 하수에 대한 고민을 다 함께해야 한다.

● **양종훈** 제주해녀의 세계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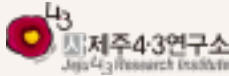
● **최희정** 외국은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전통의상에서부터 무형문화까지 다방면에 관심이 있다. 특히 해녀의 브랜드화로 젊은 세대와 소통해야 한다. 해녀의 문화적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

● **양종훈** 제주바다를 어머니의 품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제주 해녀의 삶을 엿보며 바다환경을 보존하고, 함께 고민해야 함을 느낀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우리는 바다를 독립적으로 이야기하면 안된다. 모두가 순환하며 함께하고 있는 가치이다. 이 일환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닌 전인류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 바다환경 보존과 해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유령어업을 단속하여 어구실명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해녀 지원방안으로 연간 의무적 물질작업 횟수와 어업량 할당제를 완화하여 해녀들의 고령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 해녀 후진양성과정을 개발하여 해녀고령화를 대비해야 한다.

제주4·3모델의 세계화-진실, 화해, 연대



좌 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 부의장
개 회 사	김영범 제주4·3연구소 이사장
축 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발 표	알렉시스 더튼 미국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학교 교수 진 리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공공정책전문연구원
기 록	이동현 제주4·3연구소 연구원

● **김영범** 제주4·3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부정했고, 시민사회는 방관, 침묵했다. 문제해결의 방향과 축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1998년 후반부터 진상규명 운동이 전개됐다. 이에 힘입어 국가차원에서 4·3문제 해결 시도가 있었다. 4·3특별법 제정, 명예회복위원회 설립,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 추념일 지정이 이뤄졌다. 작년에는 특별법 개정으로 수형자 재심과 개인 보상의 길이 열렸다. 4·3을 보는 전국적 시민사회의 시각도 바로 잡혔다. 이러한 해법 도출과 실행경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비극을 딛고 화해와 상생을 모색하는 점은 과거사 정리의 세계적인 모델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4·3은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미군정의 개입과 상응하는 조치가 그중 하나다. 어려운 문제지만 통로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

니다. 미국에서 오신 세 분 선생님이 좋은 제안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제주의 진정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가해자의 진정한 참회, 책임 당사자의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4·3 완전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야 제주에 평화가 정착할 수 있다. 이 자리가 그러한 길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 **오영훈**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됐다. 머지않아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됐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 시간이 지나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평가하고 싶다.

4·3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제주도민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승리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 기억의 토대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계로 나아갈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작업

도 일련의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공적 결과를 위해 교민과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4·3은 미(美) 군정 시기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적 조사를 통해 명확히 미군정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 제주4·3평화재단과 여러 연구기관이 이에 대해 노력하고, 미국도 자진하여 어떤 조치로서 책임을 다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 참가해 준 발표자들이 좋은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

● **허호준** 연구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그동안 4·3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개입을 규명하는데 연구와 취재에 노력했다. 몇 해 전 1957년 UN한국통일부흥위원단 소속으로 제주를 방문했던 호주 대표가 본국 보고서에 4·3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찾았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게릴라의 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한 방법은 극단적으로 가혹했다. 수많은 섬 사람들은 이를 잊지 않고 있으며,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제주인은 4·3을 잊지 않는다. 4·3은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 체제 아래서 경계와 망각의 대상이었다. 당시 미 대사관 보고서의 대량학살, 매스 슬로터(Mass Slaughter), 매스 익스큐션(Mass Execution)이라는 표현이 알려주듯, 50명 이상 집단학살된 경우가 최소 26건이다. 100명 이상 주민이 희생된 마을은 165개 마을 중 49개 마을이다. 희생자에게 붉은색이 칠해지고, 유족들은 연좌제에 고통받았다.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있다. 4·3문제의 해결은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1948년 4·3무장봉기 이후 미군정의 사태 조기 진압 지시, 제주도 작전 검열, 구축함 파견 등에 대한 문서들은 미군의 개입을 알려준다. 1948년 5월 미

육군 대령을 미군과 제주의 군경을 통솔하는 자리에 앉혔다. 그는 원인에는 관심 없고, 진압만이 사명이라 말했다. 당시 국내언론은 제주도 상황을 통곡의 바다, 울음의 바다라 표현했다. 이 보도는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가 있었던 1개월 동안 5,000여 명의 제주도민이 체포됐다. 비슷한 시기 그리스에서 미국은 국제여론을 신경 썼으나 제주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미국의 직간접 개입은 미국의 여러 문서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진상규명운동이 벌어진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은 4·3문제에 대해 한 번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사회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제주인의 4·3문제 해결에 대해 보자. 4·3진상규명을 위한 법제화 운동은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후 시작돼, 김대중 정부에서 이뤄졌다. 20세기의 문제를 21세기로 넘길 수 없다며 제주인의 총의가 모였고, 4·3특별법이 제정됐다. 한국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진상조사를 한 것은 4·3이 처음이었고,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다. 대통령의 사과도 있었다. 2021년 특별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 안에는 추가진상조사, 실질적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최소 2,530명 이상의 수형희생자 재심의 길도 열렸다. 현재 제주지법에서 이뤄지는 재심재판은 기억 투쟁의 장이자 진실의 공간이다. 4·3트라우마센터도 설립되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도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제주사회는 이러한 법제화 과정을 통해 4·3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4·3문제 해법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첫째, 진실규명 요구는 민주적이고 상향식이었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시민운동이었다. 둘째, 4·3문제 해결의 추진

력은 연대였다. 유족과 4·3단체, 지역 언론과 정치권, 문화예술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인사들과 연대 투쟁한 결과물이다. 셋째, 민관협치가 있었다. 넷째, 4·3문제 해결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이었다. 다섯째, 4·3문제 해결의 근거에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있었다. 진실규명, 명예를 회복하되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로 연좌제 피해, 마을 피해를 규명하고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인권 유린의 실상을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4·3무장봉기 주도자들도 4·3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4·3문제 해법이 국내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5.18의 경우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없다. 여순사건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진상조사도 4·3이 모델이 될 것이다. 국외의 경우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엇갈리며,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은 남아공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그리스의 과거사 해결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4·3의 해결모델은 점진적 모델로서 세계의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 **알렉시스 더든** 지금은 평화를 위해 어려운 시기이다. 내 동료 중 한 명이 시를 지었다. ‘히로시마에서 지도자들은 평화를 이야기한다. 한편으로 전쟁계획을 세우면서’.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를 방문했을 때 핵가방을 가지고 갔다. 핵가방에는

언제든지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있다. 하지만 아무도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나가사키에서도 그랬다.

제주학살도 이와 같다. 1945년 미국이 대량살상 무기를 처음 사용했다. 이후 모든 전쟁은 핵전쟁의 속죄의 성격을 갖는다. 이제는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것이 기본이 됐다. 뚝스데이 클락을 보라. 인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이 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미국과 어떤 관련성을 가질까. 지금은 공포의 통치에 대한 부정의 여지가 없다. 제주에서 이뤄진 학살에 미군들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미군 지휘관들은 제주에서의 일을 알고 있었고,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 관리들도 이러한 범죄를 알고, 심지어 지시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 광주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책임이 있다. 민간인에 대한 헬기 사격, 노근리 사건, 평양 폭격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1948년 독도 앞바다 어민 폭격 등도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사건의 공통점은 미국의 전적 후원을 받은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미국의 낮은 책임감은 1945년 원폭 투하로 시작됐다고 본다. 미국 정부는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 명령을 내린 이후부터 이러한 사건을 은폐하려 노력했다. 1948년 독도에서 미군이 어민을 폭격한 사건은 1995년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1995년이 되어서야 소수의 생존자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미군 비행기는 총격하기 위해 저공비행을 했기 때문에 미군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군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어떠한 숙제가 있는가, 사과를 요하는가를 봐야 한다. 제주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일어

났던 일 이후에, 우리는 인류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상적인 것은 미국 의회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역사에 대해 책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한국과 미국 국민들은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지도자는 다음 전쟁으로 우리를 집중시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반성하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방문 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생존 피해자를 포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인류애를 보여줬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인으로서, 민주국가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엘리엇의 시에 나오는 구절, “이것이 세상이 끝나는 방식이다. 이것이 세상이 끝나는 방식이다. 황 소리가 아닌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를 유일한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이성윤**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했다. 15,000명의 이름이 벽에 새겨져 있었다.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봤고, 신원미상자의 존재도 봤다. 오랫동안 계속 됐던 희생자들, 가족들의 침묵이 들리는 듯했다. 그들의 고통,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평화공원에서는 70년 동안의 침묵으로 고통을 억눌렀던 것이 느껴졌다.

4·3은 한국 역사, 현대역사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시대의 가장 야만적인 기록이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토론하라 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라 한다. 우리는 이 비극이 한국 역사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임을 알고 있다. 4·3은 1980년대까지 무시돼 왔고, 무지로써 덮여왔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인류에 대한 비극적 학살

에 대해 미국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한반도가 1945년에 분단될 때 미국이 개입하면서,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됐다. 미국은 한국의 관할권을 주장했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 사령관 존 칼리지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의 국방력을 장악하고 작전통제권을 발휘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음을 모른다. 이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때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4·3시기 제주에서는 마을이 불타고, 고문이 자행됐다. 그 시기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미국은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알렉시스 더튼 교수가 이야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서 처음 히로시마를 방문했다고. 당시에는 논란이 됐다. 특히 2차대전 참전자들은 이를 싫어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히로시마 피해자들을 추모한 것은 중요하다. 기억은 중요하다. 기억은 우리에게 안주하지 말고 싸우라고 한다. 기억은 우리의 분노를 바꾸라고 한다. 이에 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비록 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정의로웠다고 정의한다. 만약 바이든이 히로시마를 직접 방문한 것처럼 윤 대통령과 함께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다면, 한미동맹이 훨씬 격상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나중에는 바이든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했다는 것을 정의롭고 도덕적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나아가 미 의회가 직접 역사에 대해 참배한다면 어떨까. 미 의회는 1908년, 의화단 운동을 통해 강제로 거둔 2,500만 달러의 절반을 할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중국 학생들

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올바른 길에 섰다. 이와 같이 미 의회가 4·3유가족에게 자금을 할당하는 법을 만들어 그 후손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원하는 등 배·보상을 해준다면, 영원히 선하고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진전을 이뤘다. 우리는 미 의회에 우리의 뜻을 전했다. 또 4·3연구소 김영범 이사장이 진실 없는 평화는 없다고 했다. 그 어떤 진실도 평화가 없으면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어떠한 평화도 의미가 없다.

● **진리** 나는 한반도에 대해 연구해 왔다. 처음에는 AP, 뉴욕타임스, BBC 기자로서 한반도에 대해 취재해 왔다. 오늘은 제주역사에 대한 세션에 참가하게 됐다. 특히 4·3유가족, 학생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과 이야기할 것이 많다. 나는 기자로서 어떻게 하면 4·3에 대해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지,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려 한다.

여러 증거, 증언을 수집하고, 제주공항에도 유해가 발굴된 걸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일들에 노력해 온 제주4·3연구소에 감사하다. 대중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암울했던 역사를 직시하게 해준다. 제주포럼을 통해 4·3을 좀 더 글로벌한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야 한다. 4·3의 진실을 미국에도 알려야 한다.

세계와 진실, 진실규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한국 정부도 꾸준히 노력해 왔고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다. 미국의 책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유가족, 도민들은 미국이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기를 원할 것이다. 과연

미국의 적절한 사과와 배·보상이 가능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다뤘다.

우리는 타지역, 타국에서 4·3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4·3은 단지 한국의 한 사건으로 취급될 뿐이다. 4·3은 제주의 역사가 아니라 냉전의 유물이고 냉전의 역사이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제주학살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은 올해를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 70주년, 북한은 전승일로 기념할 것이다. 이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계속해서 냉전에 대해서 배우고, 냉전의 진실을 보고, 냉전시기 학살의 진실을 봐야 한다. 특히 4·3사건을 배워야 한다. 어떤 정치·경제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3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대사를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인지도를 높일까? 교육과 언론이 있다. 더든 교수가 코네티컷대학 한국사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다. 더든 교수가 20년 전 학생들을 데리고 왔다고 알고 있다. 그때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한국 역사에 대한 필독서를 추천한다고 들었다. 4·3을 직접 와서 배운 반응도 궁금하다.

이성윤 교수는 기억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허호준 박사에게도 궁금하다. 4·3에 대해 젊은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친척, 가족,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스토리코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미국에도 제주 이주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기억과 경험, 입장을 후손에 전달하고 복원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미 존스홉킨스에서 김유정 씨가 4·3후손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기밀이 해제된 기록과 유물들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 등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차원에서, 한인 출신 조부모에게 들을 수 있다. 요즘 인기 있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는 퍼스널스토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스토리텔링 방식을 배워야 한다. 넷플릭스를 보라. 225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한다고 했다. 다큐멘터리도 포함된다. 거기에 4·3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4·3과 관련된 제주 출신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4·3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진실을 파악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 **가렛 에반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3만 명의 양민이 잔학하게 살해된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 기억이 좀 더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2004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류에 대한 범죄, 르완다 발칸반도 대학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잔학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 제주에서의 70여 년 전 비극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제주4·3연구소의 연구, 평화재단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

로 4·3의 이야기가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션의 테마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책임의 원칙을 되살리고 강화시키는데, 미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미국의 책임 범위는 역사적 증거에 따라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워싱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미국이 미국에 의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오늘 세션을 통해, 증거 기반의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인류에 대한 잔학한 범죄가 일어났다. 모든 발표자들, 특히 이성운 교수의 발표에 감명받았다. 미국이 지금, 명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면 한미동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서로 존중하게 될 것이다. 다만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바르샤바에서 1970년대에 일어난 일을 알 것이다. 독일은 대단한 사과를 했다. 일본에도 독일과 같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한국에 자행한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했듯이 바이든도 그렇게 해야 한다. 70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바이든도 똑같이 해야 한미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광범위하게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예외적인 국가가 되려 하고, 슈퍼파워의 입장을 가져왔다. 그런 미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도덕적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해야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정인** 미국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현실적 방법은 무엇일까?

● **알렉시스 더든** 분명히 가능하다. 뭔가 이뤄지게 하려면, 이게 가능하다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에반스 전 장관이 이야기했다. 독일이 폴란드에 사과하지 않았나? 오바마도 히로시마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나? 물론 말로 하지 않았다. 사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스처가 중요하다. 4·3의 경우는 이성운 교수가 말했듯이, 바이든이 직접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한다면, 충분하지 않지만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일본의 유명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은 난징 대학살에 대해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끊임 없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바이든이 평화공원을 방문한다면, 유족들이 사과를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절대로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그러니까 경찰 가족들이 나서야 한다. 인류애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공동의 인류애를 교감하는 것이다.

● **문정인** 미국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주도의회에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의회가 그럴 수 있을까? 사죄에 이르기까지 미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이성운** 의회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선례가 있다. 조금 전 진 리가 노근리를 이야기했다. 그때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보도했다. AP통신에서 보도하자 여러 언론에서도 국제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사죄를 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말라. 의견을 밝히고, 특히 미국 내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미국에 4·3희생자 유가족 미국

협회가 있다. 미국 시민들, 서포터들이 끊임없이, 행정부와 의원들에게 기억을 떠올리게 해야 한다. 미뤄두면 안 된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주한 미 대사관을 이용해야 한다. 분노하지 말고, 미국의 책임을 차근차근, 미국이 책임이 있음을, 의무가 있음을 용기와 차분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계속 노력하면 낙관론을 잃을 이유가 없다.

● **문정인** 미국에서 일반 대중의 여론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미 의회를 움직여야 하는데, 어떻게 미국의 대중 여론이 움직이도록 할 수 있을까?

● **진 리** 미국인들은 흥미로운 것을 매우 좋아한다. 사람들은 북한 뉴스에 관심 없지만, 북한 내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 개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4·3도 마찬가지다. 미국인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사회는 정보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인의 개인적인 삶 등을, 스토리로서 전달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이뤄져야 한다. 노근리 사건이 좋은 예이다. 과거에 아무도 몰랐을 때 AP통신이 먼저 취재하고 보도했다. 국제 언론이 전달했다. 당시는 신문을 통해 전달됐다. 지금은 신문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해야 한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를 활용해야 한다. 인간이 관련된 내용, 전 세계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 **문정인** 워싱턴 현지에서 보는 4·3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 인식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달라.

● **김유정** 아시아학과, 한국학 관련한 선생님들,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4·3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특히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평화재단 연구원으로 4·3자료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4·3특별법 제정 이후 미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워싱턴의 상황은 유감스럽게 큰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작은 노력이지만, 미국에 있는 유족회, 4·3평화재단이나 연구소에서 여러 미국 자료와 함께, 미국에 있는 선생님, 학생들을 위해 포럼을 개최해 준 덕분에 그 전에 비해 나아졌다. 내가 4·3을 가지고 미국 과학기술부의 선택을 받아 4·3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와 같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이다.

● **문정인** 4·3은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배·보상도 이뤄지고 있는데, 여순은 어떻게 하면 반전할 수 있나.

● **허호준** 4·3 기사를 쓸 때 되면, 가끔 전남 보성에 있는 유족회 할아버지가 꼭 손편지를 한다. 그리고 전화도 와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미흡하다 이야기한다. 아까 4·3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문제는 지역 사회의 단합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언론, 사회단체, 유족들이 힘을 합쳐 유족들을 찾아다니는 노력이 필요하다. 4·3은 35년 전부터 이미 그런 작업이 저변에 깔렸다. 여순은 아직 그러지 못했다.

● **문정인** 비극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꿈은 이뤄진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미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이 평화공원을 방문하고, 경의를 표하는

사진 한 장 만으로도 제주도민의 한을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지만 바이든이 그것만을 목적으로 방문할 수 없다. 정상회담 등을 기회로 방문해야 한다.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워싱턴에서 4·3 관련 포럼을 개최한 것이 큰 임팩트가 됐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학계에 영향을 준다. 워싱턴에서 포럼을 열더라도 4·3만으로 미국인들은 오지 않는다. 대신 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한국전쟁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전쟁의 한 세션으로서 다룬다면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미 대사라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렛 에반스 전 장관이 4·3모델은 세계화 보다는 보편화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가해자, 피해자가 화해를 하고, 배·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것이 4·3모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완벽하지 않다. 다만 남아공 모델, 유고슬라비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4·3모델은 성공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 사람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체계화된 모델을 만들고, 국제회의도 하고, 공유할 때, 제주4·3의 해결 모델이 보편화, 세계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4·3에 대해 미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여론이 중요하다. 특히 4·3이 정치적, 이념적 사건이 아닌 도덕적, 인권 문제인 사건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미국 국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한국 혹은 제주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 있는 제주도 출신 혹은 4·3유족, 미국 현지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가 필수적이다.
- 4·3의 해결 과정은 정치적,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과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요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때문에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으나, 발생 가능한 사회적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4·3문제 해결 모델은 국내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편화가 필요하다. 보편화를 위해 4·3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3과 같은 과거사 문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는 대부분이 과거사 문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학살, 인권 유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인식하더라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한정적인 것이 한 원인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SNS일 수도 있고, OTT서비스를 통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영화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4·3을 일반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접근: 젠더·생태·평화



좌 장	김연철 (사)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장관
발 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 론	주드 칼 페르난도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교수 박영아 하와이대학교 교수 전원근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엘리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외래교수
기 록	박혜정 (사)북한연구학회 사무국장

● **김성경**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아침 서울에서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그 정도로 한국에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논의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한반도 평화 담론, 한반도 평화 실천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면 사회적 현상이자 징후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다.

2018년도 한반도에 평화의 계기가 왔었고 남북 간 대화가 활발해지고 비핵화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시민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 개인적 수준의 평화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남북관계 개선이라던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해서는 많은 목소리를 모아내지 못하고 있던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것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체성, 그런 습속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상황이라기 보다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 생각한다. 최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바꿀 의지는 없다. 기후 위기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대로 여전히 소비적이고 특별히 나의 일상을 희생한다거나 변화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극우주의의 부상이라던가 국가우선주의, 파시즘의 징후가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 의식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 의식 조사는 서울대학교와 통일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축적된 자료가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 2007년도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3.8%였는데 2018년도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18년도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았던 19년도, 20년도 다시 떨어져서 약 50% 정

도 되는 응답률을 보였다. 통일연구원 수치도 비슷하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됐던 시기에만 50% 아래로 떨어졌고 나머지 기간에는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학대학원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을 확인해 보니 명시적인 수준에서 “통일을 원하십니까, 통일이 되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도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수준에서는 이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점들이 우리가 걸으려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남북이 어떤 식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통일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이후로 통일과 평화 공존 사이에서 평화 공존을 선호하고 있었다. 약 40% 조금 넘는 응답률로 평화 공존을 선호하고 있는데 점점 더 간극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가.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일이 아니라 평화 공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징후가 하나씩 드러나는 문화적, 사회적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창 올림픽의 경험이다. 갑작스럽게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단일팀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만들어졌었다. 예전처럼 단일팀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가 깨진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때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우리 선수 한 명이라도 경기에 출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적절하지 않

는 여론이 생겼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관심도 높은 수준이다.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015년 50% 정도에서 꾸준히 증가했다는 게 중요하다. 2018년 전환국면에서도 북한에 무관심한 사람이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평화를 분단이라는 분단국의 상황과 연동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국 사회의 지점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평화를 상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군사적 힘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화를 상상할 때 항상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중요한 증거이다. 이것은 평화가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어떤 의미로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평화의 개념사를 연구한 여러 기존 연구는 평화의 개념은 라틴어의 어원으로부터 타자, 친구를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뜻과 도덕적 개념으로서 사랑과 은총 2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으로부터 친구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인해서 안전이나 안보를 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과 은총과 같이 좋은 관계를 맺는 도덕적 개념도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안전과 안보를 뜻하거나 사회적인 맥락이 거세된 채로 개인의 평화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들이 적어도 평화라는 개념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의미 속에서 정의로운 전쟁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친구와 적이라는 이분법적 관계가 만들어져 있고 친구들이 하는 전쟁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 되고 친구가 아닌 적이 하는 행동은 반평화적인 전쟁이 되고 부정적인 의미의 전쟁으로 인식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평화 상태가 무엇인지 감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정전체제 70년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무감각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평화와 연관된 단어를 생각했을 때 비둘기를 이야기하거나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 마음의 평안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평화를 비둘기로 상상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현상이나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수준에서 문화적 상징으로밖에 감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분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식 체계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고 평화를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로 응답한 것이 불과 1.7% 정도인 것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평화 개념이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그 이후에 평화라는 개념이 특정 정부의 정책으로 위치지어지고 평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념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오염되는 그런 상황도 목도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됐는가? 민주화 시대라던가 그 전에 거대서사가 작동하던 시기에는 진정성의 마음이라는 마음의 체계가 있었다가 IMF나 신자유주의로 경제체제가 변화하면서 생존주의 마음의 습속이 강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자신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정과 정의 담론 내에서 북한과 관계 맺기, 경험, 북한과 평화를 만들기 위한 비용 같은 것들을 다 부정의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생각

된다. 특히 이런 신자유주의 주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부정의 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수많은 갈등과 배제, 혐오가 확산되는 것이다.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던가 도덕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 바로 현재의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만들어 내는 군사적 위협이건, 분단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들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평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한국 사회에 있는 분들, 특히 젊은 층에 왜 평화에 관심이 없냐고 물어보면 “지금 내 삶이 전쟁 중인데 국가 간에 미사일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세상에 핵무기보다 무서운 건 실적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사회적 공명을 전혀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멸망’이다. 여러 가지 문화적 상징에서도 이런 멸망이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특히 소설과 영화에서도 좀비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자체가 지금 현 사회가 불공정하고 힘들기 때문에 리셋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정동이 한국 사회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최근 페미니스트 여성 가수 이랑이 '환란의 세대'라는 노래를 냈고 그 노래가 대중가요상을 받기도 했다. 이 노래에서 “모두 다 싹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 특히 여성같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지금 이 멸망의 정동은 뭔가 변

화를 만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좌절된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멸망이 없애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멸망 이후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김연철**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평화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대해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도 “낙관은 상투적이고 비판이 현실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만큼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너무 상투적으로 하는 괴리를 인정하고 인식해야만 대안도 거기에 맞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로 이해를 했다.

● **서영표** 저는 제주인으로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실질적인 경쟁 환경에 놓여있는 개개인이 그 경쟁을 재생산하고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주 사람들을 보면 생태, 평화 많이 이야기하는데 말과 실제로 하는 행위 간에 엄청난 괴리감을 느낀다. 실제 행위나 개발 정책은 생태와 거리가 멀고 평화와도 거리가 멀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성찰적으로 반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 발표의 내용이다.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은 무정부주의 생태주의자고 사회생태론 개념을 만들었다. 북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만들어진 위계적이고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습속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에서 사회적으로 길러진 습속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북친은 이를 지배와 위계의 심성이

라고 이야기를 한다. 결국 시장 질서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근대에서는 시장 질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습속이라는 것이 공격적이고 위계적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언급한 '감정구조'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이며, 이론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한 시대를 살고 있는 문화적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문화적 삶의 방식을 뜻한다.

우리 시대의 감정구조란 무엇인가? 경쟁과 실력이다. 이것은 성취를 목표로 하고 성취는 성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장은 타자를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공리주의와 경제학이다. 근대적인 인간상은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표상하고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세계를 모두 수치화시키는 것이다. 수치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두껍고 부피가 있는 세계를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 사람이 자연의 존재일 수밖에 없으면서 사람을 객체로 보고 그 객체를 상품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런 식의 습속이라는 것이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를 분리시킨다. 그리고 거시적인 세계는 무력충돌과 군사적 대결, 무역 전쟁, 기후위기와 팬데믹이다. 국가는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결국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에서밖에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면 일상은 이기적 욕망이고 이기적 욕망의 눈으로는 단기적 이익을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기적 욕망과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개개인은 결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끊임없이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무력 충돌, 무역 전쟁, 군사적 충돌 같은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늘 부차화시키는 것이 현실임에도, 계속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탓한다. 경쟁밖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좌절을 넘어서기 위해 약자를 찾아서 그보다 우월함을 느낌으로써 존재감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습속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거시적 전쟁 상태를 재생산한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일상과 감정구조를 들여다보면 개발과 성장을 빼놓을 수가 없다. 한국의 경제화는 압축적이다. 제주의 근대화는 압축된 근대화를 더 압축한 빠른 시간 안의 성장이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압축적 근대화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짧은 시간 안에 우리도 할 거야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압축적 성장을 상징하는 것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이다. 자동차가 지배하는 공간이고 메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추진된다. 제주가 가장 힘든 것은 수용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 사업이다. 자연은 절단되고 소유되고 가공되고 팔리는 상품이 된다. 결국 제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더 높은 삶의 질이지만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렸으며, 단기적 이익 추구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북친이 경고한 우리 시대의 감정구조일 수 있겠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자연, 인간 실천 사회가 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다. 그 정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몸과 무의식에 각인되는 대결, 경쟁, 전쟁의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 강의실에서도 제가 출석을 부르지 않으면 화를 낸다. 내가 나왔는데 나오지 않은 애들과 나를 동등

하게 대하는 것이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이것이 대결의 논리, 전쟁의 논리인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자가 필요한 것이다.

확대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 용어로는 축적인데, 축적을 위해서는 이윤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싼값에 원료와 노동력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이주자, 여성, 빈곤국의 인민이라고 하는 이주노동자, 자연으로부터 생태주의적인 비판, 페미니즘적인 비판, 반인종주의고 포스트 식민주의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작은 서사가 중요한데 이 시대는 다시 거대 서사에 압도되고 있다고 한다. 거대 서사란 북한의 핵 위협, 미국과 중국의 대결,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 핵무장, 북한과 공존, 한미일 동맹 강화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거대 서사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실천들이 의미없는 것으로 격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역사적으로 그 작은 것을 놓쳤기 때문일 수 있다. 작은 것들부터 물질적 관계, 행위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거대 구조에 있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그런데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거시적인 구조에 압도돼서 경쟁의 감정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비는 소위 멀티스케일이라고 해서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 나의 신체 부분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상에서의 저항이 중요하다. 우리는 몸과 무의식, 시간과 공간에 가해진 폭력과 상처가 있지만 잘 인지하지 못한다. 왜냐면 신자유주의적으로 살았고 그 습속을 내면화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상처를 상처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

로 무감각해진 것이다. 사회적 붕괴, 아노미적 상태 일 수 있다. 대결과 위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 지배적 감정 구조 안에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새롭게 출현하는 문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근대적인 삶의 양식에서 우리를 괴롭힌 건 위계적 질서이다. 하지만 전근대적 위계적 질서의 다른 면은 유대와 돌봄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성장주의이지만 그 근대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는 것은 민주주의이다. 탈근대적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극단주의적인 수비주의이다. 하지만 탈근대적인 문화적 아이디어는 정체성과 다양성의 차이의 인정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긍정을 찾아서 잡종, 혼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이고, 지배적 구조의 측면으로부터 단순히 말이 아니라 물질적 변화를 찾는 실천을 해야 하고 그것이 문화적이고 제도적이고 물질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 연대를 재고하는 것이고 생태적 감수성, 차이의 인정, 국가와 시장에 맞서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된다.

유대와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혼종, 차라리 잡종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종으로 인정하면 그 누구도 차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잡종으로 인정하고 잡종은 결국 나와 섞여 있는 모든 대상들과 모든 존재를 함께 돌보는 것을 가져야 진정한 잡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같은 사람도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작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거대 서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작은 실천을 가능하

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 서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질문인 것이다.

● **김연철** 서영표 교수님께서 거시적인 질서와 미시적 일상이 분리되고 악순화되고 파편화 되는, 제주가 안고 있는 환경과 개발 사이의 괴리를 지적해주셨고 그래도 희망의 지점을 짚어주셨다. 일상의 변화에서 시작하고 작은 실천들이 연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었다.

● **주드 랄 페르난도** 전 세계 분쟁들은 국지적인 부분이 있다. 반면 로컬도 글로벌적 의미가 있다. 전 세계적인 분쟁은 양면적이다. 하나는 전쟁 패러다임이고 다른 한쪽은 평화 패러다임이다. 지난 시간을 보면 우리는 둘 다 겪었다. 그래서 평화를 향한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평화와 민주에 대한 억압이 있었다. 오키나와, 한반도, 대만, 우크라이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스리랑카, 이라크 이 모든 지역의 경우를 보면 아주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 어떤 순간에는 평화적인 협상이 있었다. 그런 반면에 이 모든 행동과 모든 시점들은 파괴된다. 지금 인류 역사의 이 지점을 보면 강력한 전쟁을 향한 주어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 패러다임도 아주 없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면 왜 평화협상을 중단하고 전쟁을 조장하는가? 왜 전쟁을 추구하는가? 이걸 독점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폭력을 독점하고 있다. 유일한 전략이 됐다. 이걸 권력의 투영이다. 다른 국가, 지역에 대한 패권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타자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타자를 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이 있다. 이런 존재론적인 적이 누구인가? 중동, 러시아, 중국, 유럽도 이런 적이

었다. 왜냐면 유럽은 군사 패러다임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 육상, 해상, 항공 우주, 사이버 기술 그리고 실제 군사가 있다. 이걸 통해서 군사력을 만들고 이걸 위해서 인간이 사용된다. 2006~2007년으로 가보면 4년 주기 국방조사보고서에 가장 큰 적은 중국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그런데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1/3밖에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보 위협인 것이다. 예전에는 영국이 가장 광대했었다. 미국과 소련은 군사력으로 제국적이었다. 이들은 분단 구조를 형성했고 한국에서는 냉전을 다 느껴보셨을 것이다. 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단일 제국이었고 Pivot to Asia 전략을 비롯해 다양한 전략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군사 협정을 통해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전능하다고 느끼나 비참함을 초래하는 경향을 본다. 이게 전쟁 패러다임이다. 엄청난 양의 혼돈과 비참함이 생겨난다. 평화를 없애는 비용이다. 그런데 다른 관점을 어떻게 가지는지는 다르다. 팔루자는 이라크의 도시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이야기 하면서 왜 이라크는 이야기 안 하는 것인가. 팔루자 남성, 여성들은 방사선에 오염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항공모함 이름을 USS팔루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쟁 패러다임은 이 잔악한 행위를 성스러운 것으로 포장한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정당화된다. 소프트웨어에는 다양한 단어들 사용된다. 전쟁 패러다임과 전쟁주의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군국주의가 정당화되는 방법은 전 세계적인 전쟁과 테러이다. 이걸 스스로의 종교이고 믿음이다. 이슬람 거부증에 대해서 정당화한다. 그리고 이런 혐오증이 소프트웨어가 된다. 우리가 생각

하는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다. 더 정신적이고 더 도덕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 슬퍼해야 하는가에 대해 슬퍼하고 피해자는 가치 있는 피해자와 가치 없는 피해자로 나뉘게 된다. 어떻게 전쟁 피해가 정당화되는가? 모든 근대적인 것이 이것으로 정당화된다. 스리랑카도 평화가 군국주의가 됐다. 그리고 모든 인도주의도 군사화가 됐다. 한반도도 군사화가 됐고, 리비아의 민주주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 억압이 이에 해당한다. 아프가니스탄이 왜 침공을 받았을까? 9.11에 대한 복수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민주주의의 무기'라고 말했다.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반핵 운동은 성스럽지만 지구는 영구적인 전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전쟁 패러다임 대 평화 패러다임 인 것이다. 그래서 취약점에 창을 닫는 것과 여는 것에 차이가 있다. 전쟁을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약하다.

2차 대전 피해에 대해 유럽에선 핑계를 만든다. 냉전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의 경제 회복을 구축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경제 협력에 대한 공감이었다. 한중일 간에도 평화 패러다임이 있고,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한 추구되어야 하지만 끝나서는 안 된다. 김성경 교수 발언처럼 개발모델을 넘어서야 된다.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고, 인간이 자연을 모독하는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취임식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장애인, 원주민, 재활용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룰라 대통령을 지지했다. 아마존 보호도 약속하고 여성과

소외된 계층을 살피고 다른 모든 인간의 관심사를 강조했다. 옷, 식량, 엔터테인먼트, 자연 등이 평화 패러다임의 근거를 이룬다. 전쟁 패러다임이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 **박영아**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한반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에 대한 인식의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다. 외국의 언론에서도 이런 간극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고 한국인들의 심리적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그 이유로 언급했던 기억이 있다. 김성경 선생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소극적 의미에서의 평화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구현 가능한 것으로 등치되는 거시적인 상황과 파편화된 신자유주의적 주체들이 마음의 평화에 전념하는 미시적인 맥락이 공존하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분석해 주셨다. 김성경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최근 <한국 정치 리부트>라는 책을 내신 중앙대 신진욱 선생님과 대화해 생각났다. 신진욱 선생님은 현시대의 키워드가 무기력이라고 했는데 김성경 선생님이 현시대 북한에 대한 정동이 혐오, 무기력, 절망, 멸망이라고 언급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김성경 선생님의 글이 좀 우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평화사상의 계보를 훑으면서 “평화 사상 자원”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한국에서 “평화 경험 자원”이 우리 역사에서 전무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다.

몇 년 전 한 대학에서 주최했던 개성공단에 대한 워크숍에서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갔던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남북 경제 협력을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통일

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적대성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으로 보면 경험을 하나의 평화 경험 자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당시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5만 5천 명 정도였고 가족까지 합치면 25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통해 남한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원래는 군사지대였던 개성이 개성공단 때문에 지역의 성격이 어떻게 완충지대로 더 나아가 평화지대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에 대한 학술서적이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얼마나 대중매체에서 폭넓게 다뤄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참석했던 워크숍에서는 주로 한국 기업가들의 서사만 드러났는데 당시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남북한의 평직원들의 이야기도 많이 궁금했다. 내가 하고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요약하자면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담론이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해가더라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agency(행위자성)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연구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희망적으로 현실을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서영표 선생님이 발표한 제주의 생태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없지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하와이와 제주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 흥미롭게 읽었다. 하와이도 관광산업이 중심인 섬이고 군기지의 영향이 큰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규제를 많이 했고 공식적인 락다운이 있어서 하와이에 관광객이 거의 오지 못했는데, 물론 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광객의 부재로 하와이 주민들이 경험한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다. 교통 체증이 심했던 와이키키 해변 앞의 도로가 텅 비면서 하와이 주민들

이 몰려나와 대로를 천천히 걸어 다니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고 관광객들로 주차가 어렵기만 했던 아름다운 해변을 하와이 주민들이 처음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하와이 주민들의 압력으로 하와이의 관광 홍보청을 없애려는 주의회 발의가 있기도 했다. 또 최근 해군기지의 오일탱크가 오아후섬 물 공급의 중요 수원지 위에서 새면서 오염된 물을 마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수도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해군기지의 오일탱크를 제거하자는 주민운동이 활성화되고 결국 군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서영표 선생님이 제주의 생태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짚었는데, 하와이와 제주의 유사한 점 때문에 하와이라는 다른 맥락에도 유의미한 이론 틀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여러 억압적 상황이 주민 저항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제주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졌다. 제주의 시민사회 운동 단체들은 개발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담론과 정책에 어떤 식의 저항을 했는지 그 저항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 **김엘리** 한국 사회에서 평화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김성경 교수님은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셨다. 그동안 평화에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대부분 분단 사회에서 빚어지는 군사안보의 신비화, 강한 우선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는데 김성경 교수님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와 연계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일상과 연계시키려고 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행동에 머물게 하는 마음의 습속이 공정성과 만나고 북한을 타자화하면서 남북관계

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현실, 개인의 안전한 삶과 국가의 평화담론이 유리되면서 평화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이 안착할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평화를 재사유한다면 오히려 평화의 자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평화를 말할 수 있다는 역설에 기대고 싶다. 사람들은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오히려 불안정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 불안정한 존재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평화를 사유하고 평화를 수행하는 것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자신의 불안정성이 글로벌한 폭력 구조와 연결된다는 인식의 지평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이다. 이런 면에서 파편화된 개인의 인간성 회복은 일종의 형성 구조와 연결된다. 이 구조화된 감정구조, 말하자면 멸망, 혐오, 절망, 이러한 감정 구도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말로는 충족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의 안전한 삶이 국가의 평화 담론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평화 공론장이 약하기 때문인데, 이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 역량의 하나의 지점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낯설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 군사안보의 쿼어링하기다. 지금 전쟁을 멈추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무기 생산과 거래서 이루어지는 기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이 성평등과 다양성을 상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성취로 이어지는 이상한 시대에 있다. 그리고 인권과 여성 해방이 일종의 전쟁의 명분이 되는 괴상한 시기에 있다.

또 하나 파편화되고 개별화되고 소비자로서 주체를 사적 영역에 두는 것은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을 계속 위계화하는 이원화된 틀에 있다고 본다. 이원화된 틀은 전쟁 패러다임과 맞물려 있다. 한국 사

회의 20~30대들은 연애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비혼이 증가하고, 국가는 자꾸 저출생의 시대라고 계속 여성들로부터 아이를 낳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생산과 노동 영역과 경제를 변화시키는데 오히려 이런 재생산 영역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재생산 영역을 조금 더 진지하게 조명해 보면 돌봄 없이는 사회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유와 실행으로 전환해야 된다. 우리는 돌봄을 여성의 것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타개하면서 재생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질문해 본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간 안보가 군사 안보의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했지만 사실은 인간은 이성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젠더화된 인간이므로 비인간화된 인간의 존재를 종속시키는 인간 중심적 사유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한 평화이고 안보인지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다.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자에서 나아가서 동물,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와 함께,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정밀하고 조심스러움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 **전원근**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질서 속에서 재생산되는 불평등하고 취약한 삶의 조건들이 우리와 세계와의 관계, 우리와 타자와의 관계, 배타적인 생존이나 성장 경쟁, 혐오의 정치로 이끌고 있고 진정으로 정치적이어야 할 문제들을 전쟁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주체성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의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신자유주의를 우리와 타자와의 관계, 우리와 세계와의 관계, 친구와 적을 나누는 것, 인간

과 비인간을 나누는 것, 이런 경계들을 정의하는 것이 다시 정의가 되는 그 방식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사실 그렇게 정의하는 장치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다. 올해 제주포럼 대주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리적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평화와 번영 앞에 붙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주체의 형성이라는 것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대안적인 주체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 또, 멸망에 대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말고도 요즘 많은 청년들이 웹소설과 이세계, 다른 세계로 가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새 출발을 하는 상상을 한다.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과 질서로 표현된다. 정당하게 일하고 노력하면 어떤 성과를 받을 수 있다는 규칙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존재가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일 수도 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멸망이라고 하면서 약간은 비관주의적으로 말하였지만 사실은 청년들의 문화 표현 속에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질서나 새로운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전쟁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일상의 평화, 내 삶의 평화를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개발을 동시에 하는 괴리를 극복해야 함.
- 전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평화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함.
- 오늘날 전쟁 패러다임, 일상에서 경쟁 심화, 젠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야기된 점을 인식해야 함.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비전: 한·미·중의 시각



좌 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발 표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국방연구원
청 사요허 인민대학교 교수
기 록 장정훈 외교부 평화체제과 외무사무관

● **김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면서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평소 이를 준비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통일 비전 외교의 기치 아래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실제로 지난달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4.26)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를 명문으로 표명하였으며, 최근 EU와 독일 정상의 지지와 호응도 이어졌다. 한반도 통일은 모든 관련국이 평화라는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평화의 한반도, 새로운 성장동력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는 자유의 한반도를 이룩할 것이며, 그 혜택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에 모두 돌아가게

될 것이다.

● **브루스 베넷**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이 합의로 진행하는 평화통일이다. 성공적인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한미간 통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며,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남북 간의 통일 논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북한 엘리트층의 동의이다. 북한 엘리트층은 김정은 정권하에서 자신들이 누렸던 삶이 통일 이후에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 엘리트층의 안전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보장 요구에 대한 정책 수립, 그리고 북한 체제에서 이들이 자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사면 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북한 엘리트층이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북한 군인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중 일부는 통일된 군대에 재편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독일 사례를 보면, 구동독 군인의 20% 정도만이 통일 독일의 군대로 재편되었다. 결국 나머지 군인들을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시키지 않으면 이들은 무장세력으로서 통일 한반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 군인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예컨대 이들이 북한 지역 도로 공사 와 같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도록 교육하는 등 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책을 준비하고 지원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 **청 사오허** 중국과 한국은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양국은 공통으로 분단된 상호 간 적대심,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력 낭비, 군비 경쟁 등 분단이 야기한 다양한 문제점을 경험했다. 그렇기에 양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통일 추구 과정에는 몇 가지 도전 요인이 있다. 우선 미·중 전략경쟁 심화이다. 미중 경쟁으로 인해 북중관계는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남한과 미국의 희망과 달리 중국은 안보리에서 이들에게 협조하기를 꺼리고 있다. 동시에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볼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모든 측면에서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이한 대미 관계로 인해 한중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도전 요인이다.

남한은 서방과 함께 대러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러

시아는 자신을 지지해 주는 몇 안 되는 국가인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결속을 계속해서 심화해 나갈 것이고 이는 한반도 통일의 악재로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공세적 핵교리 채택과 도발, 그리고 이에 대응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같은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 또한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물론 북러관계의 심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약화가 북한의 약화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유엔 안보리 및 각국의 독자적 제재 등 견고한 대북 압박이 지속해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통일의 기회요인일 것이다.

● **박인휘** 한반도 통일 미래 준비를 위해 당면한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통일외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 통일 비전에 대한 역내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정세와 긴밀히 연결되는데, 오늘날 동북아 주요 국가는 정치안보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해 중국에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제고되면서, 한반도 통일 달성을 위한 여건은 더 악화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이 이러한 역내 정세 속에서도 우리 통일을 지지하도록 견인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통일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한국 외교의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북핵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속해 온 경제적 유인책 제공을 통한 비핵화와 같은 기능주의적 대북 접근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 결과 북핵 문제는 계속해서 심화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

는 핵보유국 지위 추구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

Q & A

Q. 청중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것인가?

A. 청 사오허 미중 경쟁 속에서 북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모두 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이다. 한국의 평화통일은 중국 통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본다.

A. 브루스 베넷 중국은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나, 통일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통일 이후 대량 탈북으로 인한 중국 내 난민 발생 또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중국이 지닌 안보 우려 사항에 대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A. 박인휘 북한은 중국에 중요한 완충지대이다. 특히 중국은 천 년 이상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믿는데, 남한 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런 영향력을 잃을 것을 우려한다. 결국 통일 한반도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 구성과 이에 기반한 외교적 설득이 필요하다.

Q. 청중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은?

A. 브루스 베넷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 등 군사적 역할은 한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 지역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투자 등 일본의 경제적 역할은 예상해 볼 수 있다.

A. 박인휘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일관계가 지닌 다층적 측면을 감안하면, 개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A. 청 사오허 한일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일본 안보는 한반도 정세와도 직결되므로, 최근 북한 도발 대응 과정에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었듯, 일본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도 더욱 많은 역할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Q. 청중 통일 이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전망은?

A. 박인휘 북한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주요국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은 중요하다. 다만, 유럽과 달리 동북아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정치 안보 분야의 신뢰 형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였고, 동북아만의 공유되는 지역적 정체성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 청 사오허 미·중 전략경쟁 심화, 러·우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안보리와 같은 기존 메커니즘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동북아에서 신규 메커니즘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상그릴라 대화, 서울안보대화, 향산포럼 등 역내

존재하는 다양한 1.5트랙 안보 대화를 활용하거나, 6자회담 등 기존 소다자 협의체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A. 브루스 베넷 동북아에서 NATO와 같은 집단안보 체제가 구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 유휴 군사력에 대한 군축 및 군비통제 등 상호 간 위협인식 감소를 위한 역내 협력체계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거 핵무기 관련 SALT, START 협정이 미러 간 긴장을 완화했듯이, 미중 간에도 가까운 미래에 이와 유사한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나가는 통일외교가 중요하다.
- 주변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평화네트워크와 특구의 정치경제: 제주도 세계특구포럼 개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좌 장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발 표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김지운	충남대학교 교수
토 론	이영훈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DMZ평화센터장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기 록	김나윤	Georgetown University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 **민경태** 과거의 제조업 위주의 경제특구 개념에서 탈피하고, 지식 생태계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가장 단 시간에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여 남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의 현 시점에서 the Singularity란, 인공지능(machine intelligence)이 인간의 지능(Human intellect)을 넘어서는 지점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남북한의 경제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되는 시점과 겹친다. 따라서 과거 경제 도상국 시절의 경제 발전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즉, “모든 산업의 지능화”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공간적 그릇인데, 북한에서부터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한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우위에 놓여 있지만, 그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 갈등과 이미 개발된 인프라가

많아 남한에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북한은 토지 보상 비용이 적다는 점 등 기존 인프라의 해체나 전환 비용이 크지 않게 신규 인프라 구축이 가능기에 북한에 먼저 스마트 시티와 기술을 적용하고 남한까지 확장하여 남북한의 교차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지리적 연결을 통한 지정학적 네트워크(connect+geography)를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과거에는 상대 국가보다 물리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지배/피지배 관계를 정의했다면, 지금은 공급망을 차지해야 한다. 에드워드 블레이저의 “도시의 승리”에 의하면, 도시는 인류 문화의 모든 창의성이 결합된 발명품이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할 수록 오히려 직접적인 연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즉, 교통망과 물류망 등 도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한반도 연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서울-평양, 남북한을 잇는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서울과 평양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것은 단순 지리적 연결의 개념이 아니라 물류 통합시스템을 통해 한반도 전반의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다. 거점 물류센터, 지방 배송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연결하여 한반도에 거대한 인공지능 컨베이어 벨트를 구축한다. 이는 서울의 첨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평양까지 확장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서울이 아닌, 북한의 어느 지역에 시작한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서울과 평양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발전된 기술력을 결합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단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자의 강점을 합쳐 효율적인 경쟁 협력을 도모하고 분업 구조를 추구할 수 있다. 서울-평양의 메가시티 구축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역에 이 광역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 시대 속에서, 한반도가 갈등과 충돌의 에너지가 아닌 평화의 교류와 협력으로 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요점이다. 제주 특구 세계 포럼 개최를 통해 제주를 “국제적 평화경제”의 모델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 **성원용** 러시아 연방 정부가 경제특구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제주와의 연계협력 가능성과 세계특구포럼 개최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다룰 것이다.

러시아 연방의 특구는 대부분 자원, 경제, 정치의

중심지인 서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에 극동지역은 소외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다수의 국가와 접경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어 특히 한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곳이다. 하지만 극동지역은 거대한 영토에 비해 부족한 노동력과 열악한 투자 환경 등 큰 한계가 있다.

러시아는 이미 낙후된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APEC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개발을 위해 연방예산을 유치하고, 하바로스크 지역에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극동 중심지를 옮겨서 연안지역을 개발하고 동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크게 두가지 극동 개발 전략이 있는데 각 지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해서 투자 유치를 이끄는 것과 항만 도시인 블라디보스톡을 개발하는 것이 있다.

러 연방 정부는 블라디보스톡에 자유항을 구축했는데 이는 어떤 한 업종을 특화시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정책이다. 다른 선도 개발 지역보다 블라디보스톡 지역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심 투자 유치라는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그 결과 서구의 대러 정책이 강화된 현 시대에 과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전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의점으로 보인다.

극동지역 특구의 문제점은 극동지역의 환경에 맞춘 발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중앙의 이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동과 중앙의 이

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며, 또한 너무 많은 특구를 두다 보니 특구의 차별성이 사라졌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도 과연 외부의 투자를 계속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연해주는 한국에게 매우 친밀한 공간으로 한국의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한-러 양자 이해관계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해주가 다국가의 접경지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특구는 한반도의 공간 전략의 입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신 동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듯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고 극동지역의 아태전략과 인태전략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루자 한다면, 그 중심은 제주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제주포럼 또는 세계특구포럼 개최를 통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섬 개발 경험을 러시아 극동지역과 공유하는 등 극동의 시대를 대비한 소통의 플랫폼을 제주도 중심으로 구축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극동의 특별행정지역 루스키섬은 도시개발형 특구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도의 개발 경험을 검토한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 제주도와 러시아 루스키만이 아니라 이런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주변 국가를 찾아보고 교류를 강화한다면 지금까지 그저 대안으로 생각했던 경제특구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김지운** 중국 선전 경제특구의 성공과 도전, 그

리고 제주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전은 중국 남동섬의 대표 도시이자 경제특구이다. 시진핑 주석의 부친인 시중선이 1980년에 계획 및 개발한 선전은 2005년에 벌써 모던 도시의 모습을 갖췄으며, 화웨이, 텐센트 등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자리잡았다. 선전의 GDP규모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약 40년간 약 13,700배 증가했고, 이는 다른 경제특구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GDP 증가폭이다.

선전의 성공 이유의 핵심에는 해외 투자가 있다. 약 40년동안 3천억 규모의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약 9만 개 이상의 외국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수적으로는 선전 내 외국 회사 비율이 약 2%로 많지 않지만, GDP의 20%, 수출입의 무려 40%, 세수의 30%를 차지한다. 2018년 기준, 선전에 등록된 모든 외국 회사의 56%는 홍콩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아 해외투자의 주 출처는 주로 홍콩이다. 현재 선전은 전환무역을 추진 중인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선전의 문화 및 지식 혁신 창조사업이 연간 14% 증가했으며 삼각주와 홍콩, 마카오를 연결한 해안, 해양, 내륙을 입체적으로 연계한 세계적 규모 수준의 메가 경제권 허브인 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 사업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전들이 존재한다. 첫째는 2014년 우산 혁명, 2019년 반송중 시위, 2020년 국가 안전법 채택 등 홍콩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바뀌는 투자 환경보다 안정된 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홍콩의 정치적 불안정은 선전에게는 큰 도전이다. 또한 선전의 공간적 제약과 부동산 가격 상승 또한 하나의 도전이다. 환경 자원적 문제도 존재한다. 선전은 20년전부터 공기 오염과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국제적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선전에겐 큰 도전이다. 선전 내에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나 매우 적은 수이고, 국제기구, 영사관 등이 부재하거나 부족하고, 세계 타 도시와 견주어 외국인 거주자나 국제 학생, 국제 회의 등이 부족하다.

제주도는 선전에 비해 홍콩과 같은 투자 기술의 공급처가 부재하다. 따라서, 세계 특구포럼을 통해 국외 특구들과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선전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이고 공간적 한계가 적기에 경제 특구로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그러나 건설 부지가 부족하기에 해양을 건너서 다른 경제 특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해안을 끼고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경제특구로서 관광과 문화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심화하고 개발해야 한다.

● **남기정**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평화의 지속이 어려워 보이는 현 상황에서, 지정학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데에 있어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연결해서 생각하려 한다. 제주도와 오키나와, 이 두 지역이 관광특구로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키나와는 제주도에겐 신냉전 발발을 저지하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 경제의 영역을 창출하는 데 핵심 파트너이다. 제주도는 신냉전시대에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또한 제주도가 냉전 시대 큰 고통을 겪었고 이러한 점이 평화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제주도가 특구로서 단순 정치적 목적을 넘어서 평화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시사한다.

오키나와는 미중 전략경쟁의 전방에 위치해 있어 중국에 대한 대만 유사에 연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20억중 13억의 마켓을 잃는 것이기도 하여,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키나와는 정부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는 국제정치가 지정학에서 시정학으로의 전환의 문턱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팬데믹 대응은 속도전이자 지연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의 싸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상대적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리에 성공했다. 코로나19는 긴밀을 느슨한 관계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주었고, 지구화에서 지역화로 변화시킬 필요를 알렸다. 이러한 대전환의 전위로서 국가가 아닌 지방 자치체가 주목되고 있다.

아즈마 히로키의 “관광객의 철학”은 시민이 시민 사회에 머물면서, 개인이 개인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그대로 공공과 보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로서의 관광객에 대해 말한다. 관광객은 주민도 떠돌이도 아닌 내셔널리즘 틀 안에 머물면서 수용할 수 있는 객체이다. 이러한 관광객을 가진 제주도는 지구정치의 광장으로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광장국가에서는 도시가 국가의 역할을 한다. 수평적이고 공개적이며, 자유롭고 투명한, 세계정치와 교역의 광장으로, 민주적 국제 질서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의 공간으로서 제주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Municipalize Asia”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싶다. 국가를 지방자치체로 해체하자고 의미인데, 제주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를 해체하자고 말하고 싶다.

● **원동욱** 현재 세계특구포럼을 진행하는 그 어떠한

국가는 없다. 세계 특구 포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 중심의 연례 세미나만 개최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포럼을 제주도가 개최하고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려면 제주도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할까.

● **이영훈** 제주가 평화 경제특구로서 거듭나 세계특구포럼을 유치하려면, 특구로서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 즉, 자본적, 인적 자원을 끌어들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제주도는 공간과 산업적으로 취약하여 경제특구로서 부적격이다. 그러나 평화경제특구라면 제주도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제주도는 지식 산업 위주의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본사가 2021년 제주로 이전했다.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 1호인 다음은 첨단 과학기술단지인 스페이스닷원에 이어 닷투를 건립하며 유능한 인적 자원을 제주도로 끌어당기고 있다. 특구의 성공요건이 경제적 요인과 함께 근무자들의 생활환경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글로벌 경쟁력을 준다.

지정학 중심의 평화 개념을 환경과 사회로 확장했을 때 제주도는 충분한 평화 특구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지정학적으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현재 Carbon Free Island 2030을 추진 중이고, 2016년 UNESCO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된 제주 해녀의 공동체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다.

제주도를 평화경제특구로 모색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의 노력, 협력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크게 생활하수, 쓰레기, 교통 등의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미 지방 자치 단체가 이러한 문제 해결 및 환경

적 이점 강화에 앞서고 있다. 그에 더불어 Carbon Free Island 2030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차 차고지, 전기차 렌터카 산업을 제안해본다. 또한 공동체 문화를 계승해서 현대화한 새로운 마을, global workation 공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이 새로운 마을 건설 프로젝트는 이미 일본 가미야마 마을에서 실행된 바 있는데, artist in residence, work in residence, 풀뿌리 국제교류, 주민 참여의 개념이 합쳐진 마을이다. 현재, 하이브 아레나 스타트업이 모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발아할 것이고, 생존 확대되어 결국 제주도가 평화 경제특구로서 활약하고 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단단한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민경태** 제주도는 한반도의 대안적 대표선수라고 생각한다. 한반도가 사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역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남북관계로 인해 못하고 있다. 이에 한중일 어느 국가의 도시에 근접하기 보다는,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가 대안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제주도 관광객들로서 이미 하고 있다고 본다. 현 시대에 우리는 우리만의 지정학 전략이 필요한데, 한중일의 평화적 경제협력의 중심지이자 허브로서 제주가 그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성원영** 제주도는 단시간에 주변 국가들의 시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꾼 놀라운 성과를 가지고 있다. 이를 주변국과 공유해야 한다. 남아있는 과제라고 한다면 제주도가 근접하고 있는 위기와 긴장, 대륙과의 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신냉전의 중심지가 제주도이기에 갈등과 대립의 긴장을 중화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제

주에게 부여되어 있다. 타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큰 규모의 세제를 부여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특구인데 그러했던 과거의 성장 모델을 지속하며 발전할 수 있는가가 현재의 문제점이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취약성이 이러한 문제 해결 도모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단위의 무수한 그레이 존 국가들을 협력 파트너로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

● **김지운** 중국의 4개 경제특구는 이미 하나의 거대 메가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지역적인 메가 경제권만이 아니라 대륙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중이다. 제주도도 네트워크를 서둘러 조성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주포럼을 제주 경제특구 포럼으로 확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경제와 번영이 앞서서 건 맞지만 평화와 생태에 맞춰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남기정** 인도-태평양은 단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개념을 포함한다.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정치적 위기에 놓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정학적 판 만들기를 거부하고 워싱턴 도쿄 서울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영훈** 제주도에 이러한 것을 유치하려면 실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잠재력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상품화할 것인가. 그러려면 두가지를 해야 한다. 우선 평화의 개념을 지정학적인 개념 이상으로 확장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ESG로 확장했다. 그리고 micro 비즈니스 모델로 실재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현재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어떠한 공간을 디자인해서 어떻

게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인가, 메가 형태의 구현이 될 수 있게, 세계 특구 포럼의 배경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담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경제특구의 개념의 변화: 경제특구를 과거의 제조업 위주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지식 생태계로서의 경제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과, 일반적인 경제특구가 아닌 평화경제특구로서의 제주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
-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시티의 구축: 북한에서부터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여 물류 통합시스템을 통해 서울과 평양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신속한 남북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
-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제공된다면 한국의 산업발전을 넘어서 국경을 맞대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한국의 제주도는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입지로 볼 수 있으며, 제주포럼이나 세계특구포럼 개최를 통해 제주의 섬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
- 제주 중심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투자 유치 강화: 선전의 성공은 해외 투자의 결과로 볼 수 있음. 제주도는 투자 기술의 공급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국제 특구포럼을 통해 국외 특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그러나 제주도는 지식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몇몇 수도권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하며 인적 자원을 끌어들이고 있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역시 경쟁력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더 많은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평화 개념의 확장과 환경 보전: 제주도는 이미

지정학적으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를 평화경제특구의 잠재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 보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함. Carbon Free Island 2030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주 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주도의 국제화 강화: 선전은 국제화 및 국제적 영향력 부족이 큰 도전으로 다가왔음. 이에 제주도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기구, 외국인 거주자, 국제 학생 등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경제 특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었음. 또한 광장국가로서의 제주도를 구상할 수 있으며 세계정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주적 국제 질서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적인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관광과 문화 발전 강화: 제주도는 경제 특구로서 관광과 문화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장점을 오키나와와의 협력 등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관광 및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을 더욱 강화해야 함.
- 국제정치에서 지방 자치체의 역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국가 수준에서의 대응이 중요했으나 지방 자치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주도는 관광객의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보다 유연하고 지방화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함.
- 포럼 개최를 위한 배경 구축: 제주도는 세계 특구 포럼을 유치하고 평화경제특구로서 활약하기 위한 단단한 배경을 구축해야 함. 인적 자원 유치와 환경 보전을 통해 제주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마을 건설과 국제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포럼 개최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아세안 지역에서의 녹색성장 구현: 한국과 아세안의 시각



좌 장	류학석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국협력팀 팀장
기 조 연 설	마하마두 통카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실 실장
토 론	지현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정책기획팀장 정호영 산림청 남북산림협력팀장 수리안 비치틀레칸 메콩연구소 소장 알 오롤포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대외협력국장
기 록	정종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국협력팀 산림협력 책임전문관

● **류학석** 본 세션은 아세안 국가와 한국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한 녹색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데 목표가 있다. 아세안은 COVID-19 이후 포용적 성장과 번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4대 경제 권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저감, 대기 오염, 물 부족 및 폐기물 문제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에너지, 도시개발, 교통, 순환 경제와 해양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녹색 회복의 우선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비롯한 아세안 지역에서의 녹색성장 구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 **마하마두 통카라** 전 세계가 기후 위기와 예기치 못한 팬데믹을 마주하는 이 시점에, 기후 위기를 해

쳐 나가기 위해 적극적이고 야심 찬 행동이 요구된다.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충분히 속도감 있게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 국가의 절반 이상이 넷제로(Net Zero) 의지를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우 개별법으로 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정책보고서에 이를 명시하거나 별도 선언을 통해 동참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의 규모와 신속성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2019년부터 약 2년간 1조 달러 이상이 화석연료 분야에 투자됐지만 1천만 달러가량이 기후기금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이는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아세안 지역에서의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어떻게 실제 투자와 이행에 연계해야 하는지,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하신 각 분야의 정책 결정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알 오롤포**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이며, BIMP-EAGA(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아세안은 산호초가 자생하는 아마존 지역을 대표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지역이며, 약 7억 명의 인구와 전 세계 3대 시장 및 5대 경제 권역으로 구성된다. 아세안 지역에서의 녹색성장 전환 프레임워크로는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Green Catalytic Facility, 메콩 지역 COVID-19 회복 계획, BIMP-EAGA Vision 2025등이 개발되어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의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분야로는 농업, 지속 가능한 도시, 청정 재생 에너지, 순환 경제 시스템, 블루 이코노미 등이 언급된다.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의 나열이 아닌 통합적 접근 방식이 요구되며, 각 성장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녹색금융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COVID-19로 인한 공급망 왜곡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녹색 성장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포괄적 정책 수립과 법률 제정, 녹색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여성 참여, 디지털 혁신 및 표준화 등이 있다.

● **정호영** 북한 산림면적은 939만ha로, 전체 국토면적(1,231만ha)의 약 76.3%이며, 전체 산림의 약 28%인 262만ha에서 산림황폐화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147만ha가 우선 복원 대상지로 분류된다. 식량 및 난방 연료 부족,

중국으로의 목재 수출 증가로 산림 벌채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 재해 발생 빈도를 증가시켜 산림황폐화를 가속하는 악순환 구조를 발생시킨다. 이에 북한 정부는 산림 건설 총계획 수립, (2013-2022) 산림복구 전투(2015-2024), 산림총국 설립을 통한 산림 독립예산 편성, 조선 인민군 122호 양묘장 등 140여 개소 양묘장 건설 등 범국가적으로 산림복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산림 분야 협력 적극 추진해 왔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4차례 상호 소통을 통해, 511ha 조림, 양묘장 11개소 조성, 25톤의 종자와 2.5백만 개의 묘목 지원 등을 실시했다. 201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산림 분야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두 차례 남북 산림 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여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우선 협력과제를 비롯하여, 혼농임업, 산불 및 산사태 공동 대응, 산림 과학기술 교류 분야 협력에 상호 합의하였다. 합의 이행을 위해 2018년 금강산 산림병해충 공동 조사, 개성 왕건 왕릉 병해충 공동방제, 평양 양묘장 방문 및 현대화 논의 등을 추진하였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2019년 이후 남북 산림 협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향후 재개에 대비하여 산림청은 1) 평양-개성-고성 인구 밀집 지역 산림 우선 복원, 2) 노후화된 양묘장 현대화, 3) 서해지역 임농 복합 경영 활성화, 4) 접경지역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공동 대응, 5) 한반도 핵심 생태 축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및 복원, 6) 백두산 등 생물다양성이 높은 4개 보전지역의 산림보호라는 세부 과제들을 중심으로 남북 산림 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성, 파주, 철원 세 지역에 남북 산림 협력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최근 북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국제 사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산림 부문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향후 남북 산림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1)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2) 다자협력 등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안정적 협력 기반 구축, 3)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및 북한과의 소통 강화, 4) 식용 약용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북한 산림자원 발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산림 협력은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협력 분야로, 향후 아세안 지역으로도 현지 사정에 맞춰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리안 비치들레칸** 녹색 성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동반하는 필수 경로이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다음 사례들을 참고할 때, 녹색 성장은 COVID-19 이후 회복을 가속하는 동시에 저탄소 및 자연 친화적인 미래를 향한 점진적인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로 동남아시아의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살펴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5개국 중 2개국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다. (필리핀과 미얀마) 기후 변화는 2021년 아세안 경제의 총 GDP에 약 11%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로, 녹색 부양 정책은 과거 경제위기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녹색 부양책은 새롭고 경쟁력 있는 녹색 산업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100만 달러의 정부 지출은 화석 연료에 대한 동등한 지출보다 5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로, 환경보전과 공중보건 분야는

미래의 전염병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COVID-19를 포함한 과거 창궐한 치명적인 병원체들은 야생동물, 가축, 그리고 사람들 간의 건강하지 못한 접촉의 결과로 발생했으며 가속화되는 도시화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는 1960년 이후 보고된 모든 새로운 질병의 30% 이상의 출현을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녹색 성장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생산성 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하며,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 및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 성장은 이러한 환경 위기와 경제적 결과에 대한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녹색 성장 기회에 투자하지 않으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이용 가능한 선택지로 치부하거나 녹색 성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녹색 성장과 관련한 정책/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족하고, 프레임워크가 개발되더라도 실제 이행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나 이해당사자의 녹색 성장에 대한 이해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매너리즘에 기반한 단발적인 접근이 아닌,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야 하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녹색 성장 분야에서 아세안-한국 파트너십은 좋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녹색 청정 기술 개발 경험은 아세안 지역의 녹색 성장 가속화에 있어 구체적인 아세안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한-빔프 협력기금(BKCF), 한-메콩 협력기금(MKCF) 등 여러 프레임워크가 이행단계에 있으며, 아세안-한국 파트너십은 각 국가의 녹색 성장을 보여주고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한 세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지현** ASEIC(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는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및 유럽 국가 간의 생태 혁신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은 비즈니스의 약 90%, 고용의 60-70%를 담당하고, GDP의 50%에 기여한다. 아세안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에 관한 주요 과제는 녹색/기후 친화적 기술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지식, 인적 자원의 제한된 용량, 금융 및 시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SEIC는 2019년부터 매년 에코톤(Ecothon, Eco-entrepreneurs' Marathon)을 개최하여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코치 및 스타트업 팀을 위한 교육 과정, 멘토링 세션 및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대회로 구성된다. 우승팀에게는 COMEUP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참가해 투자자 커뮤니티와 연계할 기회가 제공된다. 2022년까지 아세안 7개국의 169개 스타트업 프로젝트와, 60여 명의 비즈니스 코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2023년에는 아세안 5개 회원국(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23년 ODA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주로 중소기업협력부)와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정책교류 및 기후대응 기술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을 실시한다. ASEIC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거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녹색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아세안 전 국가와 한국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아세안-한국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정책을 실제 이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녹색 성장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사업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녹색 성장에 대해 수용적인 정부 정책,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인적자원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다.
- 기후위기, 평화, 인권, 빈곤문제 해결 등 녹색 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각 요소와 모두 연결된 산림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녹색 성장이 경제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지지, 녹색 성장 이행 주체의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녹색 금융 및 자본에 대한 접근 확대가 3가지 주요 과제라고 생각한다.
- 녹색 성장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등을 통한 기술협력이 핵심이며, 녹색 산업 표준을 통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지속가능한 평화증진을 위한 평화도시연대의 환태평양지역으로의 확장



- 좌 장 김준형 사단법인 외교광장 이사장
 인사말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조연설 에카테리나 자글라디나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 회장
 토론 카일 버그만 일란라엘(환태평양평화소공원)재단 회장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
 고윤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
 필립 한쉬 베르딩 세계평화인권센터 센터장
 앨리스 카데두 레마르크 평화센터 부센터장
 기록 이재진 코러스 컨설팅 부사장

● **오영훈**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기상이변, 기술과 사회의 급변, 그리고 자국중심주의로 인해 훨씬 불안정 시기이다. 세계의 안보와 경제환경이 안정적이었던 시기도 드물었으며, 향후 세계 국제정세는 더욱더 예측이 불가능할 것이다. 미중 갈등은 깊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을 넘겼으며,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의 국제환경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는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더 뻗어 나가고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와 ‘글로벌 평화 협력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팬데믹 이후 세계는 신냉전 시대를 맞고 있다. 과거 강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냉전 시대는 이념의 대립이 국가의 대립, 국가 간의 진영화를 만들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은 철의 막을 제거 후 냉전 시대를 종식시

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오늘 3자가 체결한 평화협력 네트워크 협약은 신냉전 시대의 갈등완화의 시작이며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늘 토론과 발표는 우리 모두가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간, 협의체 간, 그리고 국가 간 연대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 **에카테리나** 평화의 길로 성장하고 갈등과 긴장을 해결할 방법은 소통이다. 제주 4·3의 역사적 아픔과 상처에 공감한다. 또한 그간 보상법 통과를 추진 해 온 오영훈 지사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단결과 협력은 분열보다 강력하다. 또한 대화와 말의 힘은 위대하다. 인류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평화’의 중요성을 지켜야 한다. 고르바초프는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에도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 노력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 **필립 한쉬**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오스나브뤼크, 제주, 노벨평화상 사무국 등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도시 가입을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교류사진전 공동사업(베르딩 22.3월, 제주 22.5월, 9월)을 통해 베르딩, 제주, 키이우 등 전 시도시 간 연결점을 모색할 수 있었다. 제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진전을 개최한 도시이며 사진전을 통해 도시 차원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공 등 국제사회 이슈에 대하여 관심을 이끌어 내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평화활동을 펼친 도시이다. 평화도시 연대를 위해서는 재원 조달 필요하다. 평화 활동은 정치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2017년도 노벨평화상을 프랑스에서 주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서 실패하였다. 평화도시 연대의 플랫폼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통한 기후변화, 자원 부족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현실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연대를 굳건히 해야 한다.

● **칼 버그만** 세계 나라별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주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무척 가상하며 제주도는 환태평양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정치적 갈등이 있는 국가의 건축학과 학생들이 모여 함께 평화 공원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는 사람 간의 교류 사업이다. 특히 환태평양 지역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국제적 축제나 엑스포와 같은 문화외교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이라는 공통 언어를 활용하여 조성 도시의 과거를 회

상하고 미래의 비전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태평양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곧 평화 의지의 확대를 의미한다. 2024년 샌디에이고와 티후아나의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을 기념하여 '디자인을 통한 문화외교' 국제회의 개최 및 양 지역 환태평양공원에서 평화 증진 활동을 추진하겠다. 2010년 제주환태평양공원 오픈식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방문하여 민간 외교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환태평양공원이 화합의 상징이자,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 **서승** 소수의 민족이 주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와 오키나와가 협력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두 섬 간에 하늘과 바다 항로를 연결하고 관광상품의 공동 개발과 제주대와 류큐 대학 간 학술 및 학생 교류와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겠다. 또한 공동문화행사 개최와 예술, 문화 분야 교류 추진도 필요하다. 더 나가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 공동유치도 구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고윤주** 제주는 4·3이란 이념의 광풍으로 제주 인구의 10%가 희생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 제주4·3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국가차원에서 유족들에게 공식 사죄를 하면서 제주4·3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제주는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하는 국제적 수준의 논의의 장인 제주평화포럼을 2001년부터 개최하여 오고 있다. 이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라는 명칭으로 해마다 세계정상들이 제주를 방문하여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논의하고 있다.

제주는 글로벌 연대 평화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작년 첫 공동사업으로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사진전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생 오케스트라단이 오스나브뤼크를 방문하여 오스나브뤼크 시 주최 행사에서 현지 대학생들과 평화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화도시 연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사이버 사무국이 세워진다면 언제나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미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인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전세계 시민 네트워크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음
- 평화와 번영은 선택이 아닌 소명이며 정치 사회적 경제적 인권적인 문제 이외에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인류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 **앨리스 카데두** 오스나브뤼크는 30년 전쟁을 종식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곳이며, 평화의 도시로 불린다. 37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와 평화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375년을 맞아 전시회, 콘서트, 토론회, 시민 및 청년 활동 등 200 개 이상 평화증진 프로젝트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다른 주제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있으며 자연과 환경, 역사와 시각, 종교와 믿음 등 매월 다른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 레마르크 센터는 오스나브뤼크 문화기관 12곳이 참여하는 유럽지역 청년 네트워크 사업으로 '유럽문화 속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제주에서 3명이 참여 예정이다. 또한 한-독 우정 14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일환으로 평화콘서트 개최 예정이다. 오스나브뤼크 Me We 국제문화축제이며, 제주-오스나브뤼크 대학생 간 협주가 예정되어 있다. 제주포럼과 같은 계기를 통하여 베스트팔렌 조약을 돌아보고,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지속

Human Rights across Asia: Dilemmas and Solutions



Moderator **John DELURY**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Speaker **Rayhan ASAT** Senior fellow, Atlantic Council and Yale Law School
Mely CABALLERO-ANTHONY Professor, RSI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ICHIHARA Maiko Professor, Hitotsubashi University
SONG Hanna Direct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Researcher,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apporteur **SHIN Young-Deok** Global Asia Fellow, East Asia Foundation

● **John DELURY** In this session, we will share thoughts on the broader issues of human rights dilemmas and solutions in Asia.

● **Rayhan ASAT** When discussing human rights in Asia, we often lump all these countries together. However Asia is a diverse block consisting of various countries with different values. We have countries like South Korea which is a leading democracy. Equally, many authoritarian countries in the regional block misuse the concept of Asian values to justify human rights abuses against their vulnerable population. So, we need to acknowledge the diverse nature of the regional block from the outset.

The theme of the conference is ‘Working

together to create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s a human rights lawyer, I believe human rights must be an integral part of that solution. Without the human race, we cannot achieve neither peace nor prosperity. In this context, I want to address the role of Asia and other countries when state violence is perpetrated by powerful nations with military and nuclear capabilities. I am a human rights lawyer of Uyghur heritage, and I work on the issue of the mass persecution of the Uyghurs; where the United Nations concluded that last year China is committing an international crime, in particular, crimes against humanity. last year It falls short of determining genocide, but the Chinese government committed four sterilizations against women of childbearing age.

So, I want to discuss why we put these different topics together, “human rights dilemma and solution.” Often, countries are hesitant to bring up human rights concerns. We live in a very interconnected world, and that is a result of globalization. Global collaboration is crucial for addressing global pandemics and climate change. But that doesn’t mean we have to force human rights in these areas of collaboration. One needs to acknowledge that globalization led to the ultra-rich corporations becoming even richer than before, while I don’t deny that average citizens did benefit from the economic prosperity because of globaliz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marginalized many populations, including my community. In response, leading economists at Oxford have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a circular or regenerative economy that encompasses all populations, particularly those most affected, to achieve our climate justice agenda.

And the second dilemma that I want to talk about is the climate change issue. Frequently as somebody who has worked on this issue, I believe we need to collaborate with China, despite its role as a superpower perpetrator in climate justice. Climate change is a human rights issue, and we need to frame it as ‘Climate Justice.’ Currently, most solar panel components are manufactured in China, especially in the Uyghur region, where enslaved Uyghur workers are involved in the production process, taints

the global supply chain.

That means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are interrelated issues. We cannot separate them and adjust them separately. This November,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bought over 1000 shipments of solar panels an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hat took into these solar panels. I am giving this anecdote as a fact to linger in the roadmap to let us think about this interconnectedness. Every country, including China, has to be a responsible stakeholder. This entails upholding the basic human rights values, which means refraining from committ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or abuses against anyone, especially vulnerable populations.

The third dilemma is that holding superpower perpetrators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is difficult. Many UN member states are more willing to talk about issues committed against smaller countries, but not so much. So maybe it’s committed by powerful countries. Or we also have seen that businesses tend to uphold the values of ethical principles when in smaller countries, but not in superpower countries, whether it’s in Russia or China. So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to highlight that all these issues that we have trying to separate the economy, the state of our planet, its affliction of climate change, and the storage of human rights abuses have been spilled and seeped into each other. Separating these issues creates a culture of impunity for perpetrators and the world will

be left grappling with more human rights abuses and potential conflict.

What I want to highlight is that they often have the boomerang effect. Myanmar was a great example of that. When atrocities against the Rohingya community were committed, the vast majority of the population stood by silently. But look at things now. The military took over. This is a boomerang effect of human rights violations.

I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oomerang effects, so is the victory of an oppressed group. It is because it's not just a triumph of justice for that group, but the triumph of collective time that resonates with all of us. It is because it elevates human rights' entire standards. When the Rohingya community brought a very successful case in the ICC on a very novel precedent, it set a new precedent for victims and lawyers, and activists to use that as a precedent to push for change. Now, because of that precedent, the Uyghur group follows the case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o are Syrians. That is the boomerang effect of human rights' inspirational stories where we can push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law. So I don't want people to see Asia as a continent where human rights atrocities are happening. Still, rather revolutionary creative ideas are happening to set a new legal precedent for the entire world.

This is the beauty of Asia. So that brings me to the ultimate end goal of this. We need to

empower all human rights-oppressed groups, victims, and lawyers.

● **ICHIHARA Maiko** While living in the Northeast Asian side of Asia, many of us tend to forget how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Asia has been problematic. This is especially true in Southeast and South Asia, compared to Northeast Asia where relativ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have been maintained, even during that pandemic. For examp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Taiwanese government placed importance on responsibility. They had an explanation session every day on what's going on with the COVID-19 cases and what kind of counter-measures are being taken. Also, the Japanese government places importance on human rights protection, so they did not impose restrictions on civil liberties.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are terrible, even amongst democratic countrie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Let me bring some examples which were shown during the pandemic. One thing that haven't been seen during the pandemic was the concentration of the government. For example, the Malaysian government terminated the parliament to implement policies on their own without objections, and the Indonesians did very similar things. Creating COVID-19-related counter-measures without allowing objections from legislators was also very harsh in some of

the countries. This also refers to India where people who violated the curfew were beaten up on the streets, and the Philippines where violators were put into dog cages.

In addition, anti-fake news laws were created during the pandemic. In the pre-text, fakeness related to COVID-19 had to be restrained, and in reality, the government used anti-fake news laws to suppress journalists in those countries. Those domestic aspects of human rights ar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n-democratic countries, as mentioned so far, such as China, Myanmar, Thailand, and India. They had been very substantial and serious. Their suppression of speech is pretty harsh.

Furthermore, authoritarian influence operations are going on, and discursive forces are happening. Especially China and Russia have been cooperating very much to undermine and destabilize democratic societies by damaging some of the illegitimate concepts which are related to liberal democracies, such as human rights, democracy, and elections. We are in an era where we have to tackle domestic populists who undermine human rights in those countries and those international authoritarian actors who cause synergy between them.

● **SONG Hanna** I am more on the activist side, looking at a small nonprofit. I wanted to discuss about how COVID-19 has affected human rights, especially for North Koreans. We were excited

to hear that WHO announced that COVID-19 is no longer a global health emergency. But I think many people forget that one country still very much remains a health emergency. One country remains as isolated as ever. They are still stuck in time. Few people are going in. Few people are coming out. The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DB, the organization I am working for, relies heavily on the people who can leave North Korea and speak freely about the country, which the government quite frankly does not. Since we were established in 2003, we have relied heavily on North Korean escapees. Some refer to them as 'defectors,' or some refer to them as 'refugees.' I prefer a more neutral term, escapees. And during the peak of the great famine, we had people up to 2000 come to South Korea escaping North Korea. But during the pandemic, we had 67 last year, the year before, less than 70. And we are not expecting the increase much more even as the whole world opens up its borders. We all know that the North Korea government's oppression or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has been imposed for many years. It's been 75 years of totalitarian government. Seventy-five years, when the UN will celebrat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at's the same amount of time North Korea has maintained totalitarian control over its people. It's also been ten years since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and Investigative Body investigate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happening in North Korea. They concluded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are occurring in North Korea.

But what has been done since then? My organization has recorded over 130,000 entries in our database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COVID-19. Many experts are calling this the 'New Dark Ages.' Just because we hear little about wha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it does not mean nothing is happening. In December 2020, wh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nti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al Law', I'm sure many of us here have hear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ashing into the Korean waves Wherea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taking the exact opposite response. Any activities watching South Korean movies, listening to South Korean songs, or speaking in a South Korean dialect will be imprisoned and taken away to political prison camps.

But as we confront those dilemmas, it does not mean there is any hope of what we can do to move forward. Although few North Koreans are coming out, 34,000 survivors live in South Korea. 34,000 North Korean escapees who can be empowered. We can engage to be the voices of the people whose voices were oppressed by their government. We can also remember that this is not just a North Korean issue.

When we talk about North Korea, many people give quite a big sigh, asking what can be done

with North Korea. There are different avenues in which we can approach the issue. There are thousands of North Koreans hiding in China at this very moment. China does not recognize North Koreans as refugees. They are seen as illegal economic migrants, and the victims of China's extreme surveillance laws expand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lso, very few reports or information about these vulnerable groups in China are coming out. We can look for areas where we can continue to engage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s the government has isolated itself and then more damage its nation than any international sanctions can ever do.

However, there are more avenues for dialogue. Climate change has already been brought up. North Korea has shown that it will talk about climate change. It is an UN member state. It has international values which it needs to uphold. I have heard a lot of discouragement from my fellow activists, academics, and people working within North Korean space because of the little information coming out of North Korea. This is a good opportunity for all of us to take a step back and evaluate what we have done for the past few decades in North Korea when no diplomats are going into the country or no humanitarian agencies are being allowed there. When the borders open, what we can do differently to ensure that it is the North Korean people that are the center of government policies.

● **Mely CABALLERO-ANTHONY** Let me confine my comments to the stage of human rights protection during a very consequential period in this history. What I mean by this is the state of human righ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re is always the dilemma of the extent to which you want to protect your population from the threat of a very contagious and virulent pandemic, even primarily before the vaccines and other antiviral products were produced. So it's the dilemma of protecting and ensuring other human rights simultaneously. It is not just the health that security has protected, but you could also enjoy some of your rights, even during what we call 'humanitarian emergencies,' because the pandemic of COVID-19 pandemic has been termed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lso, the pandemic was more than just a global health crisis. It affected all states regardless of geography and economic status. The poorest of the poor countries were very much disadvantaged due to COVID-19, as they were not immune from the pandemic. This pandemic became a very substantial crisis. Many economists would say that between 2020 and 2021, the world experienced the worst recession that has not been seen since the 1930s Global Recession.

So, how did they affect human rights? 'Rights', is extensive, from the political and civil rights to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The pandemic's impact was the increase in in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especially among the poor and marginalized sectors. For the last two years, 10 million people worldwide, especially in Asia, have fallen into poverty. That means you suddenly have another 10 million people becoming very poor, living on less than \$2 a day. You also have populations or communities that have been extraordinarily displaced. I'm talking about the migrant people across the world, especially our part of the world, Asia. They've lost their jobs because of the pandemic. They couldn't go back to their own countries. Even if they returned to their own countries, some of them were not allowed to return. There were also increased incidents of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against ethnic and minority groups. Scholars have been talking about disease becoming a geographical issue because once you look like Chinese, you suddenly become an agency of the virus. It is especially very difficult if you live in a multi-ethnic society. There was a lot of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Third, amongst the population whose rights were seriously impacted, it exacerbated the vulnerabilities of women to domestic violence. There is a lot of research showing how much women's rights were seriously exacerbated due to the pandemic. Their partners vented their anger or frustration on the wives. These wives also took on a lot of work and responsibilities, yet many have also lost their jobs. There was a lot of economic deprivation because of the

loss of employment.

The other communities that had suffered are refugees, asylum seekers, and even those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n conflict-affected areas. So these are the issues that they have faced.

On the one hand, one could also see how governments had responded to this. Many governments in East Asia have responded to this in various ways. The concern was how to protect the population from getting infected. So they closed the borders and restricted the returning residents. Even in Australia, some of their residents who went overseas could not come back regardless of their ethnic origin because the borders were closed. A lot of emergency measures were also being introduced within States, like the restriction on the people's movements. For those governments whose pockets were much deeper, there was a lot of short to medium-term assistance provided to economically displaced people.

But suppose you talk about this to the extent of human rights, in that case, the impact of the human rights of communities as a result of health measures can be seen mostly in countries that are facing a lot of challenges, particularly those that are also facing internal conflicts. In Myanmar, the military coup happened just a year after the pandemic. When the impact was beginning to unfold, you can see how much damage has been done because of the pandemic. COVID-19 has exacerbated the crises that many communities

have faced. To cut down on protesting civilians, they were denied access to medical services. They were also not even allowed, and some of them fled. So because of that, the level of medical services in Myanmar dropped.

Despite these situations, governments tried their best to protect their people. Some communities fell off the cracks. We had researchers from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Myanmar, and then in North East Asia, we had Japan and China. Even in a place like Japan, where better measures were adopted, the emergence of new valuable communities emerged whose rights were not ignored. The result of the preoccupation of governments to deal with what is immediate was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population who do not have the means to go out and to get themselves to have health access. The same trend could be seen even in places like China, where older people cannot cope with this issue because of the lockdown, unlike young people who could cope and use technology. These people's so-called new valuable communities were utterly very much impacted. For example, migrant workers who could not understand the language had to suffer, as most of the announcements were done in Chinese, Japanese, or Korean. So some of the migrant workers could not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That is why they did not know how to defend themselves during the state of emergency.

While you have rights, you already have countries with problems with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ir communities. In times of humanitarian crisis like what we saw in the pandemic, those insecurities have magnified and aggravated.

● **John DELURY** It would be interesting to relate two issues between North Korea and what's happening against the Uyghur population. Feel free to ask questions of one another and engage in dialogue.

● **Rayhan ASAT** I see some overlap between North Korea and what's happening against the Uyghur population. One example is the political indoctrination in prison camps. Forced labor is another component of it. Before coming here, I talked to a human rights lawyer in Korea, and he said many people don't know what's happening to the Uyghur, so you still have to explain in South Korea. In Japan, the Uyghur issue is much more well known, but South Korea seems to be like we still need to raise awareness. And many people know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And again, as I mentioned, these are components like when the state wants to control its population, ultimately it comes down to this state being so paranoid about its legitimacy. It feels very insecure of a population being informed, intelligent, and able to voice their concerns about what's happening. Or in the

Uyghur, they see the population's identity as a threat. You know, democracies are not afraid of people being informed, and undemocratic countries, authoritarian countries use tools of utilizing their population to suppress, and control and I think that is the overlap.

Another thing Hannah you mentioned struck me, not the same but similar. Sometimes diplomats would ask me, "what is the latest development in the Uyghur region?" Tell us the latest development story. Have we resolved the issue yet? Have people left the concentration camps? All the evidence is not enough. You know we have leaked government speeches that came out of China. We use satellite images to map the concentration camps. We have survivors' accounts, and being a survivor speaking against the power in Western democracies is not as difficult as speaking against the power in autocratic countries. That means you are at risk and your family who you left behind would also be at risk, so we need to empower those victims. When people ask these questions, I try to respond that in a transparent country, we should be easily able to get information. If you're not able to get something out, that is the data. Why it's so difficult to get something out? Why has China refused to all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me in with unfettered access to conduct investigations right? So how do we go about this, then? I think one way is to make sure that we empower victims. Making sure that

their voices is reflected and heard is incredibly important. And the other thing I would say is the credible commitment. Many of the people here are scholar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re is this concept called credible commitment theory where the government always says we care about human rights and we need to impose costs on human rights violators, except they never follow through on that promise. I could criticize many Western countries for sometimes raising the issue, except you don't follow through. And I think when you lack that credible commitment,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take that as sort of implicit consent or to some extent, when they see it, there won't be the case, why should I change or modify my behavior? So I hope that whether it's through diplomatic engagement or including inviting our corporations, different stakeholders constantly bring up the Uyghur issue, and ultimately, we make this a collective action problem.

● **SONG Hanna** Thank you for that question. And there is so much that Rayhan mentioned that we can see the connections there. The fatigue surrounding North Korea, especially the human rights issue, is very real. I was in Geneva in March for the human rights council to do some advocacy related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they were a very similar response.

But what's new? what has changed? Why does this issue need more attention than the war

that is going on in Ukraine? And then, they would also compare it to what's happening with the Uyghur community. But human rights violations are not a hierarchy where one group suffers more than another. There's an unnecessary competition between governments or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is something that I think damages victims' voices and damages survivors to coming forward. But I need something new, something more exciting to show, and then that's where sensationalism happens. And we also spoke about fake news, where survivors feel that pressure unless they have something juicy to engage the community. That pressure is very damaging to the narrative that we're putting out there. Having more of a victim-centered, survivor-centered approach is what needs to happen a lot more.

The similarities we see between how we have been able to raise awareness of what is happening with the Uyghur community and in North Korea are through these displaced communities. I think we can do so much, especially with the North Korean escapee community. We talk about no information coming in or coming out, but the North Korean escapee community, especially in South Korea are the bridge between the world and North Korea. Information is the most powerful agent of change in a country that is so closed off. And even during the pandemic, the North Korean escapees were sending money and information into the country. Their goal was to remind the

people, their family back home, that we're here. Your government isn't listening to you, but we are. And the empowerment we can do for the escapee community is a start.

● **ICHIHARA Maiko** When thinking about the Asian government's approach to this issue of freedom,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y claim cultural relativism. They argue that every country and every culture has approaches and different speeds than liberal democracies. And so, they should refrain from pushing the human rights agenda on other countries. That is all the aging government's arguments. But one thing we have to pay attention to is that when they make this claim, they are looking only at state actors. So their approach is very state centric. They look at the Malaysian, Singaporean, and Indonesian governments who make these Asian values' claims. They look at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claims that human rights are not about civil liberties but social rights and economic rights. And Asian governments think we should let those governments take their time. But if we look at actual cases that Rayhan talked about, Hannah talked about, and other matters that we care so much about.

People go onto the street, taking risks, risking their lives in danger and claiming freedom. Whether in Myanmar, Thailand, East Turkistan, Tibet, inner Mongolia, or wherever it is, actually in Iran, in Afghanistan, we have

been seeing massive demonstrations in those areas. And that's the actual voice that people want to have. That's the real culture that we have in Asia. We must think about changing the mindset from a state-centric approach to a more citizen-based or human-based approach, in approaching this human rights issue. And so, as both of you were talking about, well, we have to empower the citizens who sacrifice their lives to make claims for their not only for their own sake but also for their countries, their societies, and the entire world. And given that those Asian governments are somewhat reluctant to take proactive measures, we both the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ctors have to push the governments and work with them to support the citizens.

● **John DELURY** Thank you. So I will look out at the crowd. So indicate if you have a question and we'll bring you into the conversation. Mely, one question for you and I try to cause a little trouble here between academics which is what other scholars do. But to twist, I think some of what Michael was saying, I heard her initial comment to break down the distinction a bit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as the Biden administration always says, or democracy versus non-democracy, and to sort of say, look when we look across Asia there are serious human rights problems in both, and we need to think about both. I know you've done a major study on the

region shared with some of that coming out of the pandemic. But I'd like to know how you wrestle with that question of sorts across Asia. Rayhan and Hannah are both focused on an authoritarian and a totalitarian state, but we have all these semi-democratic or democratic countries with pretty serious problems. And how important do you se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ype of government or political system and, in terms of solutions, what works in a democracy that will not work in an authoritarian state? Although I guess that sounds like a stupid question, if you find anything interesting in there, please comment.

● **Mely CABALLERO-ANTHONY** You can talk about it in different layers. What works in providing, in protecting human rights? I think there is a school of thought which says that democracy is the so-called best form of government because you have certain norms to abide by. And if you cannot do that, then you have the opportunity to get those leaders out of power. You use the rights of citizens to vote. But some would argue I'm not talking about the cultural debates here. I think we have passed that debate already that was there in the 1990s. And some governments will say that even in the West you have the same. Some countries are also becoming more authoritarian. But the question is what to do most if you want to be practical about it. What form of government will give the

most protection to their citizens? I think if you have a liberal form of government, then you can get feedback from your citizens. You allow them to complain so that in the process of doing so, you will then check you improve governance and that's it. But there's also a reality that even in the most democratic States, certain communities are also deprived of their rights. So what works best is where if you were from a policy perspective, we have normative debates, you have the practical discussions, right? I think it is crucial especially for those; how do you say that is advocating for protecting of human rights to find spaces where if you cannot change the government, how then do you best help people? Is it through supporting advocacy groups working with civil societies or perhaps working to set standards for businesses? You know, like what you have done for those companies that have stopped or closed factories in places where there's forced labor. So there are multiple interventions, multiple levels working across the board, so to say that democracy is better in providing human rights, the answer is yes. It could also be no. And it's not just academic because if you see you have the United States, the richest country in the world. And yet, look at protecting human rights for those who are victims of gun violence. Look at protecting people of color when they drive across the streets, and when a police officer stops them, you don't know whether you will be safe. At the height of the pandemic, you have the

wealthiest country that could not even provide essential health services to people.

And then you have the other extreme. You talk about China, for example where they could control it in the first perhaps few months of the pandemic but at what cost? You talk about two years of just locking down people not being able to move, but then it's okay because we're safe. Some people would not agree with that because it has been two years. So even in so-called repressive states, you have demonstrations, right? So when you say which works best to give you the life we all aspire to give us the rights we want. So it's a highly complicated question, and I'm sorry to disappoint you, John. There are no fast answers because now the world is divided regarding which political and economic model we all want to follow. And these are very serious questions. What is the system of government that will protect its citizens in all its dimension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economic, and social-cultural rights? And by the way, even for governments that say no it has to be sequential, it doesn't mean that they are not under pressure from their citizens. Whether they allow their citizens to have a voice or to influence, it is another thing, but because those who would say you cannot tell a poor man in the streets who cannot even eat to go and vote when there's no food on the table. And these are real debates that are happening you cannot ignore.

Q & A

● **John DELURY** You made something interesting about my question, so I appreciate that. Okay, let's get the questions from the audience. So if you could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if there's anyone in particular, you'd like to address your question to.

Q.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Kasit Piromya, and I came here in one of my hats as a board member of the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PhR. And for the past 15 years, we have been working a lot to promote democracy and defend and promote human rights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I have a few comments to help you understand a bit about what went on in the past few years and why so much of the problem with COVID-19 occurred.

I think that in the Philippines, Malaysia, Thailand, and even Myanmar in each of these countries, democracy is not yet completed, and there were opposing forces to the semi-authoritarian or military government. So when COVID-19 came, it allowed Duterte, Hamid of Malaysia, and my Prime Minister General Prayuth Chanocha to revoke the internal security law and emergency laws and suppress the people using COVID-19 as an excuse.

I think my point is to comment that unless we have more democracy, we will have these human rights abuses. I think Mongolia,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re examples, and Singapore, with a sort of democracy but excellent governance, has shown how human rights could be much more respected.

Q. John DELURY Great. Thank you very much. If there's anyone else, if not, I want to turn back to pull out. Was there a hand? Oh yeah, great. In front there. If you have a question, please ask, and if you want to direct it to any panelists in particular.

Q. My name is Yeongduk Shin from East Asia Foundation. I have two questions. The first one is to Dr. Rayhan Asat. It's about holding great power perpetrators accountable, especially in China. I understand there are a lot of bottom-up efforts to address the Uyghur human rights violation issue. But I think, realistically there have been a lot of limitations in terms of state actions to address Chinese human rights violations, considering it is such an enormou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So my question is, are there any more realistic effective measures other than economic sanctions? And since the world is now divided more than ever into an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camp, this whole ideological divide, does this structural division make the whole Uyghur issue more beneficial, or easier to address or does it exacerbate the issue because we're getting no cooperation from China?

And the second question is for Professor

Caballero-Anthony. It's about how she mentioned how in many ways, during the COVID-19 crisis,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happened in Western, democratic countries in terms of anti-Asian hate crimes such as in the US and Western Europe. I'm just curious about your thoughts, just general opinions on how Asian countries could address this issue more effectively since there are so many violations of Asian minority groups within Western democratic societies. I don't think it has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t has been on the news, but in terms of state approaches, it hasn'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So I would like to know your general thoughts on that issue. Thank you.

A. Rayhan ASAT Thank you so much for that question. You just articulated a paradox that we're dealing with at this moment. On the one hand, the Uyghur community is a victim of the superpower perpetrator, the powerful perpetrator you mentioned, because the world is paying more attention to and often skeptical of great powers, whether it's the United States or China, especially their intention. I think that it keeps the issue still in the public discourse. Like whenever we talk about China, whether it's the military power or other human rights issues, it gets mentioned. So, I think it helps a little bit, but because China is such a powerful country. It's challenging to rally different stakeholders around this cause. And one of the main actors is the Hollywood

entertainment industry which has been very much vocal with the genocide in Darfur, from celebrities like Angelina Jolie and Mia Farrow, and the film actors like George Clooney. I have written about this in an article called “we need another hero.” Because many these people have interests, business interests, and vested interests in maintaining connections and access to China, and that creates a major problem for us because very few people, especially those powerful voices are reluctant to speak up. Elon Musk was seen in China yesterday, and for whatever business interests he has, Tesla has a major business company, and talks about this world where he’s a big believer in free speech. And yet when it comes to China, he shies away from discussing human rights issues. So those dilemmas are real. And how do we make sure that the Uyghur issues are still maintained? I believe in China despite being very difficult to modify its behavior. It does still, to some extent, respond to international criticism and international scrutiny. And I hope in the next UN session, we can achieve an independent commissioning inquiry that we have done, for even like North Korea, where we can document human rights issues. And last comment on Asian hate, because it’s something that I’m also grappling with. China’s weaponizing this to its advantage would be that if you criticize China, then there would be a direct link to anti-Asian hate. Uyghurs are also victims of islamophobia to the most considerable

extent, too, because often Uyghurs are seen as Muslim too. So is racism if we are going to talk about racism in one place, we have to talk about racism everywhere. And I always feel like sometimes Asian communities only talk about the issues facing them. Without talking about issues facing other communities, we cannot be selective in our approach. We have to address racism at its roots and not be selective about it. Thank you.

Q. John DELURY Thank you. Mely, did you get that question?

A. Mely CABALLERO-ANTHONY Yes, I did. And it’s a very crucial issue that has to be dealt with. And I fear it will only get worse because as most health experts would say that we haven’t seen the last of the pandemic, there could be more pandemic. And mainly if the pandemic originates from our part of the world Asia, then you can imagine how these things could again unleash. How do you address this when even democratic countries and Western governments cannot control their citizens from hating speech and hurting people? One thing that I could think of is the extent to which you need to do as much as possible. It’s because there’s so much fake news,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about the virus’s origins.

And there was a mention about the importance in times of health emergencies, the importance

of making sure that the officials, the government officials, speak to the people and tell them what needs to happen, what is the cause of this, and how you protect themselves and that. So in the process of giving as much information right, that was one of the failures during the crises. Some governments could communicate well with the citizens every day. There was something and those where the people were left guessing, and the government would just impose certain measures without even preparing their population that there's going to be a lockdown that they're going to do this, that they're going to do that. So as much as possible education and information and all these things become important.

I don't know to what extent you can tell your people. I mean because different settings, different governments do it, you should expect that once there's more information and preparedness in what to do in making sure that you're also being protected that the state is helping you protect you. Then you would hope that this thing will be minimized or even stopped.

And it is not just the role of governments. It's all other actors and civil society groups as well should be out there helping spread the information.

Q. John DELURY Thanks. Mely, I think we can get one more. Well, let's get both questions answered. We have three minutes and let's hear the questions, and then any last thoughts about

the questions. If we can get some mikes out there, we already have one go-ahead.

Q.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resentations. What advice can you give Western governmental policymakers crystallizing some of the thoughts you've intelligently had about the solutions? What are the most impactful policy positions Western governments might take to solve some of these seemingly intractable problems?

Q. John DELURY Okay. Give that a thought to your 30-second appetizer version of what Western governments can do. And Dominic?

Q. I'm Dominic Phillips from the East Asia Foundation. My question is for Song-Hanna about North Korea because in North Korea, there's a twin crisis of economic, humanitarian disaster where the UN and other organizations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to improve that situation. But also, there are the issues of freedom of religion, speech, and thought, which often are addressed by attempting to punish and isolate the country. So how can we balance between addressing both issues, some that need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some that need to separate the government and punish them for their actions?

A. SONG Hanna I started with there is no hierarchy for rights in which one human rights

violation is more severe. However, there are civil society groups that would disagree with what we should put forward first, given that we have very limited avenues to work with North Korea. But with the prolonged humanitarian crisis that has been going on in North Korea since the great famine, what they don't need is more food or just a supply of medicine but what they need is capacity building. We can give that ties of advice to Western governments, regarding when we work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and how we can embed the human rights values and democratic values that should be upheld in any engagement that we have with North Korea. Unfortunately, the previous South Korean administration really shied away from that, including any kind of human rights dialogue in any engagement that they had with the DPRK but that it sends a terrible message to governments, not just to North Korea but also to China, where you can't put that aside if one issue seems to be more critical. So when you are doing economic cooperation 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includ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it is a form that both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take.

A. ICHIHARA Maiko Sure, thank you very much. Well, the Russian invasion into the Ukraine war, I would say, made the discussion about freedom and democracy a bit difficult in the sense that the aggression and discourse brought

up from the Western side, after that entangled democracy and human rights with insecurity which can be seen from many people in the global South especially point of view that the iss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state-centered issues which are about confrontation war-related. And so I would argue we should detach the issues of freedom and human rights from the Russian aggression and bringing civil society sort of actors into the discussion.

A. Rayhan ASAT It's been heartening to see a solid level of commitment to the Ukrainian war. I hope to see the same level of commitment from Western countries not only when it threatens its internal security but the security of the oppressed groups. Let's prioritize something other than our trade and business relationship with authoritarian governments at the cost of being pressed. And last, at forums like Munich security forum, human rights advocates aren't invited. Aspen is another forum, but I want to say a big shout-out to this forum for inviting human rights advocates, and lawyers to be part of this discussion of creating peace and sustainability.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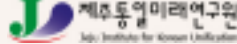
A. Mely CABALLERO-ANTHONY Well, I think that because this is not just a Western agenda, Western governments and other governments can apply to think about multiple approaches and different interventions at the state-to-state and state-to-civil society level and from education

to promoting all sorts of programs for capacity building and others. There's much you can say and craft certain policies that are attuned to and that you also have to be a bit more sensitive. And this is a way to more nuance in the promotion and advocacy of human rights because everybody wants that agenda and everybody believes in the agenda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John DELURY** Well, thank you. Before we thank the panelists, I want to recognize the East Asia Foundation and give my thanks for being included as moderator of the event and for doing a fantastic job in putting all this together. So thank you to the East Asia Foundation for echoing Rayhan's tribute to integrating the human rights topic into this conversation and doing it, with such deeply knowledgeable and courageous, and determined experts and activists. I learned a great deal from this session, and thank all four of you for sharing your wisdom. I hope all of you will join me in giving them a round of applause.

한반도의 통일·평화와 제주:

제주형 평화와 제주 도시외교 전략



좌	장	홍재형 평화문제연구소, 전 국립통일교육원장
축	사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기	조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
발	표	강수정 제주특별자치도 주무관
토	론	강덕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부원장 / 강근형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공민석 제주대학교 조교수 / 김방현 제주동중학교 교사
		고다슬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 호세 마누엘 에르난데즈 오르타 제주대학교 학부생
기	록	안경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고성준** 한반도 통일·평화와 제주, 특히 제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번째는 제주에서의 통일을 꿈꾸고자 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두번째는 중장기적 과제인 남북 통일 상황을 위해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이다.

현재 남북한 관계는 강대강 관계이다. 특히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은 북한이 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했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 억지력을 갖추고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고자 하는 점이다. 한국형 확장 억제 체제강화, 한미공동 대응 등 비핵화 이전에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해야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과 사이버 대응 등 북한을 대화와 협력으로 이끌어가려면 윤석열 정부는 강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하지만, 향후 한반도 평화와 연계되어 있는 대만문

제에 대한 것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특히 제주는 대만문제에 있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남북교류협력은 통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년째 남북교류 협력은 중단되어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에 있어 후순위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은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있고, 평화가 상당히 소망스러운 상황이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재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 국민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2030세대의 인식에서 더 심한 경향을 보이며,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통일에 대해 준비하고 있고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통일을 준비하는

데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본다. ‘백두에서 한라’라는 상징성, 제주4·3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제주도민 스스로의 상생과 화해를 위한 노력, 확대하여 남한과 북한에서의 상생과 화해가 필요하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제주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네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제주에 산재한 역사적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콘텐츠 발굴(통일과 관련된 장소, 제주가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자원 활용)
- 2) 제주형 통일교육의 개발과 실행(제주에 가서 통일을 배워오자)
- 3) 제주 거주 탈북민의 제주 융화 적극 지원
- 4) 정부와 함께 ‘제주종합 통일서비스 센터’ 조성(현재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지역통일거점에 대해 제주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

더불어 중장기적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으로는 2000년대 제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참고해보자. 민선6기 <5+1> 사업구상 중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평화협력이다.

앞으로 중장기 과제인 제주형 교류협력사업의 구상은 북한이 원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함께 가야한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연계하여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도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 남북한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 등 제주가 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분야로 지식 기술 공유 협력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생태환경, 수자원, 관광개발 등의 분야에 세계자연유산센터, JDC 등이 참여하여 북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면 북한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이러

한 중장기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이 필요할 것이다.

- 1) 북한에 대한 정확한 파악
- 2) 교류협력 전문인력 및 연구자 양성
- 3) 교류협력 전담기구 보강
- 4) 제주형 남북 교류협력방안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5)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제주의 새 이미지 창출 및 확산’ 노력(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주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강덕부** 북한의 김정은 정부는 핵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하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지도자인 김정은, 시진핑, 푸틴 모두 장기간 집권 중인 독재자이며 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와 민주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신냉전 다극화 체제의 흐름을 명확히 인지하여 남한에 적극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과 평화는 갑자기 이뤄질 수 있으므로 통일 이후 발생할 갈등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주도민 모두를 융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관, 꾸준한 연구가 이뤄져 초중고 청소년, 일반인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탈북민과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 등을 통해 제주도 내 갈등해소와 평화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 **강근형** 지금 이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할 때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현재 북한 핵문제에 대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얼마만큼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조약 수준의 협약이 필

요한데 이번 워싱턴 선언이 이에 가까워진 형태라고 보여진다. 궁극적으로 핵무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핵무력을 소유하기 위해 처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현재 플루토늄을 처리할 기술이 없다. 이 문제는 미국과의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통일교육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고취하는게 중요하다.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관이 불가분한 관계임을 인지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안보관을 위한 안보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연계되어 대만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시진핑 이후 중국은 국가 기업을 확장시키고 민간기업을 축소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쉽게 좋아지지 않으니 이에 대한 불안을 외부로 확산시켜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인민 해방군 창설 100년 전까지 대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진핑의 의지가 강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금 시기에 세계 3차대전으로 번질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학계에 나타나고 있다. 통일교육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제주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나라는 질문에 제주도정에서는 5+1 과 같은 기존 정책과 현재 아세안+알파 정책을 진행중인데, 여기서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지금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 두 국가를 통해 북한과의 노선을 구축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만하다.

또한,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남북협력기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보, 민간의료인도적 지원단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노력 필요하다.

● **공민석** 첫번째, 남북관계와 북핵이 국제정치 의 일부인가? 미중관계의 일부이자 신냉전의 일부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고 방치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유일한 위협은 중국이다. 한국이 이러한 상황 타파를 위해 미국을 견인하여 북핵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북핵문제, 북한문제에 유연히 접근해야 하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 접근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단기적 거래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미국과 논의해 봐야 하지만, 바이든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단기적 거래 형태의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두번째, 워싱턴 합의의 핵억제력에 대한 논의이다. 이번 워싱턴 합의에서 나왔던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에 대한 내용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아직 아시아, 인도-태평양에 실질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핵은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 그룹의 확장억제는 어느 정도 억제력으로 얼마만큼 북한을 압박할 것인가는 미정이다.

세번째, 북한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이다. 핵문제는 국제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그 외 북한문제, 당사자간 문제와 국내적 해결측면을 분리하는 것 필요하다.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의 당사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도적으로 정세를 이끌어 나가야 하며 이는 한국 정치의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제주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외교라고 생각한다.

● **고성준** 강덕부 부원장께서 말씀해주신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 문제, 이념양극화 문제도 매우 심각

한 현실이다. 제주 사회 만이라도 통일이라는 의제를 갖고 단합이 필요하다. 제주도에는 현재 일본,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이다. 제주에서 일본 중국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Q & A

Q.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청에서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제주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인식, 공감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제주의 평화에 대한 방향성, 일본과 중국에 대한 외교 영역에서 제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는가? 대한민국 중앙정부 포지션과 달라지더라도 제주의 포지션은 중국에 대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A. 고성준 제주가 균형을 취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문화 외교의 측면으로 중국문화, 제주문화, 일본문화가 제주도에서 어우러지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시외교가 중요하며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활발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 **강수정** 제주는 한소 정상회담 이후 평화라는 브랜드를 잘 구축해왔으나,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는 해군기지 관련 갈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즉, 외부에서 보았을 때 아직 제주도에는 갈등의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제주의 평화는 지역사회 또는 남한 내부만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국제질서 안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한 일

이다. 그렇다면 과거 한반도 평화와 염원과 동포애를 담았던 비타민c외교가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

제주는 도시외교를 통해 남북교류에 있어서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남단 제주와 북한의 교류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국제사회환경, 중앙정부의 지원 취약 등 여러 요인으로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재개되지 못하는데 도시외교 고유의 한계에 부딪혔다.

생태도시외교의 경우에도 일관되지 않은 정책과 비전들 그리고 이로 인한 시민사회 내부의 합의 부재,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대내외적 차이가 발생한다. 대외적으로는 천연자원보호, 탄소중립을 지향하지만, 대내적으로 성장에 따른 개발과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도시외교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추구해온 가치들을 계승하고 보편적인 가치, 평화를 제주형 평화로 새롭게 정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소극적, 적극적 평화의 이분법을 넘어 이를 확장하여 정교화 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4·3의 경우 화해와 치유과정, 평화의 가치 뿐만 아니라 남북상생의 토대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평화가 4·3의 역사성과 정신에 결합을 했을 때 서사를 가진 제주형 평화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제주의 역할, 영역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태와 평화의 결합을 통해 제주 평화의 섬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역대 정부 모두 기존의 기초(그린데탕트)를 이어오고 있다. 남북문제를 안보중심에서 벗어나서 기후와 에너지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다. 제주의 생태적 가치의 보존 그리고 인

간과 자연의 조화, 생태지속가능성 자체를 평화의 일부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적이 있다. 최근 아시아리더스 컨퍼런스에서 녹색전환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 논의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녹색전환을 통한 재건과 이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구했다. 제주의 선도적인 경험과 성과를 평화를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제주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시점이다.

유네스코가 제기한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는 인간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농산물의 인도적 지원, 남북한 경험이 오랜 기간 진행할 수 있던 이유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갈등과 분열을 마주하게 되는데, 제주의 경우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 등이 있다. 평화의 개념 역시 일상으로 내려와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여 제주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러한 갈등해소 노후가 쌓여 제주형 평화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포용의 가치가 통일 이후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줄 것이며 통일에 대한 동력이 확보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 생태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외교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노력과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도시외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한다.

● **김방현** 기존의 확장성이 결여된 안보 중심의 평화담론에서 벗어나 제주4·3 화해의 섬이라는 서사를 갖춘 제주형 평화+청정 생태의 가치를 결합시킨 것에 인상깊었다. 몇 가지 논의해봐야 할 점은 첫번

째로 지역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도시외교 네트워크 자율성 속에서 국가 간 갈등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의 외교전략과 국제사회에 의해 지자체의 외교전략에 한계가 있다. 한계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세번째로 평화 생태 포용에 대한 제주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홍보, 주민참여 행사, 배제된 청년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제주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포용이라는 생태라는 가치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고다슬** 국제사회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외교는 국제관계의 갈등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 도시외교가 중앙정부의 외교정책에 완전히 대립하기는 어렵지만, 도시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발제문에서 제시한 가치뿐만 아니라 점, 인권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평화와 포용, 인권 등의 요소는 전문적인 관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평화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형 평화의 개념을 구축해야 한다. 포용, 인권, 도시외교 전략 수립을 위해서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주에서는 도시외교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제주에서는 지방정부 도시외교를 전략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호세 마누엘 에르난데즈 오르타** 첫번째로 남북 교류협력을 살펴볼 때 구성주의적 전략을 따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국제 행동을 형성하는 데 이

념, 규범, 정체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며,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두번째로 생태를 기반으로 제주의 도시외교는 다른 섬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그들의 외교적 유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섬 간의 협력력이 제주의 도시외교에 중요한 이유는 제주가 직면할 환경문제는 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섬은 식민지배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 섬 정체성을 중심으로 녹색관광 계획과 SDG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설계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는 곧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반의 평화 교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도시외교에 있어서 상호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균형잡힌 접근 방식이 섬의 문화적 다양성, 상호 교류, 이해를 증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통일 문제 접근에서도 중요하며,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차이를 통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학생으로서 바라본 제주는 한국의 하와이라고 보이는 이미지가 있다. 이는 관광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마케팅 캐치프레이즈이다. 제주 도시외교가 제주를 섬 연구와 평화에 특화된 국제 교육의 허브로 만드는 데 집중이 필요하다.

Q.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국가 중심외교를 설립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A. (강수정) 현재 청소년을 위한 여러 외교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도시외교를 기획하고 싶다면 작년 말에 국민외교센터가 개설했고 국민일보 공감팩토리 등 여러 강연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찾아보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강수정** 도시외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국가외교를 넘어설 수 없고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 관계이다. 당장 주도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뤄낼 수 없지만, 작은 갈등부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제주에서 갈등의 주체가 모두 참여한 민군 협의체가 만들어 졌다. 이처럼 완전히 갈등의 해소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갈등해소의 과정 중에 있고 이를 통해 제주형 갈등해소 지식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도시외교 역량이 강화된다고 보며, 이번 제주포럼처럼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포럼들도 도시외교의 역량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제주가 대외적으로 중립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포럼의 장이자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인식된다면 국가 긴장상태를 우회하는 제주만의 도시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홍재형**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당장 평화와 협력은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다루던 주제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다. 미움 받을 용기라

는 책에 따르면 아무리 어려운 관계일지라도 서로 마주앉는 것을 회피하면 안된다. 관계를 개선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개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에서 남북관계에도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관계도 협력과 신뢰 형성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노력이 합쳐져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제주형 통일교육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 제주 거주 탈북민의 제주 융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정부와 함께 '제주종합 통일서비스 센터'를 조성해야 한다.
- 제주에 산재한 역사적 안보, 통일 관련 좋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
- 제주4·3의 역사, 정체성과 결합한 평화라는 새로운 제주형 평화 개념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 생태와 평화의 결합을 통해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개념의 강화와 역할의 국제적 확장이 필요하다.
- 평화의 포용적 가치를 통해 제주형 갈등해소 노하우, 평화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통일 시 발생할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한일역사화해와 대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좌	장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발	표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토 게이키 히토쓰바시대학 준교수
토	론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와역사대화연구소장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총	평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기	록	추연용 동북아역사재단 행정원

● **남상구** 제주포럼의 큰 주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다. 이 세션을 진행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목적 역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 세션 주제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였고, 그 결과 한일역사화해와 대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구성하게 되었다.

오늘 세션에서는 한일 양국이 왜 지금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로 역사문제에 초점을 맞춰 얘기할 것이며, 어떤 역사갈등이 있는지, 갈등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노력에 있어 성과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서로 어떤 공통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다뤄보겠다. 더불어, 우리가 국제사회에 내세울 수 있는 규범 등과 같은 부분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

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 **정재정** 한일이 역사화해를 위해 공동연구한 경험이 있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앞으로의 기대는 무엇인지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제1기, 제2기 간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 학문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나의 경험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한일역사공동위원회는 2001년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두 번에 걸쳐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10명씩, 20명 정도 참여하였다. 대체로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쟁점이 될만한 사항을 가지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대한 학문적 성과를 냈지만 되돌아보면 양국 국민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 자체가 중간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실질적으로 역사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 등 갈등을 완화해 나가면서 화해를 향한 발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선도적으로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역사공동연구위원회와 같은 것을 하여 역사화해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것이 나의 큰 주제이다.

한국과 일본은 (특히 근대) 근본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이 다르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불법으로 식민지배하였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본은 합법적이고 당시로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1965년 한일 협정을 맺을 때도 봉합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후에 역사문제로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극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보면, 정면으로 대립하던 한일 역사 인식이 30년이 지난 기간 동안 꽤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일본이) 식민지배 관련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을 하고, 한국인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을 하게 된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30년동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역사인식이 변화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한국 역시 경제개발, 민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하게 된다. 즉,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 역사대화가 가능하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정부보다 오히려 민간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80년대에 이른바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로의 대화가 활발해졌고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공통주제를 만들어 나갔다.

한일 역사 인식으로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 접점을 찾아 대화하기도 했다. 이것이 1998년 김대중-오

부치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가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고, 정부의 역사 인식에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일이 비로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이후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시작되었고, 10년에 걸쳐 공동연구 끝에 2009년 공동보고서를 간행했고 이 때 교과서를 분석했지만, 교육현장과 일반인 역사인식 개선에는 활용되진 못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다시 논의해도 괜찮을 시기가 왔다. 그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재현하고, 좀 더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일반인에게 알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이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역사문제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재개된다면, 제1기, 2기에서 부족했던 점을 능등적으로 보완해 나아간다면,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2025년에 한일이 역사화해를 선언하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 **이석우** 아시아의 국제법과 관련된 기존의 생각들을 한국과 일본에 접목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 방침은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확보이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정부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그런 차원에서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해서 떨어질 수가 없다. 즉,

국제법의 운명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다자관계보다 양자관계를 기본으로 국제법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한국이 국제법을 어느 정도로 현실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근접해있는 현실에서, 주변 국가들과 역학관계 내지,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러한 국가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정권 교체를 주기적으로 이룬 국가는 한국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 혹자는 이러한 정권 교체가 빈번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민간 영역의 독립적인 역동성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산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피할 수 있는 혼선을 제기한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국제법에 따른 외교가 매우 이상적이지만, 개별 국가의 독립을 추구하는 외교는 국제법에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러-우 전쟁,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등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다만, 이러한 모든 장벽들 초차도 국제법을 부인한다기 보다는 국제법을 원용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국내법, 국제법,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혼동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2023년 강제동원과 관련된 정부의 해법에 대한 논의와 같은 사항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체결된 조약이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변형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과연 우리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복잡한 국

가적 현안에 접근함에 있어서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석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국제법의 해석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최저 기준의 적법 내지는, 적법성 준수로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실행을 보여오고 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도덕적이고, 시대 정신을 선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후발 주자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자유 민주 국가 가운데, 실질적인 2인자인 일본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국제법학회의 주제가 동경재판, 후쿠시마, 청구권 협정 등이었다. 기존 사실과 해석 관련 재시도는 가해자, 피해자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일본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도덕성, 시대정신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유럽에 비유하지 않더라도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노력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가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노력은 감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도적인 규범형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가토 게이키** 먼저 일본 사회의 식민지배 인식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 식민지배 관련 일본정부는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제동원 역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가 더 강화되었다. 2002년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역사교과서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2021년 교과서 회사를 상대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용어를 역이용하는 등 노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강제동원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 후 국제법 위반 등의 주장을 통해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언론도 ‘한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일본 시민의 한국 인식은 나빠졌다.

일본 시민은 한국을 공격하는 프로파간다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식민지배 실태를 아는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해의 역사를 비판하는 사람은 반일, 좌익으로 매도하고 있다. 작년부터 한일 간 왕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한일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 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은 한일 역사 학술 교류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990년대 이후 민간 차원에서 한일 역사 학술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공통의 역사 인식을 목표로 공통 교재 제작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한일 교류의 역사라는 성과물이 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룬 공통 부교재 제작은 공통된 역사 인식 형성에 있어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수업을 하다보면 한국, 일본 역사연구자는 대립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다. 일본

의 연구자는 일본 국가의 가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 침략 실태, 가해실태에 대해 공유재산이라 부를 수 있는 성과가 있음에도 학생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정부차원의 한일 대화로 2002년 출범한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민간교류와 비교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 중 하나로 일본 측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위원 선정이 일본 정부 입맛에 맞게 이뤄진 것이다. 국가 의향에 따라 위원이 선정되었기에, 한일 역사대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다음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대학생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21년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한일의 답답함과 대학생인 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못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일본이 가해 책임에 성실하게 마주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일본 사회 다수파의 상식과 큰 차이가 있다.

‘모야모야’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책을 만들기로 했다. 모야모야는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데, 답답함, 꺼림칙하지 못한 감정을 뜻한다. 한국 연예인들이 식민지배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일본 팬들은 모야모야를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의문 자체가 일본인이 식민지배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컨셉을 가진 책은 없었다. 그리고 트위터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케이팝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어 1만 1천부를 판매하였다. 식민 지배 책임을 정면에서 다룬 책이 없었기에 놀랄만한 성과였습니다. 책을 읽고 SNS에 소감을 적는 등 작은 움직임이지만 역사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후 대학원생, 사회인 5명이 속편을 계획 중이다. 사소한 움직임이지만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언론상황과 극복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위와 같은 학생 의견은 소수파에 속한다. 유력 언론사가 기사를 쓰는 경우는 없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마이니치 신문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한일교류 추진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학생의 심포지움을 비판하였다. 공식 항의 결과,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기사가 삭제되었다. 이는 큰 성과이나, 식민지배를 마주해야 한다는 의견만으로도 유력 언론사의 공격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차원의 한일 학술교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조윤수** 한일역사 대화, 화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갈등 문제를 들춰내야 해서 마음이 무겁다. 연구를 하다 보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등 담론은 50, 60년대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한일 역사 현안 문제를 다뤄오면서 항상 많은 고민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의 경우, 오랜 기간이 걸렸다. 독일, 폴란드의 경우, 1970년대 시작하여 2016년에 책 한권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도 시간을 두며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

가토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역사공동위원회와 같은 사항은 한국에서 많이 논의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일본의 분위기와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역사 대화를 재개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

니면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법 규범에 대해 말씀을 말씀 주셨는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과거 여러 문제를 교섭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들어 이것이 해결된 것인지 논란이 많지 않은가? 국제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다.

● **위가야** 이석우 교수님과 가토 교수님께 질문을 준비하고자 한다. 교수님께서 한일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대화하고 서로를 포용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런 작업에 대한 실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제적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글의 취지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진행된 바 있는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있었고, 그런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 이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 여쭙보고 싶다.

가토 교수님께는 식민 지배 사과에 대한 한일 양국 시민의 인식 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다. 제주 4·3 관련 토론회에 참가했는데, 한 토론자분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관찮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정서가 어찌하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평가하는 한국인의 일반적 정서가 아닐까 생각했다. 또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야모야라는 단어도 일본 일반인의 마음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한일 양국의 사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차를 넘어, 화해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다.

● **이영호** 모두 한일 역사 화해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현재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해 주신 것 같다. 구체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적으로 어떤 방식인가가 문제인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항해서 두 가지 생각해볼까 한다.

한일 역사화해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차원은 정부차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학계차원에서도 가능, 시민단체 차원, 교육계에서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검토했던 것처럼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이 두 번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때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학자 선정과정에서도 관선보다 학계 자율성을 증진시킬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비공개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기회에 공개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대단히 보급을 소극적으로 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장기 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여, 정부 차원에서 역사 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패널분들이 말씀해주셨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두 번째로, 학계를 통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70여명의 인문사회과학자들이 모여서 세 차례 한일공동연구포럼을 민간대학에서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물이 여러 단행본으로 발간되었고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활용,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정부 재원이 있는 기관에서 적극 지원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좋은데 동력이 떨어지고 자금도 많이 부족하여 안타까운 상황이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겠다.

- 한일 역사화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재개해야 한다.
- 한일 양국의 차이에 대해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민간차원의 한일 학술교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식민지배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험과 회복탄력성 측정



좌 장 김봉현 전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
발 표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민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기 록 김수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 연구원

● **김봉현** 이번 세션의 주안점은 지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 **임해용** 탈냉전 이후 영미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가 구축됨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의존도는 심화되었다. 1980년대 초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미국 중심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는 변수가 생기게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을 시작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성장하여 미국과 G2에 속하게 되었다. 미국의 2008년 경제위기 와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2010년대 미중 전략 경쟁 시대로 전환되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시작으로 세계화의 추동력은 상실되기 시작했다. 자국 중심의 경제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으로 워싱턴컨센서스 하에서 심화되었던 상호의존은 무기가 되어 세계를 각자도생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전략경쟁이 만들어 낸 새로운 경제안보시대로의 변환을 더욱 촉진시켰다.

지난 70년 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세계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형성하고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글로벌가치사슬은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부를 증진시켰으나 수출 증대 및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수입의존도를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을 통해 형성된 글로벌가치사슬은 절대적 불평등을 해소한 반면에 상대적 불평등은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간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는 시기가 오면 각 국가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국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수준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하락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미국의 대중무역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 정도 등을 이유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2018년 관세전쟁을 시작으로 미중 무역분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공급망 점검 100일 행정명령 및 경제안보 제도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된 체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디커플링이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지면서 디리스크(De-risking)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하여 공급망 재편을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경제안보 전략은 대표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있다. 미국은 정치·군사·안보 측면에서 가까운 국가들로 구성된 공급망을 구축하여 미국이 노출된 경제위험도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를 통해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경제안보의 핵심은 워싱턴컨센서스 시대에 안보와 비교적 무관하게 진행되던 경제이슈가 이제는 안보적 고려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경제안보시대에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경제위험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성장,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인 복원력, 회복탄력성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전 세계 국가들은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2021년 백신이 개발 및 보급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각국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각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와 그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진은 국가들이 어느 수준의 경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경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경제적 취약성에 대처는 가능한지, 회복탄력성은 어떻게 측정되는지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 경제 회복탄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산출하고자 한다. 국가별 경제성과지수(Economic Performance Index: EPI) 및 경제복원력지수(Economic Resilience Index: ERI)를 개발하여 어떤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하였는지 측정하고 그 순위를 발표하고자 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이 개발한 경제성과지수와 경제복원력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전후 각 국가의 경제지수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타기관들이 발표한 지수 및 순위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과지수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의 건전성, 안정성, 생산성을 측정한다.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지만 사건 전후 국가의 경제성과 지수와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국가가 위기를 순조롭게 이겨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경제복원력지수는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및 수준을 기점으로 한해동안 그 국가의 거시경제 건전성, 안정성, 생산성이 종합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즉, 그 국가의 역량 수준에

서 봤을 때 전년대비 얼마나 국가 경제의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이 회복, 상승하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성과 수준보다는 오직 상승 혹은 하락을 수준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가별 경제성과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투자, 실업률, 정부부채, 경상수지, 물가지수 등 6가지 항목을 이용하였고, 경제복원력지수는 GDP변화율, 투자 변화율, 실업률 변화율, 정부부채 변화율, 경상수지 변화율, 인플레이션 등 6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TOPSIS(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방식을 사용하여 지수를 구축하였다. TOPSI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집단 내부의 종합적 평가 방법으로 폭넓게 사용되는데, 원자료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고 그 결과치가 평가방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의 메커니즘은 다른 차원으로 구성된 원자료를 표준화시켜 원자료가 갖는 개별적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변수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변환하는 것이다.

● **정승철** 지수를 만든 배경 및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한 2021년, 이후 2022년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2023년 경제성과지수 상위권을 기록했다. 매년 미국, 중국, 일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성과가 매우 우수한 편을 유지하였음을 의미한다.

경제복원력의 경우, 2020년에는 높은 순위를 기

록하였으나 이후 2021년, 2022년, 2023년 그 순위가 하락하였다. 다만 이는 한국의 경제성과가 이미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제복원력이 일정수준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시기 경제성과지수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들은 대부분 고소득 국가이다. 싱가포르, 덴마크, 노르웨이, 대만,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한국 등이 있다. 반면에 경제복원력의 경우 일부 고소득 국가 외에 중저소득 국가들이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다만 경제성과, 경제복원력,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제성과지수 및 경제회복력지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존 강대국들의 복원력 변화는 향후 세계질서를 전망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경제회복력 향상을 위해 해외원조가 필요한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국가를 선정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향후 제주평화연구원은 경제성과 및 복원력지수 개발을 통해 복원력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대중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뒤를 잇는 지속가능 및 회복탄력적 발전 목표(Sustainable and Resilient Development Goal: SRDGs)가 채택 및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김봉현** 민병원 교수님의 비판적 시각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 **민병원** 최근 학계에서 지수 개발에 대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는 작업들은 연구비와 관련된 사업 참여에 용이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지수

화 작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주셨으면 한다. 지수화 작업에 참여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수화 작업은 필요한 연구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모델링 자체가 정교하고, 특히 TOPSIS 방식을 통해 국가별 랭킹을 매겨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과지수와 경제복원력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복합지수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복합지수는 비교는 쉽지만 해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6가지 데이터-GDP, 투자, 실업률, 정부부채, 경상수지, 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6가지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6가지 기본 지표 사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TOPSIS 모델링 기법은 해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보여주는 수치가 가지는 의미와 수치 간의 미묘한 차이가 순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및 경제 지표와 같은 위기 상황을 외생 변수로 두고 있다. 위기 상황은 인간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내생변수로 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평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내고자 한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 같다. 뚜렷한 패턴이 없다면 지수화 작업을 통해 정책적 교훈을 도출해내면 좋을 것 같다. 둘째, 외부 충격이

라는 모델 자체를 시스템화하고 경제를 독립적인 것이 아닌 보다 크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셋째, 동아시아적 요소, 중견국가적 요소, 한국적 변수와 같은 관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지수화 작업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복합경제지수 개념화에 초점을 맞춰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김봉현** 이 세션은 코로나19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코로나19가 닦혔을 때 국가 경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80개 국가를 살펴보고, 각 국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여러 지수를 만들어 살펴보고 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요인을 통해 어떤 국가들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제성과지수가 높은 한국이 회복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

● **정승철** 한국은 경제성장은 좋았지만 복원력 수준은 살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이미 경제성과가 좋은 상황에서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든 상황이라 회복탄력성이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민병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10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보고 싶다.

● **정승철** 복원력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겪었던 국가들이 정상화됨에 따라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 **민병원** 체력이 좋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회복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면역력이 약해지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 **김봉현** 면역력 문제에 대한 의문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 **임해용** 이는 국가를 개인에 비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정박사님께서 기저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만약 한국이 복원력까지 높았다면 G7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간 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국가 크기, 인구 수, 정부 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인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뚜렷한 패턴을 지수화 작업을 통해 밝혀내지 못한다면 정책적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
- 위기 상황은 인간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변수로 보아야 한다.
- 동아시아적 요소, 중견국가적 요소, 한국적 변수와 같은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
- 복합경제지수 개념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지수화 작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 상품으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제 1 8 회 평 화 와 번 영 을 위 한 제 주 포 럼

DAY 2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2023

동아시아 금융서비스 공급망의 재편과 제주 역외금융센터(OFC)의 가능성



제주한라대학교
CHEJU HALLA UNIVERSITY

좌 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전 원장
발 표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토 론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상표 PwC컨설팅 금융컨설팅 본부장
앤드류 타가트 PwC컨설팅 동아시아 컨설팅 리드파트너
정 리 이보연 제주한라대학교 조교수

● **윤석헌** 제주의 금융센터에 대해 40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세션은 금융센터와 한국금융 산업 관련된 분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될 것이다.

● **김성훈** 역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역외금융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역내의 저위험-저수익'에 비하면 '고위험-고수익'이다. 세계 총 GDP에 대한 총 역외 금융 자산 비율은 1993년 23.4%에서 2022년 38.5%로 증가했다. 역외 펀드의 대표적인 제공자는 외환 보유고를 보유한 각국 중앙은행, 해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 그리고 해외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지리적 다각화를 추진한다. 그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역외 상점을 열면 고객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

이란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금융센터 또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 또는 둘 다를 요구한다. 이들은 소규모 국가라 하더라도 대부분 선진경제 강국들이다. 아시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경 간 시장 지역 중 하나이다. 일부 아시아 국가는 이미 역외 자금의 주요 글로벌 공급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역외금융 시장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 및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의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홍콩 특별행정구는 중국 본토 투자 자금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오늘날 지정학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조업 분야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재편을 의미하는 '탈세계화'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아시아 국가들에서 제조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동시적인 '탈중국 금융서비스 공급망 개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역외금융센터(OFC)

가 필요하다. 유일한 대안 지역이 한국인 이유는, 우선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안적인 선진 시장 경제 국가이다. 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기존의 역외금융센터는 일본, 싱가포르 및 홍콩이다.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시장경제 시스템은 역외 자금의 공급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둘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역외에서 운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많다. 그리고 많은 한국 다국적기업은 해외에서 많은 달러 수익을 창출한다.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투자 포트폴리오를 많이 운용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역외 자금 공급자들이다. 또한 한국의 금융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금융산업에는 다양한 유형의 개편과 글로벌 수준의 경험을 축적하여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트랙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는 제주 역외금융센터(OFC)의 설립이다. 제주는 역외금융센터의 필요 조건인 외국인을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국내 유일의 무비자(사증 면제) 지역이다. 제주 OFC는 국내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거주자 역외 자금을 포함한 비거주 역외 자금들에 개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세 및 기타 금융 범죄 문제에서 면제되기 위해 (마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처럼) 국내 거주자들에게는 개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한국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향한 강력한 드라이브다.

● **이대기** 동아시아 금융 서비스 공급망의 재조직과 제주 역외금융센터의 잠재력은 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회와 도전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금융센터의 현재 상황과 제주가 직면하는 한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금융센터와 디지털 금융의 등장과 관련된 환경 변화가 미래의 지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 역외금융센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시행되어야 하며, 한국의 혁신 능력을 활용하고 디지털 금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해외금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융 인프라와 기술, 규제 및 법적 지원, 금융 시장의 투명성 확보, 금융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협력적인 사업 환경이 필요하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선두급 글로벌 금융센터로 꼽히며, 비즈니스 환경, 인력, 인프라 및 금융 산업 발전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해외금융센터로서 제주의 잠재력을 평가할 때,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제주는 인프라의 부족, 한국의 낮은 경제 개방성, 엄격한 규제와 정치적 환경, 그리고 경직된 노동 시장으로 인해 다른 국제 금융센터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다. 서울과 달리 제주는 국제 항공편과 외국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금융 센터 설립을 위한 인프라 건설 비용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의 경제 개방성은 엄격한 금융 규제로 인해 낮으며, 다수의 금융 규정으로 인해 국제적 경쟁력이 낮다. 또한 경직된 노동 시장과 부족한 인력은 외국 금융 기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금융 센터와 관련한 최근의 환경 변화는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홍콩은 2020년 5월 홍콩 보안법의 입법과 COVID-19 정책의 강화로 인해 인력과 외국 자본이 이동하는 가속화되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2021년 5월 조사에 따르면 52개 은행과 금융회사, 그리고 24개 보험회사가 홍콩을 떠났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런던의 금융 부문은 브렉시트로 인해 많은 금융 회사가 대륙 유럽으로 이전

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약 7,600개의 일자리가 이동되며, 영국의 금융 부문에서 3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의 더블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같은 대체 도시들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과 COVID-19에 의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금융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금융 개념이 변화하고, 기존 금융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핀테크와 거대 정보통신 기업이 금융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가상 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금융 기업은 가상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시장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 센터로서 제주의 제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이 시행되어야 한다. 제주 역외금융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적절히 대응하고 대담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주의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해외 금융시장의 동향과 경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금융센터의 입지를 약화하는 다양한 법적 규제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외금융센터로서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금융 전문가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개발 계획과 충분한 보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국내외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ICT/제조 기반, 인력, 그리고 핀테크 산업에서 높은 혁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금융 센터로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인다. 한국은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 유니온)이 2017

년에 발표한 국가별 ICT 개발 지수에서 2위를 하였고 OECD의 국제 학업 성취 평가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덕분에 한국의 핀테크 기업 수는 2014년의 131개에서 2021년에는 553개로 네 배 이상 증가하였다. 개방 은행, 데이터 법 개정, 마이데이터 사업 실시, 종합 결제·정산 업무 허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디지털 금융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것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제주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갖춘다면 지리적인 단점을 극복하고 비대면 거래와 글로벌화에 적합한 디지털 금융 센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디지털 금융 센터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제주 지역 정부는 금융 규제와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금융 기술과 인프라 개발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제주의 핀테크 생태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금융 서비스 공급망의 재조직과 제주 역외금융센터의 잠재력은 미래의 금융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금융 센터의 변화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계획과 협력을 통해 제주는 동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임상표 1) 금융업의 디지털 트렌드와 변화의 본질**
금융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

게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 투자가 성과를 내며 최근에는 효율화·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 경쟁력 확보 및 효율화의 역사를 보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단계를 지나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효율화 및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에서는 지금까지 투자해 온 ‘과거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는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업을 둘러싼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를 요약하면, 소비자 관점에서 모바일과 플랫폼의 일상 침투현상 심화, 경쟁관점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단순한 중개를 뛰어넘어 금융 본업으로 확장하고 있고, 규제관점에서는 전통 금융기관에 비우호적인 규제 환경 부상, 그리고 기술관점에서는 AI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실제적인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리테일 산업 대전환의 사례로부터 과거 투자의 경쟁력이 Legacy로 쇠퇴하고, 미래 경쟁력이 부상할 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통 경쟁력에 대한 투자가 미래 경쟁력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고, 미래 경쟁력이 정착되는 사이클을 거치고 있다. 규제 산업이자 자산 산업인 금융업은 변화의 속도가 느리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위협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일 것이다. 디지털 혁신 사업자의 위치를 보면, 중국 안트 그룹의 경우, 2015년 알리페이 모바일 간편결제 출시로 중국 결제시장 내 영향력은 막강했으나, 2018년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중국은행 대비 미미한 성과를 달성하였고, 영국 챌린저 은행의 경우는 매력적인 금리 제공 및 간편송금 기능 등을 통해 수신 규모는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나, 아직 수수료 위주 사업 모델을 운영 중이며 영국 시중 은행 대비 개인 신용대출 취급 비중은 적다. 실질적

인 문제는 강력한 Legacy로 인해 미래 경쟁력의 새로운 투자가 지연되고 조직의 변화 수용성과 문화 지체 또한 계속된다는 점이다. 즉 전통은행의 기존 Legacy 의존 경향에 따라 혁신이 지연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신규 경쟁자인 플랫폼사는 아직 투자 단계에 있으나 효율화 전환 이후 이익을 극대화할 시, Legacy 금융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과 변할 것을 구분하고, 각각의 변화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고객, 기술, 생태계 중심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플랫폼, 데이터, 클라우드 3가지 관점의 변화에 대한 통찰 필요하다.

2) 플랫폼, Not as Utility but as Product

토스는 연령대별 인기 모바일 앱 순위에서 유일하게 10위 내 포함된 금융 앱이며, 다른 어떤 금융사의 서비스도 이 순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경쟁적으로 앱을 출시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해 온 금융사들은 토스의 인기 요인을 One Super App 전략에서 찾고 있다. 기존 금융사 앱은 영업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융 기능을 복제한 유틸리티지만, 토스는 생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플랫폼 전략을 위해서는 ‘슈퍼 플랫폼’과 기존 금융 앱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플랫폼과 오프라인의 연계, 외부 생태계와의 연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토스 고객의 지갑을 완전히 대체하는 하나의 슈퍼 앱을 꿈꾸며, 슈퍼 앱 전략을 통해 고객 획득 비용 절감과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실리콘밸리식 Product Growth 지표 관리를 통해 단순한 트래픽과 실적이 아닌 질적 성장 수준을 정교하게 측정하며 다양한 실험을 해 나갈 수 있다.

3) 데이터, Not as Oil but as Engine

최근 트렌드는 분석가의 손을 거쳐 사후적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닌, 즉각적이고 자동화된 형태로 이뤄지는 AI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 중이다. 마이데이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도 이미 회사의 데이터 활용 역량은 대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고 있다.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1등만 데이터를 독식하는 특성, 비즈니스모델의 필수 요소로서의 데이터 부상, 금융 데이터의 불완전성 극복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통 금융기관이 직접 고객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끈을 놓는 순간 고유 업무인 금융상품을 제조 후, 대리인에게 판매위탁 하는 단계로 전락할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해 구동되는 AI 기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Embedded 비즈니스 모델 기회 발굴에 나서야 한다.

4) 클라우드, Not as IT Migration but as Business Transformation

클라우드는 단순한 IT Migration이 아닌, 미래 경쟁을 위한 핵심 요소인 '신속한 고객 대응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클라우드의 Full Potential 활용은 고객 대응력 제고를 위한 조직 변화, 클라우드가 생태계의 적극적 활용, 미래 서비스형 Core Banking 전략의 구현을 통해 이뤄진다. 글로벌 선도사들은 기보유 역량과 솔루션을 클라우드 생태계 위에서 수요자에게 대상으로 제공, IT 금융 솔루션 기업으로의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중이다.

● 앤드류 타가트 기후변화, 양자주의, AI, 디지털 자산, 사이버,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들은 금

융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빠른 속도의 금융시장의 변화는 기업들의 생존 걱정으로 이어진다. 아시아의 금융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전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AUM(Assets under Management)이 5위이고 금융시장 내 상하이의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싱가포르가 성공적인 금융센터가 된 12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정치적 경제적 안정, 관료적이지 않은 점, 투명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아시아 금융센터의 미래를 형성하는 추세를 살펴보면 아시아의 금융 센터가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살펴볼 수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국가 간의 금융센터 비교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역외금융센터(OFC)가 필요한 시점에서 유일한 대안 지역은 한국이며, 국내 유일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 금융센터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의 금융규제 및 제약사항들을 지적하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디지털 글로벌화에 적합한 디지털 금융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실제적인 큰 역할을 할 플랫폼, 데이터, 클라우드의 역할들을 확인하였다.
- 글로벌시각으로 기후, 디지털, ESG에 대한 미래의 적응이 중요함. 한국과 싱가포르의 비교에서 한국금융시장이 싱가포르와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 배울 점이 있으며 제주가 적응자산관리 HUB가 되는 것도 매력적이다.
- 디지털화 추세는 고객 대상이 B2B 또는 일반고객형임에 따라 성격이 많이 다르니, 기업금융 대상으로서 제주만의 펀딩, 표적화 등의 전략, 비전, 차별화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Countering Rising Protectionism amid South Korea's Indo-Pacific Manifesto



Moderator **AHN Choong-yong**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Speaker **HEO Yoo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Jagannath PANDA Head, Stockholm Centre for South Asian and Indo-Pacific Affairs (SCSA-IPA),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ISDP), Sweden the SCSA-IPA
Jeffrey SCHOTT Senior Fellow,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URATA Shujiro Chairman,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IETI)
Rapporteur **LEE Jonghyun** Global Asia Fellow, East Asia Foundation

● **AHN Choong-yong** The world is now entering an unprecedented inflection point in modern history caused by the pandemic,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the US-China rivalry, particularly, the hegemonic scramble for technological domination. As a result, both countries have occasionally taken unilateral, coercive,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mid this turbulent and fragmented world, the Yoon Suk Yeoul government of South Korea declared South Korea's Indo-Pacific diplomatic manifesto. South Korea deviated substantially from the previous government's strategic ambiguity in managing between the US and China to strategic clarity. Through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South Korea envisions the role of a global pivotal state with like-minded countries in realizing the

three core values and implementation principles based on fair trade inclusivity and mutual respect between economies in the Indo-Pacific and beyond. So, how can we assess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 **Jeffrey SCHOTT** Firstly, Korea's Indo-Pacific strategy is a coherent approach. It builds arrangemen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ASEAN, and others. This is the foundation for the new strategy announced last December. The United States had a similar approach to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was encapsulated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But for growing domestic political reasons that raised questions about maintaining the US

leadership and openness on trade, I think the complexity and friction in US politics have led the United States to be much more cautious in dealing with the region and particularly in its relations with China. This naturally creates tension in US-Korea relations because Korea is immersed in the region. The United States is on a very limited scale trying to de-risk the situation with China. This is similar to what was already happening even before the US-China trade war. Because of the rising prices in China, growing regulation, and oppressive regulation of private enterprise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re had already been a movement by private firms in China to move out as part of their own supply chain resilience strategy, which has happened long before the current policies implement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 **AHN Choong-yong** URATA Shujiro, how do you see South Korea's initiative on the Indo-Pacific strategy?

● **URATA Shujiro** This strategy was consistent with Japan's Indo-Pacific initiative called Free and Open Indo-Pacific, or FOIP. There are many points in this Korean document which I liked and which I agree with. For example, I like the message that Korea aspires to become a pivotal global state. Furthermore, I am pleased to see the sentences that show a friendly and favorable attitude toward Japan. I would like to make two

points. The first point is that I want to know about the specific programs or projec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mplement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indicated in the strategy. It includes being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 the Indo-Pacific. On this point, I'm happy to read a sentence in the concluding section of the document that states that Korea will prepar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based on this Indo-Pacific strategy. I'm very anxious to know about these plans. But in the process, I like to see collaboration or cooperation with Japan and other like-minded countries.

The second point is the continuation of this strategy. In the past, there were several cases where the change in the Korean presidency led to a strategy change in the Korean government. I would like to see the continuation of this critical strategy. I would also like to know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this strategy, even in the next presidency.

● **AHN Choong-yong** This is still in the conceptual stage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shaping up a detailed strategy. Next, let me invite Panda.

● **Jagannath PANDA**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is quite ambitious.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not only greater clarity but also focus areas. There are several areas we need to look at. I think the current Indo-Pacific strategy of

the Yoon government is an extens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 The 'New Southern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focused a lot on ASEAN and India. Under the Yoon government, we are talking about the Indo-Pacific strategy. This policy adopts an extended approach beyond Southeast Asia and the ASEAN region. Thus ASEAN and India not only become the core component of the Indo-Pacific strategy, but several key areas are also consisting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maritime issues, and smaller middle-ranked countries, which have been the cornerstone of Yoon's Indo-Pacific strategy.

The second aspect is that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current Yoon government focuses more on new supply chain networks. After the pandemic, we realized the need to diversify the supply chain networks. There is a need to look beyond the US-China rivalry and US-China economic dominance. There is a focus on connecting with the regional economies, particularly with the major and middle power econom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the ASEAN regions to Southeast Asia regions.

The third pillar is the technological cooperation that South Korea envisions with the regions. I'm happy to see that many good things are happening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South Korean-Japan relations are returning to normal. But more importantly, South Korea's engagement with India, Australia, and many other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is a positive

indication. Technological cooperation will continue to be one of the driving forces behind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The last point is the focus on maritime issues and trade. This is one of the critically significant factors emerging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Discussions on how to have much more maritime-based cooperation have yet to take off for many reasons. I think this document of Indo-Pacific by the Yoon government will change South Korean and Indian relations.

● **AHN Choong-yong** Dr. Panda brought up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South Korea's relationship with many of the middle-power nations, specifically with India. Also, you touched upon maritime collaboration. Professor HEO Yoon, let's think about Korea's feasibility as the pivotal state in the Indo-Pacific.

● **HEO Yoon** Yes, the initiative is very ambitious and bold. Because of this strategy, the continuity and predictability of Korea's foreign policy were enhanced. The Yoon government is highlighting the role of Korea and shifting it from a passive conformer to a pivotal state. So, this is the first and most ambitious global strategy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so far. However, in this world of economic fragmentation, a more effective strategy to counter possible Chinese economic coercion is not ready. As a result, Korea's strategic autonomy is becoming limited.

Additionally, I would like to touch upon the middle power coalition briefly. Like-minded middle powers cannot wait for the United States to take the lead and reclaim the mantle. Indeed, uncoordinated industrial policies and consequent subsidy wars by the United States, EU, and China have increased business and transaction costs all over the world. That is the reality.

Professor Ahn also mentioned that middle powers should be able to display some strategic autonomy in dealing with this de-globalizing trend by superpowers. I fully agree with you. But can a consortium of middle power countries fill in the gap of the United States as it abdicates the leadership responsibility to provide global public goods? Can they pull their collective strength to pressurize G2 and safeguard the rules-based liberal order?

I'm pretty skeptical about it. Why? Because the deglobalization trend has been nurtured through the changing landscape of domestic politic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countries. The public's voting behavior changed, bringing economic nationalism, at the center of which lies anti-trade and anti-immigration sentiments.

Furthermore, the factors underlying this new economic nationalism are China shock (meaning more countries are getting increasingly dependent on China), technology shock (a digital divide), and immigration fear. Because these factors work in domestic politics, and

trade policy is constrained, it is challenging to expect the full restoration of the free trade regime unless these domestic constraints are relieved. These kinds of globalization divide are essential in policy and implementation choice. Therefore, to address this globalization divide, the inclusive trade policy would be beneficial for those who suffered and were alienated from the globalization process. And the last point is that decades of suffering from this derailed global trading system, and the setbacks and repercussions from continued protectionism will somehow gather the momentum for us to try to restore the rules-based order on multilateralism.

● **AHN Choong-yong**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issue. The next issue is about protectionism by the US and China. China has frozen cultural products of South Korea in China for security reasons, as well as restricting the outflow of Chinese tourists into South Korea. The US has also adopte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Chips Act to protect American industries by giving great favors to American companies and setting up various guardrails against China for security reasons. Of course, security is crucial in maintaining national sovereignty, but the security trade nexus has been overly used to apply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Dr. Panda, how do you see the political economy involved in this security trade nexus?

● **Jagannath PANDA** There are three points I would like to make. One is that when it comes to the post-pandemic economic order, particularly after the Ukraine war, I think there is a need for diversification that caters to the interests of the middle-power coalition we discussed earlier.

If we talk about South Korea's position in global politics today, it can be both a middle power and a major power in world politics. It is a major power in terms of its economy and a middle power today because its foreign policy is expanding. It has the power to influence the global narrative in many area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South Korea is a critical pivotal state in world politics today. There can be debates regarding the influence of South Korea. Still, when it comes to technology, investment, and a new supply chain, South Korea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erms of the post-pandemic economic environment.

The second point is that when discussing supply chain networks, South Korea must stay engaged with middle-ranked economies and lower-ranked economies. South Korea is very much connected with major economies lik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the latter of which is an adversarial state to many countries in world politics today. But simultaneously, South Korean investment has moved to Southeast Asia, India, and many other outside regions in and outside of Asia. That is a positive trend in South Korean foreign policy. Given the current world

economic environment, we need much more concrete investment, especially in developing regions.

The third point is that South Korea is emerging as a critical defense and nuclear manufacturing industrial hub. The middle-ranked and emerging economies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today South Korea can be one of the major arms exporters to world politics. Of course, many can debate by saying that South Korea is not a nuclear power. But in terms of the defense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a major power in terms of creating arms, ammunition, and related defense technologies. That is a critical area in which South Korea could stay connected with the major economies, minor economies, including the middle-ranked economies. And South Korea and India are, especially, emerging as better partners. At this point, the Yoon government's Indo-Pacific strategy is very competitive. But at the same time, it is very ambitious, and many areas need to be taken forward to achieve those realistic targets.

● **AHN Choong-yong** Okay. Thank you. Jeff, as you know, the US has been restricting South Korea's export of advanced chips to China. And it is hard to clarify the classification between high-tech and ordinary tradable goods, and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 technology complicated to distinguish from each other. In this regard, the US policy is very arbitrary and unilateral under

the name of security. Who decided on the US sophistication of semiconductors? How should South Korea respond to the dynamics of security and trade nexus?

● **Jeffrey SCHOTT** The first thing to consider is that we're talking about a very limited set of products and technologies subject to export controls. This is different from the type of protectionist measure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mposed on steel under the banner of national security, which had noth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And it's a shame that those restrictions are still in force. Very difficult politically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move them, given the bipartisan support for steel protectionism in the US Congress.

But when dealing with advanced technologies with military capabilities, drawing a line gets increasingly difficult. Because a wide range of commercial goods can be used for military applications, as we're seeing now with the drones that are being used to bomb Ukraine, so this is challenging issue for the US government to determine what capabilities have to be impeded.

We're talking about restricting technological advances and innovations, somewhat like what was done during the Cold War with Russia. You're trying to set controls that will slow the pa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o deter military impact and prevent the type of actions taken by China and Russia. Russia broke the glass on the nexus

of national security and common commercial activity when it invaded Ukraine. And now, any instance where you have the vulnerability,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production and trade, has become suspect for being used for coercive action, which I think are the two areas that China is being targeted. Unfortunately, those are two areas of significant economic engag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So that's where we have to try to figure out what is the sensible policy in the short term and over time that will allow growth in the US-Korean relations and not impede the innovation of Korean firms that has been such an important contributor to regional and global growth?

● **AHN Choong-yo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ments. Professor Urata, in response to the US trade restrictions, especially on the advanced semiconductor, the Chinese are now weaponizing strategic materials, for example, rare earth elements and cobalt. Japan is pretty heavily dependent on the supply of China's strategic materials. How would Japan respond to this?

● **URATA Shujiro** Before responding to this specific question that Professor Ahn raised about how Japan is trying to deal with China, I'd like to say a few words about the US policy. I took his message as there is disguised protectionism, particularly in the case of steel and aluminum, using this national security as an excuse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I hope Americans realize these policies are really against anti-inflation. In other words, having protectionism worsens inflation. Therefore, I hope that American people and politicians understand what the US is trying to do is to protect national industries. It will lead to or worsen inflation.

And the second point is that it is true that it's very difficult to draw a line between military-related technology and commercial technology. And I understand that. But I hear from Japanese firms that the information needs to be spread evenly and fairly to firms in different countries. In other words, US companies, maybe, for obvious reasons, have better access to that information compared to Japanese firms. So Japanese firms are disadvantaged in getting information about the US trade policy. So, I think Japanese firms like to see greater transparency in US trade policy. These are two points which I wanted to raise about US policy. Could Jeffrey can tell us what he thinks about these comments?

And then, I'll move quickly on to the Japanese strategy in dealing with China policy. Obviously, like other countries, Japan is trying to diversify its sources of imports by expanding its supply chain networks to other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trying to develop domestic capability, so Japan does not have to rely too much on China. And many Japanese firms are shifting their investment destination from China to other countries, not because of this increasing uncertainty, politically,

but also because of rising wages in China. Hence, they are responding to these changes rationally, which I assume is the Japanese firms' strategy. The Japanese government is also trying to help Japanese firms adopt this strategy. Thank you.

● **AHN Choong-yong** Thank you very much. Korea depends very heavily on China, even cobalt, and so forth. And then, the US restricts Korea from exporting high-level semiconductor equipment and even advanced chips to China. So how should we take the balance between the US policy and Korea's dependence on these strategic materials from China?

● **HEO Yoon** The optimal bal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a very challenging question. Janet Yellen, last month, gave a speech at Johns Hopkins University. Let me introduce her exact wording. We will secur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the terms of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e will protect human rights. We seek a constructive and fair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within the context. We seek cooperation with China on the urgent global challenges of our day. Korea is on the same page with the United States and is on a healthy economic engagement with China. Also, as you mentioned, the supply chain, especially our supply chain in critical mineral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South Korea is very concerned because it's also heavily dependent

upon China. Let me briefly introduce the Korean government's strategy to secure the resiliency of our supply chain.

The Korean government's objective is to become the hub of the global value chain. And it wants to accelerate the inflows and out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diversify the suppliers and create an innovative environment for incredibly high-tech industries. So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very effort to utilize bilateral, multilateral cooperation architecture to secure chain's resilience in this critical mineral or raw materials. For example, in terms of bilateral channels,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a bilateral channel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 This year the Korean government wants to achieve more than 20 TIPFs for the first time. And the TIPF comes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will be used in critical minerals. This has already resulted in six MOUs with Vietnam, Indonesia, Australia, Canada, and Mozambique, and the Korean government wants to expand OBA for resource-abundant countries.

Firstly, I want to make mineral swaps with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That's a bilateral direct channel. Another bilateral channel is that when Korea wants to create a new FTA, it's not a full-fledged FTA, but more like an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style. Korea intends to include supply chain chapters, and ten countries are targeted in Central Asia, Africa, and Eastern Europe in 2023. There will be for

example, our REE, rare earth element with Mongolia, manganese with Georgia, nickel with Tanzania, clean energy materials with Morocco, lithium with Serbia, etc.

The last bilateral channel is upgrading the existing FTA. Korea wants to focus on the supply chain, especially crea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on the existing FTA with Chile, India, the UK, China, and Indonesia. Through such activism, Korea wants to inspire a new supply chain formation in critical minerals and raw materials. For example, IPF, the pillar of the supply chain, has been concluded recently. And then Korea also wants to actively get involved in MSP, a mineral supply partnership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CRMC, a critical raw material club started by the EU and then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by Australia. There are other international groups that Korea wants to monitor and cooperate with in the future closely. For example, PGII, is about global input investment in G7, QUAD, USMCA, US-EU TTC, US-Taiwan TTC, and the US-Japan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 agreement.

Therefore, I think this bilateral approach has some limit because utilizing economies of scale in extracting and processing these critical minerals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cost. Securing an alternative supply chain for essential raw materials through collective efforts became an urgent task for many countries, which are highly exposed to the possible threat and coercion

from China. Thank you.

● **AHN Choong-yong**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for sharing various Korea's initiatives to ensure supply chain resilience and by outsourcing various strategic materials with many rich resource-abundant economies.

Gentlemen, I want to move on to middle-power coalition issues. I have already said that the US and China play the protectionist game for the national interest at the expense of their smaller economies. Some middle powers need to raise our collective voices against the self-motivated protectionism by the big powers, namely the US and China, to preserve a rule space to a free trade order. Can the like-minded middle powers play a strategic autonomy game? The APEC was born by the middle powers' initiative to become a global entity for economic cooperation. Can the middle powers make both the US and China listen to the middle powers' concerns in preserving liberal order? Some critics say that the US is the spoiler in chips and the global free trade order.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of Singapore asserted that most of the ASEAN does not want to be forced to side with either US or China in economic relations. In this regard, how do you see middle-power's attempt to raise their voices against a unilateral coercive trade policy adopted by the US and China?

● **Jeffrey SCHOTT** I'm afraid I have to disagree

with your premis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walked away from the international system. You're exaggerating the impact of many problems that beset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you're ignoring the extensive commercial relationship maintain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espite the trade war. Trade has grown, particularly in areas not subject to trade war tariffs.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powers can sustain the momentum for new trade reform, which is drastically needed. If one looks at the multilateral trading rules, they were written in the 1980s or 70s - some of which I negotiated in the Tokyo round are still in force. There has been a need of updating of the multilateral trade rule book since the laun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1995. So many things are different in international trade today that require new rules and guidelines. And the WTO, for a variety of reasons, primarily north-south frictions, but also some US-China frictions on significant issues like state support for state-owned enterprises, have hamstrung the abilit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o reach the type of agreements that were done in the 20th century. This is where mega-regional arrangements like RCEP Trans-Pacific Partnership have stepped into the void and have begun to rewrite the rules that apply to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he big problem in that progression has been the United States stepping away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hat was a significant strategic blunder. Of all the things that Donald Trump did to hurt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is is one of the most drastic mistakes and blunders. But who saved them? Japan and Australia. They refused to allow the hard work over the years to develop the advances in the trade rulebook to be thrown away, and so they turned the TPP into the CPTPP, which got new momentum with the conclusion of accession negotiations for the United Kingdom. That opens the door to a lot of new members to progressively come in to join the CPTPP and broaden its economic footprint, and make more standards for the new rules that were included in the CPTPP. This is a great advance, and it's been done by third powers. Other countries are now looking at this and saying this is how we can take safety in numbers, but also do strength in numbers and alliances to try to influence the movement towards new trade and investment reform.

Interestingly, the RCEP countries are increasingly looking at participation in the CPTPP. A number of them are already members. But you're seeing a merger or an upgrading of RCEP by individual RCEP countries' actions. However, the problem with RCEP is that India stepped out of it and it put itself at a great strategic disadvantage because of that since the supply chains are being rerouted through RCEP and the CPTPP. They're moving out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needs to meet its preferences because it is not in the group. So that's the cost of the United States of the Trump blunder that has continued under President Biden. But it shows that third countries can take a leadership role in keep trade liberalization progressing.

● **AHN Choong-yong** Thank you very much, Jeffrey. Professor Urata, I think the middle powers can still exercise strategic autonomy in dealing with the de-globalization trend by superpowers. For example, we can work together to revive a defunct WTO system by pressing the United States to appoint judges for the appellate body. We can form a real middle-power alliance to ensure this revival of the WTO system. What do you think about it?

● **URATA Shujiro** Middle powers have proven to be effective in dealing with some of the problems that we are faced with. EU, Canada, China, and finally, Japan is joining the MPIA(Multi-Party Intermediation Arbitration Arrangement) this March. This is another example that the middle powers can contribute to dealing with some of the problems we face. In this regard, I'd like to say Korea to join MPIA. That will put pressure on the US to deal with this problem. Korea, Japan, Australia, Singapore, and even the maybe EU can be considered as a group of middle powers. These countries can undoubtedly contribute to some of the problems. The WTO has 164

member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consensus. It is almost impossible to have an agreement with such many members. And so, the countries have decided to deal with this problem by taking two approaches: One is FTA. This leads to large regional groupings like CPTPP and RCEP – essentially a collection of the FTAs. And the other approach is a plurilateral agreement, like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in 1979, and digital trade has been discussed as a group under the plurilateral agreement. So WTO members try to deal with this difficulty in decision-making by taking these two approaches. Each of them, the middle powers play a very important role. So again, middle powers like Korea and Japan can get together and make changes. Thank you.

● **AHN Choong-yong** Thank you very much, Dr. Panda. India has been well-known for playing middle power politics in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 Now, for India to play a crucial role as a middle power, should it open its economy to the level of regional architecture like RCEP and CPTPP? So, how would India proceed along this line to play a middle-power role in liberalizing the Indian economy?

● **Jagannath PANDA** Yes, I would agree with you that the Indian economy is still not very much an open economy. I also agree with the previous commentator that India's withdrawal

at the last moment from the RCEP negotiation was a huge setback. Also, that does not give a positive image of India as an economic power, particularly regarding trade liberalization and integration into the regional economies.

There are already a lot of corrective measures happening in the Indian Economy and Indian foreign policy. One corrective measure is that after India has withdrawn from RCEP, we see that India is still reconsidering having much more consent to trade, minilaterally-oriented, FTA kind of arrangements, or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ype arrangements with specific economies, not in big groupings, but in smaller minilateral groups. That's a positive inclination. For example, India decided to join the IP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f we look at IPEF, there are some different points between IPF and RCEP. But it is not entirely a different framework. And the very creation of IPF is the arrangement between CPTPP and RCEP. So, it's a positive inclination that India agreed to become a part of the IPF from the beginning, even though we know that the IPF has stayed the same.

The other example is when India signed the Indian-like agreement, which is more considered a kind of advanced CEPA agreement with the UAE and in West Asia. This kind of arrangement indicates that India is open to trade and FTA-like arrangements. But India needs to gain more confidence to become a part of these mixes

outright.

But there are a few other things that India is doing to make that correction. One is trying to promote qualit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Japan is emerging as a critical partner in that regard. ASEA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partner. I think South Korea is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crucial partner, and that's a positive inclination because the more resilient the infrastructure develops, the more competitive the Indian economy will become. As a result, India may be inclined to join the FTA agreement.

The last point is that India is also looking at the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 regional economic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technology, and clean energy. India is trying to have more specific ways of collaboration in particular sectors. Let it be semiconductors or batteries. These are some of the areas where Indian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entering. Low production mechanisms with foreign economies beat South Korean, Japanese and other economies. That's a positive inclination within the economic policies of India. India will be much more open to becoming an open trading partner with the regional trading environment in Indo-Pacific.

● **AHN Choong-yong** Okay,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would you like to add any other comment on Korea's attempt to deliver international public goals as a middle power and

establish our relationship with Canada, Australia, and Indonesia, which are great regional middle powers?

● **HEO Yoon** My point is simple. To some degree, yes - CPTPP, RCEP, and the consortium of middle powers can contribute restoring the rules-based liberal order. But still, I think until the major players of the global community promote free trade, the effectiveness of all the efforts of this middle power coalition would still be limited.

Secondly, CPTPP and RCEP are all important in promoting public goods in free trade. In the case of Korea, it is a natural partner of CPTPP. But Korea has a general election next April. The CPTPP is another way that Korea makes FTA with Japan. But still, anti-Japan sentiment is widely spread in Korea, and the Korean government may be hesitant about political judgment to declare interest in the CPTPP.

● **AHN Choong-yong** We have a bunch of regional and multilateral architectures ranging from security trade to functional mechanism as CPTPP, RCEP, QUAD, IPEF, etc. In particular, seven economies, including Japan and Australia, belong to RCEP and the CPTPP. China applied for CPTPP membership. If China undertakes domestic reforms in labor, environmental standards, and IPR enforcement to the level of the CPTPP standards and the US and South Korea join, we should be able to amalgamate two

mega deals to make it a great building block for multilateralism. G7 leader declared to 'de-risk' China not to decouple China. So how about the idea of this China's entry into CPTPP?

● **Jeffrey SCHOTT** I've written extensively about this, but time has passed by. Your assumptions are obsolete. China has already applied, the United States has pulled out, and Korea has stayed on the fence. So with the conclusion of the accession negotiations with the UK, the Chinese feel that they are next in line to start talks with the CPTPP countries. That's a problem because China will only be able to meet some of the standards of the CPTPP. It can meet many of them over a transition period. But there are some areas concerning labor practices and a few other areas where more than Chinese practices will be required. There will be arguments by Chinese negotiators to say we are doing experiments in the Hainan free trade zone that will bring us up to standards over time. This is our negotiating laboratory. It will be very hard to get the CPTPP countries to say no to China. And so those negotiations will drag on.

While they drag on, it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to come back in. The United States coming back in would give a veto to the United States to block China from coming in. So that would be regarded as anti-Chinese. So the United States missed its chance at the

star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o come back into TPP. China took advantage and effectively blocked some options for the United States in returning, which is a shame.

● **AHN Choong-yong** Professor Urata, Japan is in the driver's seat to expand the CPTPP membership. South Korea is on the right track. We should join as soon as possible. But what do you think about China's prospects even though China claims they're carrying on all kinds of domestic reforms to meet the threshold standard to join the CPTPP? How do you assess China's attempt at this?

● **URATA Shujiro** I agree with Jeffrey about China's difficulty in accepting some of these chapters. On the accession experience, UK's accession experience would be a very good one. It did take much longer than I expected. It would be very short for the UK to go through negotiations. But as far as I understand it, CPTPP members are cautious in assessing whether UK positions are acceptable. So this gives a very good precedent. This is a good signal to the Chinese and other countries which applied to access CPTPP.

Another thing is that before they enter into negotiations, applicants have to have bilateral discussions with CPTPP members. Once they go through this, CPTPP members discuss whether they can start negotiations. I don't think Japan

and China had these discussions so yet. Based on this information, China's accession to the CPTPP would be very difficult. But if China can satisfy these conditions, it should be accepted. One important point is that China has a record in WTO dealings that aren't so optimistic, and RCEP is a good possible framework where we can see whether China can abide by the rules. By this, we can see whether China can accept some CPTPP committee chapters. It would be a good indicator to look at.

● **AHN Choong-yong** Thank you very much. Jeffrey,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last week, the trade ministers agreed on the supply chain resilience. Without market access, could this agreement be effective and enforceable to ensure a rule-based free trade deal mechanism?

● **Jeffrey SCHOTT** First of all, you don't know what they agreed to, and they haven't agreed to it because they said they are close to an agreement. But it's essentially an information-sharing exercise to better prepare or to prevent future supply disruptions and to manage disruptions if they occur.

Then how does that differ from what private companies already are doing under various antitrust or competition rules with each other in managing their supply chains? Are they going to give governments information that they don't already give to governments? Is that part of the

deal where the companies have bought into this public-private partnership or are they going to be forced to be compelled by governments to provide more information? And that of course could have impacts on competitiveness on investment in these companies. Thus, there are a lot of unanswered questions.

● **AHN Choong-yong**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sharing your views on this.

Q & A

Q. Do you think the US can return to the fully free trade-promoting policy?

A. Jeffrey SCHOTT We never had an entirely free trade-promoting policy. There were always trade-offs. You can go back to the Trade Act of 1962, where President Kennedy made trade-offs with the labor unions to support GATT trade tariff reforms.

But what has changed is that in the past, trade protection was designed to protect industries and companies. And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rying to do is change the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of protection, not the benefits of trade, so that they protect workers. Any economist will tell you that there are better ideas to protect jobs. If you want to protect people, you provide income support. But this is the root, the foundation of Biden's protectionist policies that he wants

to ensure that workers, particularly unionized workers, get a bigger share of the pie, even if the pie is shrinking.

수자원 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좌 장 정은이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발 표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 론 토마스 비에지보프스키 한국의국어대학교 객원강의교수
남궁은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정 리 최은희 통일연구원 선임전문원

● **나용우**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남북 접경지역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요구된다. 접경지역이 가지는 함의는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그린데탕트 구상처럼 추상적이고 거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공간이자, 남북 간 공유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제시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에는 미세먼지·자연 재난·기후변화 관련 남북 공동 대응을 통한 북한 내 인도적 상황 개선, 산림·농업·수자원 등 지속 가능한 협력을 통한 북한 산림 복구 및 농업 생산 기반 구축, 그린 협력을 통한 국내외 협력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DMZ 그린 평화지대화’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구상을 실현해 볼 수 있으며, 북한이 취약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인 산림·식수·위생에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현재의 교착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린데탕트 구상은 다양한 분야와 이슈를 담고 있는데 먼저 추

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1) 북한의 필요, 2) 남한의 이익, 3) 국제사회의 지지이며, 접경지역은 이를 만족하는 효과적 공간이다.

식용수·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범위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 양측 주민들의 심리적 동질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자원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물 관련 자연재해는 남북의 주민에게 모두 영향이 있으므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수자원 협력은 다른 분야로 협력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과거 북한은 수자원 협력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인식 변화가 있으며, 물 문제 개선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

현 정부가 제시하는 ‘담대한 구상’에 따라 수자원

협력의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데, ‘지속 가능한 상호 호혜적인 남북 접경지역 수자원 협력’이라는 목표와 상생, 지속 가능, 확산의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 상생의 원칙은 남북 주민들의 물 안보를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접경지역은 여러 제약이 많기에 기초적인 정보 수집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최근 신안보와 관련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수자원은 미래가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원칙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SDG와 같은 가치들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확산의 원칙은 여러 행위 주체가 가지는 가치에 따라 협력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미래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하는 초기 및 실질적/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에 따라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초기에서 실질적 비핵화에 이르는 1단계에서는 담대한 구상이나 그린데탕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대북 제재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식공유사업(KSP)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기술, 인력, 노하우 등에서의 협력을 유인할 수 있고, 남북 수자원 협력 관련 북한의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중장기 단계에서는 더 큰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새로운 한반도형 수자원 협력 거버넌스 구축인데,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반도접경 그린위원회’라는 협의체 또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북한의 물·수자원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가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접경 수자원 협력에 기초한 포괄적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인

데, 현재의 공유하천 중심의 논의에서 그 범위를 북한의 4대 강으로 확대하고, 식량 지원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하여,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식수·위생 등이 열악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남북 간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 협력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 내에서의 행위자들도 다양하므로 이들 간 소통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더불어, 수자원 협력은 수력발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식수를 넘어선 에너지로서의 물의 역할을 다 함께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으로 공유하천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용환** 발표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물의 문제는 항상 긴급하다’는 것이다. 중대한 문제 중 하나는 북한에서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인구가 세계보건기구(WHO) 추계로는 전체의 1/3 정도인 점이고, 또 다른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빈부 간 격차 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문제를 더욱 왜곡시키고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면 물로 인한 질병들이 발생하게 된다.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이 성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 북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질병들이 북한에는 풍토병처럼 남아있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추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과 북이 섞여 살게 된다면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근본적 문제 중 하나이다.

북한의 수자원 관련 통계나 자료는 오래되거나 부정확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은 전국적인지 지

업적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북한의 코로나19 봉쇄로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접근하기 어렵고,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자료는 대개 상황에 따라 과장이나 축소된 경향이 있으므로 북한 관련 데이터는 숫자보다는 숫자 간의 격차나 트렌드를 보아야 한다.

일반적 현황을 보면 2021년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오수 정화 장비에 대해 언급하는 등 물 문제에 대한 북한 지도부 차원의 관심은 존재한다. 문제는 물 활용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일차적인 관심이 전력 생산,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관개 등으로, 식수 관련 문제는 상수도 및 위생시설 개선에 장기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겹으로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 계획에 물 관련 지원이 4%밖에 되지 않는 등 국제기구의 물 문제 관련 관심 및 예산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수자원 이용 현황과 관련하여 2005년의 물 이용량이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더 줄어든 점은 이례적이다. 전체적으로 물의 사용은 발전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식수 관련 주요 통계는 상수도 보급률인데, 일관된 통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도 일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지만, 참조할 수 있는 점은 1990년대 말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상수도 보급률이 하락하였고, 당시 경제 전반과 물 문제와 관련해 충격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보이지는 않으나, 북한의 상황임을 상정했을 시 상수도보다는 상수도 시설 보급률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주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여러 증언이 있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수질오염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주요 강과 연근 해안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언이 많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자료에 따르면 수질 관련 문제는 북한 전역에서 대부분 발견되지만, 외부의 관심은 주로 영양·식량문제이며, 식수에는 적은 관심과 예산이 배치되는 실정이다.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은 통계마다 수치가 다르는데, 일관된 점은 세계 평균보다 북한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농업 생산을 증대를 위해 가축 분뇨나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이나 지하수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 간 격차, 특히 도농 격차가 20% 포인트 이상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식수 관련 북한 내 빈부격차의 문제도 심각하며, 평양과 비평양 지역의 격차가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구 공포인데, 서남부 지역에 인구가 모여있기 때문에 건설사업도 서남부 지역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은 더 열악해지는 탓에 지방 도시일수록 노후 주택율이 높고, 인프라도 노후되어 누수율도 높으며, 인분과 가축 분뇨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도 지속되고 있다. 자연재해에도 취약하여 동일한 수준의 홍수와 가뭄이 닥쳐도 견디는 힘이 약하며, 공동우물과 공동화장실이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수질오염의 피해가 쉽게 확대되기도 한다.

물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물 문제만으로 돌파구를 찾거나 협력사업을 만들어 내기는 제한적이거나 어려울 것이다. 깨끗한 물에 대

한 접근은 결국 인권과 연계되어 있고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북측이 수용만 한다면 식수와 관련된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한국과의 협력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NGO를 통한 우회적인 협력을 찾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북한이 협력을 수용한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준비 및 원칙이 필요하다.

● **토마스 비에지보프스키** 창의적이고 참신한 다자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나, 그린데탕트 구상은 10여 년 전에 알려진 접근법으로 새롭지 않다. 그린데탕트 구상이 알려진 이후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고, 이러한 비극도 10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2020년 한국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그린데탕트 구상과 관련해서 이해되지 않는 점은 그린데탕트 구상을 추구하면서 한국의 독자 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의 해제가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린데탕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를 해제하고자 한다는 상징적인 제스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린데탕트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과 같이 양측이 참여해야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바닥을 보여주지 않는다. 현재 지도부 하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희망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도 수용하지 않는 등 한국과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수자원 협력은 다자간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북한의 관여를 끌어낼 수 있다. 북한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EAAFP) 등의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으므로 수자원 협력을 포함한 환경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NGO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관여하는 기업이나 국제기구가 있고 북한이 회원국으로서 협력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양자 협력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남궁은** 앞선 발표를 통해 북한의 물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북한의 물관리 현황이나 통계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물 문제를 홍수, 가뭄, 오염된 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60년간의 한국을 먼저 살펴본다면 북한의 현 상태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물관리에 성공한 두 국가를 꼽는다면 바로 싱가포르와 한국이다. 6~8월에 집중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전천후 물 공급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것이 곧 한국의 물관리 성공역사이다.

1961년 이전 한국에는 물에 관한 법률이 없었으나 1961년 처음 수도법이 만들어지고, 댐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댐, 저수지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한 준비를 했고, 수도법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산업용수 등 수도물의 공급 방안을 고민했다. 깨끗한 물을 쓰고 하수가 발생함에 따라 하수법, 그 이후 지하수법 등 여러 가지 법이 단계적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이 1961년 제정한 수도법과 1966년 제정한 하수도법이 북한에서는 2008년에 들어서야 제정된다. 법률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이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을 설립하고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갖추

는 동안 북한은 뚜렷한 체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북한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 인프라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 북한의 물 사용량은 아직도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쓰이고 일부가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인 반면, 한국은 농업용수가 50% 이하이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농업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을 거쳐 현재 반도체 산업까지 도달했으나,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 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남과 북의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지원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협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여러 굵직한 정책적 계획도 요구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수 약품 및 소독설비 지원, 특히 취약계층 및 소아병원에 대한 정수기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한 구상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물관리 현황, 물 문제 실태 파악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간 공동위원회를 구축하는 등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남북 간 상하수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적은 인도적 지원이긴 하나, 실효성을 인지하고 언젠가는 북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최용환** 사실상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협력 단위들 사이에 정치 조직이 끼게 되며, 평양에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표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북 간 원하는 조건들을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향이 있기는 하며, 이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치조직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 협력 안정성을 위해 국제기구나 NGO를 통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법의 경우에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지만 북한이 국제기구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국제기구를 통한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남북 직접 교류를 할 수도 있으나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일 때의 상황 모두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자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가입하려면 이들 기준에 맞는 경제 통계 공개가 필요하다. 북한이 SDG나 국제기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며 국제기구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국제기구의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도는 낮으나 북한 자체 데이터를 공개한 것이며, 이러한 북한 변화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냐에 달려 있다. 지금 당장의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 간 획기적인 변화는 어려우나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을 제외하고서라도 한국의 필요에 의해 지역 협

력체 등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향후 북한의 참여를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린데탕트 용어가 적절한지 의문이나 현재까지도 그린데탕트 이슈가 살아있는 이유로서 남측의 수요가 있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싶다. 접경지역의 공유하천인 북한강과 임진강 모두 북한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댐을 건설하고 한반도 기후가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댐의 수문을 잠그면 남측의 물이 줄어드는데, 한강은 수량이 풍부하나 임진강은 수량이 부족하다. 북한의 수질이 좋지 않기에 도움이 필요하나 북한 못지않게 남측의 수요도 존재한다.

● **남궁은** 한국에서는 경제성장, 산업 발전, 인구 증가를 통해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1977년 처음으로 도시와 농촌 간 인구 비율 50대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1977년 처음으로 하수 처리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이전에는 하수 처리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북한을 지원할 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의 물 문제가 더욱 심각하므로 도시에 대한 지원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접경지역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표수 외에 지하수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북한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오염시킨다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나용우** 비핵화를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간다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결국 비핵화의 구체적 그림이 나오지 않더라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만 앉았다면 초기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유도하고 설득하는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협상 테이블로 오지 않더라도 먼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계기를 누가 만들 것이냐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담대한 구상’ 및 ‘그린데탕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 남북이 미세먼지·자연재난·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산림·수자원·농업 등 지속 가능한 협력을 통해 북한 산림 복구 및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기후·환경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야별 사업 준비, 북한과의 ‘산림·식수·위생’ 협력을 시작으로 접경지역의 공동협력 체제 구축
- 남북 공유하천 수자원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사업(KSP)을 추진: 남한이 2015년 라오스에 지원하였던 KSP 사업을 임진강과 북한강에 적용함으로써 북한과의 수자원과 관련한 인력 양성과 정책 마련, 법 제도 정비의 노후우 공유가 가능
- 북한 수자원 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지원: 남북 수자원 부문에서의 협력에 앞서 남북 간 상이한 법 제도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는 준비 필요
- 새로운 한반도형 수자원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국내적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 및 채널 확보, 남북 간 수자원협력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 마련(가칭 ‘한반도접경그린위원회’), 국제적 차원에서 개별협력 국제기구와 연계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북한의 물·수자원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가입 유도: 수자원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프라 비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로의 북한 가입을 적극 지원, 수자원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를 통한 북한 내 전문인력 양성 도모
- 접경 수자원 협력에 기초한 포괄적 남북 협력 추진: 임진강과 북한강을 연계하여 한강하구까지 통합하는 유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의 4대 수원(대동강,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으로 확장하여 적용, 식량 지원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하여 '물(수자원)-에너지-식량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 프로그램의 시범적 운영 고려

- 국제기구, NGO 등과의 협력을 통한 협력: 국제기구나 NGO는 정부에 비해 정치군사적 변수로부터 자유로운 융통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 이전 현황조사 등 기초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 간 교류가 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상황 악화에 대비한 우회 루트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NGO 등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추진
- 한국 정부 제안 '담대한 구상' 초기 단계, 민생 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 개선 시범사업 후 비핵화 단계에 맞춰 사업 확대를 계획,
- 북한 상수도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정수 약품 및 소독설비 우선 지원, 취약계층 및 소아병원 등에 간이정수기 및 필터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참여와 인권보장 협력 방안



좌 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 표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토 론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이사 정대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센터장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 **김미연**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논의 될 때 평화와 번영, 진정한 협력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PRD)은 장애인 인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 인권 규범이다. 현재 186개국에 동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동 협약 제11조에서는 무력충돌, 인도주의적 위기,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엔과 유엔 회원국의 장애인 보호 책임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인권문제로 다뤄야 한다.

특히 해수면 상승이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 인권에 대한 우려가 높다.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나라인 키리바시는 해수면이 91cm가 상승할 경우 국토 3분의 2가 유실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50년경 전 국토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섬나라로 이주를 진행하고 있다. 나라 전체가 난민이 된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키리바시 정부가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인구의 11.5%, 12,765명이 장애인이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키리바시에서는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키리바시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주류사회에서 오랫동안 배제되고, 오해와 차별을 받아 왔고, 그들의 권리와 요구가 무시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키리바시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파키스탄의 홍수는 국토 3분의 1을 약아갔다.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후 풍토

병으로 인한 2차 재난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가는 사회적약자,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속 난민캠프에서도 장애인 인권은 보호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장애인 정책은 인권을 모델로 가야 하며, 장애를 하나의 병리학적 또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주요 이슈로 봐야 한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후행동계획(CAP) 속에 장애인 이슈를 포함해야 한다. 지난 3월 제11조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꾸렸다. 향후 2-3년 동안 전 세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제11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위원회의 목표 중 하나는 CAP에 장애인 정책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되도록 의견을 내는 것이다. 모든 과정에 있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올해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카르타 선언이 있었다. 장애인 인권은 복지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위기의 맥락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세계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장애인 인권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천전략 등 그동안 역동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이바지해왔던 국가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김민석** 2017년 미국 정부는 5등급에 해당하는 강력한 허리케인 '이르마'가 발생하여 대피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대피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침은 없었고,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강력한 허리케인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 장애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한 허리케인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처럼 휠체어를 타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줬지만 저처럼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은 없었습니다."라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자연재해 발생 시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휠체어는 자유를 향한 훌륭한 기계적 매개체로,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휠체어에 의해 해방된다. 그러나 평평한 표면과 매우 제한적인 건축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언덕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단차가 큰 곳들은 아무리 좋은 휠체어라 해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장애인들의 이동 방법을 고민하며 지원도 많이 해주지만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만 사용이 용이하며, 기후위기나 재난 시에는 휠체어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수동 휠체어가 물에 잠긴다면 부품과 구성요소가 빠르게 녹는다. 또 사용자 피부와 접하는 쿠션은 바닷물까지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바닷물에 싹거나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은 물이나 홍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더위가 더욱더 치명적 기후요소이다. 지하철을 예로 들자면 비장애인들은 임시로 피할 수 있는 비상 장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사람의 인체는 조금만 움직여도 체온을 유지해준다. 하지만 팔이나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무더위는 훨씬 더 위험하다. 이처럼 많

은 정책들을 만들 때 다양한 장애인 인권을 고려하며 설계가 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엔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여러 사항을 이야기한 바 있다. UNCRPD라고 부르는 바로 장애인 인권 협약이다. 유엔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사국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기가 생겼을 때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UNDIS라는 장애인을 위한 3가지 전략이 있다. 첫 번째 Twin-Track Approach는 장애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가지 장애가 아닌 복합적 장애를 고려해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Intersectionality는 상호교차성을 이야기한다. 즉, 인종이나 성별, 위치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Coordination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정책 조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포용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자들이 장애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을 만들 때 그들의 진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책임 면피를 목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긴급경보 및 기타 중요 메시지 접근성을 염두해 두고 설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긴급 알람에서는 장애인들을

고려한 연락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기후위기가 홍수 등으로 인해 모든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은 사회적 이슈로부터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은 비상상황 및 대피, 인도적 비상 대응, 의료서비스 부문에 더더욱 취약함을 느끼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장애인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목소리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다른 인권 영역 중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적 취약층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에는 포괄적인 재난 대응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포괄적 재해 대응을 위해 첫째 물리적 접근이 용이한 대피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접근 안내 및 교육이 미리 이뤄져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포괄적인 재난 대응 구축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을 고려한 것으로 안전한 사회망 안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전 지역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명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혜경** 모든 나라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더

육 취약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장애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엄청 약하다. 장애인들 중에는 저소득층 계층이 뚜렷하게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많이 개정되어 좋아지고 있고 새로운 법안들도 생기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법안은 없고 장애인이라는 언급도 없을뿐더러 앞서 말한 것처럼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법안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법안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법안을 함께 만들어 가며 장애인과 기후위기 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대인** 기후위기 속 장애인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싶다. 기후위기를 연구하다 보면 기후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지역마다 피해 정도도 다를뿐더러 피해 발생의 속도도 달라 그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 말은 즉 일반인과 장애인은 기후위기 속 받는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정부는 일반인과 장애인의 피해가 어떤 점이 다르고 위험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피해 갈 수 없는 기후위기 속에서 일반인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위기를 이겨 나아갈 수 있다. 즉 장애인들의 취약성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제주지역부터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기후위기를 이겨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조성민** 2020년 2월 20일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장애인이었다. 작년 8월 지하에서 발달 장애인이 죽었고,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외치는데

과연 장애인들의 취약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2020년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은 더 취약하다고 말을 하였다. 취약하다고 인식을 했으면 대응이 나와야 하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가. 작년 12월 연말에 인권위가 윤석열 정부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니 빠른 대응을 요구하였지만, 답이 없다.

기후위기 속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것도 장애인이다. 대책을 만들자, 대응하자고 위기를 인식했다면 대책도 과감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 장애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 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응급, 구조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2019년에 제주도가 유일하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지방적인 차원에서 이행하겠다고 토론까지 했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이 기후위기를 포럼까지 끌고 온 것도 제주도가 유일하다. 이러한 논의를 했으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주거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장애인 전담관을 둘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앞서 얘기했던 문제들을 제주도에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강인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참여와 인권보장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기후위기와 장애인과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한다. 환경이 오염되면 오염된 물에서 기형이 생기고 이는 다시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은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탄소배출량으로 인해 기후 위기가 오고, 그래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한가지 한가지 과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제도 의지를 갖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세션을 준비하면서 크게 다가왔던 것이 콜렉티브 임팩트이다.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이 사회복지 발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를 같이 포함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

당사자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점에 물론 동의한다. 그렇지만 어떤 당사자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참여하는 당사자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하는 것이다.

오늘 기후위기 속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개선 방법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 이처럼 기후위기 속 장애인들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단단해지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서 바라보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많은 정책들에 다양한 장애인 인권을 고려하며 설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후 위기속의 장애인 인권의 과제는 CLIMATE ACTION PLANS (CAPS) 안에 장애이슈가 이젠 포함되어야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한 가능성, 인권이슈가 함께 교차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해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으로 장애인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 배제되어 잊히는 사회적구조를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인 지역사회로 탈시설 시켜야 한다.
- 단순히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의 이슈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방안을 기후위기시대에 장애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Dilemmas of Strategic Positioning: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Future of ASEAN



Moderator **LIM Sunnam** Former First Vice Foreign Minister
Speaker **Bilahari KAUSIKAN** Former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Singapore
LEE Jaehyon Senior Fellow,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Kasit PIROMYA Former Foreign Minister of Thailand
TON NU Thi Ninh President, Ho Chi Minh City Peace and Development Foundation
Rapporteur **SHIN Young-Deok** Global Asia Fellow, East Asia Foundation

● **LIM Sunnam**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Seong Nam Lim. I used to be Vice Foreign Minister from 2015 to 2018 and served as the ambassador of Korea to ASEAN from 2019 to 2021. I would like to begin by thanking the East Asia Foundation and the APLN, 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organizing this important and timely session titled “Dilemmas of Strategic Positioning: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Future of ASEAN.”

As many are aware of people used to say the 21st century will be the period of the Asia Pacific. But instead, especiall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I believe that the new geo-strategic notion of the Indo-Pacific has more or less been replaced by the traditional concept of Asia Pacific. This

new notion of the Indo-Pacific has been in a sense more systematically employ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s we all witnessed through the adoptio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West as well as the inauguration of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Many countries or many entities in the region have responded to this new policy trend in one way or another. Among that, the reaction or the policy choice of ASEAN has constantly drawn a lot of attention from the mass media and the academic community.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at: first, ASEAN has been a very significant player in the regional politics of the Asia Pacific and beyond. Second, the South China Sea, which has been the arena for the US-China rivalry, cannot be separated from ASEAN. Lastly, the

principles such as ASEAN centrality or ASEAN unity, people are wondering how those principles of ASEAN can go in harmony with the variations or differences among the member states of ASEAN vis-à-vis the notion of the Indo-Pacific. So throughout the discussion this afternoon, we will have a chance to hear the views and insights of the distinguished panel, primarily from Southeast Asia and Korea.

Let me first, I introduce a Former Permanent Secretary from Singaporean Foreign Ministry, Mr. Bilahari. He will be joining the session remotely from Singapore. On my left is a former foreign minister of Thailand, Mr. Piromya. He served as foreign minister from 2008 to 2011. And before that, he was ambassador to the Soviet Union, Japa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ward, he joined politics and was regarded as a champion of freedom and democracy in Thailand. To his left is Ambassador TON NU Thi Ninh. She's now serving as the president of the Ho Chi Minh Peace and Development Foundation. And before joining that, she was very active initially as a diplomat for 20 years, serving as Vietnam's Ambassador to the European Union in Brussels and then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ast but not least, Dr. LEE Jaehyon is a rising star in Southeast Asia or ASEAN studies in Korea. He got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Murdoch University in Australia, and he's now affiliated with the Asan Policy Institut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k tanks in Korea. I think

that we will begin with a discussion about how ASEAN approaches the geostrategic notion of the Indo-Pacific and how each member state, in particular, the mother country of Southeast Asian participants, has approached the Indo-Pacific nationally. So we will go one round, and then if I have any questions, we will go another round and then, we will have interactive discussions on the panelists, and among the panelists. Why don't we start with Mr. Bilahari, please?

● **Bilahari KAUSIKAN** Thank you very much. I'm very grateful to be invited to share my views today. Let me start with some of the first principles. It is vital for us not to lose sight of the fact that ASEAN's primary focus is to manage relations among these members and to ensure some significant order in the diverse region where stability among these component states is not to be taken for granted. Dealing with external forces is a secondary function. For all ASEAN members, the primary modality for managing relations with external powers has always been national and non-regional. Regional forums, for example, like the East Asian Summit and ASEAN regional forum, these are supplementary means to national approaches, which is not surprising because Southeast Asia is a very diverse region. And in a diverse area, it should not be surprising that ASEAN members can develop strategic assessments in outlooks. ASEAN has never tried a common position on

every external issue. If we tried to do that, it'd be somewhat disastrous because they would raise inevitable differences of strategic assessments against interests becoming sources of intra-ASEAN ventures.

So it follows from what I've just said that ASEAN, strictly Indo-Pacific Outlook is very primarily old wine in a new bottle. In other words, it is the lowest typical denominator compilation of existing projects. The 2019 document is better understood as a form of ASEAN centrality. In other words, it is not to be left out of the debate over the Indo-Pacific, rather than a practical guide to any ASEAN member state. Indo-Pacific is not a politically neutral term. And beyond the obvious geographical definition and even geographically, the western boundary of the word is somewhat funny. The word carries different shades of meaning to states that have adopted it, like free and open Indo-Pacific or rules-based order. And even former US allies like Japan, Australia, and South Korea do not have the exact definition of each other and indeed India even though it is a member of the QUAD. So, even if some ASEAN members and other countries use these terms, they do not necessarily mean the same thing by these terms. Singapore, for example, strongly supports of the rule-based order an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but we do not mean the same thing by these terms, for example, the US, Australia, or Japan.

Furthermore, as these terms are politically

defined, whatever your definition is, it's not necessarily stable. But what is common to all meanings of the Indo-Pacific and is the largest is, first, we are sure about some aspects of China's behavior, and second, we understand that the US is a replaceable component of the regional balance. Tha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dealing with China. Not every country has the same concerns about Chinese behavior. Neither does understanding that the US is an irreplaceable component of the regional balance necessarily mean that there are no concerns about what aspect or another of US behavior.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generally falls between this comprehensive framework I have sketched, with Laos, Cambodia, and Myanmar as partial exceptions. Over time concerns about China among ASEAN members have grown, although not always articulated publicly. And in Myanmar, Laos, and Cambodia, these concerns exist primarily on the ground and at a people level rather than the governmental level. Concurrently, today, a better appreciation of the US will be met by the balance of our most active members, again with Myanmar, Laos, and Cambodia as partial exceptions. Thailand, under the current military-dominated government, is ambivalent about the US. It remains to be seen by the attitude of a new type of government that will evolve sooner or later after the elections. Now, of course, the translation of this comprehensive broad common understanding into interest and

hence implementation as policies remains a matter of the national policies of individual members. So, let me summarize.

All countries, including former US allies, face two fundamental realities. First, we must deal with both the US and China, and dealing with them simultaneously is necessary condition for dealing with the problem effectively. And second, there is no country without some real concerns about both US and Chinese behavior. Now you've got these two fundamental realities together, and you will find is that all nations will seek to maximize strategic flexibility within the constraints of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the idea of the Indo-Pacific will have many manifestations, which will change over time, and may even be different according to different issues. I'll stop here.

● **LIM Sungham** Thank you, Mr. Bilahari, for the presentation about thinking on ASEA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SEAN and the US and China. We may have more questions about those points later on. And now, the next turn is foreign minister Piromya.

● **Kasit PIROMYA** Thank you very much. I am, at the moment, a full-time Thai citizen as well as the citizen of the ASEAN community. I am not at all involved in the official functions of the Thai government or the ASEAN secretariat. I want to approach the whole ASEAN po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ramework of the big four legal documents of ASEAN. First is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Second, the ASEAN declaration on Southeast Asia is a nuclear-free zone. Third, it is the ASEAN declaration on Southeast Asia as a sort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May I put the emphasis on the word 'neutrality' and the fourth document is the ASEAN charter, which is the subsequent positioning of ASEAN, that is people-based. Second, it would like to be the major architecture of what's going on in the Asia Pacific or Indo Pacific, it would like to play the centrality role on the regional happenings. Having decided on these four very basic documents, I relate them to the positioning of ASEAN with the conclusion that in the Indo-Pacific region or the Asia-Pacific region, with a big power rivalry, especial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f I were to be able to be part of the decision-making of the ASEAN body, I would suggest that we call for the non-aligned neutrality route in this big power rivalry because of the Treaty of Amity states and the declaration of the ASEAN charter. And I could expand on the fact that we have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which a lot of friends and everyone has been exceeding to the signing and ratifying. But under its quote, I can say that's why we do have dialogue partnerships with all the major players of the world in the region, whether it is China and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 on. So we are friends with everyone, and

we make trade with everyone. And the world's amity is that we are not an enemy, and people don't like to confront anyone. And why should we take sides although we are friends with everyone? So that is in support of this neutral positioning of ASEAN. And the second is that the nuclear-free zone and its sort of freedom and neutrality and so on. In that case ASEAN cannot say that either China or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 are nuclear powers at the same time, and ASEAN should not be in that position. I think Japan or even South Korea should have the US nuclear umbrella to cover its security. But ASEAN doesn't need that. I believe that China would dare to attack ASEAN in that sense, and we do not have the recourse to the nuclear deterrents to be suppli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 freedom and neutrality, why not? When we are friends with everyone, not enemies of anyone, we have to maintain that neutral role, not just be passive.

ASEAN could venture to do positive things. For example, it could be the position to propose to the world at large, and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particular that the two must get together at the negotiating table to make or turn the Korean peninsula into a non-nuclear free and non-aligned neutrality. At the same time, ASEAN, in its neutral position, can speak to Taipei and Beijing about the highly unfinished civil war since 1949 through negotiation. I heard you want to join the Federation or you want to go a separate

way. Still you do not have the right to kill each other, and not only sort of self-destruct, but it will bring a lot of harm and disruption to the Asia Pacific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So both Beijing and Taipei have a moral obligation to themselves and the world. And that's where the role of ASEAN as a neutral entity could positively play a lot of things. And when it comes to Southeast Asia, ASEAN, as a neutral entity, can join forces to bring about peace and development of the South China Sea. It could come out in the open to speak in a black-and-white manner that China has no right to do or undertake unilateral actions or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ASEAN should be informed whatever happens in the South China Sea. Any military exercises by anyone should be informed. Thank you very much.

● **LIM Sunnam** Thank you, minister Piromya. He has kindly introduced all the essential documents. He has presented many important documents in ASEAN, such as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And he also talked about particular issues, such as the need to resume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need for a peaceful settlement between China and Taiwan. Later, I will ask Minister Piromya specific questions about those issues. Now we go to Ambassador Minh, please.

● **TON NU Thi Ninh** Indeed, we don't have a

common position on international issues. We don't have the problems that the EU has, and it's a plus for us. Because we have this policy of accommodating national positions with the ASEAN position, so I want to mention the reason behind the background of the US-China rivalry or competition these days and the emergence of a common framework of the Indo-Pacific. Why can we still say that there is some agency for ASEAN? Minister Evans here was questioning whether ASEAN can make a difference. And we need to remember the ASEAN Security Forum. We have managed one year to have DPRK invited and presen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et with Kim Jeong-Un in two ASEAN countries, Singapore and Vietnam. So then, when Vietnam was a chairman of ASEAN in 2010, we had the initiative of expanding ADMM - that is ten members plus formula with the eight dialogue partners. And remember that the dialogue partners include everybody in the Indo-Pacific conversation today; Australia, China, India, Japan, New Zealand, the Republic of Kore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hat leads me to say that ASEAN has a convenient agency that is not perceived as a threat to anybody. And we are perceived on the contrary, completely neutral, but as a convenient and positive-minded facilitator. If you don't know where to meet, ASEAN is the place for you, especially against this broad regional context. I want to emphasize that because sometimes it

tends to dismiss the possible role and agency of ASEAN, precisely because it doesn't take common international positions on complex issues. Still, you will take the long view when it was created in 1967. Then through the trials of the Cambodia period, for example, when Vietnam joined and since we entered, we have been good students and become positive, active contributors to some agency and witnessed the initiative by Vietnam in 2010 to open up the ADMM format and to add the eight dialogue partners.

The second point is that the insurance or guarantee for ASEAN's longevity, endurance, or resilience in tumultuous times is what people sometimes say is its weakness. The fact that you know, is the principle of consensus of accommodation of national positions. Well, it is a good thing to me. So within us, we have apparent security allies of the US. There are clear partnerships and together with that, Vietnam's foreign national defense policies. We're still good back fellows because the regional framework is one where we all feel comfortable. After all, we do not let the national positions hamper our ability to go around and find some amount of realistic consensus. And ASEAN has good relations with all the members of the broader format of the Indo-Pacific. So when we speak about Centrality, my final point would be to say that the principle of ASEAN centrality is not to say that we are very critical. But it means that,

as you know, philosopher Voltaire in France “God does not exist. We would have to invent God.” This is the precise moment in time. It’s good that ASEAN is here, and I’m pleased that the Jeju Forum and the East Asia Foundation and APLN chose this topic and invited members of ASEAN and share it with our frien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So, here are some fruitful thoughts from our discussion. Thank you.

● **LEE Jaehyun** Mr. Bilahari presented a very contrasting position. Ambassador Ninh was mor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of ASEAN, referring to such a distribution as AMM Plus. To me, the two different views of Ambassador Ninh and Mr. Bilihari sound like someone is saying the glass is either half empty or half full. I got a few points to make in this intro. The first one is about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first point is about ASEAN’s position today in the Indo-Pacific. I want to be more optimistic than Ambassador Ninh. These days there are a lot of thoughts and debates about ASEAN. And I’d like to make two points. Starting in 2019, the leaders of ASEAN began to mainstream the AOIP in all ASEAN cooperation and at the same time between ASEAN member states and external colleagues. AOIP has four crucial cooperation areas: key medical iss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the Southeast Asian region. The primary direction of this AOIP is to channel external assistance to the

ASEAN countries, and I believe that’s a wise way to mobilize Southeast Asian countries during a superpowers competition.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some leverage against these powers ASEAN has an excellent return on powers. But today, we don’t have a lot of innovation in this session.

Toda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form of ASEAN are independent of either us or China. But as you can se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has been in place for more than a decade. And today, there is rising competition in this part of the world in the context of US China’s strategic rival and the decisions were the result of countries responding to increasing competition in trading in the region, in other words, all this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conomic competition, economic security issues, supply chain issues, and great strategic uncertainty and pressure on regional security and middle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Southeast Asia. Given the history of Southeast Asia, I believe ASEAN has the potential to lead a vision of small and medium countries to expand its autonomous stretch in the space between the US and China. You’re trying to see the vision that we have to avoid the clash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se guys are racing, and we are under a strategic approach as someone has to come up and lead regional countries. ASEAN has to have that kind of strength that is key

for that role. But problems began in 2012 with the Phnom Penh fiasco at the ASEAN minister meeting. Since then, there's been the South China Sea issue, and today people talk about ASEAN disunity. Because of this, this unique ASEAN century is in danger.

I argue that ASEAN is not an institution. It is an association of many members with diverse interests and voices, and identities. They have different national interests in the region. And as you can remember, ASEAN was established as an organization in 1967, and there have been so many events that could bring the whole of ASEAN down in the past 70 years. Still, ASEAN managed all the changes in different interests and ideas and voices. This is what Ambassador Ninh said, after several years of very turbulent times, an institution, or regional organization, is based on a solid legal basis that if a great power country is a member of an organization, it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However, ASEAN is not like that, it is still very flexible and very resilient in this whole process of ASEAN history, so I think ASEAN is very resilient, but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 **LIM Sunnam** The two central questions I got from the initial presentations are: if ASEAN is genuinely interested in making it one more step ahead, and if ASEAN is interested in becoming a more meaningful institution dealing with regional instability, especially the competition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Then what will be your actual kind of policy position? What would be your recommendation to the leaders of your country and Washington and Beijing? So in the same order, I'd like to ask Mr. Bilihari first.

● **Bilahari KAUSIKAN** Okay. Thank you. I don't think my dear friend Madame Ninh and I or my dear friend from Thailand are saying fundamentally different things. We should not want to take sides, and we want to be neutral, but that doesn't mean we're going to be passive. It requires an active foreign policy to pursue your interests and that other countries should not impose interests on you. The fundamental way in which our policies stabilize the region is through ourselves. If conflict breaks out among ASEAN members, there will be greater and greater opportunities for significant powers to determine the future of the region rather than the region determining the future for itself.

My policy recommendation is to recapture a sense of strategic realism. ASEAN is losing the strategic realism that enabled us to navigate the dangers of the earlier period of US-Soviet Union competition, which in many ways was far more dangerous than the current US-China competition. Because we don't forget that US-Soviet competition in Southeast Asia was not a Cold War, it was a hot war, especially in mainland Southeast Asia. But ASEAN was able to navigate those dangers because we had a very genuine

sense of what we could do and what we could not do. And I think we are in some risk of losing that sense.

I'll give you two examples. First of all, ASEAN's position on Myanmar is the one that is a very noble position, but you have neither carrots nor sticks to influence the military regime in Myanmar. So how can you exercise some influence? You can always start by talking to them, but you have now refused? How is that a good thing? In other words, you have conceded the initiative over what happens to Myanmar entirely to the military, and you have no say. My second example is the decision in principle to admit Timor-Leste as the 11th member. Let's be very clear Timor-Leste is not a viable state. It is an impoverished country. All revenue will run out in decades. It is highly tribalized, it has many languages, and the leadership has been the same leadership for about 25, almost 30 years. Why do we want them to be a member of ASEAN? How does that help us? I don't know. This is a total lack of strategic realism, and these are two relatively delicate issues.

Now what advice would I give to my government? My advice from that perspective, the first thing is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look to your interest and try to survive the competition. Try to find the benefit for yourself. Neither the US nor China are going to listen to you. They talked about the US and North Korea choosing to meet in Vietnam and Singapore. That

is very good. But what did they achieve? Nothing. With Taiwan, ASEAN does have convening power. And that is not unusual, but convening power is useful. Only those that you want to convene use it positively. I don't see any prospect of the US or China at this particular moment wanting to use ASEAN forums. Now, if we try to interfere in this, it will only diminish our reputations because we will achieve nothing, and they will think we are idiots because we do not know the limits of our power. Right now, I guess what my advice would be is that this is a new period of great power competition. They are not in a position to listen to us. Of course, we have to make our views known but in a realistic way. Without any expectation, they will adopt our ideas. We have the look for our interests, our national interests. Our regional interests try to navigate through this period without being ambitious. That does not mean we are passive. It is quite an active foreign policy to navigate all these new tensions and dangers. That is my advice.

● **LIM Sungnam** Thank you, Mr. Bilihari for enlightening us with the notion of strategic realism. Now let's ask Mr. Piromya.

● **Kasit PIROMYA** The three of us grew up in the ASEAN circle as bureaucrats. And what we have seen since we were young officers until we reached the retirement age, I think, was a closeness, friendship, and affinity among all the

bureaucrats. Diplomats are happy to meet within the ASEAN circle or the director general level of FPC of official status. On top of that, at the political level looking back towards the founders of ASEAN, we look at them in admiration, and learned a lot from them. One thing that came out very clearly is the friendship. With the freedom of working together in ASEAN, first of the five of the six and finally ASEAN of the ten, being very friendly, then we were able to solve many problems or to unify the position over coffee or a glass of wine or a game of golf. There has to be a tradition of getting to know one another and trying to speak to one another very freshly. And then people have been noticing for the past ten years that this type of activity is both at the bureaucratic and political leve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is quite odd. So we need that friendship, closeness, and a sense of purpose to have a meaningful position. And there is the case in point that he wants to use the five-point consensus of last year or you met their inability to come to terms with the position or the South China Sea. With some of us, you're not in dispute in China, and then Southwest is not and so on. Still, as ASEAN, we must have a joint position. So firstly, you must have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the ASEAN side. And then, once we have that, we can tell the what our role is within the UN or the Trade Organization.

Second, I would like to repeat that I started

with the idea that we must navigate the rivalry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my proposal to my government is that we must not take sides. We must remain neutral as we are, but we will be very active. We are aware of the limitations we have and so on. But we have the power of the voice and an intellectual capacity to convey to the at large, and hopefully, it will encourage the Chinese and the Americans to be honest. And the other point is we as ASEAN must sit together and make a list of priorities or maybe 15 things that you will do with China and maybe ten things we will not do with China, then another 15 things we will do with the United States, ten things we will not do with the United States. We must learn from them and respect that this is what we must do as much as possible to maintain our interests and that we are not underlings. Thank you.

● **LIM Sunnam** Thank you, Mr. Piromya. I think his point is that ASEAN should not take sides but, also make a list of what specific things ASEAN will do with the US and China, so that's one of the specific ideas. Okay, Madame Ninh?

● **TON NU Thi Ninh** Thank you. I agree with Mr. Bilihari that Strategic Realism is the best approach. But the kind of neutrality that he was referring to is as being not the same as the passive but active and what I would like to remind you all is there were difficulties of the

China-Soviet Union partnership during the war. Vietnam knew how to navigate the difficulty having relations with both and managing to get support. So what I like to stress is for the sake of each ASEAN nation and the sake of ASEAN as an organization, what does neutrality mean for the broader region as a whole? What are they expecting from us? Are they expecting anything from the kind of description that our friend was making? It would seem that you are not expecting anything from us, or can they? In other words, what can they expect from us if we declare that we are new? Aside from trying to pull us to one side or the other on certain specific issues and each of us as a country, we are navigating our way. And ASEAN doesn't have to say anything straightforward.

Vietnam is keeping a very close eye on the very close relations with Cambodia and China. So ASEAN is a space where the common voices of caution about overleaning on any support source, whether economic or military. You know, it is helpful that it is a place where messages and some wisdom from history can be shared in private conversations. So that is why I was saying, if it exists, we have to create enough of the Southeast Asian region to be where it is today economically because it is only 5% in South Asia. So this 25% figure speaks to the intraregional synergy. In other words, I wanted to add one element of confidence in the *raison d'être* of ASEAN and the kind of images it provides

regionally beside each national image to move forward. So, the question that remains is, we haven't asked ourselves the question: is the rest of your region looking to ASEAN for the role for those specific positions, explicit position at this particular point in time when there is this uncertain strategic marriage? This is a question I think perhaps Mr. Bilahari can answer. But here, for example, I would like to remind ourselves that ten ASEAN members are members of RCEP. Four in CPTPP: Singapore, Vietnam, Brunei, but I mean not all of us.

● **Bilahari KAUSIKAN** Malaysia.

● **TON NU Thi Ninh** Malaysia. Yes, thank you. Now you can see that this flexibility in discerning your engagement with the and the region really rests with each member country, but here, I think if I had something to suggest to my government or even members of ASEAN, My comment would be this: we hedge between China and the US. Again, when you already have CPTPP at the previous session, it was mentioned the former US administration had lost a big opportunity by withdrawing from the CPTPP. Perhaps that's why you know this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comes for the US to regain agency now, so we will all join IPEF to send the signal that it is neither China nor the US only for us. About that logic, should we all join IPEF, this multiplication of trade structures

and mechanisms internationally?

It is because of the agency of the US that invisibly reduces opportunity. Our neutrality in this should be agreed to because we're members of RCEP, and we should also all join IPEF. I think we shouldn't pay the price of looking neutral by automatically joining IPEF without consideration about what kinds of benefits, how important it is for us. At least our administration engages in a diversity of frameworks.

● **LIM Sunnam** Okay, thank you, Ambassador Minh. Among all those points she made, the most striking one for me was that ASEAN should not allow being silent or being neutral to be taken for granted by Chinese or Americans. Lastly, I would like to ask Dr. Lee.

● **LEE Jaehyun** Let me build my answer on the points I made in the first round. As Ambassador Bilahari said, ASEAN has convening power. ASEAN can say that "Hey, US and China, you guys come here and discuss matters, and we will find the solution". The same goes for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ARF or multi-lateral cooperation. But I push ASEAN more forward from just convening power. As Ambassador Bilhari mentioned strategic realism, I would rather be a constructivist here. ASEAN has potential. Not just getting these big powers together, but getting these powers together ASEAN also got the power to lead the remaining

countries like Korea, Australia, Japan, and India. If Japan say something, other countries will not listen. If Australia says something, other countries may not listen. India is the same. But if ASEAN raises the flag, other countries will follow. That is the power that ASEAN has. Then, get these small and medium powers in the region to reflect small and medium powers' voices and interests in the contex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SEAN countries should consider their own experience.

Just before 1967 when ASEAN formed an association, there was a problem with organizations like foreign military issues and mutual alliance with the US. They solved it. In the 1980s, ASEAN came out with economic schemes. There was economic competition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it failed. But in the 1990s, in the post-Cold War context, they made it. When the US withdrew from Southeast Asia, the Soviets collapsed, and China was not that big in the 1990s. There was a power vacuum,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got together and filled that power vacuum by proposing ARF. And later, in the ashes of the 1997 and 1998 economic crises, there was an initiative to get three countries, China, Korea, and Japan, and form ASEAN+3 today.

I believe ASEAN has the potential to lead small and medium countries to get the US and China. That's my first point. Briefly this is a recommendation because I am South Korean:

the recommend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When ASEAN countries and ASEAN raise the flag, South Korea should support it. In the eyes of South Korea, for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 big powers lik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the number one concern; these countries like southeast Asian countries, Japan, China, and India, are a secondary concern. The same goes for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SEAN. Big powers like the US and China are the biggest concern for ASEAN.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s something in the second tier.

Nevertheless, for South Korea to navigat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we need to have our separate strategic network, which we can find in Southeast Asia. The same goes for South East Asian countries. If they were to navigat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y could find their own independent and separate strategic network in cor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at is my recommendation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Q & A

Q. LIM Sunnam Thank you, Dr. Lee, for your opinion on the need to strengthen the network between ASEAN on the one hand and ROK on the other hand. Now let me open the floor to the audience.

Q. Hello, I'm Dominic Phillips from the East Asia Foundation. My question was about ASEAN as an organization founded on neutrality, but some member states are far from neutral like Cambodia and Laos. My question is, are certain individual member states of the Alliance a closer alliance with the US or China? Is that a threat to ASEAN neutrality, or is there a way for ASEAN to address that?

Q. I seek your advice on how ASEAN should respond to China's current sets of initiatives including global security initiatives, global security initiatives, and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s. How should ASEAN respond to this?

Q. I am uncomfortable about how little we talked about Myanmar. There is the corrosive effect on ASEAN although lack of action on Myanmar. I'm seated next to Gareth Evans, the former Australian foreign minister. He was instrumental in collaboration with ASEAN, Indonesia, Japan, and others in coming up with the Cambodian Peace Accord. What is it about the failure of the imagination of ASEAN today that this problem plagues to the extent that it has, and is there anything we can do that will further undermine ASEAN's centrality?

A. LIM Sunnam Okay, we've got three questions from the audience. One was from Vietnam regarding how to address China's Global

Security Initiative and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Mr. Bilihari will answer that question. And then, there was a question from Australia regarding the lack of discussion in Myanmar about how to address the issue, and then the first question from the EAF intern will be answered by ambassador Ninh. one minute for each answer.

A. Bilihari KAUSIKAN Well, first of all, I do not know what the Global Security Initiative is. It is rather extensive. Secondly, the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is a load of rubbish. That all countries developed along their path is what China has said. That's like saying water is wet. China set on its own path, and so did Japan, Australia, Vietnam, and so on. Modernization is necessarily Westernization because modernity is the organization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all the models are Western. There are only two basic models, and both are Western. One is the European American model, which is primarily based on the individual and the market. And there is a Russian Soviet model based on a planned economy and the dominance of the vanguard part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These are the only two choices of any country. Right? Every country changes these things. How China implemented the Soviet model was not the same as how Vietnam, Laos, and Bulgaria did during that period. The Global Investment Initiative has the most definition. As insofar as it is in conformity or supplementary, in support of the

development goals that the UN and its agencies have set up, I think ASEAN can support it. Again, this is a case that we have to determine what our interests are nationally, regionally, and follow them. I'll stop here.

A. Kasit PIROMYA ASEAN is composed of ten members. Brunei is an absolute monarchy, and Laos and Vietnam are an one-party system. We have authoritarianism in Cambodia, and the multi-party system returned in the Philippines, consensus democracy in Indonesia, one party dominance in Singapore, a bit of exit and good governance, and so on. And then Malaysia is at an impasse of the more progressive and less progressive coalition government. Thailand is caught between the military influence and dominance of politics and a more progressive movement. So the other nine countries of ASEAN are not in a position collectively to handle the Myanmar democracy and human rights crisis. It is not our job from the beginning. We need the competency or the consensus to do so. And it was wrong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N Secretary-Genera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ay that this is an ASEAN affair. It is a democratic affair. The onus or the responsibility must go back to the UNSC.

A. TON NU Thi Ninh Vietnam is closely the closeness of each country, particularly those with ommon land border with China, and not

specifically Cambodia. But having noted that, there are many ways to deal with it outside ASEAN, bilaterally with the incredible number of bilateral visits between Vietnam and those two countries that we don't intend to loosen our embrace of our traditional neighbors. That is why we also need the ASEAN forum so that we can discuss it in Germany and hear other different voices that may help our neighbors.

A. Kasit PIROMYA Here is one other point to add. Every member of ASEAN has a responsibility not just to itself but to ASEAN as a whole. Vietnam has been excellent, and I'm not saying this because I have been dealing with the Ambassador for quite a long time, and we were once enemies, but now we are best friends, and cooperate bilaterally inside the ASEAN project.

I have said this many times fondly and sincerely, to begin with my Vietnamese counterpart. Everyone has to have the spirit of Vietnam to help each other.

A. LIM Sungnam Okay, in conclusion I heard a lot about the need for strategic realism on the one hand and proactive balancing or proactivity neutrality on the other hand. ASEAN could overcome all those obstacles and difficulties facing us and become a more meaningful organization in the coming years. Why don't we give everyone a big hand?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



좌장	한인택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개회사	마영삼	(재)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환영사	샤픽 하사디	주한 모로코 대사
축사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발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모하메드 벤사브리	주한 알제리 대사
	아살 알탈	주한 요르단 대사
	송웅업	조선대학교 객원교수/전 주 이란·이라크·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
토론	자카리아 하메드 힐랄 알 사아디	주한 오만 대사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
정리	김태은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차장 / 남윤지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행정원

● **마영삼** 지금 세계는 미·중 간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팬데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국제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경제도 악화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도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강대국 간의 대립 관계가 심화되고, 역내 국가의 외교 노선이 강화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한국과 아랍 간의 관계에도 교류와 협력의 장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와 중동에도 위기관리 및 평화를 위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 개최되는 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평화-정치-안보-경제 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시각과 접근을 통해 한국과 중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사들의 깊은 지식과 경험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과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면서도, 실질적 협력을 증진할

방안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주한아랍외교단 및 공동주최 기관인 제주평화연구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준 참석자들의 아이디어와 고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

● **샤픽 하사디** 오늘 주한 모로코 대사이자 주한아랍외교단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제주에 오게 되어 영광이다. “인도-태평양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제주포럼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동료 대사들과 외교관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기억에 남을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뜻깊다. 저명한 패널리스트의 귀중한 발표와 동료들과 함께하는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다극화

시대의 한-중동 협력'으로 지금 시기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중동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중동 지역을 넘어 전 세계 공동체의 평화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핵심적인 정치 및 경제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한국과 아랍 간 외교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김은정** 최근 중동 지역의 급격한 정세 변화에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우디-이란 간 관계 복원 이후, 사우디-시리아, 바레인-카타르, 바레인-레바논 등 국가 간 관계의 직접적인 개선이 있었다. 이러한 관계 개선을 통해 예멘 평화 협상이 개최되는 등 중동 내 여러 분쟁 해결에도 여러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 역내 관계 개선과 전반적인 정세 안정은 한국과 아랍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과 아랍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왔다. 아랍은 한국의 주요 에너지 수입원이자 최대 건설 수주 지역으로 한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했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동 국가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제, 사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다. 한국과 아랍은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협력 파트너이다. 우리 정부는 아랍 국가들과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도약해 나아갈 것이다. 이미 IT, 보건, 의료, 신재생 에너지, 게임, 스마트 시티 등 미래 분야에서의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아랍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하는 데 노력해 주신 한국-아랍 소사이어티와 제주평화연구원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한인택** 국제적으로 특히 중동에서 수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2년 전에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었고, 최근에는 이란-사우디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최근 1~2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중동 역내 국가들의 역할이 지대한 것 같다. 중동 역내 국가들의 역할들도 살펴보고, 이런 변화들이 세계 경제 및 한-중동 협력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오늘 주한아랍대사들과 중동에서 근무하신 한국대사를 이 자리에 모셨다. 오늘 토론을 토대로 한국과 중동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한국과 중동의 앞으로 10년간의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먼저 주한 UAE 대사께서 UAE의 대외 원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故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초대 UAE대통령께서 “우리는 알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로 친구와 형제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UAE는 관용과 공존을 위해 인도주의적 대외 원조 지원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국제평화와 안정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종교, 언어,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원조를 하여 빈곤 감소 및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OECD에 의하면 UAE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세계 10위 권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보인다. UAE는 다양한 해외원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표적인 UAE의 자선 재단으로는 아랍에미리트 항공 재단, 에미레이트 적신월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재단을 꼽을 수 있다. 해외 원조 활동으로는

파키스탄 소아마비 예방 접종, 두바이 케어스 재단의 아프리카 후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해외 원조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구호를 위해 2억 1300만 달러(약 2700억 원), 260대의 수송기 및 12,300톤의 구호 물품을 지원하였다. 또한 내전에 휩싸인 수단에서 탈출을 위해 12개 수송기 지원 및 476톤 분량의 식량, 의약품,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UAE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 지역, 인종, 경제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해외 원조를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 **한인택** 기존 UAE의 부나 발전에 관해서는 잘 알았지만, UAE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대외 원조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초대 자이드 대통령의 훌륭한 인도주의 사상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UAE의 대외 원조가 관용과 공존의 정치에 기초해서 재난 구조라든가 내전 대상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외원조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면서 대외원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UAE가 더 모범적인 대외원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주한 알제리 대사께서 중동 평화에 대한 주제로 아랍의 공동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다.

● **모하메드 벤사브리** 중동 평화에 대한 아랍 국가의 공동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중동의 평화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하다. 모든 아랍국가에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은 인근 국가 및 국민의 이익 및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근본 요소이다. 이 주제에 대해 아랍국가마다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상 회담을 통해 도출된

공통된 입장은 팔레스타인 인권 지지, 국제법의 합법성, 갈등의 진화로 볼 수 있다. 1965년 카사블랑카에서 개최된 아랍 정상회담에서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지지, 1967년 카르툼의 아랍 정상회담에서의 '삼부정책' 결의, 1988년 알제리에서의 팔레스타인 국가 선포가 있었고 현재 유엔 회원국의 대다수가 옵서버 자격으로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회원 신청이 진행 중이다. 2022년 알제리에서 개최된 아랍 정상회담에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수립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평화, 자유,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인 한국은 다른 아랍 국가들과 역사적 분쟁이 없기에 중동의 평화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과학 및 산업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아랍 국가에 대한 개발지원을 통해 한국은 아랍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며 아랍 국가가 이를 토대로 문화적 다양성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협력 이외에도 문화 및 언어적 교류도 상호 증진되어 양 지역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

● **한인택** 벤사브리 대사께서 중동 평화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 및 중동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에 관해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아랍국가들 특히 알제리가 중동 평화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마지막에는 한국과 아랍국가 간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 다음으로는 주한 요르단 대사께서 중동에 있어서 요르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 **아살 알탈** 요르단은 중동 지역의 경제, 산업, 상업 발전을 위해 평화와 번영이 강화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본다.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요르단은 인근국들과 협력하여 인도주의적 행동을 보이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과 관련해서 요르단의 입장은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 국가 해결론(Two-State Solution)이다. 즉 이스라엘과 나란하게 팔레스타인에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독립적인 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이집트, 시리아 고위급 관리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재정립과 심화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밖에도 요르단은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이집트, 이라크와 에너지, 산업, 투자, 운송, 전력망 연결, 식량 분야 등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레바논에도 전력망 연결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걸프국가들과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이다. 시리아 위기 관련해서는 시리아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귀환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무장 테러 조직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최근에는 시리아 국경과 인근 국가들에 마약 밀수가 큰 위협이 되고 요르단도 고통받고 있다. 요르단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여러 국적의 난민들을 보호하며 의료, 교육 서비스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요르단의 약 1070만 명 인구 중 36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인구의 약 36%로 작은 나라에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난민들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다. 이처럼 요르단은 중동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역할과 노력을 계속하면서 난민을 외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 **한인택**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끝나

지 않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만 해협, 한반도 북핵,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긴장이 강조되는 지역이 중동 같다. 과거에는 중동에 테러가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총기 사고가 중동의 테러 뉴스를 압도하는 것 같다. 중동 외 지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지금까지 긴장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중동 지역의 긴장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앞서 대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중동 지역 내에 긴장 감소와 평화 증진을 위해 아랍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것이 중동의 데탕트의 에너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 마지막으로 송웅엽 대사께서 이 문제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다.

● **송웅엽** 최근 중동지역 정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전술적 변화가 아닌 장기적·전략적 변화이며, 중동지역에 새로운 ‘주체적 실용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본다. 그러나 중동지역에 새로운 정치이념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을 ‘주체적 실용주의’로 부르고자 한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열강의 대립 구도가 바뀌고,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동의 정치 지형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동지역의 데탕트가 미중러 갈등에 매몰되지 않고, 중동 국가들의 주체적 선택에 따라 상황에 맞는 중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바람직한 한국과 중동의 협력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디지털 전환,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첨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신뢰를 토대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경제계가 “제2차 중동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이

슬람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중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있다. 중동지역 데탕트 시기에 우리의 '제2차 중동 붐'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동이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한인택**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 첫째는 중동이 아랍 민족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시대로부터 지금은 실용적 자결주의 혹은 주체적인 실용주의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전환하기 때문에 중동의 데탕트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인 것 같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동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상대주의, 상대방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건설이나 플랜트를 넘어 첨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하는 제2의 중동 붐이 가능해지고 이것이 양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해 주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발표자 이외 다른 대사들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 **칼리드 압델라흐만** UAE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아랍 이외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활동들이 한국 언론에서도 공개가 되기를 바란다. 알제리 대사 발표 내용에 동의하며 이 또한 한국 언론에서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디어에서 아랍에 관심을 가져주면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게 되고, 한국의 청년들도 아랍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입장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지만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지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랍국가들도 적극 동의한다고 확신한다. 최근

팔레스타인 총리가 이집트를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변화하는 중동에 대한 요르단의 역할 발표 관련해서는 지역 협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협력을 위해 한국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주면 더욱 이 지역의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송용엽 대사 발표와 관련해서 아랍 세계가 아랍의 민족주의와 근본주의만이 다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1950~60년대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이집트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며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아랍의 차세대를 이끌 청년들은 더욱 세계로 눈을 돌리며 교육을 통해 발전 중이기에 한국과 아랍 청년들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과학과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여 아랍의 더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 한국과 중동의 미래는 1970~80년대와는 다르게 양 지역 간 기술 협력이 주도되어 추진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연사들께 중동의 평화 증진을 위해 한국 언론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한국 언론은 중동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실기에 어떻게 중동을 홍보할 수 있을지 언론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 **자카리아 하메드 힐랄 알 사아디** 연사들의 발표에 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린 후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아랍의 교류에 대해서다. 한국과 아랍의 교류는 1950년대가 아닌 9세기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랍의 고대 책에도 신라시대를 언급한 기록이 있으며, 아랍 상인들이 중국을 거쳐 한국인들과도 교류했다고 나와 있다. 그다음은 한국과 아랍의 관계이다. 1960년대부터 한국과 아랍은 건설 및 플랜트 등 경제 협력을 쌓아왔고 최

근 원자력 발전소,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녹색 수소 및 공공외교 분야로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 아랍어를 구사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아랍인들도 한국 드라마나 K-Pop을 통해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이처럼 한-아랍 관계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송용엽 대사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발표 중 아직 한국에는 중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잔존한다고 언급해 주었는데, 어떤 시각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또한 한국인들은 중동과 아랍에 대한 정보를 아랍인으로부터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고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아랍과의 인적 교류를 강화해 제3자가 아닌 중동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질문은 주한 요르단 대사께 드리하고자 한다. 한국이 국제적인 금융 강국인 만큼 공적개발원조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는데 대사의 발표에 언급된 요르단 및 인근 지역에도 해당할지 질문드린다.

● **마영삼** 먼저 UAE의 훌륭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언급하고자 한다. UAE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한국 역시 코로나19 시기에 다른 국가들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였다. 한국과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기도 하다. 이에 공동으로 개발 원조를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린다. 알제리 대사와 송용엽 대사께서 문화상대주의 및 문화 다양성을 거론해 주신 바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아랍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제리 대사께 질문 드린다.

● **한인택** 시간 관계상 의견 및 질문은 그만 받고, 발

제자들께서 앉으신 순서대로 받으신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답변 및 설명해 주시며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UAE와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함께할 수 있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UAE가 한국 및 UAE교민들을 수단으로부터 구출하는데 함께 협력한 바 있다. 또한 이란에 있던 한국인들이 코로나 19 때 UAE로 탈출하는데도 협력하였다. 이처럼 양국이 함께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UAE는 종교, 지역, 인종, 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인도주의적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모하메드 벤사브리** 아랍 지역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사막, 낙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의 천으로 덮인 여성의 모습은 아랍 세계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니며, 이것은 아랍 세계의 기준이 아니다. 아랍어를 구사할 줄 안다면, 오만부터 모리타니까지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아랍의 각 국가의 기후와 풍토는 상이하다. 모로코의 아틀라스산맥에는 눈이 덮여 있듯이 한국보다 더 추운 지역도 있고, 시리아와 레바논에는 사막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랍에는 여성이 총리, 군대의 장군, 의사, 엔지니어, 조종사 등의 직군에도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아랍 세계에는 많은 다양성이 있음을 한국 대중에게 설명하고 싶다. 미디어 관련해서는 한국에 많은 TV채널이 있지만 한국을 알리는 국제 채널이 없다. 아랍국가들도 아랍어는 아니지만 국제 채널로 아랍을 알리고 있다. 알제리에서도 TV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 이렇듯 한국도 국제 채널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아살 알탈** 먼저 테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다. 중동에서는 IS와 같이 최근까지도 테러가 일어나면서 급진적인 사고와 이데올로기로 계속 끓고 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물리적으로 테러리스트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상이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이집트와 알제리 대사가 언급했던 미디어와 관련하여 동의하는 바이다. 한국 언론이 중동에 대한 보도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주한 요르단 대사관은 한국의 언론사와 협력을 하며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국에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노력하면 한국 대중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오만 대사도 중요한 질문을 해주어 감사드린다. 최근 한국은 많은 지역에 대해 공적 개발원조금(ODA)을 증액시켜 전 세계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 한국은 2백만 달러를 ODA에 확대한 바 있는데 이는 요르단에도 있어 매우 중요하다. KOICA와 같은 기관을 통해 요르단에 난민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 주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도 지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난민들에게 중요한 물,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해 큰 도움을 주었다. 이에 지난 10~20년간 한국 정부가 요르단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 3억 달러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 **송웅업** 오만 대사가 말씀하신 국내 언론에서 왜 중동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파되는지에 대한 개인적 답변은 두 가지이다. 우리 언론사가 중동에 특파원 보내는 곳은 이집트 카이로와 UAE 두바이 두 곳뿐이다.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중동 뉴스는 주로 국제언론을 통해 접수해서 그대로 번역하여 게재하

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제언론사는 대부분 유대계 자본이 운용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시각이 걸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보도되는 면이 있다. 이에 우리 언론에서 중동에 관한 긍정적, 사실적이며 정확한 기사 보도를 위해 3가지 건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요르단 대사가 말씀하셨듯이 주한아랍대사들이 우리 언론사들과 다양한 접촉을 늘려 중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두 번째는 비록 소수이지만 카이로와 두바이의 한국 특파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제가 과거에 중동 지역 대사관에 근무 시, 중동지역의 우리나라 특파원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고민은 '접촉'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특히 주재국의 고위인사 및 다양한 접촉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적어도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그 특파원들에게 다양한 소스를 제공하여 홍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들은 즉각 본부에 보고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국내 언론사의 지면은 어쩔 수 없이 제한되어 있다. 관심이 없으면 기사를 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중동 국가들이 우리 언론 기자들을 초청해 주기 바란다. 우리 정부도 해외 언론사의 기자들을 초청한 사례들이 많듯이 한국 기자들이 중동 정부에서 초청받아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관련된 기사를 써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국가에 대해 호의적, 긍정적이며 현실적인 기사를 써 줄 것이다. 이에 대사들께서 본부에 보고하여 국내 언론사를 초청하는 기회도 만들어 보시기 바란다.

● **한인택** 이상 시간 관계상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을 마치도록 하겠다.

- UAE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례와 같이, 한국과 아랍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아랍 간 지속적인 교류도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도록 국내 언론에서도 더욱 많이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 중동 평화는 중동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며,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모든 아랍 국가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은 평화, 자유,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중 하나로서 중동 평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요르단은 중동 지역의 평화 달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행보를 보이면서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 해결뿐 아니라, 시리아 위기 관련해서도 수년에 걸쳐 여러 국적의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사실 난민을 보호할 책임은 국제사회 전체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중동지역에서는 급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파트너와 함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동과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제2차 중동 봄'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전체가 상호 협력 및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좌	장	박태현	강원대학교 교수
축	사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발	표	진희종	제주대학교 강사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대표
		린지 포터	시마 선임연구과학자
토	론	남종영	한겨레신문사 기자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기	록	강무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

● **박태현** 세션 제목이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이다. ‘생태법인’이라는 개념이 낯설다. 오늘 발표를 맡아 주실 진희종 전문가가 만들어 낸 개념이다. 법인이란 인간 말고 실체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이고 재단법인은 ‘돈의 집합’이다. 이와 달리 생태법인은 특정한 종 또는 생태계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자연물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면 인간과 같은 권리주체가 된다는 개념이다.

● **진희종**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고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는 20만 년이다. 지구의 자연은 인간에게 가장 취약하고, 인간은 자연의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당면한 기후생태 위기의 원인은 인간 행동의 결과이다. 우리는 도덕적 숙고를 통한 올바른 행동 선택의 책임이 있다. 인간이 지구를 버리면 지구도 인간을 버릴 것이다. 대안으로 생태법인은 이러

한 숙고의 결과이다.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했다. 근대 이후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은 생태위기를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

생태법인은 자연 존재에게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생태위기 극복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면에서 착안한 법률용어이다. 미래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이로써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지배와 복종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여 인류 문명 대전환의 신호탄 역할을 하리라는 바람에

서 제안되었다. 최초의 공론화는 2022년 2월 국회에서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다양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었고 작년 제17회 제주포럼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주도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법, 생태법인은 인간과 자연의 행복을 위한 제주미래의 비전이며 새로운 실천의 약속이다. 우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통하여 제주 공동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뛰어넘어 인류사회의 새로운 문명을 열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2023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워킹그룹이 출범하였다. 제주 생태법인의 이념과 가치를 전 인류와 함께하고자 한다.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한다. 돌고래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협력을 원한다.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 조직을 제안하고, 이 포럼이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 **장수진** 생태법인을 적용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이 적용된다면 보전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려 한다. 생태법인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적 기능을 하는 조례나 법률 둘째, 사회적 합의, 끝으로 대상의 상황을 관리하고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는 제주도이며 약 120마리의 개체가 분포한다. 사회성이 높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치, 오징어 등 대부분의 어종을 먹이로 한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에 보호 해양생물로 지정되었으나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선박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돌고래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여기에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 자원 및 전문가를 양성하며, 해양생물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가야 한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먹이활동과 영양, 건강 평가, 분포 및 이동, 무리 활동 및 규모 등 다양한 생태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일반인 연구로도 확장할 수 있다. 시민 과학의 영역으로 과학자와 자원봉사자가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특정 모임을 통해 지구를 배우고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로 해양포유류학회가 2년에 한 번 개최되는데 아직 아시아 지역에서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제주에서 해양포유류학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제주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돌고래와 해녀에 있어서도 그렇다. 돌고래가 다이버들은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데 해녀의 경우 가까이 접근하며 지나간다. 해녀는 바다에 자연스럽게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듯하다. 자연스럽게 해녀와 돌고래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더라도 돌고래 관련 내용들이 적지 않게 기술되어 있다. 생태법인 제도를 통해 남방큰돌고래가 보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돌고래 한 종을 보호하는 것은 서식지 등을 보호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인간 활동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사람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린지 포터** 고래류를 중심으로 바다와 관련된 연구 네트워크를 살펴보겠다. 인간과 고래가 함께 그려진 그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한국에 있다. 인간

이 사용하는 많은 도구가 고래에서 나왔다. 고래유는 화석연료가 이를 대체하기 전까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다. 상업적 가치로 인해 고래가 포획되어 왔으며, 상업 관광의 대상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고래는 바다의 생태 안정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더스강 돌고래는 현재 2,000여 마리가 파키스탄 하부지역에 존재한다. 댐, 보 등이 설치되면서 서식지가 매우 제한되었다. 이 돌고래는 앞을 보지 못하며 음향에 의존하여 서로 소통하고 있다. 포유류로서 가장 복잡한 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도양 흰수염고래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래와 소통한다. 소리의 크기는 188데시벨로 제트엔진의 소리보다도 더 크다. 외뿔고래는 바다의 유니콘으로 불리나 사실 뿔이 아니라 어금니이다. 뿔쪽한 뿔은 수컷만 가지고 있다. 뿔은 싸움을 위한 검이 아니라 감각 기관이다. 수백 개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며 정보를 뇌로 가져간다. 돌고래가 서로 두드리고 비비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에도 보이는 일반적인 종으로 적응력이 뛰어나다. 극지방을 제외하면 모든 하구에 존재한다. 사회성이 좋고 똑똑하며 굉장히 소통이 발달되어 있다. 소형 고래 중 가장 연구가 활발한 대상이다. 오늘 생태법인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구나 고래연구자로서 굉장히 기쁘고 감동스럽다.

그럼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까? 해양생물 보전과 육지생물의 보전은 확실히 다르다. 바다는 규모가 광대하고, 바닷물은 공기보다 덜 투명하며 다차원적이고 매우 복잡하다. 또한 바다 생태계는 빠르게 바뀐다.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정하기도 어렵다. 인간이 소비하는 단백질의 2/3가 바다에서 온다. 바다는 생물을 포획하고 제외하는 구분

이 어렵다. 공해는 주인이 없으며 바다 속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전에 취약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는 육상생물 보전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해양생물 보전이 어렵지만 국제적인 단체들이 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89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국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의무가 있어 법적 효력을 갖는 단체이다. 이외에도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산하 고래류 전문가그룹, 유럽 고래류학회, 아시아 해양동물 좌초네트워킹 등의 단체들이 있다.

왜 해양 포유류를 보전해야 할까? 해양 포유류의 역할이 바다에서 크기 때문이다. 큰 고래의 경우 바다 밑 영양소를 수면 위로 올려보내고, 유해한 탄소 14만 5,000톤을 몸 안에 격리(수천 년 간 보관)하며, 바다를 이동하면서 대양 간 영양소를 옮기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다는 하나이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의 영향이 크며, 사람의 위해성은 되돌릴 수 없다. 하나의 바다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폐, 심장과 같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고래류를 보호해야 한다. 생태법인 제도를 통해 고래를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남종영** 동물의 권리를 개체로 보는 동물권 운동은 미국의 동물권 단체인 비인간권리프로젝트(NhRP)의 인신보호영장 청구 소송이 대표적이다. 개체를 고통받거나 삶을 침해당하는 피해자로 보며, 이들의 감금되지 않을 권리를 위해 싸운다. 반면, 자연에 법인격을 주려는 시도는 동물권 운동이 아닌 원주민 운동이나 환경운동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며, 개체가 아닌 특정 생태계를 권리 주체로 삼았다.

2017년 뉴질랜드에서 제정된 환가늬이강 분쟁 해결법은 강물, 강바다, 동식물 등 강 전체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비슷한 시도로 독일에서 아덴해 갯벌을 법인화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첫 번째로 지정하고자 하는 한국의 생태법인 논의는 권리 주체를 종(species)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물운동과 법인화 시도의 중간에서 있다.

아울러 생태법인을 성공적으로 알리려면, 흥미롭고 감동적인 남방큰돌고래 서사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서사는 크게 공간과 시간 그리고 캐릭터로 구성된다. 독립적이고 때로는 충돌하는 다수의 스토리가 서사라는 나무를 만든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다수의 개체에 기반한 매력적인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다. 불법 포획됐다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그물을 먼저 뚫고 스스로 자유를 찾은 삼팔이, 그리고 우울증을 앓으며 쇼를 거부했다가 사산 끝에 야생에 돌아가 새끼를 낳은 복순이와 그의 짝 태산이. 이들은 전통적인 동물 운동이 호소했던 ‘피해자 서사’와 구별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생태법인 논의를 하면서 불행했던 삶을 돌고래 스스로 행복한 삶으로 바꾼 ‘희망의 서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강민철**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분이 공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생태법인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오영훈 도지사는 도정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할 방안과 생태법인은 어떻게 할지 등을 연구 중이다. 수월성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조

례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 먼저, 조례 제정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자치사무로 본다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국내외 사례조사와 어떻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다음 특별법 개정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법 환경 보전의 장에서 특례로 남방큰돌고래를 핵심종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조례 제정과 특별법 개정 2-트랙 접근이 어렵지만은 않다.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민법 개정안의 여야 우선 심사 처리 합의, 해양수산부의 생태법인 연구용역, 유엔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 시 제주 사례 소개 등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생태법인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조례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도민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겠다.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열린 적이 없는 세계해양포유류학회 총회가 2028년 제주에서 개최되고 ‘국제 생태법인 포럼’이 조직돼 정례적으로 제주에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지배와 복종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으며, 지구의 기후생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으며, 생태법인 국제포럼 제주 개최 및 2028년 세계해양포유류학회 총회의 제주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Special Session for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Expanding the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 Moderator** **KIM Sook** Former Ambassador of the ROK to the UN / Executive Director of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 Keynote** **Philip S. GOLDBERG**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ROK
- Discussant** **Patrick M. CRONIN** Asia-Pacific Security Chair, Hudson Institute
Allison M. HOOKER Senior Vice President, American Global Strategies
LEE Soohoon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M Hyunwook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KNDA)

● **Philip S. Goldberg** It's great to be here today with you on this beautiful island of Jeju to discuss the enduring depth and breadth of the US-ROK alliance. I'm joined on stage obviously by some very sharp minds who are ready to discuss our two countries' Indo-Pacific strategies, our presence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great relations with the ROK. What I want to focus on this afternoon is the remarkable expansion of our alliance from one that was primarily security focused into a comprehensive global strategic alliance. As the chair Ambassador Kim mentioned expanding the arenas of not only security but also the economy, democracy and other fields.

In just 70 years, we've done all of that and I had the pleasure last month of participating in

the state visit hosted by President Biden in honor of President Yoon. Our two leaders announced a new forum to discuss the full range of our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signed 23 MOUs in the high tech and clean energy sectors and agreed for NASA to team up with Korean experts to increase our joint space exploration. Their meetings left me reflecting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our alliance and the peace and prosperity it brought first to Korea.

I want to touch briefly on the past which was the genesis of our security relationship. As I mentioned, 2023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our historic alliance which is historic not only because of its endurance over 7 decades its reach. While its mission is still centered in the Korean Peninsula to defend the Korean people, Korea has

become a net security provider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We're natural partners because our alliance is based on shared values. We share a vision for a world governed by democratic norms,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We're agile and adapting to changing landscapes expanding our alliance to incorporate every aspect of global security,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economic stability.

It's important to remember why that has happened. It's happened because of that 70-year presence. Our alliance together in providing the security umbrella, has allowed Korea to progress to where it is today as a technological scientific superpower and as a country that is now expanding in the world through its cultural and other entrances to the international attention. It's a remarkable achievement and it's now playing a greater role on the global scene.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using our alliance and our great partnership to help advance that. So our joint commitment to these core values forms the basis of our bilateral policy and strategy. For this reason, President Biden put it well when he said that the alliance was formed in war and has flourished in peace.

It's this foundation, the foundation of an alliance forged in blood and strengthened by time and experience that inspires me and my Korean counterparts as we pivot to face the challenge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molded a

present where we are partners for good, where we combine our strengths to create innovative solutions and secure our mutual prosperity. We see this today particularly with our partnership in the economic sphere. In May, our two presidents reaffirmed the centrality of the US-ROK Free Trade Agreement to each of our economies. Thanks to this agreement our trade relationship has grown to over 227 billion dollars worth of products and services each year. That's a 17 percent increase from last year alone and 65 percent greater than when the agreement went into effect. It's clear we share a love for road trips and good barbecue. These figur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show that the two-way trade and investment is benefiting of both countries. Hyundai and KIA vehicles including a growing line of popular electric vehicles are top Korea's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in 2022. For the United States Korea represents our largest overseas market. For US beef with over 2.7 billion dollars in US Beef exports to Korea last year, a whopping 343 percent increase over the past 10 years.

Our partnership ensures peace in the region and cooperation with likeminded partne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 work together to deter any potential aggression from DPRK forces, particularly the threat or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Yesterday's test launch as Ambassador Kim mentioned, is another reminder of the centrality and the importance

of our alliance and our defense commitments visits by the Nimitz and Reagan carrier strike groups and deployment of strategic bombers earlier this year are just a couple of examples of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he Washington declaration signed by our leaders in April confirms our country's efforts to protect peace and ensure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Our ironclad alliance consistently delivers on positive results for both of our nations and for our allies across the globe.

So what does the future hold?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our alliance and we've transformed that what was once a partnership for the security on the peninsula into the expanded comprehensive alliance. Since President Biden took office, Korean companies have invested more than 100 billion dollars in the United States driving innovation and creating new jobs for Korean and American workers.

It's also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we're counting on Korean companies to help us meet our green economy goals and reduce carbon emissions through the creation of these factories, and factor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will help us innovate and continue to expand our technological base and help us secure supply chains as we prosper.

We'll also consider and confront the destabilizing actions of reckless states like North Korea. We still believe that diplomacy is the only viable way to achieve a safe and stable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And both President Biden and Yoon called on the DPRK to immediately return to negotiations as part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Outside of the region our governments are forces for good from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to strengthening global health to standing up against assaults on freedom as we're doing in Ukraine all of these are signs of what's happening now and into the future. We rely on our steadfast cooperation to tackle these challenges together.

Presidents Biden and Yoon recognize, for example, on the climate front that we're at a crossroads where we need to make the right decisions to ensure the safety of future generations. For this reason, our two countries are committed to reducing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growing our renewable and nuclear energy sectors. The US is making historic investments in clean energy and climate action. Our clean energy transition, as I mentioned, depends on ROK companies that produce critical components like EV batteries and solar panels. We're also working to reduce gas emissions on a global scale through our green shipping challenge. Our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for their part are sharing their expertise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Our countr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s connected, prosperous, secure and resilient. Our

respective Indo-Pacific strategies are the road maps that will guide us in securing this vision for a bright future. Underpinning all of these efforts we have the support of something that our two countries have a lot of friendship and people to people relationships. That's why as you saw during the state visit, our countries are deepening the ties between our two peoples through educational cooperation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TEM. Last month in Washington, our presidents announced a 60 million dollar investment in a new jointly funded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that will support 2023 Koreans and 2023 Americans, symbolic of the year 2023 and the 70th anniversary of our alliance going in each direction. These young people are our investment in the future of the alliance and will lead the way in helping us in the next 70 years.

So we're here leaps and bounds from the past with our steps firmly rooted in building a mutually prosperous future for our two countries that I'm confident will achieve because we're working towards it together as equal partners and that means a lot to us.

Each person here reinforces our ironclad alliance through continuing its legacy of mutual respect our continued collaboration on policies and practices such as champion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Our partnership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better the lives of others and a host of other initiatives in which many of you here exercise key roles. As President

Biden said to president Yoon last month ours is a future filled with unimaginable opportunity and endless possibility. Nothing is beyond our ability to reach out what our nations and people can do when united.

Panel Discussion

● **KIM Sook** The ROK-U.S. Alliance has been an indispensable pillar of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for 70 years. It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bolstering regional security,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advancing democratic values such as democracy and liberalism. This session is quite timely as North Korea attempted and failed to launch its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into orbit yesterday morning. Furthermore, the ROK President Yoon made a state visit to the U.S. in April and had a very successful summit with President Joe Biden, resulting in the production of two historically important documents: the joint communique and the Washington Declaration.

As the alliance celebrates its 70th anniversary, this session will reflect on past achievements, current challenges, and potential pitfalls while also charting a path forward in a that is rapidly changing. Howev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primary focus of our session will be on the future, exploring ways to advance the ROK-U.S. alliance toward a comprehensiv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 **Patrick M. CRONIN** Even in the face of terrible circumstances, we can find beauty and hope. The horrors unfolding in Ukraine remind us of the importance of a brighter future for Europe. Reflecting on War II and the Korean War, the enduring alliance between the ROK and the U.S. stands out. This alliance has not only maintain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has also driven economic prosperity. The Korean people's emphasis on education has propelled the ROK's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areas like clean energy and semiconductor chips.

The democratic system in the ROK serves as an example for both the peninsula and the U.S., highlighting the values of liberty, freedom, prosperity, and security. As the alliance looks ahead, it is time to expand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recent meeting between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demonstrated the enthusiasm and optimism underpinning this relationship.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remains a significant challenge.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through collaboration and diplomacy is essential. Waiting for North Korea to come to the bargaining table is not enough; persistent efforts are required. The ROK's outreach to Japan and Prime Minister Kishida, despite historical complexities, shows courage and fosters greater cooperation.

The ROK, Japan, and the U.S. share common ground in shaping future rules in various

domains. Leveraging multilateralism and trilateral relations, the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can contribute to initiatives such as AUKUS. The ROK's technological capabilities make it an important partner in projects within this alliance. Additionally, the ROK's involvement in global contexts like the G7 and NATO, focusing on cybersecuri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is crucial for providing global public goods.

Despite challenges in power-sharing, managing high-tech risks, establishing trade rules, and countering economic coercion, these obstacles present exciting opportunities for engagement. Continued collabo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will lead to further progress in securing freedom, prosperity, and security. Building upon the achievements of the past seven decades, the alliance will continue to evolve and thrive.

● **LEE Soohoon** The history of the ROK-U.S. alliance spans 70 years. The alliance began as a patron-client relationship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in 1953 and forged through the shared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This is why we call it a "blood-forged alliance."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alliance transitioned to a period of economic success and democratization, known as the transitional alliance. After 9/11, the alliance expanded its responsibilities beyond the military and encompassed economic, political, and environmental sectors. The ROK-U.S. alliance

has also played a crucial role in regional and global order due to its geographical location.

The Free Trade Agreement in 2012 marked an important milestone, leading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ROK and the U.S. However, in recent years, the alliance has faced challenges, includ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strategy and its criticisms of the alliance as a transactional alliance. Despite this, the alliance has adapted and continued to collaborate, particularly in the Indo-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nd semiconductor supply chain. Now, the alliance enters a new phase as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e recent joint statement between the two leaders covers three main parts. The first part discusses global issues including the war in Ukraine and climate change. DPRK also addressed meaning that it is no longer considered a bilateral issue but a global issue. The second part focuses on regional aspects, particularly initiatives like the Indo-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nd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Lastly, the bilateral level covers cyber security and space cooperation.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significant document that exclusively addresses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toward the ROK. It reaffirms the commitment and strongest possible defense from external threats. Most importantly, the declaration establishes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as a platform for discussing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in contingencies. It emphasizes joint execution and planning between ROK's conventional forces and U.S. nuclear operations. Notably, the declaration mentions the potential future visit of a U.S.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SSBN) to the Korean Peninsula, a symbol of unprecedente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arrangement has never been discussed even between the leaders of the U.S. and Europe.

The Washington Declaration holds several significances. First, it aims to increase the credibility and capabilities of U.S. extended deterrence, enhanc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idenc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NCG and the Nuclear Planning Group (NPG) is a point of interest, with the NCG being more efficient in bilateral decision-making compared to the NPG, which is more multilateral. Second, the document details extended deterrence, explicitly mentioning the inclusion of nuclear weapons. Third, i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diplomatic approaches for dialogue with the DPRK.

Looking ahead, at the bilateral level,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xtended deterren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is crucial, as is close cooperation among the ROK military, the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USINDOPACOM), and the United States Army Tank-automotive and Armaments Command

(TACOM) for information sharing. At the regional level,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provide synergy between the U.S.-ROK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and the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 is important. On a global scale, the focus should be on promoting democracy and freedom with the ROK-U.S. alliance leading the way in upholding a rules-based order. Enhancing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can be the key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e have had multilateral talks such as the Six-Party Talks, as well as bilateral talks between the U.S. and DPRK. Now I believe there is an opportunity for trilateral dialogue to resolve the issue.

Finally, with President Biden's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post-Cold War era, the ROK and the U.S. have a decisive decade ahead to shape the global agenda for the future.

● **KIM Sook** What is your stance on the criticism that ROK gave up its nuclear sovereignty for NCG?

● **LEE Soohoon** If Korea pursued nuclear power, it would face significant obstacles, including going against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potentially triggering a domino effect in East Asian countries. The NCG aims to find a middle ground between the NPG and the EDSCG. While nuclear sovereignty is a concern, a cost-benefit analysis is necessary.

● **Allison M. HOOKER** I can confidently state that the ROK-U.S. alliance is currently at its strongest.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where we can expand and deepen our cooperation. The recent state visit betwe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has set a course for the future, advancing and expanding the alliance.

The first area of focus is North as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remain essential in dealing with its hostility towards the ROK, the U.S., and our partners like Japan. Extended deterrence and exercises as well as sanctions implementation is crucial, even without unanimous support at the UN Security Council. The focus of openness to dialogue and diplomacy with North Korea should be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second aspect is the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which extend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made great strides in working together on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I, semiconductors, EV batteries, quantum technology, biotechnology, biomanufacturing, and autonomous robots. This collaboration in innovation and advancements will positively impact the global supply chain, economic security, and prosperity for the U.S., the ROK, and our like-minded partners.

The third area focuses on meeting global challenges and embracing President Yoon's concept of Korea as a Global Pivotal State. This bold vision will enhance our ability to work together globally, advancing our

influence and impact. It expands our borders of collaboration, including efforts in the Indo-Pacific, preservation of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engagement with NATO and the G7, and addressing hotspots worldwide, including Russia, Ukraine, and the Taiwan Strait.

In summary, the essence of our alliance lies in identifying threa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nd partnering together to overcome them or take advantage of them. By deepening our friendship and bilateral relations while strengthening the fabric of our international community, we can foster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but throughout the .

● **KIM Hyunwook** Over the past 15 years, there has been a debate in the ROK regarding the importance of sticking to values versus prioritizing interests and money. This debate intensified as China's influence and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ROK grew. The skepticism towards values arose because they were seen as intangible and not directly beneficial. However, values play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public mindset and institutionalizing politics and the economy.

The birth of the ROK-U.S. alliance emerged from a desperate need for security after the Korean War. The mutual defense treaty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prevented further conflict on the peninsula. The alliance has

evolved over time, and its significance in global alliance policies cannot be underestimated.

The current stage of the alliance presents several challenges and characteristics. The threat perception has expanded beyond North Korea, with China now being a major concern for both the U.S. and the ROK. The Yoon government has sought to establish a reciprocal basis for Sino-Korea relations. However, issues like the deployment of THAAD have strained relations with China. President Yoon maintained his stanc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ROK's own security interests.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cluding North Korea's arsenal, has heightened security concerns. The recent events in Ukraine, where Russia has shown a willingness to consid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have influenced NATO and Asian alliances. Japan and the ROK are concerned about nuclear disparity and seek greater nuclear umbrella protection from the U.S. The establishment of the NCG is seen as a significant step in strengthening the nuclear umbrella for the ROK.

Economic security is another important aspect of the alliance. The US is adjusting its trade systems, decoupling from China, and derisking China-related issues. As the global supply chain undergoes adjustments,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U.S. and the ROK is necessary to ensure a win-win outcome for the alliance.

● **Philip S. Goldberg** For those advocating for a greater role in nuclear policy or pursuing nuclear sovereignty, there are several key developments to consider.

First, the Washington Declaration highlights the absolute ironclad commitment to act decisively and overwhelmingly in response to an attack from North Korea. President Biden's statement at the press conference afterward reinforced this commitment stating that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will result in the end of the regime.

Secondly, although it requires further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NCG signifies a new approach with increased information sharing and planning strategic response to North Korea, especially in critical moments.

Thirdly, the reaffi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s an important statement. This aligns with the longstanding American commitment to provide its nuclear umbrella. It recognizes the broader polit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pursuing a nuclear program, emphasizing that it is not solely a military decision.

Lastly, the Washington Declarat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iplomacy as a solution for engaging with North Korea. While they may not be responsive at present, it is crucial to keep the option of diplomacy open and prioritize it as the pathway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they are the only ones with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The aim is to maintain the current status and work towards achieving denuclearization.

● **Patrick M. CRONIN**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negotiated by President Yoon provides significant benefits for the Republic of Korea(ROK). Acquiring an independent nuclear weapon would be costly and have negative consequences. President Yoon negotiated a bigger voice in leveraging a tremendous asset for security, America's unequaled strategic nuclear platforms were built over decades through the Cold War. The declaration allows for strategic planning an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Washington, preserving deterrence without jeopardizing the economy or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is is a win-win outcome for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enhancing their alliance.

● **KIM Sook** What can we learn from the war in Ukraine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vis-à-vis North Korea?

● **Allison M. HOOKER**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reinforces the principle of "peace through strength." By applying this principle to the North Korean situation, strengthening

the ROK's military capabilities, the ROK-U.S. alliance, and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ll significantly enhance deterrence.

● **KIM Hyunwook** The is navigating through critical junctures, including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ongoing war in Ukraine. In this uncertain environment, the ROK-U.S. alliance offers reassurance and stability as the alliance mechanism will be activated in response to any contingencies or crises that may arise on the Korean Peninsula.

Notwithstanding, very ironically, allies in Asia including Japan and the ROK have started to doubt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 Japan is concerned about potential trade contingencies involving Taiwan as any disruption in the Taiwan Strait would directly impact Japan. Japanese elites are possibly worried about the potential use of Chinese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near Taiwan. Due to these concerns, both Japan and the ROK are seeking increased nuclear umbrella protection from the United States, with the NCG being a positive outcome of the summit meeting. This is an important first step that benefits both countries. These outcome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llies in Asia, distinguishing it from the NATO context.

● **LEE Soohoon** In 2021, President Biden assured protection for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The U.S. approach to Ukraine differs from the

US-ROK alliance because there will be no direct engagement for Ukraine.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Russian invasion highlight the distinct nature of the Ukraine and ROK-US alliances.

In terms of the China factor, for Japan, lessons learned from the Ukrainian crisis highlight the potential contingencies in the Taiwan Strait. If a contingency arises President Biden stated that the U.S. may engage. The key question is wheth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will have a role. Within the USINDOPACOM, USFK and United States Forces Japan (USFJ) will be considered first and then the ROK armed forces.

● **Patrick M. CRONIN** It is evident that China reacts strongly when its interests are challenged as seen with the THAAD issue. The ROK's alignment on policies that intrude on China's interests may invite various expressions of displeasure from Beijing. The recognition that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is a global issue is increasingly affirmed by countries wide. While China may not object to this, it concerns them regarding potential support against their core interests and the One China policy. The challenge lies in balancing the protection of core technology areas and the desire for trade and investment while also foster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It is crucial to ensure that all voices are heard, conveying the importance of a peaceful resolution rather than resorting to force. The ROK aims to stand up for its interests

without seeking to make China an enemy, strategically align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counter coercion and pressure.

● **KIM Sook** In 2004 and 2005, the Foreign Ministry of ROK was extensively involved in discussions with the U.S. administration regarding strategic flexibility. When we discuss contingent situations, strategic flexibility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other important topics to explore, such as sanctions, and the ongoing debate between value and interest, which is a fundamental question to address

The Age of Transformation?: Asia Pacific vs. Indo-Pacific



- Moderator** **MOON Chung-in**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Yonsei University/Vice-Chair, 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PLN)
- Speaker** **Gareth J. EVANS**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KIM Sung-hwan Chairman of East Asia Foundation
LIU Zhenmin Former Under-Secretary-General for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ujata MEHTA Member of India's Union Public Service Commission
LIM Wonhyuk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ofessor
- Rapporteur** **LEE Jonghyun** Global Asia Fellow, East Asia Foundation

● **MOON Chung-in** According to Thomas Kuhn,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ory or paradigm, there is always a crisis of the existing paradigm. That crisis triggers immense intellectual debates and contending theories, which ultimately leads to the emergence of a new paradigm. However, what is strange about this Indo-Pacific paradigm is that there was no such debate when the Asia Pacific disappeared, and suddenly, Indo-Pacific began to dominate our field. Very few people talk about Asia Pacific, but we still have APEC. We still have all kinds of Indo-Pacific dialogue and discussions. How did Indo-Pacific come out all of a sudden without any intellectual debate on the existing “Asia-Pacific” paradigm? With this intellectual background, we organized this session. Let us start with Gareth Evans.

● **Gareth J. EVANS** I was involved from the outset as Australia’s foreign minister in the late 1980s and most of the 1990s in creating all the early regional economic and security dialogue architecture, including APEC and the ASEAN regional forum, but we still think others being at the heart of the concept of the Asia Pacific as Chung-in just said. I’ve certainly always been pretty comfortable with that terminology or that paradigm. It did, at least for a very long time, capture the increasing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of most of Pacific-facing Asia along with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 terminology reflected the desire of all of us in East Asia and Oceania to maintain and increase the engagement of the mighty United States’s economic engine in our region. It also

reflected the desire of most of us to maintain the military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s and a perceived stabilizing force. Asia Pacific certainly captured the mood of the time.

The idea, however, of conceptualizing the geopolitical essence of our region as the Indo-Pacific has been gradually gaining traction since the early 2000s, partly as a result of the growing visibility of India as both an economic and a political player somewhat in greater recognition of really critical importance of open Indian Ocean sea lanes, and of course partly as a result of china's increasingly visible and increasingly assertive willingness to expand its influence westward.

The concept of the Indo-Pacific took off after 2016 when Japanese prime minister Abe made a speech referring to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s being a core national strategy. The terminology was enthusiastically embrac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a year later and then with Indian prime minister Modi in 2018 for the first time clearly articulating the Indian vision of the Indo-Pacific region.

Australia around the same time particularly in a foreign policy-wide paper of 2017, identified a stable and prosperous Indo-Pacific a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interest. Since ASEAN in 2019 decided to be part of the action to accommodate itself to the concept, there's been no looking back.

There are two basic ways of looking at this development: being relaxed about it or being

concerned. Why? Because if one takes the concept as simply recognizing the reality that India, which largely excluded itself from engagement with the building of the Asia Pacific institutions, is now a significant player in this space and potentially both in security and economic terms, Given that, it's hard to argue with conceptualizing the region more broadly.

Similarly, if one accepts, as I've always been inclined to, that the Indo-Pacific is not just a maritime but a land-based construct, in the same way that NATO was not about the body of water in the North Atlantic but the continent on either side of it, if one accepts that it's a land-based construct and not just a maritime one, embracing the whole of continental Asia and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s part of it, in that case, I think there was little reason for the region's land-focused powers to be agitated about the concept.

However, another way of looking at the issue I can understand gives more grounds for concern, articulated among others by Chairman Chung-in Moon, the present opposition in South Korea, and several respected thinkers in Australia and elsewhere. What's the basis of that concern? Well, the concept is overwhelmingly maritime-focused and indifferent to the reality of continental Asia and the issues that preoccupy its land-focused member states. They are concerned that the Japan-inspired and initiated terminology of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with its implied

enthusiasm for electoral democracy and unrestricted markets, is designed to isolate rather than include China. There's a concern that for the United States, the Indo-Pacific is all about security, military power, and containing China while retaining primacy. The concept explicitly plays to its advantage as the 's most dominant maritime power.

Additionally, On the concern side of the equation, there is the worry that the military arrangements enthusiastically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are inherently focused on confrontation rather than finding avenues for cooperation. I specifically refer to the Quad, AUKUS, and UK-US agreements. The argument is that these concerns are institutionally synonymous with the concept of the Indo-Pacific.

My bottom line is that the Indo-Pacific is not as an inherently problematic concept as some people claim. It can still be thought of simply as rational conceptual accommodation to new economic and diplomatic realities, primarily the emergence of India as a major player. I think we can adapt to this linguistic and paradigm shift only if three important qualifications come with acceptance: first, it should not lead to an obsessive preoccupation with maritime security at the expense of everything else. Second, it should not entail inherent antagonism towards China and an unwillingness to diffuse tensions and search for common ground where possible.

Lastly, it should not inherently involve an

embrace of American primacy in perpetuity, which is an unsustainable aspiration that could ultimately lead to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United States, our region, and the wider . If we can all think of the concept, the paradigm of the Indo-Pacific in those terms, subject to those conditions, then it's a concept that not only deserves to stay but is here to stay. Thank you.

● **MOON Chung-in** Thank you very much, Gareth. Minister Kim?

● **Kim Sung-hwan** Thank you for sharing your insights. It is indeed interesting to examine the origins and motivations behind the term "Indo-Pacific." Prime Minister Abe and President Trump played significant roles in shaping and promoting this concept. The term "Indo-Pacific" reflects the growing importance of India and recognizes the interconnectedness of security and economic issues in both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However, considering the joint contribution of Prime Minister Abe and President Trump, their primary concern at the time was the rise of China and its increasing influence globally. They shared a common apprehension about China's growing power. Prime Minister Abe understood the impact of terminology in shaping policy and public opinion. By proposing the phrase "Indo-Pacific," he aimed to shift the geographical focus away from the East Asia region with China at the center, which may have been seen as a

potential threat.

During the research, I came across an article by Tsuneo Watanabe, a senior fellow of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which suggested that Prime Minister Abe's alignment of Japan's security stance with US policy was driven not by optimism and trust in US commitment but rather by pessimism and fear that the US might become increasingly detached from the region. This sheds light on Abe's motivation to strengthen ties with the US. The concept of the Indo-Pacific may persist regardless of the outcomes of future presidential elections. However,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changes in the domestic political landscape of the US could potentially lead to modifications or adjustments in the terminology and associated policies.

Let me briefly talk about the Korean perspective. Last December,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at Korea would increase engagement and cooperation within the Indo-Pacific to advance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 has officially recognized the concept of Indo-Pacific. Scholars have interpreted the Yoon government's declaration of Indo-Pacific strategy as a shift from the previous Moon Jae-in government's strategic ambiguity to strategic clarity amid intensifying US-China strategy competition. The Yoon government's Indo-Pacific strategy signifies a willingness to extend beyond Northeast Asia and actively engage in cooperative endeavors

with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emphasized its commitment to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Pacific, highlighting the term "contributive diplomacy" in line with Korea's economic stature. On this point, I recomme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contribute to the Indo-Pacific region by identifying the needs of countries in the region and expanding mutually beneficial projects.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countries involved.

Before I conclude my remarks, I want to briefly talk about whether these two competing regions are compatible: Indo-Pacific and Asia-Pacific. One of the prime examples of Asia Pacific is APEC. Nevertheless, India has not joined APEC. The US recently chaired the APEC meeting, and China and the US officials held a meeting there. Therefore, the concept of Asia Pacific is still ongoing. While the Asia-Pacific concept continues, the Indo-Pacific concept emerged as a political consequence of the unpredictable nature of President Trump during the US election period. This geopolitical concept can still evolve and change over time.

● **MOON Chung-in** Thank you very much. And Ambassador Liu, it's your turn.

● **Liu Zhenmin** Thank you, Professor Moon, for inviting me to this panel. Before I share my

comments, the issue here, whether it is Asia-Pacific or the Indo-Pacific, is not that important. We are currently facing challenging times, perhaps the most difficult times since the end of War II, including ongoing crises such as the Ukraine conflict. Therefore, when discussing these regional framework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what we can do for Asia and what the future holds for the continent.

Asia has been a frontrunner in glob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Despite being impact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global economic slowdown, Asia continues to be viewed as a region with promising growth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Asia is a continent characterized by significant diversity, surpassing even Europe. The countries in Asia have distinct histories, cultures, traditions, and social systems, each with varied security interests and aspirations. In Northeast Asia, the remnants of the Cold War still ling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regional security mechanism has yet to be fully established in Southeast Asia. Some countries are grappling with complex internal issues and are still in the process of national reconstruction. Additionally, territorial disputes persist between certain countries, and mutual trust among neighbors remains challenging. Moreover, external meddling by major powers from outside the region has further added to

the security risks Asia faces.

When discussing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it is not limited to Europe but extends to Asia. President Xi proposed the concept of global security cooperation in 2002, urging countries to transcend theories of geopolitical security and zero-sum games and instead embrace a vision of common, comprehensive, cooperative, and sustainable security. Asian countries bear in mind the bitter lessons from history, particularly those learned from Europe. Most Asian countries endured full or partial colonization by Western powers for over a century and were subjected to military invasions until the end of War II. This historical memory shapes the perspective of many Asian nations. Asian countries must establish an Asian security paradigm based on extensive consultation, joint contributions, shared benefits, and collective results. I concur with both Minister Evans and Minister Kim's viewpoints. Over the past 30 years, Asia-Pacific cooperation has made progress, albeit with challenges. The inaugural APEC summit hosted by President Clinton in Seattle 30 years ago marked the beginning of this journey. In recent years, the concept of the Indo-Pacific region, distinct from the Asia-Pacific region, has emerged, and an Indo-Pacific strategy has been formulated and promoted. Regardless of whether we refer to the Asia Pacific or Indo-Pacific, the merit of a strategy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its ability to unite countries in the region and contribute to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development. Asian countries need to navigate these transformations, acknowledging the diversity within the continent, striving for cooperative and comprehensive security, and pursuing peace and development for the region and beyond.

Unfortunately, these certain countries' interests in this concept have been drawing lines by ideology. The so-called Indo-Pacific Strategy attempted, exclusive cooperation mechanisms such as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Chip 4 alliance, mineral security partnership, and other value-based cooperation mechanisms. It is deliberately creating tensions and decoupling. This strategy is a zero-sum game given by self-interests and maintenance of its hegemony at the expense of other countries' interests. They are doing this, which is not in line with the common interests of the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t isn't easy together with universal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Three things need to be attained to achieve real and lasting peace development prosperity in Asia; first, to carry the Bandung spirit, the Bandung spirit and the term principles advocated by the Asia Pacific conference in 1955 embodied the wisdom of Asian-African countries. People have become the basic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ally observed by all countries. Asian countries should follow the spirit of Bandung in dealing with each other and the other respected the pre-press of principles over

the UN charter, respect the sovereignty on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all countries, recognize the equality of countries regardless of their size, commit to no 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and set a dispute peacefully and refused to serve the special interests of major powers through collective defense arrangements. Second, to uphold the concept of common security for Asia, we need to combine national security with the common security of all Asian countries. Each of the Asian countries is talking about its security, but how about regional security? All Asian countries should respect each other's core interests and the major consensus instead of building one's security at the expense of the others. All countries, regardless of size, strength, or wealth,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equally in regional security affairs and likewise have a responsibility to uphold regional security. Third, we must continue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within existing structures until we find the commonpla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last year marked a significant milestone. As the 's largest and most promising free trade area, RCEP prioritizes common development and high-level openness, contributing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global governance changes. It is encouraging to anticipate that the net GDP growth in the RCEP region will surpass the combined net GDP growth of the US and the EU, with a projected

increase from 2022 to 2028. This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leveraging the RCEP partnership and recognizing its importance from a global perspective.

It is crucial to advance the high-level opening process of RCEP based on regional development needs and facilitate the alignment and integration between RCEP and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This will lay a solid foundation for achieving the shared expectations of establishing an Asia Pacific framework. Furthermore, the Chines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its intention to join the CPTPP highlights the evolving nature of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In this regard, countries should continue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in formats such as the ASEAN Plus Three (ASEAN plus Korea, Japan, and China) to foster a new pattern of high-quality and inclusiv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deed, Asian security is a paramount concern that warrants thoughtful consideration. Forums like the Jeju Forum and other regional gatherings provide valuable platforms for finding common ground and addressing these pressing issues. Through such dialogue and collaboration, we can work towards a more secure and prosperous future for the region.

● **MOON Chung-in** Thank you very much. Now Ambassador Sujata, it's your turn. Please

go ahead.

● **Sujata MEHTA**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Moon.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cept and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a shift when comparing the terms, "Asia Pacific and Indo-Pacific." Has it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ur perception? Minister Evans has discussed how the term has evolved, while Minister Kim has addressed the emergence of the Indo-Pacific notion. I would like to assess regional cooperation in light of these points.

Our analysis of regional cooperation processes primarily draws from the experiences in Europe following the Second War, which emerged from the tensions of the Cold War. The European approach involved the development of multiple layered institutions that served as venues for cooperation, contention, and other matters, such as noncontroversial collaboration. However, the situation in Asia was somewhat different. Asia sought to move beyond the legacies of the Second War, decolonization, and conflicts in Indo-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notion of the Asia Pacific concept enabled us to transcend them. With Asia at the center, the Asia-Pacific region appeared as a peaceful sanctuary, providing space for all involved parties to focus on the urgent task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cquiring economic strength. This was something that all countries in Asia, as members of the Asia Pacific community, could embrace. The post-Cold

War period has demonstrated the remarkable economic strength amassed by Asian countries, and Asia's growing visibility and influence in affairs have become well-known. However, the parameters of our present discussion indicate a sense of unease, suggesting that the moment for Asia and ASEAN centrality may have passed, despite the broader scope and emerging dynamics of the Indo-Pacific.

We currently exist in an age of multipolarity, and the prevailing idea suggests that groupings and formats of convenience are developed depending on the subject at hand. This provides a certain degree of flexibility. Multipolarity should be flexible and inclusive, in my view, and it is crucial to retain these attributes. Consequently, multiple actors in Asia need to focus on developing and revitalizing habits and structures of cooperation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crises. We should not wait for a crisis to compel the U.S. to refocus on Asia or the Indo-Pacific. We must actively look out for Asia and strive to recreate or develop cooperation within the Asia-Pacific and Indo-Pacific regions. This entails being open to multiple groupings, formats, and poles while deliberately avoiding the rigidity of binary choices. Binary choices would be detrimental to us all.

At this point, I also emphasize the responsibility of a significantly influential actor in our region, such as China. China needs to seek open-minded cooperation and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others' concerns in the region. Such an approach would substantially contribute to a constructive environment and help prevent the dangers and risks associated with the over-militarization of the Indo-Pacific. Promoting dialogue and building upon Asian strengths, drawing from ASEAN approaches, would be beneficial in avoiding the risk of over-militariz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We should move beyond a purely maritime understanding of the Indo-Pacific and focus on the region beyond, particularly the western part of the Indian Ocean. We should also be mindful of the western part of the Indian Ocean and the continental dimensions of the areas affected by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Thank you.

● **MOON Chung-in** Thank you very much. Okay. Professor Lim Wonhyuk, you have a maximum of five minutes.

● **LIM Wonhyuk** Okay, let me briefly talk about the transition from the Asia Pacific to Indo Pacific, then talk about the critical features of Indo Pacific strategy and then conclude with what is to be done.

Well, I disagree with Professor Moon. There isn't a ready acceptance of the switch from the Asia Pacific to the Indo-Pacific. When I talk with my colleagues and people in Korea, there's a sense of unease and dismay about the transition, especially among colleagues who devoted their

professional careers to the Asia Pacific and APEC. There's a sense of anger and cynicism, and in fact, I don't think it's only the Koreans. Even in the United States, people like Bob Zelnick probably feel the same way about life's work being ripped to shreds. This kind of sentiment is similar to the one that George Canning expressed in his New York Times interview regarding NATO expansion at the end of the 1990s.

So why is Korea so concerned? Well, if the Indo-Pacific region includes maritime and continental Asia, then you don't have to switch from Asia Pacific to the Pacific. If you look at the origins of the Indo-Pacific, going back to prime minister Abe's speech about the confluence of two seas in 2007 is maritime-focused, and anti-China. If you look at the Indo-Pacific strategy, what stands out is: anti-China, exclusive grouping, and security-focused. And finally,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e United States tries to do this without devoting resources. There's a big contrast to what the United States did in Europe after World War II. The Marshall plan was equivalent to about one percent of Western Europe's GDP at the time. But there's no equivalent to the Marshall Plan today. If the United States is serious about countering China's expansion, it will try to facilitate energy transition and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Asia Pacific region by devoting some resources on this front. But in the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the only thing that has been put forward is the upscaling initiative, which tries to

address digital skills among women. So what's driving this Indo-Pacific strategy is the United States' wishes to maintain supremacy without devoting real resources to try and counter China's expansion.

What is to be done, then? It's important to insist on inclusivity and common comprehensive security. It is naive to address the security dilemma by increasing military preparedness unilaterally. The whole history of Europe shows what happens if you follow that approach. War One, World War Two, and as vice minister Mehta mentioned, Europe was able to get out of that predicament by adopting the Helsinki process and switching to common and comprehensive security even though it's backsliding now. But the second thing I'll emphasize is managing risks, and don't go for decoupling or de-risking.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at and we can face risks instead of trying to separate or adopt an expansive concept of risk elimination. But it's important to focus instead on small-yard high fence technologies where all sovereign states try to safeguard related technologies, personnel, and equipment.

And also reduce vulnerability to economic shocks by having strategic reserves, having some balance between domestic production based and international trade, and capping import share from a single country. We have an interesting precedent in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in response to the 1973 oil shock. If you think

about it, IEA members adopted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90 days of strategic reserves. At the same time, it could have had more success with a joint release of these reserves.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IEA vote shares are based on 1973 oil consumption. So over 50 years, the has changed and I think that it's very outdated to insist on an IEA approach. I believe it has important lessons for what is likely to be an essential challenge for not only IPEC participating countries but also China and countries outside in terms of critical technologies, and minerals and materials. Finally, the last thing I would like to emphasize is to have some humility and a sense of history. Back in 1972, when President Park Chung Hee adopted the Yushin constitution, freedom house assessment of Korea's political freedom about Korea's politics was at a very low level. Korea was not a democracy all the time. There's a process through which countries develop their economies and their politics. And we have to have some humility before naming and shaming other countries. Thank you very much.

● **MOON Chung-in** It's a wonderful session, and I have never seen such articulate speakers. But before I open the discussion to the floor, I will do some ten-minute interrogation of panelists. First, let me ask Minister Liu, and Minister Evans said "I'm relaxed about the Indo-Pacific strategy provided that the United states can satisfy three

No's', first No maritime focus, No antagonism against China, and No American primacy". Do you think the US will accept the three Noes by Gareth Evans?

● **LIU Zhenmin** Thank you. I hope Minister Evans could persuade President Biden to accept his proposal, and the three ideas would be fine.

● **MOON Chung-in** Thank you. I hope Minister Evans could persuade President Biden to accept his proposal, and the three ideas would be fine.

● **LIU Zhenmin** For Asian countries, it is not an issue where we were junking from one concept to the other. It's an issue about having a more inclusive, more open, more corporate, and more effective regional mechanism.

● **MOON Chung-in** But here you know, and let me ask a question, Minister Kim and I will get to you. Wonhyuk is discussing President Yoon Suk Yeol's Indo-Pacific strategy based on inclusiveness. Even you mentioned inclusive mutual trust mutual trust and respect, et cetera. But I don't see inclusiveness because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re excluded, but Minister Kim, how would you explain that one?

● **KIM Sung-hwan** Minister Liu said China applied for CTPPT so maybe someday they also apply for IPA.

● **MOON Chung-in** Is China going to apply for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KIM Sung-hwan** Not now.

● **LIU Zhenmin** I'm not sure where this Indo-Pacific strategy can go. But until now, it's a politically motivated Anti-China strategy.

● **MOON Chung-in** Okay, Gareth. Now it's your turn.

● **Gareth J. Evans** I think you are over-excited about the 'Indo' terminology here. I mean, Indo Pacific is essentially a fairly neutral concept into which you can pack anything you like. If you want to load into it antagonism to China and if you're going to pack it into irreversible commitment to American primacy, or if you want to pack it into irreversible conceptual focus on maritime issues rather than anything land-based, then there is something inherently problematic about it. But the truth of the matter is even if the Asia Pacific was still the dominant paradigm language around the place. We'd still have a problem with American instinct for primacy, American antagonism, and other's antagonism to anything that China wants to do and a willingness to build a lot more focus into maritime security issues.

So I mean, language only takes us so far, and I think you know Professor Lee and a couple of others including Chung-in, are getting a bit over

excited about the inherent problem. Neuralgia, that's the problematic character that's associated with a language. We need to work hard to address those problematic issues and to get a common security focus, the cooperative focus through all the other available mechanisms like one other quick comment on Kim Sung-hwan's historical explanation of how all began. I'm sure he's right when he says that the promise Abe in Japan invented popularized or gave new momentum to the concept of Indo-Pacific because he was preoccupied with trying to exclude China from the centrality of the focus and going to play a different conceptual game. But the notion of him thinking that he could win the heart of President Trump with a new conceptual approach strikes me as a bit implausible. I mean, President Trump is not known for having any intellectual preoccupations or interest in abstract concepts of their own sake. And I think he is carrying a little bit too far, the notion that you could win his heart and his permanent alliance commitment but simply a linguistic exercise.

● **KIM Sung-hwan** After they made a joint statement in Japan, the US changed the name of a Command from Asia Pacific to Indo-Pacific Command.

● **MOON Chung-in** Ambassador Liu raised a very crucial issue. He raises three things and let us return to the Bandung conference, common

security, and regional cooperation. This idea of a Bandung spirit, Chunli, Prime Minister Nehru, and President Sukarno formulated it. What is the Indian stance on that one? I understand that your foreign ministry has been keeping to neutrality and inclusiveness. Let me add one more. We are all confused about Indian identity. India is now part of the Indo-Pacific, India part of BRICS, India role of the Bandung Conference. Can you tell us about Indian identity?

● **Sujata MEHTA** Thank you, professor. Indeed,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we all inhabit a multiplicity of identities. There isn't a single identity. Particularly at the time of multipolarity, we all have to engage with multiple groupings for different objectives and goals. So I don't see an intrinsic contradiction between part of several exclusive bodies, organizations or groupings. We can deal with it all. And the point that I was trying to make by citing the European experience was to say that just as we can engage with multiple actors in the ASEAN regional forum, I don't think those necessarily have lost their vitality or need. They continue to have space, and we all need to continue to engage equally.

● **MOON Chung-in** Minister Kim Sung-hwan argues that the Asia Pacific and Indo-Pacific have to harmonize. Minister Kim is very well known as a balanced moderator and harmonizer. Can you elaborate on that point? Because if you listen

to Ambassador Liu's remarks, Indo-Pacific and Asia-Pacific are contradictory and conflictual. But you're saying that we need to harmonize. How can you harmonize it?

● **KIM Sung-hwan** I think the key is whether there is a dialogue between the US and China. Minister Mehta suggested we should develop habitable cooperation rather than habitable confrontation. One way is to use EAS, East Asia Summit, where all ASEAN countries, including Russia, China, the US, and Japan, are participating. So if we use EAS, we can harmonize both the Indo-Pacific and Asia Pacific

● **MOON Chung-in** By the way, Professor Lim, you said that the Asia Pacific is not dead. But I need to see any research money going to the study of Asia Pacific. In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all the research money goes to a study of the Indo-Pacific. Even in this Jeju forum, we now have almost twelve panels dealing with the Indo-Pacific.

● **LIM Wonhyuk** There's a fad to focus on Indo Pacific as opposed to the Asia Pacific, but with the United States hosting the APEC summit this year, even the United States is interested in the Asia Pacific to the extent that you can use the convening power of APEC to bring the countries together. And another thing I'll add is that concerning India, if the rise of India was

the central challenge, then APEC could have easily included India back in say, 2011 when the United States hosted another APEC summit. My understanding was that some in the Obama administration were in favor of that, but others wanted to demand some trade concessions from India as a precondition for joining the APEC.

let us give a big applause to the panelists here.

● **MOON Chung-in** Thank you for the productive session, and I appreciate your concluding remarks. Minister Kim Sung-hwan's point about harmonizing the concepts of Indo-Pacific and Asia-Pacific is crucial, as valuable institutions under the Asia-Pacific initiative can contribute to 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emphasis on cultivating the habit of cooperation, as highlighted by Ambassador Sugata Mehta and the other panelists, is significant. Common development, security, and even shared civilizational ties underscore the weight behind fostering cooperation in the region. You raise an important point regarding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he Indo-Pacific strategy, tracing it back to Karl Haushofer and his book 'Geopolitics of the Pacific.' Exploring the historical context and understanding the influences behind ideas and concepts is essential. The article by Hansong Li, a Harvard Ph.D. candidate, provides an interesting perspective. Engaging in thorough debate and examining the intellectual origins of ideas can contribute to a more meaningful transition from one paradigm to another. Now, I will conclude,

Loss and Damage from Climate Change as a Growing Challenge to Peace and Prosperity: Where We Are and the Way Forwar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reas of Research, Policy, Financing and Technology



외교부



Moderator Achala ABEYSINGH Director & Head of Programs, Asia,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Discussant Khampasong KHAMVEN Deputy Director of Adaptation Division,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Ranit CHATTERJE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Keio University / Co-founder, RIKI India
Saleemul HUQ Director, International Centre for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ICCCAD)
/ Professor, Independent University Bangladesh (IUB)
Rapporteur Marion TREBALAGE Individual Consultant,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 **Achala ABEYSINGH** Dr. Achala ABEYSINGH gave a brief overview of loss and damage in the context of climate action. Mitigation efforts reduce carbon emissions through promoting renewable energ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nd adopting sustainable land use practices. Adaptation builds resilience in infrastructure, systems, and communities through early warning systems, emergency preparedness, and ecosystem-based approaches. Loss and damage address the impacts of disasters with measures like risk assessment, insurance facilities, and enhancing community and ecosystem resilience. Research, policy actions, financing, and technology advancements support these efforts. They are taken to address climate change challenges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and capacity-building efforts focus on providing guidance,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and developing human capacity in the field of loss and damage. Initiatives like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and Santiago Network for Loss and Damage offer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Policy actions involve incorporating concepts of preparedness, addressing non-economic losses, and improving frameworks for disaster response. Some countries have integrated loss and damage into their national strategies, and regional initiatives exist to support policy development. In terms of financing, resource mobilization, and innovative financing tools are crucial. The Loss and Damage Fund, backed by countries' pledges and potential

sources like international air passenger levies or bunker fuel levies, can help meet financial needs. Climate monitoring, data collection, and the adoption of resilient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techniques are vital for technology. Initiatives like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CTCN) and the Climate Risk and Early Warning Systems (CREWS) Initiative focus on advancing technology to meet these requirements.

● **Saleemul HUQ** Dr. Saleemul HUQ shared key points at different levels: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Globally, climate change impacts every country, and the IPCC produces assessment reports based on scientific facts. The rising temperature has surpassed 1 degree, and crossing the 1.5 threshold is imminent. Numerous examples of climate change impacts resulting in loss and damage were reported although the Paris Agreement lacks a clear definition. Losses refer to irretrievable damage while damages can be repaired. Liability and compensation remain contentious political issues. UNFCCC is responsible for policymaking, and a Loss and Damage Fund was established at COP27. Implementation is crucial and should be the critical focus, requiring action at various levels. Asia, being a significant emitter, assumes particular importance in this regard. For example, in Bangladesh, the focus is on local communities and how to support them. Climate change intensifies events like typhoons, emphasizing the need for prevention and effective

response in risk management. Loss and damage encompasses economic and non-economic aspects and can also be categorized as rapid or slow onset, such as sea-level rise.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climate change, the incorporation of loss and damage in climate action becomes crucial.

● **Khampasong KHAMVEN** Mr. Khampasong KHAMVEN shared a national perspective on Loss and Damage. The presentation highlighted the challenges faced by Lao PDR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nd the measures taken at the national level as the country aims to achieve net zero emissions by 2050. Lao PDR is highly vulnerable, particularly in rural areas, and has experienced significant economic losses due to floods. An example was shared of the devastating impacts of a flood in the South, leading to the displacement of thousands of people from their homes. In term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MONR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climate work and policy strategy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 DCC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serves as the focal point for UNFCCC to facilitate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committee for disaster prevention, involving various ministries to address affected sectors. Lao PDR has implemented its second NDC, adopting policies, national frameworks, and regulations. Following COP27, action

plans have been developed aligning with the international agenda, focusing on mainstreaming adaptation and addressing loss and damage at the local level. Lao PDR continues to strengthen climate action, particularly in forest management and clean energy, and has plans to incorporate loss and damage into future climate action. Challenges include limited capacity, especially in coordination and knowledge of practical actions, not only at the local level. The country also needs more human resources and the need to strengthen engagement, particularly with the private sector. Opportunities lie in securing support to identify gaps and develop strategies to mitigate the impacts of loss and damage. While developing countries face capacity limitations, they play a crucial role in addressing loss and damage issues.

● **Ranit CHATTERJE** Dr. Ranit CHATTERJE focused on the private sector and especially MSMEs. The importance of solid connectivity and managing transboundary risks in the context of disaster management was highlighted. The private sector plays a crucial role in driving economic growth, but it is necessary to address how to involve them in climate disaster management while maintaining profitability. MSMEs(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e Asian region are diverse and have different definitions and levels of vulnerability. They face challenges in assessing the impact of disasters and developing

tailored risk management policies. MSMEs are vital for the stability of the economy and cultural heritage, yet their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re often neglected. Defining responsibilities, fiscal structuring, and providing financial aid are essential in addressing loss and damage. An illustrative case from Nepal was presented, revealing that many MSMEs, particularly those in the informal sector, lack access to government-mentioned loans.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this situation. The impacts of disasters extend from the local to the regional and even international economy. However, the perspectives of MSMEs are often overlooked in discussions dominated by larger companies, and the heterogeneity of the private sector is often omitted.

During the Q&A session, the discussion revolved around bridging the gap between understanding and commitment in terms of political and financial aspects, and the recognition of a common agreement. The need for knowledge sharing and capacity building to mitigate the worst impacts was emphasized. It was highlighted that policies should incorporate the knowledge gained regarding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Two approaches were mentioned: self-awareness and capacity generation, and external support for preparedness. The understanding of risks and effective risk assessment was emphasized. The fairness of insurance approaches, particularly for vulnerable communities unable to afford premiums, was discussed. Developed countries are exploring

initiatives like the global shield to reach and support vulnerable communities.

In concluding remarks, it is essential to frame climate change discussions around Loss and damage, incorporating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Prioritizing the well-being of people, communities, livelihoods, and ecosystems is of utmost importance in our actions and deliberations.

We are currently in the early stages of understanding the scale of the problem and identifying strategies to bridge the existing gaps. Our next steps should revolve around the development of a robust Loss and Damage program that can effectively tackle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Policy Implications

Overall, Loss and Damage should be embedded in mitigation and adaptation efforts.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should be framed around loss and damage, given its unavailability with the intensify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 Adaptation measures: policies should focus on building resilience in infrastructure, systems, and communities through early warning systems, emergency preparedness, and ecosystem-based approaches.
- Loss and damage: Policies should address the impacts of disasters through risk assessment, insurance facilities, and enhancing community and ecosystem resilience.
- Research and capacity building: Policies should support research,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y advancements to guide loss and damage initiatives.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and developing human capacity are crucial aspects.
- International mechanisms: Policies should engage with international mechanisms like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and Santiago Network for Loss and Damage to receive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 Incorporating loss and damage: Policies should incorporate loss and damage concepts into national strategies and frameworks. Regional initiatives can provide support for policy development.
- Financing: Policies should focus on resource mobilization and innovative financing tools to meet the financial needs of loss and damage efforts. Establishing funds and exploring potential sources like international levies can contribute to financial stability.
- Technology advancement: Policies should prioritize climate monitoring, data collection, and adopting resilient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techniques. Collaborative initiatives like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CTCN) and the Climate Risk and Early Warning Systems (CREWS) Initiative can contribut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 Private sector: Acknowledging the private sector as heterogeneous and framing strategie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with tailored policies especially for MSMEs, could be a strong basis for further advancement in the Loss and Damage policy landscape.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관한 외신 기자들의 견해



좌 장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
발 표 / 토 론 사카구치 히로히코 마이니치신문사 서울지국장
프랭크 스미스 TRT World 기자
안드레스 산체스 브라운 에페 통신 특파원
기 록 박수연 외교부 외무사무관

● **안은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다층적(multi-layered)이고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통해 역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발표되었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아시아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높아진 국제 위상에 맞춰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고,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글로벌 중추 국가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과 협력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추구는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규칙을 기반으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북한·북

핵 문제·비확산·대테러·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여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 기업, 국가가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 역내 번영이 구현될 수 있다.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상호보완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원칙, 즉 포용 원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전과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 원칙은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 관련 협력함에 있어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여 역내 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원칙은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관여야말로 지속 가능하고 효과

적이라는 인식하에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외교사적 의의로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에 걸맞게 한반도를 넘어 외교적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의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향한 여타 역내 국가들의 열망 실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또한 의미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리적 범위는 북태평양, 동남아시아·ASEAN,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등을 아우른다. 이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안드레스 산체스 브라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상의’ 한국 외교정책 기조로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민주주의, 인권 등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의 입장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주요 협력국가’라 칭한 것은 여전히 중국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성숙한 한중관계’, ‘상호존중과 호혜’, ‘국제규범과 규칙’ 등은 한국이 대중관계의 전환을 원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국은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다변화하고 있으나, 30%나 되는 대중무역량과 공급망 문제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이 좋은 해답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지 여부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 등에 따라 한중관계 및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 **사카구치 히로히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호주 등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우선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통해 한국 외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광범위해졌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은 가까운 나라로서,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미일 3국이 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하여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일관계 정상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역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과 관련해서도 한일관계 정상화가 더욱 가속화되기를 바란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향후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범위가 넓은 만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 나갈 것인지, 역사적·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등이 외신기자로서 인도-태평양 관련 주요한 관심사이다.

● **프랭크 스미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한미동맹을 강화한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군사협력도 강화되었고, 한미일 협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를 윤 대통령의 국민 방미가 효과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국민 방미는 정치

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큰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각종 국빈 방문 행사 관련 영상들은 AP Newsroom에 게재되어 유튜브, TV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란,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대중들에게 있어 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플랫폼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영상은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우리는 영상의 우크라이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폐허를 배경으로 서있는 것만으로도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긴다.

Q & A

Q. 안은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디커플링(de-coupling)할 대상보다는 디리스크잉(de-risking), 다변화(diversify)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유럽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러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A. 안드레스 산체스 브라운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유행 중 제기된 중국과의 디커플링 움직임은 최근 디리스크잉으로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EU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이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크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며, 반도체 등 여러 공급망에서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 남중국해 등의 이슈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내 대중국 입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안은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A. 사카구치 히로히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고 생각한다. 역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면서 한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안은주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다.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장기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프랭크 스미스 개인적으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한미 군사 연합훈련의 송출보다 한미동맹의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외신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미 연합훈련의 영상은 거칠고 공격적이다. 한국의 외교정책과 역내 관계를 고려할 때, 군사 훈련 부분은 덜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는 국제사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외교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과 부합한다.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에 있어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의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행 관련 필요한 공조를 해 나가야 한다.
-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고, 역내에서 한국의 더욱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소통과 홍보가 필요하다.

Rethinking the Role of Non-State Actors in Enabling the HDP Nexus Approach



Moderator	CHUNG Byung Hwa Director, UNITAR CIFAL Jeju/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Keynote Speech	Bernadia Irawati TJANDRADEWI Secretary General,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Asia Pacific, UCLG ASPAC
Speaker	KIM Sun Senior Director, Good Neighbors International
Discussant	KIM Tae Kyoo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JOUNG Min Gu Council Member, Culture, Tourism & Sports Committee, Jeju Special Self-Governing
Congratulatory Remarks	Provincial Council
Rapporteur	KIM Min Kyung Young Professional, UNITAR CIFAL Jeju/JITC

● **CHUNG Byung Hwa** Good afternoon and thank you for coming to this session. My name is Byung Hwa Chung, serving as the Director of UNITAR CIFAL Jeju, a capacity-building training institute targeting people from Asia-Pacific countries. It is a great pleasure to be a moderator for today's session.

The Triple Nexus is the term that implies the interlinkages between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sectors. This concept which started on the occasion of the 2016 Humanitarian Summit, aims to create synergy effects of development assistance by pursuing triple elements together. This approach calls for a new way of working since these three sectors are closely related. As is well known, this new method was motivated by adopting

the UN SDGs agreed in 2015, in particular goal 16 –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

However, despite the intention of the triple nexus concept, sometimes it hasn't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due to somewhat different objectives each element pursues. Nonetheless, the increased application of the triple nexus has been witnessed in many development projects. It's because, despite the challenges in its uptake, the HDP nexus is regarded as an effective way for the development society to holistically address humanitarian crisis, development needs, and peacebuilding.

Each sector has its vital role to play in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triple nexus. And non-state actor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close contact with those in need. Their experiences on the ground are sometimes shared as good practices. In this sense, it could be worthwhile to share and examine success stories and lessons learn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activities of non-state actors. So, I am happy today to be with the prominent speakers from different sectors and to listen to their resourceful insights on the topic.

● **Bernadia Irawati TJANDRADEWI**

The Humanitarian Development Peace(HDP) Nexus approach is a framework that recognizes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humanitarian action, development programming, and peacebuilding efforts in complex and fragile contexts. It emphasizes the need for these three domains to work together in a coordinated and integrated manner to achieve sustainable outcomes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crises. The HDP Nexus approach seeks to break down silos and promote coherence by fostering collaboration, coordination, and mutual reinforcement among actors working in these sectors. The interconnectedness of humanitarian actions, programming, and peacebuilding efforts can definitely make possible the followings: 1) addressing root causes, 2)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3) integrated approaches, 4)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5) policy 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6) local ownership and empowerment. And the non-state actors play

an essential role in implementing the HDPN; for example, 1) proximity and community engagement, 2)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3) local knowledge and expertise, 4) trust-building and community ownership, 5) resource mobilization, 6) monitoring, evaluation, and learning.

I will share one case study. A 7.5 magnitude earthquake struck the island of Sulawesi. We applied the HDPN by addressing humanitarian needs and supporting recovery and reconstruction efforts. This case study illustrates how the HDP Nexus approach, implemented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non-state actors, can address immediate humanitarian needs. We combined early recovery and reconstruction, livelihood reconstr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peacebuilding and social cohesion, and advocacy and policy influence.

There are a few key takeaway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HDPN seeks to bridge the gap between humanitarian action, development programming, and peacebuilding efforts. It recognizes the interlinkages between these three domains, but the implementation and engagement by non-state actors can vary depending on their mandates, capacities, and specific contexts. The local governments are more flexible, and I am happy that now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re paying more attention to ODA projects and working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in and outside of South Korea. This is a good opportunity. By having

this interconnectedness of humanitarian action, development programming, and peacebuilding, we can have more ownership on these programs.

I conclude here by saying that engaging local actors in the nexus approach has ensured a more people-centered approach and greater accountability to affected people. I am happy to join here, and look forward to more discussions. Thank you.

● **JOUNG Min Gu** Good afternoon. This is Min Gu JounG, as a council member of the Culture, Tourism & Sports Committe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This session covers important issues aligned with balanced global development and peace in the future. I hope to create an inclusive society where no one is left behind, ultimately leading to a sustainable future. My aspirations are the aim of this Jeju Forum, and the theme of this session align with one another. We live in an era of transition for a more sustainable future. Emphasis on inclusivity, equality, equity, and coexistence is stronger than ever, aligning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e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ight years ago. Therefore, I look forward to the presentations, discussions, and case sharing by experts making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this field. I hope today's session provides insights and allows us to share diverse perspectives actively. Lastly, my dream is to declare the end of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here on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It will truly make me happy as a resident in Jeju, and a person who loves peace. I sincerely hope that this dream will come true.

● **Steve HAMILTON** I will speak about the HDP Nexus approach, its implementation, and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 do we operationalize HDPN? IOM's approach involves five key areas: joined-up analysis, joined-up planning, integrated programming, coordination, research mobilization, and financing. The starting point of any effort to operationalize the HDPN is joined-up analysis to ensure a comprehensive and shared understanding of content, needs, risk, and vulnerability. The increasingly complex nature of crises requires more emphasis on understanding the root cause of a concern grounded to varying and often interconnecting degrees in political, histor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Understanding the deep-rooted challenges with an analysis in a fragile and risky context is essential for comprehensively addressing the different dimensions of crisis for long-term sustainable solutions.

In addition to joined-up analysis, IOM's efforts to operationalize HDPN require joined-up planning. At the country office level, joined-up planning means agreeing upon common objectives and outcomes towards which IOM's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programs can work based on a common understanding of context, clear and predict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line with respective principles, and value-added. In crisis-affected contexts, IOM proactively engages and sometimes leads inter-agency planning processes. Strategic planning processes provide an opportunity to develop a shared understanding of context and identify common goals laying the foundation for mutually reinforcing programs with multi-year planning, enabling reflection on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elements. IOM's country offices are encouraged to develop a multi-year strategic plan structured around shared outcomes. It will be to secure the ultimate goal of reducing risk and vulnerabilities and restoring or enabling progress towards developing goals over the medium and long term.

Humanitarian development peace actors are working concurrently, side by side, on different projects within the same communities. One key message we would like to take away is the potential for implementing coherent programming across the HDP nexus, which is context-specific with principled people-centered approaches. IOM recognizes the importance and benefits of breaking down silos between its programs and other HDP actors, so the three types of actors and interventions are mutually reinforced.

Jointly identifying and addressing the mobility dimensions of crisis across all relevant

coordination forums promote coherence across humanitarian, development, peace, and migration actors. Sharing IOM data and analysis is appropriate since it supports planning and coordination. Engagement with national governments, UN Resident Coordinators, humanitarian coordinators, and donors, who are seen as critical providers in HDP coordination, enhances coordination and decision-making regarding public funds. Global pooled funds are becoming increasingly used by donors to ensure better agency coordination.

● **KIM Sun** Good Neighbors is the first South Korean NGO to obtain general consultative status within the UN actors. Good Neighbors should have planned long term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start. Instead, the projects were driven by the immense challenges and the understanding that more than the short-term recovery was needed. Therefore, the ground experiences became the foundation for adapting strategies that cluster emergency relief and long-term development. This led towards prioritizing peacebuilding projects, allowing them to have a long-lasting impact beyond immediate assistance.

I will give you two examples. The first case is the human support project in the Assosa Refugee Camp, Ethiopia. The project has been as a foundation for promoting social and economic cohesion between the refugees

and the host community, fostering peacefu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 committee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both groups has been organized to facilitate democratic decision-making, maintaining social safety nets through mutual agreement and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Economically, establishing a cooperative farming association enabled business activities while creating a shared market in the region supported income generation and job creation. The second case is the humanitarian project in Tanzania, in collaboration with UNHCR and UNCDF. The project has enhanced self-relianc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clusive financial accessibility of refugee and host community members through occasional training, VSLA (Village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programs, and other economic initiatives. The project also increased social interaction between refugees and the host community, creating more job opportunities.

Finally, I would like to offer and share some suggestions as an NGO worker. South Korea has the smallest amount of ODA to NGOs among East Asian countries. However, South Korea has more interac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compared to Japan and China.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apitalize on funding for NGOs and an approach to community engagement. Secondly, I would like various countries'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actively collaborate with NGOs since HDPN requires

an integrated approach. Lastly, I emphasize that sustainable peace for shared developmen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enhancing social and economic solidarity. People want not just words and theories, but tangible things they can hold in their hands, so we should achieve this by working together. Thank you.

Q & A

Q. KIM Tae Kyoon The three speakers talked about the bright side of HDPN, and the ideal and good practices were shared with us. As the only person from academia, I would like to discuss the challenges:

Q1) The first question is, are there any difficulties or risks to sett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the HDPN by which multiple sectors are required to join, coordinate and agree with common goals?

Q2) How would H, D and P be jointly identified and coordinated? For example, IOM would focus on the mobility dimensions of crisis, but they are also connected to other UN agencies. There might be some problems, such as misinterpret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partners. So how do you tackle this lack of coordination and derive solutions to fill the gap?

Q3) Multiple stakeholders are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but if the mission is not well coordinated, who takes responsibility if we assume that a HDPN project fails.

Q4) How do you monitor and evaluate the

integrated HDP projects? Are there indicators, toolkits and guidelines to monitor and evaluate?

Q5) Do other non-state actors always successfully implement the HDPN? Or sometimes, do you face some obstacles?

A. JOUNG Min Gu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promoted ODA projects since the declar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12. However, ODA's vision, strategy, and direction still need to be clarified and the related budgets still need to reach the appropriate level. Although Jeju was designated as an island of peace in 2005, it has shown limitations in the work for peac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eju should develop customized ODA projects focused on peacebuilding through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Listening to the expert presentations, I have thought about the role of non-state actors' role in enabling HDPN for ODAs in Jeju.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aces challenging tasks in exploring ODA projects that align with Jeju's local context, expanding financial support,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project implementat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pose a question regarding Jeju's peace initiatives and the future of ODA in Jeju.

Considering the vision and experiences of UCLG ASPAC,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and Good Neighbors, how can a local government like Jeju identify and implement HDPN-related projects? Moreover, as a small city with a population of only 700,000, how can we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non-state actors such as resid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ddressing these two issues is crucial for securing the necessary financ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establishing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realizing true grassroots autonomy.

A. Steve HAMILTON Thank you, Professor Kim, for the questions. You are right, HDPN is not well-examined, and more research is needed. In terms of difficulties, I won't give specifics but of course, there are difficulties breaking down the silo. Regarding coordination, IOM works through the resident coordinator, humanitarian coordinator, UN Country Teams (UNCT), and Humanitarian Country Teams (HCT). The UN resident coordinator structures and strengthens the plans. Regarding HDPN projects, I think you need to remember that there are still too many individual projects implementing Triple Nexus. We are trying to analyze how those projects support and organize the cities. People on the ground are working to make sure we do not miss certain areas. In terms of evaluation, there's always a critical lack of funding for the evaluation phase. I want to encourage all donors to not only make robust evaluating demands,

but also discuss within agencies the method that is most useful.

Jeju could be an essential convener, which is the strength of Jeju right now. With a societ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look at the overall capacity, how do we raise capacity within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ow do we get them to work within Korea and globally? A robust civil society is working internationally, and needs more partners than they already have. This is where Jeju can use what they already have, their strengths, to bring people together.

A. KIM Sun Professor Kim mentioned integrated evaluation. Most of our programs approach community development. We are working in an integrated way, but most evaluations are separated. Regarding the toolkit, I am also interested in evaluation tools so I will look into them when I return to Seoul. Also, I hope that Jeju Island can be the island of peace. If possible, Jeju can support humanitarian assistance without a huge budget, for example, the Ukraine social development project, the Myanmar program, etc. We might be able to discuss this issue further.

A. Bernadia Irawati TJANDRADEWI

Regarding international and global projects, it should have a win-win kind of benefits. You cannot just always give and always take. For Jeju,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programs that you hav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hould also

benefit the society. So we should recognize what situations we will have, and support others using the development programming so that we can connect all these to reach the common goals and result in peace. Everyone loves peace, and peace starts from your family. We have to look forward to this in whatever situations we have now. Every organization has their role to play in this part. We need to increase ODA, and I am happy that more and more local governments want to raise it.

Policy Implications

- Enhancing joined-up analysis, planning, programming, coordin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is important to make the HDP Nexus approach work better.
- Active collaborative efforts among governments,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make the integrated approach possible.
-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monitor and evaluate the integrated HDPN-based projects to gain the desired outcomes.
- Developing a context-specific approach is critical, especially in a fragile state where there is a challenge in putting the integrated framework in practice.
- HDP Nexus is still an evolving concept. For the HDPN to be a more relevant and efficient tool to apply to address development needs, it is essential to accumulate more success cases and best practic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HDPN.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세안플러스알파 비전 공유: 아세안을 넘어 아랍까지



기 조 연 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축 사 샤팍 하사디 주한 모로코 대사
 간디 솔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마영삼 (재)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김해용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 **오영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째 제주포럼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야제와 오늘 개막식에 이어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세안과 아랍의 대사님들을 비롯한 외교관 여러분, 제주도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이종훈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도의 주요 경제사회단체 단체장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셨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년 전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한 이후에 가장 역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제주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17개 광역시도 중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아직까지도 1차 산업 비중이 10.8%나 GRDP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생산성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시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방 재정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주의 지속가능,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제주의 청정자연의 가치와 역사와 문화가 다음 세대에 전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가 지향하는, 제주포럼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약속입니다.

제주는 이를 위해서 부단히 달리고 있고 그리고 명쾌한 미래 비전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탄소 중립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많은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지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재생에너

지와 수소, 이 두 가지로 에너지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날을 더 획기적으로 앞당기고자 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관련 정책들이 법률로 제정되고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와 관련된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최근에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재정되어서 제주도에게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계의 외교관 여러분, 우수한 비영리 단체, 유엔 등을 포함한 모든 단체에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을 응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에서부터 시작하고 제주와 가장 가까운 곳의 이웃 도시들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번영의 미래를 꿈꿔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주는 탐라국이라는 독립된 왕국을 만들어서 천 년 동안 나라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작은 섬 제주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한반도로, 제주에서 중국 대륙으로, 제주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제주에서 동남아시아로 해상 중계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 위대한 탐라인의 DNA가 우리 제주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탐라인의 DNA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라라는 섬에, 이 제주라는 섬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시들과 주변의 나라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세안을 넘어 아랍 지역까지, 아랍지역을 넘어 유럽까지 전 세계로 제주인의 DNA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계를 향한 제주의 외침입니다.

제주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변방 제주섬이 아닙니다. 위치를 바꿔서 보십시오.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태평양을 향해서, 인도양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에 선두에 있는 것이 바로 제주섬일 것입니다. 제주섬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Chafik RACHADI** In my capacity as the Ambassador of His Majesty King of Morocco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an of Arab Diplomatic Corp,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Peace Institute, as well as the Korea-Arab Society for organizing this forum and this session.

Ladies and gentlemen, our host Jeju Special-Self Governing Province is right at the heart of the Indo-Pacific area. Through the ASEAN Plus Alpha initiative, it has continuously facilitated trade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ASEAN and Arab nations. This endeavor promotes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the efforts of supporting and cooperating to host the Jeju Forum at this propitious spot for the past 18 years, the organizers are witnessing the impact that the event has on build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nations and, in particular, the Arab in general.

Events like these are essential to shed light on the way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mpacts global peace in the Middle

East and ASEAN region. In the face of security issues in the Indo-Pacific, we must diligently pursue opportunities for enhancing cooperation and achieving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Similarly, the exchange will open channels of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SEAN, and Arab countries in enhancing genuine and essential cooperation.

In closing, I hope that this session will serve as a springboard for a new advancement in Arab-Asian relations and also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olidify the mutually beneficial network between Korea, ASEAN, and the Arab . Thank you.

● **Gandi Sulistiyanto SOEHERMAN**

Distinguished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profound gratitude to Jeju Forum for inviting me to this important event to discuss potential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Middle East.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Jeju Forum for organizing this event. The initiative of Governor Oh Young Hun about the ASEAN Plus Alpha should be explored to seek opportunities for ASEAN and Middle East countries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Distinguished Ladies and Gentlemen, as you may all know, Indonesia this year assumes ASEAN Chairship under the theme “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 This theme partly reflects both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faced by ASEAN. Indonesia came

up with three pillars of ASEAN chairmanship: 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 and implementation of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On the pillar of ASEAN Matters, Indonesia wants to strengthen ASEAN unity, ASEAN centrality, and ASEAN’s capacity to address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That is why we have “Vision 2045”. ASEAN should be more responsive and adaptive in facing future challenges.

On the Epicentrum of Growth, Indonesia wants to solidify regional mechanisms in dealing with external economic shocks. ASEAN must become a peaceful region and anchor for global stability and prosperity not a proxy to any major powers. This is very important. ASEAN will not be a proxy to any major powers. An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OIP pillar Indonesia aims to build an inclusive regional architecture to have concrete cooperation in four priority areas: Maritime cooperation, connectivity,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and Economic and other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Distinguished Ladies and Gentlemen, ASEAN has become one of the most viable and successful regional organizations globally.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67, ASEAN has made a number of achievements toward regional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with three main pillars;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socio-

cultural. The ASEAN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and the . Through the ASEAN-led mechanism, ASEAN has successfully engaged other countries such as ASEAN Plus One, Dialogue Partners, ASEAN Plus Three, the East Asia Summit, and ASEAN Regional Forum (ARF). ASEAN has also expanded dialogu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ith other regional cooperations, including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consisting of Bahrain, Kuwait, Qatar, Saudi Arabia, and the UAE. ASEAN had the first formal contact with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or the GCC in 1990. The GCC intended to establish a formal relationship with ASEAN during the meeting. There are many developments achieved between ASEAN and GCC. The five GCC have accredited their respective Ambassadors to ASEAN. ASEAN has also established its committees in all the capitals of the GCC Member States. ASEAN and GCC now are working to further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by developing an ASEAN-GCC Framework of Cooperation for the next five years and convening the fourth ASEAN-GCC Ministerial Meeting.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Regarding economic cooperation, the trade between ASEAN and GCC' has grown in the last decades. I believe the ties will grow with the expansion of ASEAN's middle classes and good growth prospects for both regions.

Many studies predict that Asia countries will soon be the GCC's largest trading partners. The Asia House Research forecasts that Asia will be the biggest trading partner for GCC in 2030, or approximately 36,4 %, with the amount of USD 576 billion. This shows that GCC-emerging Asia trade will surpass the GCC's trade with advanced economies faster than expected by 2028 and will be higher in 2030. I believe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GCC and ASEAN will flourish in the future.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bilaterally, Indonesia has developed robust cooperation with many Middle East countries. Indonesia and UAE established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last year (2022). UAE also continues CEPA negotiations with the Philippines. Indonesia also becomes a favorite destination for the Gulf Sovereign Wealth Funds (SWFs). The trend is growing where ASEAN member countries remain attractive for Gulf countries to invest in many sectors such as finance, energy, and infrastructure.

Ladies and Gentlemen, I am confident there is an opportunity for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Middle East countries. During the 42nd ASEAN Summit in Labuhan Bajo, Indonesia in the last three weeks, ASEAN discussed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GCC. ASEAN leaders reiterated to look forward to intensifying leaders' engagement to build concrete

cooperation at the ASEAN-GCC Summit in October this year (2023). So, I believe today's discussion will provide an excellent platform for all of us to exchange views, share best practices, and explore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Middle East countries. Thank you.

● **마영삼** 오늘 제주와 아랍 국가 그리고 아세안 국가 간의 더욱 뜻깊은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여러 지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제주에서부터 출발하여 아세안, 더 나아가 아랍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특별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제주의 특별한 구상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평화와 번영을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랍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향후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아랍 양측 간에는 무역, 투자의 정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그린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주-아랍 간의 협력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제주와 아랍 지역 간의 직항로 개설을 앞당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제주 올레길과 아랍의 산봇길이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되고, 제주도가 아랍 도시와 자매 관계를 맺

는, 그렇게 하여서 양측 주민 간의 교류의 폭을 더욱 넓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대사님과 귀빈 여러분들께서도 제주도와 아세안, 아랍을 연결하는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해용** 저는 제주도 올 때마다 늘 집에 온 거 같이 마음이 푸근합니다. 어 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도청에서 국제관계대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아주 좋습니다.

It is my great honor to be here today. First, I must congratulat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and East Asia Foundation for successfully hosting the 18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My special thanks go to Jeju Peace Institute for having me on this meaningful and prestigious occasion. It is my great pleasure to meet you all in Jeju.

Recently ASEAN is coming to us very closely, more closely than ever. Looking around, ASEAN is everywhere in Korea throughout the country from food and coffee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udents, migrant workers, and even members of boy groups or girl groups, we see various ASEAN waves around us. Especially in Jeju, there are nearly 8, 000 people from ASEAN countries living here. Not only do we work together but we also live together now.

Excellences, you may be aware that the Indo-Pacific region is gaining more and more importance over the years, as we can see the name “Indo-Pacific” represents its extensive geographical coverage. That is also the reason why all of us are gathered together here tonight to explore more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Among the vast scope of the Indo-Pacific, ASEAN plays a central role in the regional architecture, located between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Against this background, ASEAN has come up with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maintaining momentum for ASEAN-led mechanism and ASEAN centrality.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e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and its 8 core lines of effort to build a substantive and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In response to such development of regional dynamics, the ASEAN-Korea Centre has been bridging and connecting ASEAN and Korea. We connect people, we connect businesses, and we connect countries as a whole.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9, the Centre has been conducting programs to upgrade trade, promote investment, boost culture and tourism, and increase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ASEAN and Korea. This year we are planning to implement 17 programs comprised of 32 projects. Distinguished guests, I still remember Samseonghyeol, one of the famous tourism sites in Jeju, had videos showing that Jeju was

at the center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geographically.

Now, Jeju is also the key base toward ASEAN and beyond. It is also a symbolic location where the first ASEAN-Korea Special Summit was held in 2009. With the hopes of advancing understanding of ASEAN last year, the ASEAN-Korea Centre established Jeju ASEAN Hall at the Jeju International Peace Center, which is just across the street from this building. I strongly recommend you visit the Jeju ASEAN Hall.

Distinguished guests, surely ASEAN is a key partner as well as a friend to Korea.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artnership, the ASEAN-Korea Centre will continue efforts to bridge and deepen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sides. Once again, thank you to Jeju Peace Institute for inviting me here today. I look forward to networking and hearing about different ideas today. Thank you very much.

● **LIM sungnam** There is a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ASEAN, Arab, and Korea. There are plenty of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 business and commercial ties as well as other fields. Malaysia already is a halal supplier for many as well as Indonesia. They have long established very productive commercial relations with Arab states. Korea, in this instance, can also come on board and form future-oriented relations. Without further ado, allow me to propose a toast to the host for peace and

prosperity.

● **Abdulla Saif Al NUAIMI** When we speak about Arab and ASEAN relations, I think this relation is very strong and goes back hundreds of years. There are Arab diasporas who live in many ASEAN countries, especially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and Brunei. For example, if you go to Singapore, you will see an Arab street. This is evidenc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sides is very strong and goes deep in history. Recently, most Arab countries have had excellent diplomatic relations with all 10 ASEAN countries. ASEAN countries became tour destinations for Arab people as honeymooners, investors, and students pursuing their education in ASEAN. Between 2016 and 2021, the GCC investments in ASEAN countries reached more than 14 billion USD. These are evidences of how strong our relationship is.

I would like to thank the Jeju Peace Institute for organizing this session for Korea, Arab, and ASEAN to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relations and find opportunities to avoid our countries from the polarization which the is witnessing right now. I would like to give a toast to Korea, Arab countries, and ASEAN. Peace and Prosperity!

제 1 8 회 평 화 와 번 영 을 위 한 제 주 포 럼

DAY 3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2023

탄소중립과 한국의 전략: 국제규범 준수와 기업의 대응



좌 장 류상영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 표 사만다 그로스 브루킹스연구소 에너지 안보 및 기후이니셔티브 책임자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 소장
루 페일리 타이허연구소 연구원
토 론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기 록 이종현 동아시아재단 글로벌아시아 펠로우

● **류상영** 본 세션은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어 다룰 것이다. 첫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의 정책과의 비교. 둘째, 국제기구에서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셋째,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패널리스트들이 소속된 국가는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지고 있고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중국, 미국, EU 그다음 일본, 한국 순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도 미국, 영국, 중국, 한국의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RE100 이니셔티브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의존율이 2%가 채 되지 않는다. 만약 Renewable Electricity

100%가 실현되기 시작한다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수출을 못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정도로 아주 위급한 이슈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레짐은 기본적으로 규제로부터 시작한다. 각 국가는 지역연합 차원에서, 국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 계획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들을 패널리스트들에게 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미국, 중국, EU,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이 과연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규제전략을 유지하고 있는가? 둘째, 탄소중립은 기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각 나라가 어떤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가? 셋째, 탄소중립 이슈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갈등은 물론이고 각 사회 내부, 심지어 산업 분야별로도 굉장히 갈등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

극화가 심히 진행되었다. 각 국가의 이해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협력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국제적 목표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협력이 실현 가능한가? 넷째, 화석 연료에서 클린 연료로 완전한 전환을 이루는 과정은 국제규범과 무역,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영향력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미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집중하여 질문 드리겠다. 한국은 화석 연료를 통해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했고 기술 혁신을 이뤄왔다. 이에 한국은 탄소중립 달성이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 조건 및 비판적 견해를 물어보고자 한다.

● **사만다 그로스** 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다루겠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미국이 탄소중립의 방향성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하지 보셨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배출국이며 1인당 탄소 배출량 규모도 매우 높다. 따라서 기후와 관련하여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와 기후 행동에 대해 한 정당보다 훨씬 더 회의적인 정당이 자리하면서, 정치적 양극화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정책 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기후변화정책 혹은 규제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논해보겠다. 오늘날 미국의 기후 정책은 보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조금은 대략 1년 전에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 법은 작년 8월에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정치권과 일부 의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투는 바람에 일부만 통과되었고,

수수료와 보조금으로만 구성 되었다. 초당적인 접근 방식의 결여로,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규제를 시행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기후 정책은 보조금 중심으로 방향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 혜택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규제전략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전기 자동차 보조금 등을 통해 교통수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차량이 더 잘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공해 전기에 대한 세액 공제도 있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보조금 지원이 특정 에너지원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풍력이나 태양열에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지 않고 수소 자원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원자력도 생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언하자면 원자력은 현재 미국 전력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도 이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은 기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소 보조금을 예로 들자면 수소 보조금은 탄소 격리를 통해 천연가스로 만든 블루수소나 재생 가능한 전기와 물 분해에 기반한 그린수소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수소 생산의 배출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수소가 만들어지는 경로에 집착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기후관련 미션만을 염두에 두면서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작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거대한 기후 법안에서 나온 보조금 정책의 큰 특징이다.

이번에 통과된 거대 기후 법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특징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기술 개발은 미국의 대학 혹은 국립 연구소가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해당 기관들이 연구 개발

프로세스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시 정부의 개입으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환경규제 법안이 굉장히 오래된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의회가 기후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기존의 청정 대기법에 따라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미국 내 대중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은 어떤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는 특정 집단에 따라 매우 다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선, 미국의 대중들, 특히 젊은이들은 기후 문제에 대해 매우 잘 인식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평범한 미국인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유럽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상황은 다르다. 보수주의자들은 현재 기후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RE100 리스트에 포함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이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알기' 때문에 기후 변화 관련 정책 시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루 페일리** 저는 중국의 타이허 연구소에서 ESG와 탄소중립, 금융 그리고 탄소 거래와 관련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탄소 정책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기술 발전과 탄소중립은 에너지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관계가 서로 직결되어 있음을 먼저 말하고 싶다. 탄소 배출 감축은 에너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 발전에서도 에너지 절감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인류의 최신 기술, 가령 인공지능을 보면 GPU 에너지 소모량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위해 큰 비용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차이나 모바일이 현재 6G 개발에 있어 에너지 절감을 모든 단계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 절감이 기술의 진보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석유 채굴 중심 기술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중국은 수력, 태양광, 풍력 에너지 자원 기반이 모두 풍부한 상황에 있다.

다음은 산업의 측면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아일랜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해질 공장이 있다. 아일랜드가 전해질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저렴한 수력 발전 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가 전해질 원소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시스템적인 변혁이다. 현재 중국은 국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인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업이나 농업 부분에서도 탄소 흡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탄소 흡수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소득원이 되었다. 특히 시골이나 농촌 마을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촌 지역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이 적극적으

로 활용되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 아래에 작물을 키우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 아래에 식량작물이나 경제 작물을 키우고, 이것으로 순환적인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 한국도 국내에 탄소 거래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탄소 거래소는 탄소를 더 시장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다자 간의 혹은 양자 간에 탄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양국이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탄소 영역에서 매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의 이동, 투자 부분에 있어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이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개선이다. 현재 EU에서 수출 수입품에 대해서 탄소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를 탄소 라벨이라고 부른다. 공급망 관리에 있어 한국과 중국이 저탄소 라벨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 **김태년** 저는 한국과 EU의 탄소중립 정책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겠다. 두 나라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매우 유사하다. 양국 간의 공통된 정책을 보면 결국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첫째는 재생 에너지를 산업 분야나 전력 분야에 어떻게 늘릴 것인가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파워 트레인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그 외에 건물이나 기타 산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 문제,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사용 증가, 순환 경제를 통한 리사이클링 확대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서 차이를 보인다. EU는 모든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의사 결정 기구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2021년에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각 분야별로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발표하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를 85% 내지 97%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환과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배터리 관련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 중국이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칠레, 콩고,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자국산 원재료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히며 자원 민족주의가 부흥하고 있다. 유럽은 배터리 동맹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배터리 생산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한국의 전기차 보급은 정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는 충전기 보급이다.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기가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전기차 보급 규제 문제이다. 정부는 관련 기업이 매년 일정 비율 전기차 보급을 늘리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이 부담을 어떻게 나눠서 짚어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6%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희토류 및 희소 금속이 필요하다. 희소금속의 공급망을 중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류상영** 아주 간략하게 현재 업계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요인들, 또 해결이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었다. 그러면 세 분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허원순 논설위원께서 8분 동안 간략하게 질문 내지는 코멘트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허원순**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실현은 현실성과 일관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는 한국이 배출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탈원전을 진행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불과 두 달 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상화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비합리적인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정상화하였는데 같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로 반대되는 정책을 진행하니 참으로 민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앞서 말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코멘트는 최근 EU의 탄소중립 이니셔티브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교조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이니셔티브가 최근 현실적이며 융통성 있게, 즉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이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한국에서 철강, 화학, 시멘트 관련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들이 정부가 2050년까지 제시한 계획대로 탄소중립 목표를 진행하려면 무려 40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부담은 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이 전부 소비자에게 결국 부담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중국 측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지 않나 싶다. 중국 또한 정책의 목표와 실행 수단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했지만, 아직 기술의 고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현행 정부의 목표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 **류상영** 토론자의 지적과 관련하여 미국 측 그리고 중국 측 발표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한다.

● **사만다 그로스** 제가 들은 것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원전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에서 대규모 신규 원자로가 건설되지 않는 것은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원자로가 건설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미국의 정책 리스크에 관한 내용이다. 워싱턴의 내부 정치가 분절화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가 의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새 행정부가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루 페일리** 중국 정부가 제출한 여러 정책 보고서를 보면 신형 에너지 체계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이는 신에너지 체계와는 많이 다르다. 신형 에너지 체계는 중국 에너지 체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중국 여러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가 매우 많은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공장과 제조업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작용하고 있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신에너지뿐만 아니라 기존 석탄이나 화력발전 기술이 함께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은 체제 차원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거국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이를 해낼 수 있다

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이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과정이 다른 체제에 비해 훨씬 수월함을 강조하고 싶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정책을 만들고 있다. 가령, 베이징에서 최근 녹색 전기를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중국은 체제적 이점에 더해 시장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한 기술을 소비할 수요자가 늘 존재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동력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최근 가격의 원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낮춰졌다.

● **류상영** 지금부터는 미국, 중국, 한국 발표자들에게 각각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자 한다. 우선 사만다 그로스 박사께는 미국 정부가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 가격 측면을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중국 루 박사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의 석탄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리 재생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석탄을 줄이지 않는 이상 중국의 탄소중립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희토류 가공 과정에서의 느슨한 환경 규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소장께는 세계 주요 기업들이 RE100을 가입했는데 이들 기업 대비 한국의 RE100 기업들이 달성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터무니없이 작은 시점이다. 이웃 나라 기업들과 비교해 봐도 중국은 지금 32%를 달성했고, 일본이 15%를 달성했는데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적인 기여를 이행하려면 정책적

으로 한국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만다 그로스** 먼저 비용 측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비용은 현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 하나가 되었다. 고로 지금 당장 전력망에 추가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지점까지 도달했다. 문제는 필요할 때마다 가동할 수 있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달리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맑을 때만 전력을 생산한다는 간헐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제한적이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저장 장치,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계량기, 수요 관리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그리드 및 기타 기술의 발전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것이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첨언을 더 하자면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이 법이 상당히 보호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 물론 해당 법안이 미국에서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나 이는 재료의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료가 가능한 한 양질의 방식으로 생산되도록 하는 목적도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혜택을 부유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재료를 공급하고 개발하는 다수의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루 페일리** 먼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하겠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ESG 측면에서 타국에 해외직접투자를 한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그 이유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때문이다.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정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재생에너지를 구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희소 자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배터리 공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로 카본 공장 단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도 탄포집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에 대해 굉장히 진심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히 지역의 특성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서부 지역은 태양광 개발을 하기 적합한 지형이 많기 때문에 동부에 비해 태양광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 **김태년**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희소금속이 투입되어야 하고 희소금속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조달되는데 그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가격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급격히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개입되는 공급자들의 탄소프린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이 시기별로 또 계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하다. 수소가 재생에너지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대부분 화학 공장이나 철강 공장에

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엄청나다. 대략 수소 1톤을 생산하는데 CO2가 10톤 이상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100% 달성은 상당히 어려운 길이라고 볼 수 있다.

Q & A

Q. 류상영 마지막으로 간략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다. 첫째는 탄소중립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며 두 번째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실 방위산업에서 탄소 배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어느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희토류를 수출할 때 원재료를 호주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여 값싼 석탄을 이용해 가공한 후 수출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패널분들 중 한 분께 간략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A. 사만다 그로스 두가지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다. 방위산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사실 말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아도 그렇다. 안보가 다른 이슈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지역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방위산업이 중요한 분야이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체계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금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오염 배출을 대가로 치루면서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동일한 경로를 걷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 **류상영** 오늘 좌장으로서 네 분께서 대단히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탄소중립 이슈는 굉장히 장기적이지만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이슈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서울은 올해 얼마나 더운 여름을 보내게 될지, 캘리포니아에서 또 얼마나 큰 산불과 기록적인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물 부족으로 생산 라인을 얼마나 중단해야 될지 등과 같은 논의가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의들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논의지만 다시 한번 제주포럼에서 동아시아재단 기획으로 다루게 된 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 모든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다.

New Space 시대, 글로벌 우주 경쟁 속 한국 우주 외교의 방향



좌 **장** 정기원 외교부 국제기술규범과장
개 회 사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기 조 연 설 폴 윤 엘 카미노 칼리지 교수 /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
발 표 / 토 론 김수중 (주)이노스페이스 대표이사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영진 국방대학교 교수
기 록 박호성 외교부 국제기술규범과 사무관

● **정기원** 우리 누리호 발사(5.25.)에 이어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5.31.)하였으며, 중국의 선저우 16호 발사(5.30.) 이후 같은 날 미 국무부는 처음으로 「우주외교를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도전적 과제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였다. 이처럼 우주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며 우주는 단순한 탐사와 개발의 대상이 아닌, 점차 외교와 안보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우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상업·규범·정책 각 분야 전문가와 우리 우주 외교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 **윤현수**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우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주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 경제, 규범을 아우르는 우주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우주 분야 주요국과 협력하여 국가 우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작년 12월에는 제3차 한미 민간 우주 대화를 6년 만에 재개하

여 양국 간 우주 산업, 개발, 위성 부품 수출통제 완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올해 11월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미 국무부와 서울에서 「한미 우주 포럼」을 개최하며 양국 우주 협력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업·규범·정책을 아우르는 우주 외교 추진에 앞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효과적인 우주 외교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폴 윤** 그간 한국은 미국과 주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왔으나, 국제 규범 형성에 있어서도 한미 협력과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다드 NASA 우주센터에 방문하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미 우주위원회 위원장 겸임)과 면담 시 우주 규범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먼저 우주 규범 협력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및 우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우주의 이용에 관한 국제 규칙과 규범을 수립하는 데 함께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국제 규칙과 표준 형성에도 미국과의 협력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관련, 캐나다가 한국보다 우주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우주 외교를 통해 아르테미스 유인 탐사 임무에 캐나다인을 참여토록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한국도 외교를 통해 차기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국의 달, 화성 유인 탐사 계획에서 NASA와 협력한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수중** 우주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민간의 우주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는 New Space 시대가 오고 있으나, 우주는 여전히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우주 발사체 수출입 및 발사장 운용, 국제 규범 형성, 민간기업 교육 등에서 외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주물체 수출입 및 운용 지원 차원에서 발사체, 발사장 등 우주 관련 모든 설비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수출 및 해외 발사를 위해서는 외교적 지원이 중요하다. 한빛-TLV 발사 시에도 수출입, 운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외교의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우주는 결국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이 필요한데, 규범 형성 논의 초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여, 한국과 같은 우주 후발주자에게 진입장벽이 아닌 발전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들은 ‘책임 있는 우주 행위’ 등의 국제규범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가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해주었으면 한다.

● **정영진** 뛰어난 우주 역량을 보유한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우주발사체 역량* 보유국은 현재 미, 중, 일, 러, 인도, 프랑스, 한국 7개국으로 인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태 지역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2040년 이내에 8번째 우주 발사체 보유 국가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인공위성은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뛰어난 위성 기술을 보유하거나 다수의 위성을 운용 중인 국가들이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143개의 위성이 발사되었는데, 이 중 약 60%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사되었다.

우주 외교의 핵심은 ‘책임 있는 우주 행위’를 통해 우주 활동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며, 이의 기본 전제로 ‘우주 영역 인식’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QUAD* 국가들과 우주 실무단을 발족(‘21)하여 위성정보 교류, 우주 위협 대응, 우주 환경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규범, 원칙 등을 협의하고 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 호주에서는 최근 미 공군의 우주 영역 감시 자산을 배치하였으며, 인도, 일본은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미국과 우주영역인식 협력을 추진할 계획)

한국은 이를 고려할 때, 우주 영역 인식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 아웃리치 분야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현 우주개발진흥법은 ① 정부 주도 개발을 가정하고 있으며, ② 연구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국제 규범 등을 반영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국내 규범의

국제표준화와 우리 우주 역량을 활용한 국제 기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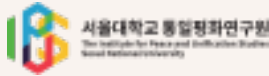
● **안형준** 우리나라는 약 30년간 위성과 발사체를 중심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 어느 정도 기술 축적이 되었으며, 이제는 이러한 ‘수단’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왔다.

또한, 우주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 변화에 따라 우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우주 자체가 ‘국가 주요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역량과 국내외 동향을 고려할 때, 우주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외교·경제·규범이 모두 논의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부처 역할 조정, 국가 우주 개발의 추진, 예산, 사업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우주의 상업, 안보, 정책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우주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 뉴 스페이스 시대 우리 민간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 우주 관련 국제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여야 한다.

한반도 생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좌	장	천해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발	표	문진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
		박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사로지 다쉬	컨설팅월드와이드 부장
토	론	손환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겸임연구원
		임재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기	록	김민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 **문진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는 2012년 6월 개소 이후부터 한반도 보건 안보 위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학제적 접근으로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준비된 통일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단의 시간 동안 보건의료 관리 체계, 의료인 양성체계, 질병을 인식하는 주민들의 질병관 및 질병 행태, 남과 북에서 발병하는 질병의 종류까지 한반도의 보건의료적 차이는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의학센터는 통일 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한반도 보건의료 통합 대비 연구 및 대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 제언,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 연구 중인 ‘남북 기후변화 및 건강 영향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보건지소 모델 개발’에 대해 발표하겠다. 북한의 기후변화 이

슈는 비무장지대의 경계를 넘어 남한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남북 공동 대응을 통해 기후 문제가 한반도 건강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1차 연도에는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문헌과 북한 기후 특성 및 에너지 사용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고, 2차 연도에는 남한의 보건지소 중 북한의 기후 환경과 비슷한 보건지소를 선택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한 후, 3차 연도에는 최종적으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보건지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의학센터 이외에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기후변화 모니터링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수집 분석을 담당하고, 적정기술학회에서 적정 재생 에너지 활용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여 공동 협력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스마트 보건지소 모델 개발을 통해 기후 민감

질환 조기 질병 경보 대응 시스템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북한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한 재생 에너지 생산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박상민** 북한은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건강 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원래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들, 예를 들면 보건의료 재정 부족, 정부의 규제약화, 의료인에 대한 지불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비공식 환자의 부담금이 증가하고 비공식 사적 진료가 성행하면서, 환자의 자가진단 자가치료가 증가하고, 의료접근성 불형평성 또한 증가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심각해졌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 환자 및 국민 교육 강화, 의료인력 동원에 집중했지만, 여전히 보건의료 체제 자체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북 보건의료 지원 방법은 크게 양자 기구와 다자 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유아 예방접종에 집중하는 세계백신연합(GAVI)과 결핵, 말라리아, AIDS에 집중하는 글로벌펀드(Global Fund)는 대표적인 대북 보건의료 지원 다자기구 채널이다. 이 두 기관은 영국에서 감염병 관리라는 건강 안보 측면, 즉 국익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 보건의료 관련 원조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두 기구의 원조금은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 기금에서 비롯된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은 UN agencies를 통한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자기구 채널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기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북 보건의료 원조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지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며, 이를 동시에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방안 중 하나로 접경지역의 남북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모델을 설명하겠다. 남북관계와 유사한 사례인 스웨덴-덴마크 클러스터의 경우 과거 영토분쟁으로 적대관계였지만, 양국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한 클러스터를 통해 세계3위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했다.

우리가 제안하는 남북 원헬스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구상안을 보면 중심에는 One Health 임상병원이 있고, 세로축으로 종합병원, 동물병원, 식물병원(식물검역센터)을 아우른다. 여기에 가로축으로 R&D와 산업단지 발전을 아울러 학제적인 연구와 임상, 교육, 생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이 클러스터 모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북한과 남한의 시너지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부분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되는 신약이나 예방접종 파트를 남북 원헬스병원에서 동식물, 인간까지 포함한 내용의 임상을 적용하고, 여기서 적용된 기술들을 산업단지에 이전해서 생산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북한에 대한 지원, 남한의 활용, 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관련된 파트의 생산과 연계되면 훨씬 시너지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게 되면 전쟁의 역사인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가 생명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고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남북공동 대응 방역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학제적인 임상, 교육, 연구, 생산을 시행하면서 수직적 교류가 아닌 수평적 협력 모델이 되며, 결국은 여기서 얻어진 여러 산업적인 성과들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공동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허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제재가 유지되는 때, 완화되는 때, 해제된 때를 구분해서 50년

대계라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사로지 다쉬** 북한(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보건의료 중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다자간 협력을 유도하는 이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저는 DPRK의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도적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을 항상 강조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협상을 기반으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존엄하고 상호존중하는 남북 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었다.

한반도의 외교가 직면한 새로운 단계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관리하는 것과 준비 조치를 재개하기 위한 인도적 접근에 대한 협상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저는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내재된 의료 협력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의 코로나19 조치는 2020년 모든 유엔 및 기타 인도적 기구의 철수로 이어졌으며, 유럽위원회(EUPS(Concern): European Union Programme Support)은 2021년 3월에 철수했다. 북한 당국은 전국적인 완전 봉쇄 조치를 채택해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고 당국이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COVAX 등을 통해 예방 접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도 내지 못했으며, 북한은 고립되어 있었다. 북한은 전세계의 경험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표명했지만, 주체주의 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한 외부 지원 수용은 망설임의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속해서 DPRK에서의 인도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엔 국제 직원 및

EUPS 기관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DPRK에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 2022년에 DPRK에서 보고된 COVID-19 확산 사례는 4,739,860건이며,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23'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이 비율이 59% 이상이다. DPRK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효과적이었지만 무기한 봉쇄 및 고립으로 인해 보건 및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지원들이 악화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한 달 내에 이루어진 극적인 봉쇄 조치는 북한의 농업 사이클에도 내재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엔식량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유엔식량기구(WFP: World Food Programme)의 보고서는 "팬데믹과 관련된 심각한 제약 및 장기간의 국경 폐쇄로 인한 식량 안보와 영양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는 식량부족으로 인해 쌀, 밀, 옥수수의 수입이 이루어졌고 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FAO는 최근 분기별 작황 및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DPRK를 외부 식품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정했다. 한국 농촌개발청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DPRK의 작물 생산은 이전 연도 대비 180,000톤 줄어들어 4.51백만 톤으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으로 필요량에 비해 800,000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와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긍정적인 협력을 통해 EUPS/UN과 같은 건설적인 조정 과정에서 DPRK와 함께 보건 관련 인도적 지원을 우선순위로 두는 시도는 적절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감염병과 보건 전략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적인 접근이다. 인도적 접근에 대한 교착상태를 고려할 때, 주요 주체들이 다자간 플랫폼을 통해 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안은 많은 관련 그룹이 제시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DPRK는 중앙 비상 감염병 대비와 대응 시스템을 통해 COVID-19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보여줬지만, 국제 협력을 통한 과학적 발전 측면은 놓치고 있다. DPRK의 상황은 장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2023년 기준 스위스 정부만이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을 통해 주로 영양 분야에 대해 120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유엔식량계획(WFP), 중앙비상대응기금(CERF), 대한민국, 러시아가 DPRK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한 국가이다. 유럽연합은 2023년까지 1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약 1억 3,620만 유로의 인도적 원조를 제공했다.

DPRK의 문맥에서 외교와 인도적 접근의 분리를 제안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반도 지역 협력을 통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의 방식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EU, UN, 적십자사, 관련 내부 인도적 기관과의 협력 개발은 분명히 적절하며, 다자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지금까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우리의 기후 및 DPRK의 COVID-19 상황의 핵심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국의 더 집중된 접근 방식을 기대하고 있다.

● **임재준** 호흡기 내과 의사이며 결핵을 연구하고 있다. 결핵이 사회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이기 때문에 토론을 맡게 된 것 같다. 남북한 보건 의료 협력에 대한 생각을 결핵을 주제로 말하고자 한다. 우선 남북한 결핵 실태에 관해 연간 10만 명당

결핵환자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아프리카 소말리아는 250명이고 북한은 513명이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세계에서 최악이다.

결핵은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정확히 반비례하는 병이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중 1위이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 결핵 환자 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한국전쟁 때문이다. 결핵은 전쟁과 가난의 병이고, 특히 전쟁은 영양 측면, 좁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있게 된다.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남아 있는 시스템도 주로 전쟁을 위한 부상자나 민간인 치료를 위해 적용된다. 남한의 결핵 문제는 한국전쟁 중 결핵에 걸린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분들이 연세가 들면서 면역력이 줄어들면 활동성 결핵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북한 결핵의 문제는 경제발전이 어려워서 영양결핍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는 의료접근성의 문제, 자가 치료 성행 등이 결핵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소이다.

남북한의 대비가 슬플 정도이다. 남한의 경우 최첨단의 진단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고전적인 방법, 손으로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단하고 있다. 남한은 진단, 검사, 치료에 관한 모든 비용의 부담을 정부에서 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약제 내성 결핵 환자의 20% 미만만 치료받고 있다. 북한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및 펀드는 경제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디나 그렇듯 코로나19 이후 결핵 환자는 더 늘었을 것이다.

결핵은 전염병이고 결국 북한의 결핵 문제는 남한의 문제이기도 하다. 남한은 충분한 결핵 진단과 치료 능력이 있고, 북한은 물론 세계 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이 상당수 있다. 정책이나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결

핵이야말로 남북한이 실제적이고 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인 것 같다. 예를 들면, 북한 결핵 문제만큼은 남한에서 책임져 보는 것이 어떨까? 충분히 가능하다.

● **손환철** 이번 제주포럼에 함께 하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함께 보고,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통일외식조사에서 젊은 친구들이 주로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뉴스 기사를 통해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의 차이와 변화가 남북 보건 의료 협력, 혹은 남한의 인도적인 지원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외식조사 설문 문항 중에는 북한에 관한 문제 중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한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나 개혁개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대북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가장 높게 나온 답변은 대북 인도적 지원입니다. 우리 대중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코비드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측면에서 악화된 지점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고려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남북 기후변화 및 건강 영향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보건지소 모델 개발 사업 제안
- 접경지역의 남북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모델 제안
- 실제적인 협력 결과를 낼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의 창구로서 북한 결핵 문제 해결 제안

2023 청년운동회: 청년자치의 새로운 도약



좌 장	양인현 오잎클로버 팀원 손어진 오잎클로버 팀원
발 표	인드라 드위 프라세티오 믹타 청년 이니셔티브 2023 의장 양소희 사단법인 아그니카 사업개발총괄 정지수 제주청년센터 센터장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토 론	이건웅 제주대학교 학생 변정윤 오잎클로버 팀장
기 록	김수정 오잎클로버 팀원

본 세션에서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으로 다스리는 ‘청년자치’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 자치의 문제점을 청년들의 시각과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청년 자치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며 현시대 모든 청년에게 청년자치의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

● **이건웅**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6·10만세 운동, 4·19혁명 등 그 중심에는 청년이 있었다. 자신과 친구들,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섰다. 과거에도 청년들이 직접 사회에 나서 행동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지만, 그에 맞서며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사회를 변화시켰다. 결국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청년들의 역량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진보되었다. 선거법

이 개정되었지만 39세 이하 출마자는 전체 출마자 중 9.6%, 24세 이하는 0.57%에 불과했다. 이것이 청년들이 본인 살기 바쁘고, 자기 일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경험이 있다. 나는 만 18세로 전국 최연소 후보였고, 나를 포함한 청년 후보들이 가지고 있던 고충 중 하나는 부담스러운 선거비용이었다. 한국 선거 기탁금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 원,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3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500만 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천 500만 원이다. 기탁금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매우 많아,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청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지위가 아직 사회에 참여하기에는 부담되는 일이다. 청년이 마음을

먹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려 해도 소위 기성세대라 불리는 사람들은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배우고 나중에 하라고 한다. 제가 선거에 출마하기 전 활동을 했을 때도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들었다. 그때 느낀 점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아직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의원 후보로 나갔을 때는 더욱 심한 말을 듣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청년들이 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선 청년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담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양소희** 더 나은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되찾아야 할 두 가지는 정치, 그리고 사랑이다. 여러분은 자기 삶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얻은 것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이루는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성별, 장애의 유무, 가정환경 등이 있다. 저 또한 마찬가지다. 첫째 딸로 태어나 사랑하는 동생의 언니로 살아가는 삶, 제주도에 태어나 청소년기 평생을 보내는 삶, 이런 것들이 나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즉,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를 이루는 것들이 가능성이 아닌 한계가 된다. 어떤 것 같은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던 건 축복

이었지만, 어린 시절의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 요소가 나를 규정짓고 억압하고 한계가 되는 순간을 너무 많이 느꼈다. 꿈의 크기를 키워갈수록 격차를 온몸으로 느꼈는데, 특히 지역 격차, 교육격차가 크게 와닿았다. 감각을 강렬하게 느꼈던 15살, 주한미군 대사관에서 주최한 행사에 제주도 대표로 선발되어 비행길에 올랐다. 스스로 좀 잘하는구나 싶어 굉장히 의기양양했지만, 막상 행사에 참여해 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회와 경험을 누려왔던 수도권 또래 청소년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주변 어른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할 수 있어'라고 했던 것들을 이미 너무 자유롭게 누리고 있던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가 평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 나의 감정은 부러움, 서러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왜냐하면 이때 내가 맞닥뜨린 한계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불평등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주에 돌아와 무엇이라도 바꿔보고자 여러 시도를 많이 했다. 어설프게 배운 방식으로 교내에 모의유엔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찍은 UCC로 독립영화를 만들고, 도내 청소년들과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서투르고 엉성했지만 스스로 만든 기회와 경험이라 즐거웠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것들에 나만의 방식으로 대항하는 법을 조금씩 터득했던 것 같다. 초반에는 연합고사 분위기를 망친다며 비판도 많이 들었지만, 몇 년 후에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10대 후반에는 내가 뛰어

난 사람이 되어 이걸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증명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고, 불평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취하는 게 많아졌다 보니 무언가를 대표하여 말할 기회도 많아졌다. 마이크를 잡고 나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항상 붙였던 수식어는 “On Behalf of”, 즉 “~을 대신하여, ~의 편에 서서”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스스로 재차 묻게 되는 질문이 생겼다. 나만 뛰어나다고 해서 불평등이라는 문제들이 해결될까? 나랑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질문이 생기고, 스스로 되물으면서 내린 결론은 이 문제를 절대 외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내 삶이 조금 편해지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답을 좇다 보니 되찾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것 같은가? “너 정치에 관심 있어?”, “나중에 정치할 거야?”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떠올랐던 정치의 이미지는 싸우고 욕박지르고 소모적이고 피곤한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특정 색깔로 규정지어지는 게 싫었다. 정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이나 감수성에 대해 조사한 2020년 자료를 살펴보면 부패하다, 실망스럽다, 위선적이다 등의 것들이었는데, 당시 내가 느꼈던 것들 것 비슷했다. 그래서 어느 또래처럼 적당한 거리 두기를 선택하여 내가 해왔던 일들은 중립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제기했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에 한계가 있었

다. 결국 정치적 의사결정, 정책과 제도를 통과해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느꼈던 나는 어쩌다 정치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 국회 보좌진, 대통령 및 지방 선거에서 여러 역할을 맡으며 정치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그렇게 3년을 활동하며 스스로 다시 한번 정치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를 내렸다.

정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다. 정치라는 건 최후의 순간에 이익과 손실이 아니라 외로이 남겨지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일이고, 변화의 파도가 너무 거세서 올라타기는커녕 휩쓸리고 누락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는 일이며, 무언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기꺼이 맞서 싸우는 일이다. 또한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에 몸을 던지고 앞장서는 일이며, 절망적이고 암울해서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기어코 희망을 발견해보려는 일이며, 적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행동하는 일이다. 이것이 나에게 정치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라고 했을 때, 크고 강인한 사랑의 힘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가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및 공동체에 대한 큰 사랑이 없다면 이것들을 끝까지 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정치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린 후 가장 중요하게 와닿았던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어떤 일은 분명히 정치적인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일은 분명히 누군가의 편에 서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지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때에도 완벽한 중립을 고집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정치하다’라는 동사는 소수 직

업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청년 자치에 관해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지?라며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든 분이 자신만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치하다’라는 동사를 되찾아야 한다. 정치는 소수 직업정치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스스로 정치에 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고,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이를 위해 때때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각자의 정치를 하는 일이 조금 자연스러워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한 일이다.

우리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다. 나는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싶은가? 나는 이 질문에 늘 이렇게 답한다. “좋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은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 주지 않는다. 누군가가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더 나은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정치와 사랑을 되찾아 가는 여정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

● **인드라 드위 프라세티오** 어떻게 차세대를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청년이 자율성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까? 첫째, 인적 자본을 개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총인구는 약 2억 7천 6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청년 인구는 약 6,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4%를 차지한다. 우리는 청년의 수량적 측면과 아

울러 그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 둘째, 청년이 자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요구되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한 지식의 이전이 필요하다. 20대는 넘치는 에너지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더욱 큰 기성세대는 무르익은 지혜와 노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다 큰 시너지를 위해 이 두 세대를 연결할 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가진 에너지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 참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차세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자율성을 주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MIKTA를 소개하려고 한다. MIKTA란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Turkiye), 호주(Australia)의 5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그중 MIKTA Young Leaders Camp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구성할 것이며, 이 활동은 대표단 공동 성명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된다. 한국의 청년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2023 MIKTA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청년 리더를 양성하는 MIKTA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변정운** 제주도에는 100여 개 안팎의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정책이 청년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인

지도가 낮다는 점이다. 이번 세션을 준비하며 제주 청년들에게 제주 청년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다수 청년들이 0~3개를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개 안팎의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0~3개만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청년들에게 정책과 관련한 정보가 전달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정책수혜자가 적다는 점이다. 청년 정책 자체가 청년 모두를 포괄할 수는 없지만, 100여 개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면 정책수혜자가 조금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년 제주도 청년 통계 결과, 제주 지역 청년 인구는 2021년 기준 16만 8천 726명으로 전체 도민의 24.2%를 차지한다. 하지만 청년정책 수혜자의 비율은 3천 500명~1만 2천 800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정책 혜택을 받는 청년의 수가 아주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의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희망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청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주도의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추진한 94개의 청년정책 중 30개의 사업이 청년들의 참여율 저조로 인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고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문제였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의 1/3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상황은 정책 구성부터 실행 단계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걸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생겨나야 할까? 올해 초 청년 원탁회의에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는데, 이를 바

탕으로 답하고 싶다.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며 두 가지 유형의 청년을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책을 구상하고 제안하려고 하는 청년이었고, 두 번째는 회의에 참여하면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이었다. 이를 통해 얻은 두 가지 시사점은 첫째, 청년의 일상을 지지해주는 기반이 탄탄해야 자치라는 것이 본래의 의미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청년원탁회의와 같이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많아져야 청년들의 참여율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들 스스로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 **정지수** 제주 청년들은 일자리, 주택, 교육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삶이 녹록지 않다. 제주의 청년 중 3.5명은 이주 청년이고, 2.5명은 순수 타지 출신이다. 전혀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청년들의 삶 모두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키워드는 제주형 청년 보장제다. 이 사업은 제주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자립까지 생애 주기별로 청년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1년에 1,100억 정도 투자되고 있다. 탐색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진입기에는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자립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주 청년 보장제를 통해 청년정책은 청년의 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주청년센터다. 제주청년센터는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핵심 지원기관인데, 청년들

이 정치적 효능감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잘 실감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 체계인데, 이를 편의점에 비유하자면 배고픈 청년이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당신이 알아서 찾아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먼저 먹어보는 건 어떠세요?’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소개하고 제안해 주는 것이다. 청년정책이 있음에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제주청년센터는 공공·민간 정책들을 총망라한 청년정책 허브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개인에게 커스터마이징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8~9월쯤 베타버전이 나올 예정이다. 청년정책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때나 아쉬운 게 있을 때, “제주청년센터 가면 다 해결해 줄 거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위한 제주청년센터의 소명은 우리가 현재 쥐고 있는 카드(정책·예산)를 잘 활용하여 누수를 최소화하고, 사업별 서비스를 받은 청년들의 이용 후기에 귀 기울이고, 청년 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하는 것이다. 그 과정들이 모여 보다 완성된 청년보장제가 만들어질 것이며, 그 변화의 중심에 제주청년센터가 설 것이다.

다음 키워드는 센터 프로그램 Map이다. 제주청년센터는 계속사업(공간 지원, 활동 지원, 취업 지원 등)과 신규사업(온라인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 등), 그리고 제주더큰내일센터와 각종 청년지원사업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이 일련의 Level-up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활력 상태에 있는 청년들, 중활력 상태에 있는 청년들, 고활력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나누어 단계를 형성하고 그에 맞는 활동들을 지원한다. 대상자

를 발굴하여 낙오를 방지하고, 발굴한 청년들을 성장, 발전시키고 관계망을 형성시켜 자생력을 함양하고, 성장한 청년들이 그들의 역량을 사회로 환원하도록 하여 공생력을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키워드는 청년참여기구 활성화이다. 작년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 원탁회의 이렇게 두 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청정위(총 25명)의 1/3이 제주도청 상급 국장이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올해는 청년 23명으로 구성된 청년 주권 회의기구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활동 기구를 제안한 이유는 이 경로를 통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약자를 구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일이며, 정치 권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명제에 있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관철할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선거를 거치지 않은 청년에게 나눠주기 위한 플랫폼이 바로 청년참여 기구이며, 이는 지역·직업·연령·성별 등 다양한 청년 당사자들의 현장 대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폭넓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일부에게는 현장 경험을 쌓을 기회도 뒤따라야 한다. 기성정당과 현재 정치 시스템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외국의 경우 20대부터 정치인을 육성하여 30대에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데, 한국은 그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핵심 키워드는 결국 효능감이다. 효능감은 무서운 것이어서 그 에너지가 눈덩이가 되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고 스스로 생동하는 선순환 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기성세대가 할 일은 청년들에게 효능감을 안겨주는 일이다. 청년들이 ‘우리가 얘기하

면 듣고, 우리가 주장하면 반영되고, 우리가 노력하면 바뀐다’는 신뢰의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청년의 내일을 제주도부터 다시 쓸 것이고, 제주청년센터가 맨 앞에 서겠다.

● **김태일** 세션 진행 장소를 굉장히 잘 선정한 것 같다. 제주컨벤션센터는 그 모양이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션뷰는 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오션뷰에 자리를 정한 것이 슬픔과 고통이 있는 청년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품은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2010년과 2020년 인구이동 자료를 분석하여 거주지 이동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1인 세대의 인구이동이 6~70%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1인 세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업을 찾아 자유롭게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목적성을 명확히 갖고 있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1인 세대의 인구이동은 19~34세의 청년세대가 2010년에 비해 2020년 크게 늘었다. 청년세대의 이동 사유는 직업과 주택 문제가 가장 많았고, 2010년에 비해 2020년의 경우 주택보다는 직업으로 인한 이동이 많았다. 또한 수도권 권역(서울과 경기도), 광역·특별시 권역, 도 단위 권역으로 구분하여 인구이동의 이동 요인을 파악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0년의 경우 수도권 권역과 광역·특별시 권역에서의 이동이 가장 많았고, 광역·특별시 권역과 도 단위 권역에서 가족과 직업으로 인한 이동이 많았다. 반면 2020년에는 수도권 권역과 광역·특별시 권역에서 주택으로 인

한 이동 비율이 8~10% 낮아지고 주거환경과 직업으로 인한 이동이 4% 정도 높아졌다. 여전히 주택문제가 이동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환경과 직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주택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인 가족 간의 관계, 교육환경, 특히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 문제들을 개선하여 좀 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제주의 강점인 1차 및 2차 산업을 보다 활성화한다면 청년들이 직업을 꼭 수도권에서만 찾지 않도록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주도 19세~34세 청년들의 이동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제주 도내에서의 이동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은 20% 정도를 차지하였다. 제주 청년의 이동 사유는 전반적 인구이동 사유와 비슷하게 직업과 주택문제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2010년과 2020년 사이 전출인구의 이동 사유를 비교할 때, 직업 문제 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이외에 가족, 교육, 주거환경 문제 비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직업의 선택권을 높이고 가족과의 생활 환경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에 매력적인 도시공간은 어떤 것인가? 청년세대를 위한 매력적인 도시공간은 첫째, 물질적 측면에서는 짜임새 있는 공간이며, 비물질적 측면에서는 도시가 갖는 이미지, 즉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둘째, 또한 주민과 그들을 위한 세분된 공간, 즉 잘 짜인 주택지와 광장, 질 높은 문화시설의 배치와 접근성이 배려된 교통체계, 주택지와 연속성을 갖는 쾌적한 녹지공간의 체계 등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주의 도시와 건축은 청년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가 오랫동안 머

물고 싶은 주민 중심의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앞서 연사분들이 청년의 정책 관련 참여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주택과 도시 정책에서의 참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주택과 도시 정책에서
의 주민 및 청년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
시는 자신과 타인이 공존하면서 편리함과 쾌적함을
확보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과 도시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
겠다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 세상은 사람 중
심의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미국은 뉴어바니즘
(New Urbanism)을 기조로 이미 10년을 앞서가고
있지만, 제주도는 그렇지 못하다. 도시의 건축에 대
해 사람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제주가 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공
간이 되려면 청년들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
하다.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에 몇백억이 투자
되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에 대해 시청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다. 우리가 하
나씩 투쟁하고 논의하고 맞서면서 보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주도에도 많은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설계하는 청년형
공공주택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적당한 일자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고, 가족이 옆에 있는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제주 청년들이 오래도록 제주에 머물면 좋겠다는 희
망의 말을 전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청년들이 정치·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 청년들은 정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주체성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
- 차세대 강화를 위해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사회적 포용과 형평성을 높여 청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세대 간 대화를 통해 지식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단한 지지 기반을 마련해주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은 만드는 주체는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 청년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면 정책에 반영되고, 노력하면 바뀐다는 효능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참여로 청년세대가 살아가기 좋은 제주의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성공사례를 통한 혁신적인 지역개발 중심으로 “제주인에 의한 제주인을 위한 제주개발은 불가능한가?”



좌 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기조연설 란데르 벨로키 몬드라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발 표 이미경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토 론 강순원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유경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래사업처장
 오성익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기 록 김설범 주식회사 라쿤

● **란데르 벨로키** 이번 기회를 통해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큰 특징만 전달하겠다. 몬드라곤이 하는 일은 사회적인 변혁을 위한 일이다. 몬드라곤은 6만 9천 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 수준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직원들은 111개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47억 유로 정도의 매출을 창출했고 소매분야에서도 61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했으며, 몬드라곤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금융에서도 협동조합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몬드라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요 특징이다. 바스크 지역의 기업들, 주주들이 바스크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경제위기에 잘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업률 또한 다른 곳보다 현저히 낮았다.

몬드라곤은 평등, 공평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모든

조합원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규칙을 만들었다. 회사 생활이나 급여 체계에서도 평등과 공평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평등과 공평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규칙들 때문에 바스크 지역 중 몬드라곤 지역이 소득이 가장 높고 빈곤율이 낮다.

또한 몬드라곤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해낸다.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협동조합원이며,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이 주인공이고 이들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모두가 투표권을 가지고 이렇게 민주주의에 기초를 둬으로써 협동조합의 일원이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몬드라곤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징을 살펴보자면 모두가 고용자이자 노동자이며, 평생 협동조합의 일원이 된다. 협동조합의 일원이 됨으로써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고용을 보장한다. 또한 몬드

라곤은 상호 협동의 생태계이다. 수익 공유도 하고 있고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이익도 공유하지만 손해도 공유하면서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간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몬드라곤은 연구센터와 대학들에 5000만 유로를 R&D에 투자했다. 또한 사회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사회적인 번영을 위해 사회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곧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활동들은 이미 중남미에서도 함께 연구 중에 있다. 사회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가치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미래에 AI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함께 해결해 나가길 원한다.

● **이미경** 우리 희망제작소는 대기업 없이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성장한 도시인 프레스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 지난 4월 프레스턴에 직접 다녀왔다. 때문에 프레스턴 모델이 무엇인지와 프레스턴의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 프레스턴 모델을 통한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프레스턴은 영국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가 늘고 있고 60년대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인구가 감소했던 도시이다. 상황이 열악할 때 프레스턴 도시가 처음 한 것은 외부 자본을 유입했던 일이다. 타이드반 프로젝트 1조원대 사업을 진행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실패했었고 2012년까지도 하위 20%인 상황이 열악한 곳이었다. 프레스턴은 힘든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내부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도시를 구하기 시작했다. 시의회와 맨체스터 소재의 CLES(비영리성

크탱크) 지역경제전략센터 그리고 센트럴랭커셔대학과 함께 만들어낸 모델이 프레스턴 모델이다. 몬드라곤 모델과 클리브랜드 모델 두 가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시작했다. 클리브랜드는 병원에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한 사례이다.

프레스턴 모델의 특징은 지방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다. 공동체 자산 구축이란 육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서 한 가장 큰 일은 지출 분석이다. 얼마만큼의 돈이 빠져나가는지 따졌을 때 당시 소비 규모가 10억 파운드였는데 필요한 것을 내수 생산 소비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버스 터미널, 지붕이 있는 시장 같은 것을 만들 때에도 지역 노동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지역 내에 있는 기업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사업 규모를 작게 나누었다. 협동조합들은 상호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협동조합이 힘들고 수익이 안 나올 경우 다른 협동조합이 도와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에도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프레스턴의 8개 앵커기관이 있다.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으나 해외 사업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돌렸다. 노동협동조합을 만들어 촉진하는 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 앵커기관을 통해 교육, 일자리 모두 발전하였다. 프레스턴 지역의 프레스턴모델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지역에 맞게 지역개발을 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 **강순원** 이미 90년대 초에 몬드라곤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제주의 고민이 난개발과 이를 어떻게 견인할까인데 고민을 많이 했었다. 몬드라곤은 제주보다 안 좋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힘으로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제주에도 그 방법을 적용하고 싶었다.

제주도의 인구나 현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려 보겠다. 제주 인구는 70만명 31만 세대이며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다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거의 멈춰 있다. 또한 고용률은 70%, 실업률은 2%이다. 제주도 전체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 건설업이다. 1-4명 사업장이 80%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으며 전체의 70%가 1인당 월11,000,000 원이다.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도 30% 나 있다. 제주 특성상 공동체적 노동의 교환, 서로 필요하고 이롭게 하는 합리적 노동 교환 쉽게 말하면 '품앗이' 정도로 이해된다. 서로 노동을 교환도 한다. 의기투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그 와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문화도 있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을 보완하는 공동체 기반, 내생적 지역혁신을 모색하고, 공동체에 기초하여 지역혁신을 하려는 지역사회 의지와 주체형성 및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 전통 수놓음의 현재적 해석을 통한 지역혁신을 설계해야 한다.

● **유경홍** 2002년도에 제주특별법으로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다. 위치적으로 2시간안에 동아시아 주요 도시 16개국을 이동할 수 있는 곳이다. 교육사업을 대표하는 영어교육도시가 있다. 총 7조 4000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도민 소득향상,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JDC 설립이후 변화를 살펴

봤을 때 인구, 관광객, 지역 내 총 생산 모두 증가하였다. 추진 사업으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이 있다. 영어교육도시 학생들은 유학을 대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가을 학기부터는 더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3000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다. 2단지 확장 예정이다. 헬스케어 타운은 47만평 규모로 조성을 완료하고 있다. 코로나19와 법적문제로 중단된 상황이다. 신화역사공원은 월드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을 운영 중이며 휴양형 주거단지는 소송이 진행중이라 출구를 모색 중에 있다. 면세점 수익은 다시 JDC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혁신도시, 혁신물류단지, 글로벌 교류 허브가 진행되기로 확정됐다.

Q & A

Q. 양영철 스페인에서 가장 가난했던 바스크 지역이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A. 란데르 벨로키 딱 한가지의 성공 요소를 꼽으라면 어렵긴 하다. 바스크 지역의 경제는 100년전 빈곤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강력한 산업정책이 가장 큰 동력이다. 각 지역의 강점과 단점을 잘 분석해서 네트워크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Q. 양영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A. 란데르 벨로키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해서 활기가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몬드라곤에서 기업간의 시장 중심 협동만 아닌 다양한 수단을 활용을 해서 서로 도울 수 있게끔 하였다. 기업과 협동조합이 작기 때문에 상호협력이 중요하다.

Q. 양영철 이미경 연구위원님은 직접 영국 프레스턴에 가서 몬드라곤의 모델을 적용한 프레스턴 사례를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은 무엇인가?

A. 이미경 인구가 14만이라 엄청 작은 곳이고 제주가 훨씬 크다. 자원이나 인구가 달라서 일대일로 적용할 순 없을 것이다. 프레스턴은 고민이 두 가지인데, 우수한 공급자를 확보하는 것과 우수한 협동조합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꾸려가고 있다. 지역의 대학이 깊숙이 협력해야 한다.

Q. 양영철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개발,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길로 알고 있다. 기획관의 관점에서 제주인을 위한 지역 개발 방향에 대해 제안해달라.

A. 오성익 오늘의 화제가 된 협동조합 이슈는 제주도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측량 수요가 급격하고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건설업이 가장 먼저 충격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부의 자원 인력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적조사의 중요성을 더 알리고 싶다. 산티아고 길 벤치 마킹 해서 올레 길

을 만든 좋은 사례가 이미 있다. 삼다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좋은 물이고, 비닐커버 없는 친환경 페트병으로 된 좋은 사례이다.

몬드라곤 사례는 협동조합이 정부의 지원없이 자주적으로 커진 방법을 더 연구해서 우리도 따라 가야한다. 해외 지사를 만들어 세계화와 연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을 배워야한다. 대전에 대덕 과학기술협동조합 같은 퇴직한 과학자 조합이 있는데 그것도 제주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양영철 공동체를 기반으로 제주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강순원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 시스템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강점을 만들까 계속 고민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해보는 것이 아닌 오늘 몬드라곤 사례를 본 것처럼 열정과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각기 다른 자원들을 놓고 제주의 문제를 새롭게 보고 방향도 새롭게 만들고 나아가 예산까지 신경 써봐야 한다.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방외교의 역할



좌	장	이성운	미국 터프츠대학교 교수		
기	조	연	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테루야	요시미	오키나와현 부지사	
		빠터얼	하이난성위원회 비서장		
패	널	참	파	파텔	클라이밋그룹 컨설턴트
		태	미	킴	미국 어바인시 부시장
		던	베	넷	주한 뉴질랜드 대사
		고	윤	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

● **오영훈** 18회 제주포럼을 맞이하며 지방외교 세션 개최에 참석해주신 여러 귀빈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정치·군사·경제·환경 등 전방위적 복합위기에 놓여있다. 자연재해,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안보 등 시대적 과제가 넘쳐나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만 패권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쟁에만 집중할 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전통적인 국가 외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지방외교는 더 유연한 형태의 외교로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도 제주포럼을 필두로 최근 지역의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과 더불어 지방외교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올해 싱가포르에 제주특별자치도청 해외사무소를 개소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환태평양지역까지 지방외교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제주는 단순히 지방외교를 하겠다는 의미만이 아닌 실질적인 교류 협력과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첫째, UAM 즉, 도시항공유통사업이다. 제주는 한화, 한국공항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빠른 시일 내 UAM 관광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는 미래 교통산업에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제주는 물론 하이난, 오키나와 등 관광이 주요 산업인 아시아 국가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글로벌그린수소허브 구축 사업이다. 국내 여러 곳에서 그린수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제주밖에 없다. 현재 제주는 19.1%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곧 탄소중립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한계도 있다. ESS 저장장치, 수소에너지 전환의 미성사 등 현실적인 기술의 문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는 산업통산자원부와 실질적인 협력계약을 체결하며 2026년경에 약 12.5메가와트의 수소를 생산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제주는 장기적으로 모든 에너지원을 수소로 변경할 것이다. 향후 모든 내연기관차는 제주에서 운행하지 못할 것이다. 2023년 올해에는 그린수소로 운영되는 버스와 곧 머지않아 수소트램이 제주에서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그린수소허브 구축은 아시아 여러 국가 및 도시와 연대하고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셋째, 민간우주산업분야이다. 최근 대한민국 누리호의 발사를 성공하면서 전세계 탑7의 자리에 진입하였다. 이제 국가 중심 우주산업이 민간 중심으로 이전될 것이다. 이러한 로켓은 현재 전남 고흥에서 발사하고 있지만 향후 소형로켓은 제주에서 발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제주가 국내에서 적도 궤도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에 쏘기도 쉽고 적도 궤도를 통해 관측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곳곳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이를 대비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로켓발사와 위성 활용에 있어서 적절한 장소는 제주가 될 것이다. 2021년 11월, 국내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에서 로켓 발사를 시도하였고 올해 11월에 다시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실증사업 및 공장을 제주에 구축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화 등 여러 민간기업도 제주를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제주는 여러 국가 및 도시와 연대하며 교류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주변국의 여러 도시와 함께 연대하며 제주포럼에서 교류하며 일본, 중국 등 여러 아시아의 주요 도시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이렇듯 제주가 주변의 여러 도시와 협력해서 지방외교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더 많은 국가가 연대하고 협력하기 위해 기존 전통적 국가 외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테루야 요시미** 원래 금번 제주포럼은 타마키 오키나와현 지사가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해 부지사인 제가 대신 참석했다.

오키나와는 일본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약 147만 명의 지역으로서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국제적으로 오키나와는 도쿄, 베이징, 하노이 등 주변 주요도시에서 항공으로 4시간 안에 있다.

오키나와는 과거 류큐 왕국으로서 여러 주변국과 교역을 통해서 교류한 고유의 역사가 있다. 류큐 왕국은 1800년대 후반에 일본으로 편입됐다. 오키나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반 주민까지 연루되며 여러 생명이 희생됐고 여러 문화유산이 파괴된 참혹한 전투를 경험했다. 이때 여러 오키나와 주민들은 해외로 이주했고 그들을 ‘우치난추’라고 한다. 오키나와는 당시 전투에서 참혹함을 기억하며 후세에 계속해서 평화정신을 전파하고자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희생된 영혼의 넋을 기리고 같은 장소에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을 건설해서 관련 자료와 역사를 보존하고 있다. 또한, 오키나와평화상을 제정해서 오키나와와 관련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상을 주고 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11번을 개최했다.

국외적으로 오키나와의 국제교류는 주요 산업인 관광업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평화산업이라고 한다. 오키나와의 국제교류의 초점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우리의 사업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제주와는 96년에 공동성명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섬관광정책포럼(ITOP)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관계를 돈독히 해왔다. 그 외 중국의

푸젠성, 팔라우공화국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섬 지역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대외적으로 큰 축제로는 세계에 나가 있는 오키나와인 네트워크 “우치난추 대회”를 연례 개최하며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오키나와현의 자립적인 발전과 현민(民)의 번영을 위해서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현 사무소 내 지역외교실을 설치했다.

● **빠터일** 아름다운 제주에서 지방외교와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에 함께해서 매우 영광이다. 제주포럼은 18회를 개최하며 이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포럼으로 거듭났다.

앞서 오영훈 지사와 오키나와 부지사께서 말씀하신중일 삼국은 모두 지방외교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전세계에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을 알려왔다. 중국은 1978년부터 대외 개방을 성실히 해왔고 하이난도 그러한 노력에 동참했다. 그 결과 하이난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외자를 유치한 곳이자 기업의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곳이다. 중국 내 타 지역과 달리 하이난의 법인세는 15%에 불과하다. 이러한 하이난의 개방적 정책은 중국인민공화국 정부로 하여금 관련 법제도를 개편해서 자유무역항정책을 이어가도록 장려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번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한 최초의 조치라고 자부할 수 있다. 이러한 우대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런 도움에 힘입어 하이난은 앞으로 5년간 대외의존도를 대폭 하락시킬 것이며 더 많은 다국적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을 꾀하고자 하이난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하이난은 기존의 서비스업과 관광업과 더불어 항공우주업과 제조업까지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위 녹색 발전을 통해 청정발전을 추진하는 섬으로 거듭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보아오포럼의 활용과 지방외교이다. 국가외교와 달리 지방외교는 더 유연하고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이난은 중국의 대규모 인구시장을 발판으로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건으로 지방외교에는 최적의 지리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상술한 낮은 세율과 간소화된 조세제도 등 자유무역항의 기본정책들이다. 이는 하이난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초석이 됐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자는 것이다. 지방외교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규칙과 원칙에 기반한 교류가 기본이라 생각한다. 특히 섬 지역의 지방정부는 저탄소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서 환경 분야의 여러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상호호혜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로가 회복탄력성을 기르고 상호 간 교류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상호교류와 방문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서로 좋은 친구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넘어 씽크탱크나 민간 차원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옛말에 “친구와 함께라면 어느 길이든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협력하는 지방외교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2023년 11월 하이난에서 열리는 섬관광정책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Panel Discussion

● **Champa PATEL** Subnational governments play a crucial role in ensuring peace and security amidst the challenges posed by climate change. The Under2 Coalition, consisting of 167 states and regional governments, recognizes the significance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or global stability. Climate-related events like heat waves, droughts, and rising sea levels particularly impact the Asia Pacific region, where countries with low-lying coastlines face heightened risks.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conflict is not direct, climate change can exacerbate existing vulnerabilities and compound crises. Subnational governments are instrumental in addressing these challenges, as they operate at the local level and are closest to the communities they serve. They possess jurisdictional powers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raise revenue through local taxation and green bonds, and direct these resources towards climate change goals and resilience-building initiatives.

Supporting subnational governments involves various strategies. One approach is helping them set ambitious targets through projects that utilize satellite data and mapping tools. By

identifying industries with the highest emissions at the subnational level, tailored plans can be developed to address these specific areas. Strong governance is also crucial, and collaboration with high-level leaders from subnational governments such as Chungnam Province in Korea, helps drive action at the international stage.

While subnational governments wield significant power, their voices are often overlooked in processes like the UN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process, which primarily involves states. Efforts are underway to ensure the meaningful involvement of subnational entities in the NDC process, fostering collaboration with national counterparts and enabling targeted plans at both levels. Technical knowledge sharing and peer-to-peer learning further support subnational governments. Currently, initiatives are underway to assist 8 to 10 subnational governments in areas such as green budgeting and green public procurement, guiding them through the entire process from revenue generation to supporting sustainable practices.

Additionally, showcasing the successes of subnational governments on the international stage is essential. Their dynamism, creativity, and innovation often go unnoticed, but these stories demonstrate their leadership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By highlighting these achievements, the Under2 Coalition aims to emphasize the vital role of

subnational governments in achieving climate goals.

To ensure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it is crucial to integr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into mitigation efforts. Merely achieving a greener world is insufficient. The goal is to create conditions where people can thrive, not just survive. Building resilience into mitigation programs, prioritizing adaptation, and supporting a just transition to new industries are fundamental aspects of this comprehensive approach.

Ultimately, climate action that builds resilience and fosters better disaster response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By empowering subnational governments and supporting their efforts through the Under2 Coalition, the aim is to enable effective coping mechanisms and prevent climate-related shocks from becoming destabilizing factors.

● **Tommy Kim** The City of Irvine, located in southern California, is a rapidly growing and diverse community. With a population of around 320,000 residents, it is the 13th largest city in California and the 10th fastest-growing city in the United States. The city prides itself on its multicultural makeup, with a significant Asian-American population, including communities from Korea, Taiwan, Japan, mainland China, and Vietnam, as well as the Middle East. Irvine is known for its religious diversity, with various

major world religions represented, including Korean churches, a Korean Catholic church, a Buddhist temple, and an Islamic center.

Established in 1971, Irvine is a planned community with specific land use and first-class universities and educational centers. It boasts a thriving business community, with over 22,000 businesses headquartered within its borders. The city covers approximately 66 square miles and includes a significant amount of open space.

Irvine recognizes that its diversity brings responsibilities. To foster global peace and cooperation, the city maintains sister-city relationships with various international counterparts, such as Tsukuba in Japan, Hermosillo in Mexico, Taoyuan in Taiwan, and Seocho-gu in Korea. These relationships facilitate business, education, and cultural exchanges, contributing to the diversity of the community and fostering international connections.

The city serves as a global learning center and education hub, hosting institutions such as Sejong Hakdang and promot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re are also Chinese, Hindi, Tamil, and Farsi schools. These educational facilities strengthen community connections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cultural exchange.

Economic development is a key focus for Irvine, with one-third of Fortune 500 companies located in the city. It aims to attract more businesses, including international companies

and serves as a regional hub for Taekwondo and various consulate generals.

The cit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subnational diplomacy and prioritiz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building relationships with sister cities. Balancing the interests and concerns of diverse communities can be challenging as decisions made to support one group may inadvertently upset another. For example, the city faced protests from Taiwanese residents when considering a sister-city relationship in China. Similarly, efforts to recognize the Armenian genocide were met with opposition from the Turkish consulate general. These experiences highlight the delicate balance and responsibility that comes with celebrating and representing diverse communities.

The City of Irvine has taken a stance on certain universal issues such as upholding women's rights in Iran, demonstrating its commitment to supporting causes that align with the values and concerns of its residents.

As a diverse city, Irvine believes there is much it can accomplish and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addressing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at arise from its multicultural and growing community.

● **Dawn BENNET** New Zealand's foreign policy is influenced by the unique status of the Maori people, the indigenous population of the country. The treaty of Waitangi signed in 1840 recognized

the authority and partnership between the Maori and the New Zealand government. This partnership is central to New Zealand's national identity and foreign relations. Four principles derived from the Maori worldview guide the country's foreign policy: respect, diversity, guardianship, and family/connectedness. These principles shape New Zealand's decision-making and interactions with other nations.

In practice, New Zealand consults with its Maori partners in trade negotiations, incorporating their indigenous aspirations and objectives. The country also includes indigenous segments in conferences and has initiated the Indigenous Peoples'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Arrangement (IPETCA)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The Maori economy is growing, with strong interests in primary goods, geothermal energy, digital education, and tourism. For the Maori, trade is about relationships, reciprocity, and community responsibility, aligning with New Zealand's overall foreign policy principles.

In the current geopolitical landscape, characterized by power competition, New Zealand acknowledges three major shifts: from rules to power, from economics to security, and from efficiency to resilience. Navigating these challenges requires a response grounded in New Zealand's national identity and values, which are strengthened by integrating Maori culture and approaches. The Maori

worldview emphasizes interconnectedness, sustainability, and holistic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nature, and spirituality. New Zealand embraces this worldview in its foreign policy, fostering partnerships,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sea-level rise.

New Zealand sees the Pacific region as a connected community rather than isolated countries, and it prioritizes inclusivity, cultural sensitivity, and sustainability in finding solutions to complex geopolitical issues. By modeling these values and approaches, New Zealand aim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ll countries can thrive. The Maori proverb,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It is people. It is people. It is people,” reflects the significance of prioritizing human connections and relationships in shaping New Zealand’s foreign policy.

● **고윤주** 이번 세션은 세 지방정부 리더가 만나는 아주 흔치 않은 기회이다. 미중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지방외교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주의 지방외교는 제주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 제주는 매년 1500만이 방문하는 가운데 관광업과 수산업이 주 산업을 이루는 섬이다. 또한, 제주는 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곧 중요한 지방외교 아젠다이다. 이를 위해 제주는 플라스틱 프리 2040 등 여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인권에 기여하고자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는 대한민국정부 지정 세계평화의 섬으로 오랜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방외교를 통한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으로서 작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성이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항공과 해상으로의 교통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주 지방정부가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연결성은 중요한 아젠다이다. 이런 배경에서 제주의 지방외교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이다. 제주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선 국내 어떤 시도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고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제주는 R&D와 전문가 교육에 집중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연합을 형성해 대응하고 있다. 그중에서 제주의 가장 큰 이니셔티브는 앞서 오영훈 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린수소허브를 구축하는 것일 것이다.

두 번째는 평화사업이다. 제주 지방정부는 4·3평화재단과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평화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4·3평화상과 독일, 일본 등지의 평화도시와 연대를 구축해서 글로벌평화도시연대를 통한 평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부터 열린 제주포럼 역시 제주가 평화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처럼 인적교류 및 교역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평화사업 등이 제주 지방외교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다. 범세계적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초 참석한 보아오포럼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미중경쟁으로 SDGs, 파리기후협약 등의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 큰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외교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지방외교는 참여한 국제정치 속에서 전통적인 국가외교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다 유연한 형태의 새로운 외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이뤄낼 수 있다.
-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와 다양성에 관한 문제를 최전선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중요한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 지방외교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 특히 평화적 가치 공유 및 교류를 위한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염원에 가장 밀접하게 대응하고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제주는 국내 최초 특별자치도로서 섬의 지리·환경적 요인을 이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후대에 계승하도록 제주포럼과 같은 여러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한 방송인의 눈으로 본 한류와 한국



좌 장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
발 표	마크 테토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
	조셉 리저우드	에빗 오너셰프
	아비셰크 굽타(력키)	인디아그로 대표
토 론	야닉	방송인
	카잉	방송인
	멜로디	방송인
	카를라	배우
기 록	최명주	외교부 외무행정관

● **손지애** 한국과 한류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로 방송 활동을 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된 주한 외국 방송인들의 시각과 관찰을 통해 한국과 한류의 미래를 진단체 보고자 한다.

● **마크 테토** 대부분의 사람들이 K-pop이나 드라마를 통해 한류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 이후 그들의 관심사가 한국 문화, 음식이나 옷 등 의식주, 그리고 전통 문화로 발전해 나가고, 직접 한국을 발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줄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한국 전통 문화와 그 가치에 대해 알아야 하며, 이 문화의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라마 <킹덤>에서 갖과 비너를 본 외국인들은 한복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알고 싶어 하며,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 미쉐린 셰프들이 찾아가는 곳이

심미 미쉐린 레스토랑이 아니라 정관 스님의 사찰이 었듯이, 의식주는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고유의 독특한 프레임워크이며, 우리는 '다섯 궁궐 이야기', '한복 이야기', '한옥 이야기'처럼 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조셉 리저우드** 식재료에 관심이 많아서 본국 호주 외에도 뉴욕, 런던, 홍콩 등 대도시 식당들에 근무하면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요리 생활을 하다가 한국 식재료에 관심이 많아져 한국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해녀들이 물질하는 과정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가는 적이 있었는데, 물에서 나온 분께 어떻게 잡았는지를 묻자, 그분이 갑자기 먹어보라며 손가락을 쑥 내밀었다. 그 후 같이 잠수도 해보고 친해진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고유의 독특한 스토리이고,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 **아비셰크 굽타(력키)** 인도는 10개 민족과 15개 언어의 국가로서 매우 복잡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인도에서도 최근 북인도, 남인도 할 것 없이 한류가 유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인터넷 접속이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십여 년 전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남한? 북한?'이라고 물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지만, 최근 인기 인도 셰프가 유튜브에서 '고추장'을 소재로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네 슈퍼마다 한국 라면을 팔고, 일부 중고교 외국어 선택과목에 중국어가 빠지고 한국어가 채택될 만큼, 가히 'K-Crazy in India'라고 할 정도로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 **야닉** 나는 네덜란드에서 백혈병에 걸렸다가 한의학에 관심있게 되었다. 이후 완치가 되면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한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 한의학 공부와 함께 방송도 하게 되면서 한국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에 계속 머물게 되는 이유는 '한식' 때문이다. 친구들은 네덜란드에도 한식당이 있는데 굳이 한국에 살아야 하는지 묻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먹는 한식에는 단순히 'Food' 이상의 의미가 있다. 풍성하고 정겨운 느낌,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누는 분위기가 정말 좋다. 이렇듯 한식에는 한국의 문화가 들어있다.

● **카임** 미얀마에서 동방신기에 빠져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고 결국 한국까지 와서 방송 활동을 하게 되었다. 마크 테토 위원의 발표처럼 'K-pop에 빠진 외국인이 한국을 알고 싶어서 찾아와 한국에 살게

된 사례'라고 보면 된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다. 최근 인기가 많아진 한류 콘텐츠에서 외국인들이 콘텐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아비셰크 굽타(력키)** 최근 질투할 정도로 한국에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이 너무 많아졌고, 방송에 출연하는 외국인도 너무나 많다. 이들의 시각과 경험에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생겨서 한류 콘텐츠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손지애** 외국인이 단순히 한국 드라마의 '외국인 사위' 같은 단편적 역할에서 벗어날 것이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던 토크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사례처럼, 이제 방송 콘텐츠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고,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 본다.

● **마크 테토** 외국인이 한국어를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자신만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멜로디** 제주포럼의 주제가 평화와 번영인데, BTS가 유엔에서 연설한 대로, 한국이 어떻게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 **아비셰크 굽타(력키)**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문화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인도의 향후 10년간 경제 발전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데, 경

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협력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포지션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조셉 리저우드** 평화와 번영은 문화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그런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마크 테토** BTS가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K-pop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류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카를라** 한국에 와서 처음 방송 활동을 시작할 때 외국인 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스팅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 당시 나는 'What is foreigner?'라는 의문이 들었다. 혹시 외모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인종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다.

● **아비셰크 굽다(럭키)** 사람의 심리가 6가지 좋은 경험과 1가지 안 좋은 경험 중에 1가지 안 좋은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기 쉽다. 본인도 한국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좋은 경험을 더 많이 기억하려고 한다.

● **손지애** 세션 맨 처음 마크 테토 위원이 사용한 'we(우리)'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카를라가 이야기처럼 한국 사회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는데,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곁에 같이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한류 콘텐츠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 고유의 스토리텔링 개발,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
-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한류)의 역할: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좁히는 역할을 하는 것
- 한국 사회가 성숙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중요한 척도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좌 장 김희은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대표
발 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펠로우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기 록 스펜서 킴 CBOL 그룹 회장
김영욱 국립외교원 연구원

● **스펜서 킴** 미 국내 정치적으로 사회 및 문화 분야 관련 양당 간 대립이 첨예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정책 분야에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및 안보 이슈 관련,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여, 즉 자유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와의 장기적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유지되나 한반도 이슈 관련해서 남한과 북한은 더 자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노력하기 어려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지만, 노력도 없다면 강대국의 국익에 맞춘 한반도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과거 서독의 대외정책인 ‘Ostpolitik(동방정책)’을 한국이 참고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수 또는 진보 정부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상기한 서독의 ‘Ostpolitik(동방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추후 남북통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민태은**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협력 및 한일 협력 강화 관련된 여론 조사 결과는 지난 1년간의 한미 협력 강화에 의해 한국의 안보 불안감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응답자들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미 제공 핵우산이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작년에 비해 한미관계가 굳건하다는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

● **패트릭 크로닌** 현재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안보 및 경제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 한미관계가 지금처럼 가까웠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그렇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동 사례에 근

거하여, 한국과 미국 모두 지도자 변수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고위 레벨에서의 동맹 강화 움직임과 더불어 동시에 동맹 강화 정책을 반대하는 한미 양국 국내 세력의 존재는 계속해서 양국 모두 주목해야 하는 요소이다. 2024 미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는 디커플링(decoupling)과 디리스킹(de-coupling) 간의 차이를 확실하게 정책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간의 차이를 수사의 사용으로만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디리스킹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지는 불확실하다. 현시점 기준 2024 미 대선 관련 각 대선 후보의 대외정책을 대표하는 프레임이 두드러지게 등장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프레임은 추후 등장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2024 대선 캠페인 기간에 등장할 중국과 관련된 정치적 프레임은 공화당 또는 민주당 모두 매우 명시적(explicit)일 것이다.

● **민정훈**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느 때보다 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양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과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내 양국의 역할에 대해 먼저 언급하였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무대에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역할을 공동성명문에 가장 먼저 포함한 것이 매우 흥미로운 점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며 이례적인 성과로서 워싱턴선언을 채택한 배경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우려 사항에 대해 미국도 공감했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동성명문에서 중국을 한 번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은 한중관계를 고려해야 하니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2024 미 대선을 고려하여 우리는 미국과의 경제 분야에서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내년 미 대선에서 경제 이슈가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 명백한바,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느 때 보다 면밀히 준비하여 변화된 대미 경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잭 쿠퍼** 미국의 정치적 구조에 의해 본국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 W.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민주주의 관념을 강조한 ‘자유 어젠다(freedom agenda)’이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자(don't do stupid stuff)’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상기한 3가지 용어를 모두 합친 것 같다. 그럼 이러한 논리에 근거했을 때, 미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가 실시했던 대외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4 대선 후보 관련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그가 첫 4년 동안 해왔던 대외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그가 첫 4년 동안 해왔던 대외정책 기조보다 더 공세적인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한국에 좋은 뉴스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은 트럼프 등장 시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디산티

스의 대외 성향과 관련하여 현재 그의 성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미미하나, 전통적인 공화당의 대외정책 방향과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그 사이쯤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지지 세력을 고려해야만 하는 디산티스 입장에서 그의 대외정책은 트럼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와 대중 견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내년 미 대선은 주요 사안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중국일 것이다.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 지평의 확대를 지지하며 한국이 계속해서 현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2024년에 백악관에 등장하게 될 대통령 역시 한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한국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 지평 확대 움직임은 우리의 국익 담보와 더불어 한미관계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동 번영을 위한 한·중 전략협력: 기회와 과제



좌 장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 표 **표나리** 국립외교원 교수
 파오등신 연변대학교 교수
토 론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등상릉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기 록 **우영아** 북경대학교

● **이희옥**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국제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지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중요한 국가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경제활성화, 그리고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의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본 세션에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한중간 협력의 가능성과 선결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표나리**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안보와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역 내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이러한 관계가 다소 냉랭해진 것은 단순히 코로나 19로 교류가 줄어서 발생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형적인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

이 정작 첨예한 사안 앞에서는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방지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16년 사스 현안 발생 이후 양국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여러 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했음에도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 공적 영역과 민간에서 방대한 인적 교류를 통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생각했으나, 중요한 순간에는 작동을 멈추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국 정상 간의 핫라인이 가동하지 않은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그중 최악은 국가 안보 정책 사안을 민간의 여론 대결로만 들어버린 것이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양국의 청년 세대는 책임 소재를 상대국에게 돌리며 비난했고, 그동안 한중 간에 발생했던 모든 갈등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며 양국관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 2022년 11월, 한중 양국 정상은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것을 합의했

다. 그러나 고위급 대화 개최의 난항에서부터 양안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쟁론에 이르기까지 관계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중 양국이 이념이나 가치, 체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한중은 냉전사유마저 팽배했던 1992년, 전격적으로 수교를 단행했다. 한중 간에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안보적 이익과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거대시장을 결합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개의 공동이익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이 두 가지는 여전히 한중의 공동이익이다. 오히려 북한 핵위협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중 양국 간에는 민감한 문제들이 산적해 단기간에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 어렵다. 중국은 한국의 가치외교나 정책 선호에 대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종종 이를 평가절하하고, 이러한 선택이 앞으로 한중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경고한다. 그러나 중국도 현재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기존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있으며, 자유·민주·인권은 미국의 가치를 추종한다기보다는 20세기 민주화 운동을 통해 현재의 사회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인들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현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체성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대화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대상을 글로벌 사안으로 확대해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외교적 차원에서의 '전략'은 일반적 개념, 즉 "국가의 향방을 수립해 자원을 수집 및 배분하는 수단"을 기초로 하지만, 초점은 양자 간의 사안을 초월한 포괄적인 문제들, 예컨

대 확장된 양자적 사안 혹은 국제적 사안에 대한 양국 간의 입장 및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다. 한중 간에도 북한 비핵화와 같은 확대된 양자적 사안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사안들을 전략적 협력의 범주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중 간 이견이 양자 사안보다 덜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 양국은 2013년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안보, 경제·사회, 인문교류의 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그 수단으로 다방면·다층위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우선 양국 최고 위급 지도자 간에는 상호 방문과 더불어 양측이 모두 참석한 다자회의 기간 중 적극적으로 회동을 가지고, 무엇보다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다음으로 양국 외교 장관 간에는 연례적인 교황 방문을 정착시키기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외교 차관 및 국장급 인사들 간에도 경제·해양법 및 국제법·문화·보건·환경·특허 등 여러 분야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러한 만남은 소위 「4대 전략대화」를 통해 틀을 갖추고 정례화되었다. 「4대 전략대화」란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한국의 집권여당과 중국의 공산당 간 대화, 양국 외교·국방부 실무자 간(일명 2+2) 대화, 양국의 국책 연구기관 간에 구축된 대화채널 총 4개의 정례적인 대화 채널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최고지도자에서부터 실무자와 정책자문기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정밀하게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년 구상이 나온 이래 10년

의 시간이 흐르며 양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변화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틀을 다듬고, 참여 주체와 의제 측면에서도 2023년의 전략 환경에 걸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4대 전략대화」의 중추인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채널은 중국 측 참여주체가 이미 외교담당 정치국위원으로 격상된 만큼 이를 반영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정책대화는 당국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 환경을 감안 시, 공동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소통 채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정치적 한계를 고려하고, 점차 역할이 확대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도 소통을 확대할 수 있다면 향후 양국의 국내적 사안과 연계해 협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양국 외교·국방 부문 실무자 간에 이루어지는 2+2 대화는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겸해 개최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차관급 회의로의 격상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후 차관급 2+2 전략대화가 개최되지는 않았던 바, 차제에 참여주체들의 범위와 급, 의제를 정리해 2023년의 전략 환경에 적합한 대화체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국 국책연구기관 간 전략대화는 현재 한국의 국립외교원(KNDA)과 중국의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및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을 주축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다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1,2,3차 전략대화는 「한중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대화」제하 총 16개 연구기관이 참여했으나, 이후 규모가 점차 축소되었다. 향후 한중과 동아시아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초기의 합동전략대화 모델의 복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또한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지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지역 차원의 협력이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지역 안보와 양국이 공통으로 마주한 국제적 사안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층위의 전략적 소통이 활발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 사스 현안 발생 이후 다소 위축되었던 양국관계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과 리오프닝을 계기로 도약해 더욱 큰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파오둥선** 1992년 중한수교 당시 양국은 서로 간의 이념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중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전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세계화는 영구불변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해왔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대의 큰 흐름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국내적으로 자원배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미국 중심의 관계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과 서구중심의 국제정치경제 질서 내 중국의 빠른 성장을 견제하며 세력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5-2016년에는 전략경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2017년 중미 양국은 전략경쟁에 진입하게 되었다. 중한관계는 2013-2014년 중미 전략경쟁시대가 전환되는 지점에서 전초전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한관계는 수교 이래 가장 좋은 시기였지만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1달 전, 한국의 사스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중미 전략 경쟁이 진행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경쟁이라는 단어는 보다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

다. 전략 경쟁이란 안보, 복지 등을 둘러싼 강대국 간 경합 과정으로, 협력과 충돌이라는 스펙트럼 사이의 어느 한 지점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국 경쟁은 전쟁으로 점철되었던 과거 대국 경쟁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전쟁비용의 증대 및 '공포의 균형'으로 대국간 극단적 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상호 이익의 교환, 국제제도 재편 등을 통한 자원배분의 주도권 경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이익배분 구도를 재편함으로써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의 대중전략을 보면 첫째, 국제질서 재편의 주도권 확보를 통한 패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등 의제 중심의 소다자 구도를 통해 패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동맹국들간 협동능력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셋째, 경제, 과학기술, 가치관 등 다양한 영역의 경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이는 또한 진영화 논리와 결부되어 궁극적으로 지정학적 경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중미관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경쟁의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한관계의 원심력이 증대되고 있는 원인은 세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 첫째, 국제체제 측면에서 대중견제를 요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 그 부산물로서 첨단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불안감도 크다. 둘째, 중한관계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경험관계의 이완,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긍심, 한국 내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북핵문제 '중국 책임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한국 국내 수준에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대결'이라는 미국식 프레임에 사로잡힌 한국 답론 구도, 그리고 이에 편승하려는 이념적

충동이 대중국정책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중한갈등은 점차 안보, 경제 및 가치관 등으로 영역이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한반도 정세는 '신냉전' 구도에 더욱 다가가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냉전' 구도를 막으려면 이미 미국의 전략적 견제 대상이 되어버린 중국보다도 한국이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더 크다. 양자 간의 공동이익을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핵심이익을 상호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으므로써 서로 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외교는 어디까지나 상호 간의 적대감을 줄이고 양자관계를 우호적으로 전환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중한 양국은 서로 간의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야만 그동안 누적이었던 상호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관계를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동상률** 우선 중한 양국이 적대에서 화해와 수교 관계로 나아가고 수교 30여년 기간동안 상대국의 제1위, 제2위 교역 대상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관계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적인 모범사례이지만 우리는 과거 30여 년 동안 양국이 이룬 성과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한수교 후 30여 년동안 이룬 발전성과는 중일수교 후 50여 년 동안 이룬 발전성과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중한 간의 경제, 인문 등의 발전성과를 상수라고 가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변수로 볼 수 있다. 어느 한 측이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언제라도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양국 모두 상호존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가 의미하는 상호존중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

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 측에 한국의 주권존중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각자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4강 외교 대상국 가운데 한국을 가장 존중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있지만 한국 신정부의 입장 표명은 중국의 기대와는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은 대만 문제가 국제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만 문제는 국제적 영향을 받고 있더라도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불안정한 양안관계가 한국의 경제 및 교통수단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국제적 영향이 국제 문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은 같은 발언 이더라도 다른 국가들보다 중국의 발언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호간의 기대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교관계에서 중국이 한국에 기대하고 있는 정도는 미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르다. 중국 칭화대학 국제관계 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과 대국관계지표"에서는 각 국에 대한 중국의 우호감과 적대감 수치를 통계로 나타내고 있다. 2023년 1월 발표된 지표를 살펴보면 중미관계에 대한 수치는 양국관계의 최하위 수치인 -10.0 중 -8.0이었고, 중일관계는 -5.6 이었던 것에 비해 중한관계는 4.1으로 상당히 우호하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양국 사이가 좋던 2014-2015년 중한관계 수치는 6.0정도였다.

마지막으로 가치외교와 관련해 중국 일부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추종한다는 인식이 있다. 미국의 대외적 민주주의 전파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은 지속적인 혼란과 불안에 빠졌던 것에 비해 80년대 한국의 민주화는 가장 성공한 사례로 들 수 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한국의 자긍심이자 자신감의 원천

임을 개인적으로도 공감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이른바 자신의 가치관 외교를 축으로 '작은 뜰과 높은 벽'식의 폐쇄, 배타 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가치관을 지닌 나라를 이색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계를 단순히 '권위'와 '민주'로 양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심화시키고 동북아 진영화와 국제사회의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

● **주재우** 북핵문제, 대만문제 등 누구를 탓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한중 간의 협력 기회 요인과 선결과제에 대해 논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즉, 양자 차원에서, 한중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협력 기회의 요인과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모색하는데 지혜와 혜안을 모으는 자리이다.

한중 양자관계만 해도 지금 해소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비(非)군사안보 영역에서 양국이 당면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 경제·산업·무역 영역에서 한중 양국 협력이 시급히 필요한 문제도 많다. 이런 문제를 다자 차원, 그것도 중국이 경쟁하는 나라를 포함한 다자관계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보면 해결될 것이 없다. 대신 중국이 강조하는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데 양국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소통과 대화를 중단하고 차단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특히 비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대화와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 중국이 강조하듯 양국의 발전과 번영, 양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국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난제에 부딪히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 정치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은 국가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정치가 장애요인이라면 민생을 위해 정치적 양보는 필수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비정치 분야에서 대화와 접촉, 교

류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중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역으로 비정치 분야에서 대화와 접촉, 교류를 지속하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야기된 외교관계의 경색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포용정책의 핵심이며 상호의존론의 핵심 논리이며,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핵심 이론이다. 평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라일수록 대화와 소통, 접촉과 교류를 차단하지 않고, 문화개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어야만 협력이 가능하고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의 싹을 우리 스스로가 잘라버리는 격이 될 것이다.

한중 간의 협력 기회의 요인은 많다. 미국과도 북한과도 별개의 현안들이 많다. 양국 국민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왜 정부가 양국 국민의 교류를 차단하고 나서는지 묻고 싶다. 정치에 무고한 국민들이 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상해야 하는가? 비(非)정치군사안보 문제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 요인은 많다. 가령,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경제, 2단계 자유무역협정, 경제고위급회담, 투자, 전략대화 등의 분야에서 많은 기회 요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가 이 모든 것을 중단시켜놓은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대화와 교류의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 정치적인 골레에서 벗어나 비정치 영역에서 대화와 교류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상호이해, 상호신뢰 이 모든 것들은 대화와 교류를 전제로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꾸준한 접촉과 소통, 대화와 교류만이 불필요한 인식, 오해, 더 나아가 오판할 수 있는 기회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중 양국이 당면한 문제는 양자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한중 양국이 양자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마저도 제3국 요인과 결부시켜 악영향 받을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행동을 자제할 것을 양국에 촉구하는 것이다. 양자 간의 현안을 양자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책임 있는’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성숙된 자세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한중 양국민의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민의 우호감마저 사라졌다. 문화의 다양성은 말로만 존중되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서구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스파게티, 피자, 도너츠의 유래를 가지고 설전을 벌이는 나라는 없다. 국수가 중국에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고춧가루의 전파 경로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이를 절인 배추에 가미한 것이 조선 김치이다. 물김치, 총각김치, 오이소박이, 파김치, 깍두기, 겉절이 등 여기 계신 분들 다 드셔봤을 것이고 만들어도 봤을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맛보고 만들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선 년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우리 후세대의 몫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어제오늘 느낀 바를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우리의 가치외교가 서방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우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중국은 사회주의 강국의 길로 들어선 사회주의 국가이다. 18차 당대회가 진행된 2012년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에서 체제경쟁을 선언하며 사회주의 노

선이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선언하였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목표 입장을 발표했다. 이렇듯 중국의 시각에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가치외교는 부각이 되겠지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미동맹 문제는 70년의 한국의 분단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성립된 후 첫 10년은 6.25 전쟁 이후 국가재건의 시기였고 남은 60년 중 첫 30년은 북한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한국이 열세했던 상황 속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대북 억지력을 발휘했으며, 중국 주은래 전 총리와 키신저 간에도 이러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다. 80년대 초, 전 미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거의 회고록에서 중국 측에서는 전략적 우위가 남한에 있으며 북한은 군사적으로 남한을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이 언급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며 전략적 우위는 다시 전환되었다. 오늘날 한미동맹의 숙명은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의 중국 문제이다. 1992년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여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4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적혀있다. 중국 측 주장인 대만문제는 내정문제이고 주권의 문제라는 것에 이해하며 동의한다. 다만 잦은 무력시위와 무력을 동원하게 되면 주위 국가들이 이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상호존중 문제이다. 작년 3월부터 중국 환구시보에 양국의 상호존중에 대한 인

식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 측은 중국의 핵심이익의 존중을 요구하고 있지만 역시 사지로 중국 측도 한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불법진입과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독도상공에 근접하게 비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만 서로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며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 **표나리** 작년부터 중국 측에서도 한중관계가 악화 된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중관계가 문제없다고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의 문제를 인지하고 풀어가면 된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중국 측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한중 간의 기대가 너무 컸다는 부분과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자는 의견이었고 이 의견들에 공감한다. 양국간의 기대가 너무 컸다는 부분은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는 바이다. 동상룡 교수가 제시했던 지표는 한국의 언론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 놀랐던 것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욱 호감을 갖고 있고 우호적인 관계로 보는 나라가 한국과 러시아 이외에는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국에 대한 비호감 비율이 38% 정도였는데 사실 조사된 나라 중에서는 가장 우호적 순위에 있었던 국가 중 하나였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38% 중국인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소재를 뽑아 당황했었다.

한중은 이웃이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양국의 협력을 이어가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양국의 양호한 관

계와 한국의 국익실현 등을 위해 실제 사실보다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언론 발언들은 지양해 주길 바란다. 한중문제를 논하는 방식으로 양자 간의 사안에 집중해 먼저 논의하고 미국, 대만 등 서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제 이슈들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이슈가 해결되고 난 후 논하자는 말에 동의한다. 추가로 소통하는 방식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북한의 핵문제 같은 경우,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건설적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문제 가운데서도 핵위협만 논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 과정에서 나오는 핵오염 등 양측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도 동의를 했던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의제를 세분화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파오둥신** 진행해야 할 교류와 협력이 많은데 정치가 왜 장애가 되느냐고 말해 주셨다. 정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배운 정치의 개념은 희소자원에 대한 권위적인 배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들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양국간의 관계를 자극해 국민들의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구 국가들은 서로 교류를 하며 각국의 문화와 이념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한복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중국에는 54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그중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국경 외 민족집단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은 약 20여 개이다. 이들 소수민족 중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민족 복장을 착용하고 있으며, 중국 조선족의 민족 복장은 한복이다. 조선족이 한복을 입는 것은 중국이

문화제국주의를 해서 입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슈를 보고 한국의 정치와 이념구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느꼈다. 과거에는 대부분 북핵문제로 인해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친중인지 반중인지를 중심으로 언론프레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2년 2월 한복 이슈가 생겨나고 같은 해 3월 대선이 진행되었다. 일부 영역에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언론 집단이 만드는 언론플레이를 가려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등상릉**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왜 중국에 대해 분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 쇼트트릭 경기나 한복 등 왜 민간 측면에서 싸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여론 혹은 전문가, 심지어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반중 정서를 이용하고 있으며 친중 인사들마저도 부정적인 요소에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이웃국가인 한국에서 생겨나는 반중 정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양국의 가치차이 문제에 대해, 중한수교 당시 어떻게 냉전구도를 극복하고 수교를 하게 되었는데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교 후 30여 년 동안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같은 국가로 분류하지만 중국은 위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국가이다. 상대방을 적으로 삼는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더더욱 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중국은 한중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더욱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반도 지역내 평화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인문, 사회 등 분야에서 많은 공통이익을 갖

고 있기에 안정지향적인 한중관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이희옥** 최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팅이라는 표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리스팅은 미중 간 협력에서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지만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을 합의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구동존이를 강조하고 한국은 상호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이익은 양자 간의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이슈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불편한 한중관계가 더욱 고착되면 더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움직여야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말처럼 만나서 교류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중 양국 각자 자기정체성 외교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중 협력이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됨.

-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부합하도록 2013년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참여주체와 의제 측면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녹색 경제, 2단계 자유무역협정, 경제고위급회담, 투자, 전략대화 등 비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화와 교류가 지속되어야 함.
- 양자 간의 공동 이익은 확대시키고 핵심 이익은 상호 존중하고 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왔지만, 사드 현안 발생이후 양국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고위급 대화 개최의 난항에서부터 양안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쟁론에 이르기까지 관계의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음.
- 한중 간에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안보적 이익과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거대시장을 결합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공동이익이 존재하며 북한 핵위협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동북아(한중일) 청년들의 목소리



좌 장 린다 젤리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부정무담당관
촉 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 표 / 토 론 허만지양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동북아시아의 미래평화 프로젝트 청년 피스빌더
준 오이카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동북아시아의 미래평화 프로젝트 청년 피스빌더
김이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동북아시아의 미래평화 프로젝트 청년 피스빌더

“Futuring Peace in Northeast Asia”는 유엔 정무평화구축국과 몽골, 일본, 중국, 대한민국 청년 평화활동가들이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고위급 정책 회의에 청년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청년, 평화, 안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50호(2015년), 2419호(2018년), 2535호(2020년)에 발맞추어 동북아시아 청년들이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청년들은 미래학을 활용하여 지역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2040년을 배경으로 교육, 신기술, 혁신적인 접근법이 지역 인식을 구축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가상 플랫폼을 통해 140여 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참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4개의 상호 연관

된 분야를 식별해 청년들이 정책 권고안을 작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청년 평화활동가들이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본인들이 기획한 정책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입안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청년 평화활동가들이 개발한 정책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증가하는 혐오 발언, 편견, 여성 혐오 및 적대감을 해결하고 지역 문화 교류를 위한 안전하고 포괄적인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동북아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협력

• 교내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와 학교들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을 개발. 동북아 지역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통해 문화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능력, 포용적 사고방식, 문화 공유를 위한 자신감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함.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 기업 및 기술공급업체는 게임, 동영상 및 메타버스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장치, 기술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사용지침에 대한 최신 지식을 제공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기여.

- 시민사회단체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 문화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곳에서 평생학습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공간을 마련. SNS 기업과 기술 공급 업체는 기술 및 장치 제공을 통해 이를 지원.
- 각국 정부의 정보기술부와 SNS 기업은 모든 사용자들의 언론 자유를 지지하면서 폭력적인 온라인 언어와 허위 정보를 다루고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

2. 동북아 청년을 위한 교육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지역 내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타문화와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장려

- 어학연수 프로그램 및 지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교육부는 청년들이 다른 동북아 국가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에코 체임버를 피할 수 있도록 함. 각국 정부는 시민들의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동북아 내에서의 학생 교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수업료를 삭감하거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학생들의 식사 비용을 지원. 또한 동북아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국제 학술 및 예술 프로그램에 더 많은 보조금을 할당.
- 민간 주도의 지역 내 포럼을 통한 교류 확대: 영리기업은 지역협력과 지역 인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에 주요 참가자로서 함께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이끌어 감. 또한 지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부족한 자금을 충당.
-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 제공, 시민들의 정보접근성 보장: 기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공공 기록과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며, 지식 사회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3. 청년들이 지역 환경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동북아 기후 행동 청년의회 창설

- 청년의회는 지역 내 국가별로 만 18~32세 사이의 선출직 의원 5명으로 구성되며, 순환형 대표제로 운영.
- 국제기구, 지역단체, 환경기관 및 정치재단은 (1) 대화 촉진 및 재능풀 활용 (2) 지속적인 회의를 위한 물리적 공간 지원 (3) 글로벌 시민권, 외교, 환경, 경제, 사회 정책과 같은 분야에 대한 교육과 협상, 팀워크 의사소통과 같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고등 교육 기관 내에서 청년의원 육성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청년의회 창설에 기여.
- 국제기구는 청년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 및 의사결정 공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ASEAN, PIF, EU와 같은 다른 지역 기구를 방문하여 현재 동향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기관들은 청년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 행동계획 및 청년리더십 방안을 기획하는 과정에 함께함. 청년의회의 정당성과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개방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
- 동북아의 각국 정부는 청년의회와 그의 역할, 그리고 정부가 청년의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를 확실히 하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

4. 접근성, 상호 운용성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습의 미래를 재인식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포괄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확보

- 동북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동북아 국가들은 뛰어난 IT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음. 많은 국가들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동북아 각국은 독점과 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산업, 연구기관, 학계, 정부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동북아 플랫폼을 개발. 지역 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메타버스 내 권력 분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가속화.

- 언어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촉진: 정부는 적극적인 언어 간 정보 교환을 위한 알고리즘과 과도한 필터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위한 지역 인식 구축을 지원.
- 민간-공공기관 협력 및 다중 이해관계자 대화 촉진: 메타버스에서는 IT나 기술정책 관련 전문가들 이외에도 청년, 동성애자, 장애인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
- 메타버스 규제를 통해 기업과 시민 사이 힘의 불균형과 이해 상충 시정: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IGF)을 모델로 삼아 지역 내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과 시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몬드라곤 대학의 지역인재 양성 경험을 통해 바라본 “제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준비”



좌 **장**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전무이사
발 **표** **이원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아이토르 리자차 몬드라곤대학교 팀기업가정신전공 학과장
원종호 에이치비엠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이사

● **아이토르 리자차** 몬드라곤 대학교를 대표하여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협약을 체결한 특별한 날이다. 오늘 몬드라곤 대학교의 활동과 학술연구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한다.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한다. 창업 정신과 경영학, 팀프러너십, 리더십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몬드라곤 대학은 1997년부터 시작되어 공대와 인문대가 있고, 6000명의 학사 과정 학생들이 있으며 이들 모두 조합원이다. 꾸준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

몬드라곤 대학의 특징은 교육 혁신이다. 처음에는 학위를 주기 위함이었고, 또한 실질적인 스킬을 가르치고 싶었다. 팀프러너십이라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고, 특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학사과정에 대한 것이다. 지금 여러 국가에서 활동 중이다. 여러 국가에 연구실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도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 있다. 250명의 젊은 팀엔터프러

너가 10주 정도 서울에서 공부를 한다. 엄청난 도약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만 3번 방한했다. 이것은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몬드라곤대학은 학사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5가지는 아래와 같다.

1. 국제교류 - 경험을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쌓고 있다.
2. 실제로 회사를 만들어 본다. 예를 들면 강의를 해서 가르치지 않고, 실제로 티셔츠를 제작해서 판매한다.
3.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한다. 즉 스스로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4. 교육모델
5. 팀 배우기는 팀워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몬드라곤의 정신 중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팀으로서의 업적이 더 중요하다.

몬드라곤 대학의 교육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움직이고 프로젝트와 행사를 개최하면서 배워간다. 회사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대학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학사과정을 마치면 창업했던 회사를 꾸준히 키워 나갈 수도 있고, 적절한 회사를 새로 만들기도 한다. 물론 회사에 입사를 하기도 한다. 학사 과정을 밟으며 본인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 우리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700명의 팀 창업가가 회사를 설립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방법을 연구한다. 기업가 정신, 혁신 정신, 정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육성하고 나아가 직접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안에서 스타트업 회사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많은 투자자가 학교에 찾아와 투자를 유치한다. 그래서 학생과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일도 한다. MTA 스토리를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 이원준

21세기 변혁시대 인재양성 - 교육 더하고 '빌등' 대학에서 강의를 직접 해봤는데, 인재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쉽지 않다. 창업은 우리의 실정과 많이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심각한 이야기이다. 내가 학생들을 보면 모범생이라 무엇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중요하게 본 것은 팀으로 성장하면서 개인도 성장하는 것인데 HBM이 잘 운영하고 있다. 5년정도 진행해보니 실체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 나는 참여자이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었다.

2017년부터 실험을 시작했고 방향성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으며 외로운 싸움이였다. 내가 발견한

것은 5개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다. 가장 크게 발견된 점은 내적인 변화와 같이 만들어 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화, 바스크의 D&A에서 북유럽의 D&A를 본 것이다. 개인의 성장과 팀의 성장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한단계 더 나아가면 교육을 이야기할 때 도구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대가 빨리 바뀌고 많이 바뀌었다.

빌등이라는 단어는 독일의 교육 철학이다. 북유럽이 잘사는 이유는 인생 학교, 자유의 학교 때문인데 그게 덴마크 독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뿌리를 찾아 들어가보았다. 자아를 확장시키는 것, 정체성을 키우는 것인데 문화, 맥락, 가치관을 봐야한다. 아이들에게 뿌리와 날개를 남겨주어야 한다. 우리는 기억과 이해를 가르치는데 인재를 양성하려면 적용, 분석, 평가, 창조를 가르쳐야 한다. 교육받고 학습하는 것이 내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교육은 받는데 마음이 성장이 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보면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많다.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키워 내기 위해서는 정신적 문제를 교육 문제와 분리해서 해결해야 한다. 조직이 인간을 사용했다면, 인간이 조직화돼서 공동 성장해야 한다. 교육과 빌등의 조합으로 인간의 성장해야 한다. 빌등은 도덕적, 정서적 성장을 일컫는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개인적으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질문으로 열망과 재능 그리고 가치관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 원종호 팀프러너십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전달하고자 한다. 10년전에 처음으로 MOU를 맺고 시작했고 오늘 10년 만에 제주에

서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쁘다. 70년 전 몬드라곤 대학의 3가지 키워드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교육이다.

MTA 교육방식을 15년전 몬드라곤 대학에서 시작했다. 포인트는 개인의 성장, 공동체성 성장, 그것을 통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2015년 성공 회대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 성공 관대에서 성공적 결과를 만들었다. 바스크나 가능한 것 아닌가, 우리가 가능할까, 4년제 학사과정만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편견과 혁신이 있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시도를 통해 결과를 얻었다. 배운 것으로 통해 2가지 이론을 깨 달았다.

엽전이론 - 본질적인 것은 유지하되 적용할 때는 유연해야 한다.

온기모델 - 바스크어로는 '잘 안다' 한국은 답은 그릇인데, 뜻이 잘 알아야 퍼트릴 수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코로나19 시절 LEINN 서울 프로그램으로 공식적 데뷔를 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단순 학교가 될 순 없다. 개인의 성장과 팀 성장 그리고 비즈니스로의 발전까지 해야 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스페인 학생들 300명이 매년 방문하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실제 스페인에 왔다갔다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남을 느꼈다. 과감하게 도전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주에서의 새로운 도전도 모색 중에 있다. 러닝 저니로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주도도 계획 중에 있다. 내년 오픈 준비로 서울 랩처럼, 제주 랩도 준비중에 있다.

● **김종현** 청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지 분

들을 만나 감사하다. 혁신을 통해 제주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 제주 출생 남자이다. 제주가 성장하려면 제주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전파되는 것이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이 부족했고 그래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만들게 되었다.

스스로 나의 일을 창조하는 인재를 만들어 낸다. 6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한다. 그 후 6개월 동안은 창업 아이템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 다음 12개월 동안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키워 나가고 진행한다. 19년도부터 8기까지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능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청년만 하는 것이 아닌 600여개의 도내 기업이 함께하고 있다. 평점은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성공자를 배출해내었다.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찾아갈까? 재미의 행동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가까운 것부터 찾아서 페로몬이라는 향수를 뿌리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진하기 때문에 가까운 먹이를 다같이 공유하게 되는 재미들의 행동패턴이 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들의 성과를 공유해서 결과적으로 큰 성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메슬로우, 자아실현자, 청년주체 사회적 안정감을 만들고 친밀한 커뮤니티를 제공하면 능동적인 주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혁신인재 육성방법

1. 애착형성과 커뮤니티 - 성장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인식, 타인 인식
2. 메타인지 - 협업을 위한 인지능력, 아는 것 모르는 것, 할 수 있는 것, 모르는 것을 인지한다.

3. 성장 마인드셋 - 고정 마인드셋 보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게 한다.
4. 소명의식 -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게 한다.

Q & A

Q. 몬드라곤 대학교에서는 비즈니스 과정을 책상에서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 전세계를 직접 돌아다니며 팀원들과의 협동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 참 인상 깊었다. 이런 과정을 다양한 국가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몬드라곤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교육과 달리 어떤 효과가 있는가?

A. 아이토르 리자차 수업이 없고 기업가 정신 교육과정이다. 콘텐츠를 직접 가르치며, 직접 배우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대학 입학 전에 10시간, 12시간 다른 활동을 대신해 보면서 팀 엔터프러너십을 설명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학사 4년 과정이지만 평생동안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Q. 몬드라곤 학생과 미국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A. 아이토르 리자차 우리는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를 4년동안 가르친다. 미국 MBA 과정은 툴을 적용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Q. 청년들을 가까이에서 마주했을 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 방향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누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나?

A. 원종호 대학생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경험이 많으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팀플레이가 어려웠다. 어린 친구들은 경험한 것이 없어서 실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등학생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20대 초반 친구들이 두려움 없이 즐기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Q. 앞서 스페인의 팀아카데미 방법론을 보고 영감을 받아 다양한 실험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한국에 적용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이 교육 방식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이원준 대학이 생긴 이유가 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것인데, 작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변화는 자신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교육을 넘어서서 사회가 함께 사업가 인재 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시도가 필요하며 어떤 사업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김종현 혁신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청년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생

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좀 더 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 세대의 빛을 우리가 쓰는 것인데 청년 세대에게 과감한 투자를 넘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과감하고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함.
- 탁상공론 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제로 창업을 해보고 경험해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함.
-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투자시기는 20대 초반이 가장 좋은 시기임.

한국 경제성장 경험의 공유: K기업가정신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제주한라대학교
CHEJU HALLA UNIVERSITY

좌 장 전용욱 제주한라대학교 부총장
기 조 연 설 김기찬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대학교 부총장/가톨릭대학교 교수
발 표 / 토 론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
오인규 일본 칸사이 외국어대학교 교수
조니 옥타비안 하리안토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부장관 전문보좌관
기 록 이보연 제주한라대학교 조교수

● **전용욱** 30~50클럽은 가입국은 7개국 밖에 없고 가입국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인구 규모와 소비자 규모 등이 엄격하다. 한국은 2018년 30~50클럽에 가입한 마지막 7개국의 멤버이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등 거시적 한국경제를 일군 K기업가정신을 보게 되면 1세대인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대우의 김우준 창업자들을 포함하여 신세대인 네이버의 이해진, 카카오의 김범수 등 기업가 정신과 경험을 공유하여 아시아 경제 번영과 기업 성장을 도모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 **김기찬** 아시아 국가는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에게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아시아 국가들은 문명의 진보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문제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답은 기업가정신에 있다.

한국은 기업가정신으로 혁신과 성장을 끌어냈다.

이러한 한국 경제성장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기업가정신은 '정신'에 관한 것이고 K기업가정신은 기회를 혁신으로 만든 정신이다.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만든 정신으로써 K기업가정신이다. 경제가 심리이고 정신인 이유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문명을 만들기 때문이다. 문명의 출발은 정신이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이란 기회를 고객 경험 혁신으로 만들어내는 정신으로서 어떤 기회도 기업가정신이 없으면 보기 어렵고 도전하지 않는다. K기업가정신은 기회를 혁신으로 만든 정신으로 한국의 경제 기적을 만들었다. 따라서 기회에 도전하고 혁신을 끌어내는 정신이 기업가정신이다.

기업가정신은 변화에서 어려움이 아닌 기회를 보는 정신이다. 특히 현재의 어려움에서 기회를 보면

기업가정신이고, 이를 어려움으로 보면 전문가이다. 전문가(Professional)들은 모든 기회를 어려움(difficulty)으로 본다. 이 어려움은 위기가 되고 기업가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가적 사고방식은 기업가적 경험을 통해 개발되고 강화될 수 있다.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함양하기 위해 조직 및 커뮤니티 내에서 기업가적 혁신과 웃음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 **조니 옥타비안 하리안토**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과 기업가정신 및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1965년과 2022년 GDP 및 연간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1965년 당시 한국은 인도네시아보다 GDP가 낮았지만, 현재는 그 반대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원인과 과정 및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술 혁신, 한류의 영향, 지리적 정치 상황이 주는 압박과 근면성·실함 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글로벌 위기로부터 도출된 기회들은 1) 기술 혁신 가속화, 2) 디지털 전환, 3) 건강과 웰빙에 집중하기, 4) 작업 환경 재구성, 5) 환경적 이익, 6) 글로벌 협업 강화, 7)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지원 강화 등이라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제조사업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1) 비용 고려, 2) 유리한 경영 환경, 3) 무역협정, 4) 지리적 근접성, 5) 위협의 다양화, 6) 성장하는 소비자 시장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2023년의 잠재적인 직장 동향을 정리하면 1) 기업 구조조정, 2) 역량 기반 채용, 3) 재택근무, 4) 정식 일자리가 없는 임시직 경제, 5) 디지털 인재의 중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경제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생인 통찰력을 짚어보자면 한국은 전쟁 피해로 고통받은 나라에서 경제 강국으로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으며, 이는 전 세계 국가들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의 성공 이야기는 개인들이 가진 저항력, 혁신, 강한 직장 윤리를 보여준 기업가정신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정부의 기업가정신 육성에 대한 헌신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독려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혁신을 육성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기업가적 열정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 **아밋 쿠마르** 인도 경제의 현재 상태, 성장 전망, 진행 중인 다양한 전환(인프라,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등) 및 혁신 기회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특히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의 신기술과 디지털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인도의 스타트업 성장과 기업가정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도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많이 부러워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 인도의 현황은 글로벌 변화에 따라 정부의 240억 규모의 경제시장에서 6%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고, 지리적 위치 덕분에 해외투자 유치의 유리한 면이 있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녹색 인프라에 1,300억의 예산을 두고 있고, 로지스틱 개선, 선박운송의 개선, 중소기업의 성장, 녹색에너지(태양, 2차전지, 녹색수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2016년에 몇 백 개밖에 안되던 스타트업 회사들이 현재 9000여 개까지 성장한 부분은 스타트업 허브로서 잠재적인 성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인프라, 로지스틱, 제조업 성장 경험의 교훈을 삼아 인도 자원에 기회를 포착하려 노력할 것이다.

인도 정부는 2020년부터 국가교육법을 도입하여 대학교의 개별이 아닌 통합된 교육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위한 많은 계획을 세웠으며, 첨단 기술개발과 기업가 정신을 학문적 교육으로써 멘토링 작업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우호적인 환경 제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의 대학들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과과정을 공동개발을 하여 한국 대학과의 협업 기회도 엿볼 수 있다.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태양, 분자 관련 연구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 의학, 바이오 부분을 지원하는 정부의 전문 부서가 따로 있다. 기업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금융환경 제공, 노동자 스킬과 관련 직무업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EU와는 완전히 다른 디지털 전환 접근법을 진행하고 있고, 1.5조 달러 규모는 한국의 80%정도이지만 한국의 경험 공유는 많은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오인규** 여성 보편주의는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새로운 팬 문화와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그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성차별적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공통된 보편적 속성을 공유한다. 하이브(HYBE)는 자신들의 음악과 공연에서 친여성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Kpop과 방탄소년단

이 세계 음악 시장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들의 비즈니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이브(HYBE)는 전 세계 여성 팬들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다차원적 수익원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정치, 사회 인식 프로그램 및 자선 기부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전략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여성 보편적인 전략의 결과는 현재 전 세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 및 일본 대중문화와 달리 대부분의 글로벌 한류 팬들이 소비하는 K-팝과 K-드라마 제품에 남성 및 여성 아티스트가 동등한 수로 혹은 여성이 더 많이 출연하는 유일한 사례이다. 또한 팬들은 급진적 공감(즉, 자신의 취약성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적 행동을 통해 이를 극복)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주류 대중문화 산업에서 널리 발견되는 전통적 남성 우월적 메시지에 대한 대안적 메시지를 찾는 것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설계된 창업 전략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데이터 역시 전 세계 K팝 비즈니스의 3대 기동인 여성 보편주의, K팝 팬덤, 급진적 공감 사이의 관계를 실증해 준다. 여타 아시아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은 문화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한국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여 그들 또한 자신들의 나라가 갖는 현지 문화의 강점과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상품화하여 글로벌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다. 본 사례 연구는 한국의 문화 기업가 정신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모두에서 아시아 파트너들과 공유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기업이 정신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정신이고 회사 내 혁신과 웃음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함.
-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성공의 교훈은 개인들이 가진 저항력, 혁신, 강한 직장 윤리를 보여준 기업가 정신에 근간을 두고 있다. 2023년의 잠재적인 직장 동향을 정리하면 1) 기업 구조조정, 2) 스킬 기반 채용, 3) 재택근무, 4) 정식 일자리가 없는 임시직 경제, 5) 디지털 인재의 중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인도 경제의 현재 상태, 성장 전망, 진행 중인 다양한 전환(인프라,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등) 및 혁신 기회에 대한 논의는 한국과의 기업가정신 공유와 협업을 위한 기회 제공의 장을 만들 수 있음.
- 전 세계 K팝 비즈니스의 3대 기둥인 여성 보편주의, K팝 팬덤, 급진적 공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은 문화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한국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여 그들 또한 자신들의 나라가 갖는 현지 문화의 강점과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상품화하여 글로벌 시장에 내다 파는 것임.

인도-태평양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도약

ESG경영을 통한 저탄소관광 전략-제주 복합리조트를 대상으로



좌 장	고계성	경남대학교 교수
환 영 사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축 사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발 표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토 론	정승훈	제주대학교 조교수
	송상섭	제주관광학회 학회장
	신학승	한양대학교 조교수

● **송상섭** ESG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어려워하고 있다. 특히, 관광사업체는 직원 5명 이하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나 대규모 기업에서 먼저 선도하고 협회 등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확산되기 쉬울 것이다. ESG 관련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한국관광공사는 ESG경영에 대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뜨는 관광에는 이유가 있다, ESG 관광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ESG 관광 사례를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 (1)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 여행”, (2)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지역상생 여행” (3) 두 여행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와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개선”을 소개한다. 제주관광공사는 ESG경영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환경(E) 분야’에서는 ‘청정 제주를 지키는 환경 관리인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S) 분야’에서는 ‘관광객에게는 안전과 만족, 지역사회에는 사회, 문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교량적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제주관광공사의 투명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는 셀프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의 규모, 경기 상황을 떠나 모두가 ESG경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업이나 활동들 또한 ESG로 엮어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1) 도내 기관들을 통해 기업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 (2) 제주도 문화상, 관광대상 등 어워즈 시상 시 ESG 관련 분야를 추가하거나 ESG 대상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가 있는 기업에 포상, (3) 관광업종별 ESG 지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표를 만들고 확산할

것을 제안한다.

● **정승훈** 제주를 지속 가능한 관광목적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광부문만이 아닌 여러 부문 간 협력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며, 특히 관광사업체는 중소기업이나 1인 기업도 많아 ESG 경영을 어떻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관광객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업종 외에도 여러 업종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며, 도내만이 아닌 도외 기업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더불어 관광기업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서 소개된 관광 서약서, 수칙 마련 등 관광객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없어서는 안 되므로 어떻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의 ESG 경영 가이드라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신학승** ESG를 논할 때 국가, 기업, 조직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공급자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관광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친환경 관련한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 기업도 개인도 자본주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논리를 관광부문으로 가져와 관광객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제안한다. 오늘날 관광객이 소비는 객관적인 수치로 데이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점수를 부과하고 이에 맞는 혜택을 주는 등 관광객에게 친환경적인 행동을 유인하고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에서 제주 E-credit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모든 기업이 필요 ESG 참여해야한다는 인식할 수 있게 영세한 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ESG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 관광협회, 스타트업협회 등 기관에서 세미나, 포럼, 캠페인을 통해 ESG 인식 확산 기회를 만들어 줘야함.
- 도에서 ESG대상 어워드 사업을 만들어 ESG경영에 모범이 되는 기업에 대한 시상 필요함.
- 도외기업, 항공, 크루즈 여행선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제주도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기업들과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의) 관광진흥계획에서 가이드라인 개발, MICE관련 경영가이드라인 발표를 해야 (해당) 지침을 따라 갈수 있음.
- 개인과 관광객이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배출, 에너지 소비, 전기사용 등에 있어서 친환경적 행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함.
- 물 소비, 쓰레기, 전기소비량을 측정해서 E-Credit 점수를 부과하고 점수가 높은 관광객에게 적절한 benefit을 제공해야함.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전략 구체화 방안



좌 장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발 표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국방대학교 부설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박재적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토 론 전수진 중앙일보 기자
기 록 정종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이 세션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 State: GPS) 역할 강화”를 실제 외교 전략으로 구체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체성과 위상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를 토론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어떠한 정책 수단을 보유했는지 논의하면서 국가 규모, 경제력, 지정학적 위치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탐색했다.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전략적, 정책적 행동양식을 전망하면서, 한국 외에 글로벌 중추 국가에 포함될 국가들을 탐색하고 이들과 설정할 관계를 모색했다. 나아가 글로벌 중추 국가들의 연대가 수행할 역할 및 기능을 논의했다.

● **전재성** 이 세션은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전략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는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의 최상위 개념이며, 그 개념과 실현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는 한국이 신흥 선진국으로서 지구적 차원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학계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늘의 발표자들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외교부와 함께 글로벌 중추 국가의 개념, 이론, 역사적 배경을 논의하고 그 개념을 한국의 외교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해 왔다. 오늘은 그 연구의 성과와 그간의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의 개념과 우리 정부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글로벌 중추 국가와 중견국 외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것이며, 이어서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님께서 글로벌 중추 국가의 대외적 역할 확대에 대해 발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박재적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글로벌 중추 국가의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수진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국제정치와 저널리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발표들에 관해 토론해 주실 것이다.

● **이승주** 글로벌 중추 국가와 중견국 외교에 관해 크게 4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특히 중견국 외교의 맥락 속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애 요인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첫째는 중견국 외교의 역사에 기반하여, 글로벌 이슈들을 연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견국 외교의 역사는 그리 짧지 않으나, 탈냉전에 의한 구조적 변화가 중견국 외교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탈냉전 국면이 가시화되며 부상한 개발 협력, 인권, 무역 외교 등이 중견국 외교의 일환들이라고 설명된 바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이슈별로 중견국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그 측면에서 중견국 외교는 이슈 특정적(issue specific)이고 기능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는 이전까지의 중견국 외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지금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이슈가 연계된 글로벌 과제이기에, 한 이슈에서의 리더십이 다른 이슈에서 리더십으로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구적 도전에 직면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 지구적 도전의 실체와 원인, 그리고 이슈간 연계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COVID-19를 예로 들자면, 각 국가는 전 지구적 도전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보호주의 및 경제적 민족주의적 현상을 일

으켰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은 이러한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는 리더십의 공백을 노출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는 이러한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일정하게 기여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양자 외교, 지역 외교, 세계 외교를 연계할 수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앞으로의 도전들은 개별국가, 양자관계, 지역, 세계 등 모든 단위에서 연계될 것이며, 명확히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는 모든 단위에서 그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조건이 이슈 연계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조건은 장의 연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슈 연계와 장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졌을 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의미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한국 외교는 인도-태평양 전략 등 지역 외교의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이 상정한 지역 개념은 특정 지역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바뀌는 유연한 공간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는 이슈에 따라, 이익에 따라 그 공간을 유연하게 변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 유연함을 양자 외교 및 다자외교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글로벌 중추 국가는 경성권력(hard power), 연성권력(soft power),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6~7위권의 군사력을 통해 경성권력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연성권력에서도 한

국이 가진 여러 가지 매력을 통해 새로운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상에서의 위치를 권력으로 전환하는, 위치적 권력 (positional power)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한국은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핵심적 위치 등을 통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분야에서 권력을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경성권력, 연성권력, 네트워크 권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국내적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 정치 등 국내적인 뒷받침이 불충분하다면 글로벌 중추 국가의 형성도 지속도 힘들 것이다.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정책적 연속성과 지속성, 즉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안정성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라는 시그널로 작용한다. 그러한 면에서 국내 정치와 대외정책의 연계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구성요소로 큰 중요성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의 글로벌 중견국 외교는 도덕적, 규범적 우위를 통해 다른 국가들을 변화시키는 형태로 이끌고자 했다. 그러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포함한 집행리더십 (executive leadership)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집행리더십의 실적을 쌓아나감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의 결여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성요소의 결여를 의미한다. 둘째로, 집행리더십과도 관계된 것이지만,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됨으로써 얻는 이득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득과 비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득만 생각하면 우리의 역량을 벗어난 범위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 외

교를 추진하게 될 수 있고, 비용에만 집중하면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것이다.

마무리하자면,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는 중견국 외교의 연장선에 있는 동시에 많은 변화를 이룬 개념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는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창출하기 어려우며, 다른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외교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때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 전략을 실현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 **전재성** 이승주 교수님께서서는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해 주셨다. 한국에서의 중견국 외교 개념이 미국의 단극체제가 굳건하던 20년 전 즈음부터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리더십이 변화했고 세계가 초국가적 위협에 직면한 지금은 다른 외교가 필요함을 잘 짚어주셨다고 본다. 세간에는 한국의 국력을 고려할 때, 강대국 외교 혹은 선진국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이승주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권력의 원천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력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의 틀에서 그 국력을 활용할 밑그림을 준비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 **박영준**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목표, 국정과제, 국가안보 전략서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가 정부의 국가 비전임을 표방해 왔다.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개념의 의미와 기존의 비전들과의 차이,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

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개념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제질서와 중추 국가의 위상에 관한 고민부터 시작해 보겠다. 국제질서상의 능력과 역할 기준으로는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의 구분이 존재하는데, 한국의 국력은 경제력으로도든 군사력으로도든 중견국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대외정책은 그러한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힘들며, 그동안 정치인들의 인식 역시 그 국력에 상응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간 중견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장한 국력에 맞춰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개념이 창출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글로벌 중추 국가란 무엇인가?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글로벌 중추 국가가 국제사회의 방향을 조정하고 제시하는 국가라고 여러 차례 표방한 바 있다. 또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라면, 약소국 시기의 의식을 탈피하여 세계적 맥락에서 세계를 보는 시야와 인식을 해야 대외정책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본인도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은 의식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문제의식들이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개념에 담겨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어떠한 대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적 도전을 1) 북한의 위협, 2) 미중 경쟁, 3)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안보 질서의 동요 등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 안보 질서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선 한미동맹

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여,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군사 문제를 넘어 협력의 범위를 경제, 과학기술 등을 포괄하도록 확대할 수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체제를 기존의 수레바퀴 살(hub-and-spoke) 동맹을 넘어선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의 소다자 동맹 네트워크로 확대 재편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네트워크 재편에 참가하여, 때에 따라 한미일 협력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협력국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문제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도-태평양 차원에서도, 우리가 중견국을 표방했던 시기를 지나, 보다 적극적으로 다자협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Quad, AUKUS에 참여하여 지역 질서의 불안정 해소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과학기술 차원에서 Chip 4 협력체제 등에 대한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해양 안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표방하였고, 이와 관련해 중국을 포함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노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경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국제기구 및 국제 규범 강화를 위한 외교를 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증진된 국력을 활용하여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 안보리의 기능과 역할 회복, NPT 체제의 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은 소수의 정치인 및 전문가를 넘어선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내부적으로도 사회, 언론, 교육 등을 포괄하는, 국제적인 인식을 반영한 담론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재성** 이 과제를 시작할 때,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면 세계의 모든 문제에 견해를 표방해야 하거나 실제적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나 국제사회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북한 인권 등 매우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개념 하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는 대전략에 준하는 개념이며, 그 개념을 정책 및 실행체계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중간 작업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 우리의 정책자원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어떠한 국가들과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지, 다른 글로벌 중추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지 등을 해결해야 전략의 구체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중간단계를 가이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이 필요하며, 그 원칙을 개발하는 문제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다.

● **박재적** 이 발표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입장에서 어떠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지를 고민해 보았다. 한국은 질서를 형성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질서를 수용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중견국들은 틈새 영역(niche area)에서

의 주도권을 발휘하는 것을 추구하였으나, 경성권력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에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고민에 직면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중추 국가의 개념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

중추 국가는 아직 논쟁 중인 개념이나, 그 개념과 관련해 세 가지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첫째, 중견국 중에서도 상위 중견국으로서, 질서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상 권력을 확보한 국가여야 한다. 둘째, 자국이 속한 소지역에서 최소한 지도적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각 소지역이 연계되는 네트워크에서 연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견국 개념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며,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 인도양에서는 인도, 남태평양에서는 호주, 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그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이 얼마나 다른 국가와 연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국가들의 중재적 역할은 제한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네트워크 간 연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담대한 구상 등의 전략 기조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우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 권력과 정체성, 또는 비전이 있어야 한반도 전략에서도 북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한 구상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안보, 경제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 전략 기조의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역 전략 중 하나인 인

도-태평양 전략의 공간인 인도-태평양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정체성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이루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결은 한 단계에 될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다. 첫 단계로, 우리가 스스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에 적합한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며, 그 공약을 이행하고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각 소지역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들과 중층적으로 연대하는 단계이다.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일본, 베트남, 또한 호주, 인도, 프랑스 등의 소다자 연합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 국가들과 어떻게 연대할지에 대해 지속해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글로벌 중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역할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계에 이르면,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던 지역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추진 등도 그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1단계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화하는 과정이며, 해양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포괄적 안보 이란 영역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국가들, 소지역에서 주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며, 3단계에서는 위의 국가들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더욱 높은 단계에서 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상상력을 보다 확대하여 중국과의 연대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과 브릭

스(BRICS) 간의 협력 등이 그 아이디어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전재성** 정부는 대개 5년 단위의 외교 전략을 세우고 그 이상의 시한을 세워도 5년이 지나면 바뀌려니 하는 것이 한국 외교 전략의 습성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중추 국가는 성숙한 중견국의 국력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고민, 그리고 국내적인 정치적 합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QUAD+, AUKUS+ 등을 통해 초국적 위협에 대한 대응도 포괄하나,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일 것이다. 이것은 한미, 한미일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도 연결된다. 강대국 정치를 우회할 수는 없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를 추구하더라도, 강대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대국 정치를 반대할 뿐 특정한 강대국을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 혹은 중국이 강대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 정치를 펼친다면, 우리의 전략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전수진** 기자의 입장에서, 매일의 취재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4월 프랑스 외교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관계국들의 언론인들을 초청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것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한국을 초청했다는 것이다. 일견 지리적으로는 인도-태평양과 무관해 보이는 국가들도 인도-태평양과의 관계 설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취재할 때 편집

국 내에서 가장 자주 직면하게 되는 질문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과 관련해 우리 언론은 편집국을, 더 중요하게는 독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질문을 프랑스 관계자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았을 때, 프랑스와 인도-태평양의 관계에 대해 이미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두었으며, 매우 흥미롭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이 점에서 프랑스는 그간 중견국 외교를 표방해 왔으면서,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프랑스 관계자들은 국가별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어떠한 조직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지,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질의하였으며, 이것은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수치화, 동사화, 고유명사화 등을 이미 상당 부분 진전시켜 둘 정도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향후 외국의 관계자들이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에 대해,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남북관계, 북한 등에 궁금해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논의를 통해 외국과 연대하여 어떠한 외교적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일본의 기차로부터 한국의 그 전략이 국내 정치적 상황이 바뀐 뒤에도 유지될 전략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 프랑스 기자들은 정권의 변화가 외교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외교는 정파와 관계없이 국익만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지금의 국제적 상황은 또한 일관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외교를 요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와 실행,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패트릭 크로닌** 한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관계없이, 한국은 이미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수많은 분야와 협의체에서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성공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이 결정해야 할 것은 그 국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또한 언제 그 국력의 행사를 유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특히 정부, 기업, 학계의 협력하에 어떠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인가? 한국이 그 발달한 기술력을 생성 AI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 안보, 경제 등과 관련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은 그 도전 중에 어떠한 것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대응할지가 중요할 것이다.

● **전재성**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에 대해 언급해 보자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진 것도 곧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한반도와 지역에서 치열한 외교를 전개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안보와 풍요로 이어졌다.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공유할지, 어떻게 그 인식을 확산하는 전략 및 문화를 만들어 갈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권의 변화에 따른 외교정책의 변화는 민주주의

국가가 자연히 거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정권 변화에 따른 외교정책의 변화를 보면, 틀린 외교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외교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 수렴되는 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상호 비판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여부 등 당장 중요한 현안 외에도, 장기적으로 국가들의 경쟁을 가를 문제는 무엇인지, 어떠한 의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글로벌 중추 국가에 관한 논의는 한국이 실제로 중추 국가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한국의 국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중추 국가에 해당하는 역할을 실행할 것인지의 논의로 이어져야 함.
-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 중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중점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중추 국가 전략의 요체는 한국의 이익만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 지역 등을 넘나드는 연대를 통해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임.
- 한국의 국력에 걸맞은 신뢰 및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이익을 고려하는 외교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과 역할,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글로벌 중추 국가 및 인도-태평양 전략은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서는 안되며, 그것을 실제적으로 진행할 조직의 정비와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함.
- 글로벌 중추 국가의 개념 및 전략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한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함.

다가온 초거대 AI 시대… 미래를 위한 인도-태평양 국가의 선택

한국경제 매거진

좌 장 이홍표 한경경제매거진 취재편집부장
발 표 유승재 페르소나에이아이 대표이사
이정수 플리토 대표이사
기 록 최수진 한국경제매거진 기자

이정수 플리토 대표는 인공지능 무엇이고 인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앞으로 미래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주도 말로 “제주도에 오난 어땡 하우과?”라고 물어보면 외지인들은 답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인 챗GPT를 활용해보면 “제주도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라고 번역한다. 또, “맨도롱 해수과?”라는 질문을 챗GPT에 넣어보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라고 번역해준다. 그러나, 챗GPT의 대답은 정답은 아니다. 첫 질문은 “제주도에 오니 어땡습니까”라는 뜻이고 두번째는 “따뜻한가요?”라는 의미다. 틀린 답이지만 챗GPT는 자신있게 대답한다.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 대표는 “주변의 교수들도 예전에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완전히 잘못된 것은 없었으나 요즘에는 터무니 없는 내용의 과제도 자신있게 낸다. 그러면 보통 생성형 AI를 썼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정말 자신있게 말하지만, 근접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그래

서 업계에서는 언어의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경우 저장된 정보만 활용한다. 특정 질문에 정확한 정보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제한된 정보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역시 의심해야 한다. 기계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답은 아니다. 이 대표는 “사람들은 꿏고 있는 냄비가 뜨겁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라며 “만져봤기 때문에 안다. 인풋과 아웃풋을 받고 중간에 그런기능을 만들어냈다. 그걸 그대로 적용시킨 게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비유했다.

언어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모호성 탓이다. 언어에는 인간의 표정과 상황 등이 반영돼야 한다. 인공지능 업계는 언어의 모호성을 지금까지 해독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속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에

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환각효과’다. 잘못된 정보를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제한된 정보로 문제가 발생한다. 챗GPT는 학습된 언어 데이터가 570GB(기가바이트)다. 영상 하나의 용량이 10GB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 50개 수준이다. 영상으로 따지면 크지 않지만 텍스트 기반으로 따지면 학습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적은 데이터로 유추가 가능한가 물어본다면, 불가능하다. 정보가 많이 없으면 답이 맞는 경우보다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인간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기계는 잘한다. 어떤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자동번역기는 번역 과정에서 잘못된 번역이 생길 수 있다. 똑같은 문장을 아무런 정보 주지 않고 생성형 AI에서 번역한다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번역이 도출된다. 그 이유는 특정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까지 활용해 일반 번역보다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이 실수하듯이 제한된 정보로 결과를 내면 기계도 똑같은 실수를 한다. 번역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너러티브 ai를 활용할 땐 상황을 더 주는 게 중요하다.

생성형 ai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좋은 명령값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IT업계는 10년 단위로 변화하고 있다. 10년 전, 포털이 관심을 받았다면 2023년의 화두는 AI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마케팅도 심화하고 있다.

챗GPT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업계는 챗GPT를 활용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내면서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비슷한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이다. 그래서 기업 만의 차별화된 기술, 노하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와 차별화된 기술을 합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지금 스타트업과 관련 기업, 나아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생성형 ai의 미래는 사람이 결정한다”라며 “생성형 AI는 보안에 취약하다. 우리가 쓰는 것은 전부 다 그걸 만든 회사에 노출될 거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우리의 데이터가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긍정적 미래도 있겠지만 사용하는 것에 있어 조심해야 하고 긴장해야 한다. 결국 만든 것도 사람이고 쓰는 것도 사람이다.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미래는 밝을 거다”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승재 페르소나에이아이 대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유 대표는 “한 교수님께서 말과 사람이 경주하는 것에 비교하더라”라며 “사람과 말이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 라고 묻는다. 말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을 올라타야 한다. 결국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되면서 검색과 챗의 경쟁이 시작됐다. 포털에서 “제주 포럼에 가는 길이 어디야”라고 검색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한 400개 이상 나온다. 거기서 인간이 가장 근접한 정답을 찾아야 한다. 반면 챗GPT는 바로 원하는 답을 찾아준다.

인공지능 시장은 인식의 AI와 생성의 AI 싸움이 시작된 상태다. 인식을보다 생성물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답이 현답일까?라는 질문도 나온다. 챗GPT는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만, 굉장한 환각효과가 있다.

틀린 정보들 많이 말한다. 완전 말이 안 되는 답은 인간이 보면 틀렸다고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럴싸하게 답하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잘못 사용한다면 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AI가 정확한 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현명한 답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하다.

인간은 말을 통해 설명한다. 말은 지식에서 나온다. 인공지능은 기술적인 지식에서 답을 내놓는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보다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기업들에게 AI를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이게 AI가 맞냐는 질문이 나온다.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한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술이 나오는 시기다. 그런 면에서 챗GPT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인공지능도 말로 설명해야 한다. 소피아 로봇은 말로 인간과 교류한다. 무인 자동차 역시 말로 한다. 시대 발전할수록 인간과 교류하는 것은 말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AI는 결국 대화형 AI가 될 것이다. '자연어 처리'가 중요한 이유다. 자연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모든 말을 뜻한다. 자연어 처리를 위한 기술은 바로 nlu와 nlg다. 자연어 인식과 자연어 생성을 뜻한다. nlp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인공지능 스피커, 챗봇, 키오스크 등이다. 이런 서비스 만드는 게 과거에는 어려웠다. 인식을 떨어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말이 어렵기 때문이다. 띄어쓰기 하나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이 챗GPT다. 챗GPT는 자연어 생성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예시 문장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챗GPT의 약점도 있다. △가짜데이터 편향 △데이터 부족 △보안문제 발생 △약 1만2000줄 질문 제한 등 4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기업들

도 챗GPT 도입은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로 쉽게 도입하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소비다. 생성형 AI는 인프라 유지에 4억원 수준의 소비를 한다. 서버 비용만 4억원이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 비용이 크게 늘어 한달에 9억원을 사용한다고 한다. 방대한 파라미터 수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한다. 소비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럼에도 초거대 AI를 선점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간 경쟁이 아닌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하고 있어서다. 많은 국가들이 초거대 AI 고민하고 있으나 이를 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한국은 할 수 있다.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챗GPT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챗GPT가 멈추면 한국 서비스가 다 멈출 수 있다. 챗GPT 사용도 좋지만,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저작권 이슈와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맞는 국가 전략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AI 시대에 기업이 해야 할 고민
- AI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전략
- AI 시대에 우려해야 할 부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와의 협력 전략 모색



좌 장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 표 김동석 국립외교원 아중동연구부 부교수
토 론 송영훈 강원대학교 교수
조준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선임연구원
하윤빈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기 록 우영아 북경대학교

● **김동석** 본 세션에서는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와의 협력 전략과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이 어떤 가치가 있고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우선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구성 국가는 인도양에 면한 대륙 국가와 인도양 도서 국가를 포함한다. 대륙 국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 케냐, 소말리아(IORA 회원국), 에티오피아, 지부티, 에리트레아, 수단 등이 있고, 도서 국가로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가 있다.

인도양 연안의 가치로는 주요 에너지 및 물류 수송의 해상 요충지이며 중부 내륙 및 서부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진출 관문이라 말할 수 있다.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 지역이기에 이 지역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정치적 가치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이 위치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RICS 및 G20 회원국이며 민주화, 흑백 화해 경험에 기반한 화해, 공존 모델을 제공하는 아프리카 역내 강국이며, 케냐는 아프리카 연합(AU) 및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지도국으로 역내 경제통합 및 분쟁 해결을 주도하는 나라이다.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본부가 위치해 있고, 비동맹권에서 강한 위상이 있으며 정치적 안정 및 연방제의 모델을 제공한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연합(AU) 본부가 위치해있어 아프리카 외교 중심지이다.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전체 GDP의 약 20%,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공, 케냐, 에티오피아는 다양한 산업의 발달했고 고등 교육을 받은 젊은 인구들이 많으며, 모리셔스, 세이셸, 탄자니아 등은 해안가에 위치해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가 본격화되어 시장 확대 등의 경제적 가치가 예상된다. 또한 식민 지배, 탈식민 이후 전쟁, 저발전과 같은 유사한 역사적 경로를 걸어온 한국과 정서적 유대감을 지니고 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한국의 경제발전 및 민주화 성취를 높게 평가하며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정책으로 중국, 미국, 인도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BRI)의 핵심인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 경제적 진출과 더불어 군사·안보적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가속화로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케냐 등과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소말리아에 드론 공격을 전개하고 디에고가르시아섬에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안보 집중에서 벗어나 원조, 무역, 투자 증대 및 부채 탕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는 차별화되게 민주주의 증진, 거버넌스 개선, 민간 경제 영역 강화, 인적자원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정서적, 이념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남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케냐, 남아공, 모리셔스 등에 다수의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거주하고 있으며, 식민 지배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인도양 아프리카와 경제교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을 견제하며 모리셔스, 세이셸, 마다가스카르에 군사 기지 건설도 추진중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 후발주자로 경제교류 및 개발 협력 증진에 초점을 맞추며 주요 국가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남아공, 케냐 등은 아프리카 내 주요 무역 및 투자국으로,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는 중점협력국 및 한국 ODA 주요 수혜국으로, 다른 다수의 국가에서는 보건, 교육, IT, 농업 등 분야 개발 협

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한 인적교류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정상 순방국으로 인도양 연안 국가(남아공, 케냐, 에티오피아) 혹은 이들 국가와 인접한 국가(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가 있었고 2024년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 개최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의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전략으로 현지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진행해야 하며,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국가들과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현지 인사와 소통하며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경제교류, 개발 협력을 넘어 안보, 거버넌스,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문화 등으로 관심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고위급 정부 인사교류와 더불어 공무원, 유학생, 예술인 등 민간교류 활성화, 학계, 기업, 교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기구와의 협력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구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기구를 통해 당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 전체를 회원국으로 둔 아프리카 연합(AU)과의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 셋째, 안보 협력 증진을 통한 역내 평화 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 정세 불안에 대처하는 지역 기구에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양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 해군과의 교류 증진을 통한 해군력 강화 지원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관련 협력 확대인 해양 생물자원 개발 및 연구, 해양 에너지 발굴 및 이용, 해양 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 오염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해양 협력 강

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역내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식량 및 물 부족 해결 등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거버넌스 협력 증진을 통한 역내 자유, 평화 기여 및 문화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 이해 및 신뢰 구축 등이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와의 협력 전략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략과 유사할 수 있다. 개발협력, 거버넌스 개선, 안보 협력 등 대아프리카 전략에 적용이 가능하며 해양 협력 분야도 대서양에 면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적용 가능하기에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특색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단결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서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등 다른 소지역을 소외시킨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계기로 아프리카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 대한 세부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전략 수립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를 강화한 상태에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 **송영훈**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 한 부분으로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국가가 왜 특별한지 정부의 설득력 있는 추가 근거들이 필요하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국가들이 단지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관계는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재정 투입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닌 기술이나 안보, 문화협력 등으로 어젠다를 모으며, 방향성을 조정하는 사전정지 작업이 외교부 및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아프리카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적다 보니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신경을 덜 썼던 부분은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가장 필요하지 아닐까? 자연재해는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재해피해를 입고 난 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복되기 전 또 다른 재해를 입게 된다면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재해가 발생될 때 얼마큼 견딜 수 있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된다면 도로건설, 광물자원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국가들의 전략과는 다른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장기적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준화**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양성을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국가들을 나눠서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 공감한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실용적 측면에서 제시해 주신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토론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접근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8년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인도의 동쪽에서부터 태평양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아프리카 지역의 인도양 연안까지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되는 국가들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전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 발전시킬 것이라 발표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아세안 국가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액션플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도양 국가들이 왜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될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만 묶일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니기에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고려해 이원적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현재 인도양 연안 국가들 간의 지역 다자협의체인 환인도양연합(IORA)이 1997년 인도와 남아공 주도로 출범하였고, 2022년 23개의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2018년도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으로 가입을 한 상황이며 2020년 1차 한-환인도양연합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올해도 개최 예정 중이다. 이와 같이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국가에 청색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 등 특정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어 환인도양연합을 통해 어젠다로 분류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합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선 협력분야에 대해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어젠다가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양 아프리카 국가들을 외부세력이 어떻게 어젠다를 주면서 만들어 나갈 것에 대한 논제만 있지 인도양에 해당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젠다를 먼저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양 아프리카 국가들은 환인도양연합을 통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지만 첨예하게 국익을 다룰 수 있는 분야에서는 양자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양의 군사요충지로 쓰이고 있는 차고스 제도 같은 경우,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미국의 군사요충지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며 케냐, 에티오피아와 같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도 미국과 양자관계가 큰 힘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프리카 외교적 패턴은 새로운 패턴이 아니다. 1955년 반동회의 패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라고 하는 반동회의에서 기본적 가치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아프리카 국가나 아시아 국가들은 본인의 국익을 실질적으로 더욱 추진해 나갔다는 사실을 역사적 패턴에서 상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와의 협력 전략을 시도할 때도 공유된 플랫폼을 통해 접근하기보다 각 국가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협력분야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문화협력이라고 생각한다. 코이카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에 박물관을 설립해 준 적이 있었는데 관광 관련 건물 및 지역 보수 협력이 단기적으로는 실질적 이익으로 다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교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분야라고 생각한다.

● **하윤빈** 우선 우리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리적 범주와 협력 대상은 인도양 연안과 아프리카까지 확장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적혀있다. 개인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내어놓은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사료된다. 지역적 대상과 협력적 파트너는 다룰 수 있기에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만 포함되고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외교전략의 큰 틀 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라보고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서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것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공간을 다시 재구성해 봐야 한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은 아베 전 총리로부터 도입되었고 트럼프 정부 당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을 언급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을 배제시키는 형태의 외교전략을 의미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파트너로 함께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일대일로뿐만 아니라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미국의 아프리카와의 관계 재정립, 바르칸 작전에서 프랑스 군대가 철수하는 상황 등이 일어나고 있는 각축장이기도 하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영토의 변경은 아프리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흑해 곡물 협정, 내부적인 기근 등의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을 시킬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한국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기여를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회성이 아닌 정례화로, 또 정례화를 통해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아프리카 현지 사람들은 개발협력 이상의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다. 이런 부문에 있어 아프리카 지역을 원조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고 아프리카 국가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 **김동석** 재난 대응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고 가뭄,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프라 손실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프리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개별 국가와의 소통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 협력으로 콩고 민주공화국 박물관 건립은 국가적 행사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좋은 장소로 쓰이고 있으며 현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종족 아이덴티티가 다양하고 그로 인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셔널 아이덴티티 형성이 중요한데 박물관 사례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문화 교류라는 것은 쌍방의 교류를 의미하는데 우리도 아프리카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원빈** 아프리카는 다양한 국가가 모여 있는 지역이다. 오늘 논의를 통해 아프리카의 모든 면을 볼 수는 없지만 왜 아프리카가 한국에 중요한지에 대해 논할 수 있었다. 사실 한국이 아프리카에 더 중요할 수 있다. 제주도의 4·3, 식민지 지배 등의 아픔, 예멘 난민 문제, 환경 문제 등은 아프리카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이슈들로 주제를 잡고 전문가들을 섭외해 세션을 진행하는 것이 제주포럼이 국제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 내년의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잘 개최되고 제주도와 아프리카 또한 연결이 되어 많은 이벤트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프로젝트를 희망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다.

● **하윤빈**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 정산 문제 등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정부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대상 지역에는 동남아도 있지만 아프리카 비율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불보증이 당연하겠지만 과연 지자체에서 그러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다. 기업이 진출하면 좋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기업이 진출하면 좋은 걸까? 개발협력을 하는데 꼭 우리의 경제적 이득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랜 경험으로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는지 본능적으로 잘 안다. 공적 자금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진출하면 좋은 것이지 않느냐고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할 때 협력 목적 자체가 기업이 진출을 하는 것이나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것일까? 우리의 세금을 특정 기업들이 진출하는 곳에 쓰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Q & A

Q. 청중

아프리카가 54개 국가가 있고, 그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20여 개의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이카나 코트라 사무실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관심이 생겨도 실질적인 교류를 갖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주시길 원한다. 또한 에너지 관련 협력을 진행하려고 보니 부족한 전력을 자기네 지역에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아 보였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 나름의 노하우나 도움이 축적되어 있고 한국의 민간 기업에서도 저희의 국제 교육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출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서는 지불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 측은 1000억 이상 규모의

● **송영훈**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춘천이 사회적 기업과 베트남의 탄소저감 기술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00억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면 파일럿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기업에서 1억 달러 정도의 프로젝트 먼저 만들고 베트남에 적용해 본 후 3억짜리 사업을 해본 다음 기술을 만드는 식으로 점점 큰 프로젝트로 옮겨가고 있다. 1000억짜리 프로젝트는 실험 모델로 쓸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불보증을

해주면 좋겠지만 큰 금액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 **조준화** 에너지라는 것은 룡팀으로 깊게 가지고 가야 하는데 기업들이 프론티어 정신이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의 광물 자원들은 이미 다른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나라들이 관심이 없는 부분이거나 폐광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도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은 주요 에너지 및 물류 수송의 요충지이며 중부 내륙 및 서부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진출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에 이 지역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음.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략과 유사할 수 있기에 현지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진행해야 하며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국가들과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
-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급 정부 인사교류와 더불어 민간교류 활성화, 학계, 기업, 교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 장기적인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 인력 양성이 필요함
- 안보 협력 증진을 통한 역내 평화 구축 기여를 지속하고 청해부대 파병을 통한 해적 문제 해결에 기여,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 정세 불안에 대처하는 지역 기구에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블루 이코노미 관련 협력 확대 방안으로 해양 생물자원 개발 및 연구, 해양 에너지 발굴 및 이용, 해양 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 오염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해양 협력 강화가 필요함.

청년,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격려사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좌장 강동렬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간사
발표 재비어 로케 맥머레이-페르도 XP Ventures, OPC 대표 / UN SDSN Youth 상임이사
토론 양가윤 SDSN Youth Korea 주임 퍼실리테이터
이영현 SDSN Youth Korea 책임 퍼실리테이터
김민희 브로컬리연구소 대표

● **김성중**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할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어 무척 기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이 모여 만장일치로 채택한 인류 공동의 약속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시행했고, 우리 제주도도 지난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조례에 따라서 현재 20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논의하며, 제주의 미래전략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취업과 주거 불안, 기후 위기 등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고자 각자 느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수많은 제안들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튼튼

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제주 그리고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빛나는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강동렬** 올해 제주포럼의 대주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인데, 시의적절하고 잘 짜여 있다는 인식을 받았다. 왜냐하면 SDGs는 17가지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인권, 빈곤, 환경, 물, 에너지, 평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아우른다. 이 목표들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심지어 북한마저도 채택에 동의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프로토콜이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각 권역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UN과 별개

의 조직인 G20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강화하자는데 동의했다. 전체 포럼의 대주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 왜 통찰력이 있고, 시의적절한가에 대해 올해 이와 관련된 회의들이 전부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여기에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함께하는 청년 활동가 및 청년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공간에 와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다채로운 제주를 만들 기회라고 생각한다.

UN은 1, 2차 세계대전,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는 평화와 군축의 취지에서 생겨났다. UN은 전후 황폐해진 지역들을 회복시키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나 여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해 왔다.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경제적 부를 쌓는데만 집중하다 보니 환경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고려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평화, 경제, 사회, 환경의 순서로 의제들이 축적이 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탄생되었다. 이것은 UN 또는 서구권에서만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의 지원을 받았고, 해방 이후에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시대정신을 갖게 되는 시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휴전이 고착화되면서 소득 수준을 올리는 경제 성장에 주요 의제가 형성되었다. 경제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권리를 챙기지 못했고, 거버넌스가 독재적으로 더 이상 민주주의의 영역을 집행하지 못하자, 사람들의 권익, 즉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회의식이 형성되었고, 민주 정부가 만들어졌다. 이후 경제적 성장 상황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환경적

인 관계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UN에서 SDGs가 나오게 되는 과정의 흐름이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것이다. 스스로 지나온 역사 속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내가, 내 지역, 내 나라를 더 낫게 그리고 내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야겠구나라고 SDGs에 대해 생각하면 된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서 나온 정의를 보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발전이 UN의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이다. 이것은 1987년에 나온 보고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DGs는 28년이 지나서야 주목받아 늦었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것이 MGoS(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라는 것이다. UN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감독자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에서 MGoS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계, 청년, 장애인, 봉사자, 노인 등 다양한 사람이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다. 한국형 SDGs를 만드는 작업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 K-MGoS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이다. 국가 MGoS를 만드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그 뒤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MGoS를 구성하여 국제적 기준에 준해서 수립한다면 혁신적인 지도 사례로 남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88개의 개발도상국 NGO들과 함께 실제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국가

또는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문하고, 다양한 논의 및 소수 민족의 의견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도에서도 SDGs 계획을 세울 때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후시계(Climate Clock)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내 주는 시계이다. 지난달 기준 6년 69일이라고 적혀있다. 1.5도 상승하는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탄소 축적 저장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어느 정도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지만, 그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기술이나 노력으로는 변화를 억제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6년이라는 시간 후에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라는 또 다른 시계가 있다. 이것은 기후위기와 안보위기를 합쳐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이다. 인류 멸망 시점을 자정으로 놓고 자정까지 90초가 남아있다. 작년에 100초가 남아 있었고, 재작년에는 110초 남아 있었다. 1년에 10초가 지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안보, 기후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봤을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9년밖에 남지 않았다. 청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기 바란다.

● **재비어 로케 맥머레이-페르도** SDGs를 위한 청년 거버넌스에 관해 발표하고자 한다. 필리핀에서 청년 거버넌스 또는 정부 및 개발에 대한 청년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이정표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SDGs는 매우 포괄적인 의제이다.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 23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각 계층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모든 사람의 포부가 실현되고, 모든 사람의 꿈이 세계 각국의 정부와 인류 전체에 의해 실현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의제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SDGs는 상호의존적이다. SDGs는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 232개의 지표와 함께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SDGs는 포용적이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SDGs의 슬로건을 항상 듣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는 믿음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DGs는 야심 찬 목표이다. 우리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며,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세 가지 구성요소는 젊은이들의 거버넌스를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SDGs는 상호의존적이고 포용적이며 야심찬 목표이다. 이와 함께 솔루션은 상호의존적이며 야심차며 포용적이어야 한다. 상호의존적이며 야심차고 포용적인 해결책 없이는 SDGs를 실현할 수 없다.

필리핀에서 청년 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분야 또는 다섯 가지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가지는 제도이다. 두 번째는, 필리핀의 청년 인구이다. 세 번째는 청년 및 국가 건설에 관한 공화국법인 RA 8044 또는 청년 참여를 제도화하는 법률이다. 네 번째 RA 11768 또는 Sangguniang 개혁법으로 알려진 법률이며 마지막으로 각계각층에 존재하는 청년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에서 청년 거버넌스를 매우 중요하

게 만드는 것은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기관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47,000개가 넘는 청년 위원회가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필리핀에는 국가 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된 총 1,200개의 공인 청년 단체와 50,000개의 비공인 청년 단체가 있다. 실제로 젊은 층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970년대부터 필리핀에서는 청소년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과 시민사회로부터의 대표성으로 인해, Sangguniang Kabataan(SK)과 같은 청년 거버넌스 기구를 창설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두 번째, 필리핀에서 청년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인구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33%가 청년층에 해당하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년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 대표성의 핵심이다. 필리핀에서 선거를 관찰하면 대부분의 광고나 미디어 중심에 청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젊은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젊은이들은 실제로 정부나 입법에서 대표권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청년을 위한 법안 중 하나인 “Republic Act 8044”에 참여하는 청년 중에 하나이다. 이 법이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이유는 청년들이 실제로 독재자를 무너뜨린 인민 권력 혁명 또는 스페인과 미국인에 대항한 필리핀 혁명에 대한 청년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은 실제로 국가 건설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여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과 함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법률 입법 과정에서의 청년들의 참여와 여러 절차는 필리핀 청년들에게 좋은 훈련장이자 출발점이었다. 청년들의 인식과 청년 참여 기구의 창설로 인해 더 많은 시민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청년 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좋은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번째, 청년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법률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Republic Act 11768”라는 법률은 Sangguniang Kabataan(SK)과 지역청년 위원회를 더욱 강화하였다. SK는 자체 자금을 지출하고 배분할 수 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SK는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었다. 또한 시민사회와 정부는 SK가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육, 개발 및 연구가 핵심요소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흥미, 그들이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법, SK에서 그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SDGs는 그들의 만든 의제와 프로젝트가 연결되는 것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시민사회가 사회 각계각층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많은 청년 인구와 제도화를 위한 청년들의 투쟁으로 인해 정부기관은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대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속가능성은 청년 대표를 통해 유지된다.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청년들의 대표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을 기반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청년 시민단체가 발전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었다. 이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 거버넌스, 시민사회 거버넌스, 국제 시민사회에 우리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필리핀 청년 거버넌스의 특징이다. 청년을 위한 법률 제정은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청년단체들도 변화를 위해 법제화

등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조직(SDSN Youth / Ysn)이 필리핀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다.

2015년부터 청년들은 성과 생식보건권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 생식건강과 가족 계획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투쟁은 힘들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지금 필리핀에서는 어린 여성들이 가족을 가질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인권이 사회의 중요한 측면이 아니었던 과거 행정에서 우리는 싸웠고, 청년들은 그들이 가진 권리를 알고 보장받도록 전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인권 작업을 수행하는 청년 조직으로 인정받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좌석을 얻게 되었다.

다음은 청소년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Sangguniang Kabataan(SK) 혹은 지역청년위원회의 발전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SDSN Youth에서는 청년들이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보장하였고,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주장을 전진시킬 수 있는 도구, 기술, 지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있다. 각기 다른 청년 단체들은 서로를 지원한다. 우리는 실제로 다른 지역사회의 청년 이니셔티브에 자금 지원하기도 했다. 우리가 지원한 천산갑 보호 및 혁신이 팔라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청년들에게 도구, 기술, 지식이 주어진다면 그들이 가진 열정과 에너지로 해낼 수 있다. 청년은 혁명을 만들고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 **김민희** 저는 이 자리에 제주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청년으로서 진심으로 제주의 지속 가능

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앞으로 제주에서 만들어질 L-SDGs인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데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제주의 지역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저를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여성, 청년 사업가, 기후위기활동가, 농업인, 4가지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각각의 키워드를 SDGs와 연결하면, SDGs 2 Zero hunger, SDGs 5 gender equality, SDGs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SDGs 13 Climate Action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제주에서 이 목표에 속한 지역구성원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었다. SDGs 2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침체,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변화와 기후적응 문제, 농촌과 농업의 고령화, 제주 지리적 특성상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 SDGs 5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인 제주이지만, 여성농업인 권익 한계 문제와 여성 정치적 참여 및 리더십 확대 필요성, SDGs 8에서는 제주내 청년실업문제 심화, 서귀포시-제주시 등 지역 간 경제 및 고용격차, 타지에 비해 낮은 임금과 노동환경, SDGs 13에서는 국내 최남단 제주가 부딪치는 기후위기,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물종 멸종위기,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심화와 적응력 강화, 교육문제, 카본프리 아일랜드 변화되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이슈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제주에 부딪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2020년 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각 지방 또한 K-SDGs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SDGs를 수립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발행한 L-SDGs수립을 위한 이행매뉴얼을 보면 다

음과 같은 작성원칙이 있다. 앞서 다양한 SDGs 목표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마주한 현실을 설명한 이유는 4가지 작성 원칙 중 원칙 4번,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형 방식에 의한 작성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기 때문이다.

L-SDGs계획 수립 및 추진 전략의 핵심은 중점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한 목표의 취지 및 지역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기업, 환경/시민단체, 행정 등 지역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L-SDGs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 경기, 광주, 수원시, 충남 당진시 등 기본전략을 수립한 각 지역 전략을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한계를 그들이 발행한 자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제주 또한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L-MGoS(이해관계자 그룹)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L-MGoS를 제주에 맞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야 하고, 확실하게 그들의 역할을 부여하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행관리와 의견 수렴이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L-MGoS 의사반영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공개적인 토론, 워크숍,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처럼 SDGs 수립 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도록 정책문서,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을 제공하는 공개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해 그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청년 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SDGs 관련 청년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활동하는 제주 청년정책협의체에 분과 혹은 TF팀을 구성하는 방식 등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여 청년들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단순한 정책사업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해야 할 리더들과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부족한 상황임을 보았다.

이번 기본전략 수립이 단순한 정치적·상징적 선언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기본전략 수립이 많은 L-MGoS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이고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제주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선도하길 바란다.

● **양가윤**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한다. 제주 4·3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4월 3일, 조례시간이었다. 4월 3일을 맞아 학교에서는 ‘송아지’라는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았다. ‘송아지’는 4·3

당시 피신하는 가족의 이별을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가 송아지에게 돌을 던지며 다가오지 말라고 서럽게 소리치는 모습에 저 또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제주 4·3을 알게 되어 마음이 너무도 아프다고 말을 했더니, 아버지는 제주 4·3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의 할머니 또한 제주 4·3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고 말하였다.

이날부터 4월 3일은 따스하기만 한 봄날이 아니었고, 제주도는 아름답기만 한 고향이 아니었다. 제주 4·3을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여러 책과 신문 기사를 읽으며 4·3의 진상과 현재 상황을 공부했다. 민간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희생된 역사, 약 반세기 동안 철저히 은폐 당한 역사,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역사가 바로 제주 4·3이었다.

어느 날 육지에서 전학 온 친구가 순수한 표정으로 “4·3이 뭐야?”라고 물었다. 제가 제주도에서 꾸준히 4·3에 대해 접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제주 외 지역에서는 이름조차 모르는 역사라는 점에 적잖이 놀랐다. 인식 변화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SNS를 이용하여 “당신의 4·3을 보여주세요” 라는 챌린지를 기획하였다. 해당 챌린지는 전국으로 퍼져 약 600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챌린지 덕에 무심코 지나칠 뻔한 날을 기억하였다는 후기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 4·3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의 역사이다. 과거의 은폐와 왜곡은 현재의 부족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현재의 우리는 제주 4·3을 올바르게 대하여, 미래에는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

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17개의 UN SDGs 중에서도 제주 4·3은 특히 16번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과 관련이 깊다. 평화와 정의, 제도 없이는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 지속 가능한 환경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SDG 16번은 다른 목표들의 필요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평화와 정의, 제도 구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주 4·3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우선 제주 4·3은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역사이다.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제주의 공동체는 소리소문도 없이 파괴되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평화를 잃었다.

이후에도 제주 4·3은 침묵을 강요받았다. 국가보안법과 연좌제 등의 억압하에 4·3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소설 ‘순이삼촌’은 제주 4·3의 참혹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뤘고, 제주 지역의 학생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함께 모였다. 언론에서는 “4·3의 증언”을 연재하며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렇게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낸 결과, 제주 4·3은 제도 구축으로 이어졌다.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 4·3의 진상 규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4·3 생존수형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며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제주 4·3은 지금까지 SDGs 16번, 평화, 정의와 제도구축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청년의 역할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주 4·3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주 4·3의 진실이 더 널리, 더 올바르게 퍼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한다.

저는 올해 4월 3일, 제주 청년들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제주 4·3을 공개적으로 기리는 모습을 보았다. 제주 4·3을 기억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며, 제주 청년들이 이 역사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각자의 공유가 모여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주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주 4·3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 제주 4·3은 제주도만의, 혹은 대한민국만의 역사가 아니라, 당시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의 갈등 하에 빚어진 희생이었다. 그렇기에 제주 4·3의 진실과 그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여야 한다.

2019년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서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과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하였다. 공원을 함께 둘러보며 캐나다 친구들에게 제주 4·3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동백꽃 배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러자 친구들은 캐나다에서도 빨간 꽃 배지를 달고 세계 대전의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날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서로의 역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한 국가의 아픔이 그 나라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제주 4·3은 비극적인 아픔만 있는 역사가 아니다. 제주 4·3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역사가 담긴 제주 4·3 기

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이는 4·3의 세계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제주 4·3이 전 세계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또 다른 비극의 재발을 막고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추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 4·3의 교훈은 현재에도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는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남의 일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4·3의 아픔과 평화의 가치를 알고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동일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감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처럼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4·3 정신의 계승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청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가 제주 4·3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세계화하며 교훈을 실현할 때에만 제주도의 진정한 평화와 정의 그리고 제도 구축이 이뤄질 것이다. 앞으로 제주 4·3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청년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또한 제주 4·3의 정신이 제주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 **이영현** 유엔은 17가지 SDGs 를 내세워 경제, 사회, 환경 세 측면의 균형 이룬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 중 4번 목표는 'Quality Education'으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두

고 있다. 양질의 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발판이며, 지속가능발전과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근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번 목표의 7번 타깃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다.

유엔은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촉진해 왔으며, 제주도 또한 국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의 확대 및 강화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유네스코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약칭 ESD는 “국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 역량, 가치관 등에 대한 교육”으로 유네스코는 모든 연령층에 해당 기회를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를 위해 정부, 교육기관 등이 ESD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 및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ESD의 전 세계적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ESD for 2030 toolbox와 같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작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앞서 언급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다음 다섯 가지의 영역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 영역은 정책 개선, 학습 환경 변혁, 교육자 역량 구축, 청년의 권한 부여와 참여, 지역 수준의 실천 가속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네스코는 5~10년 단위의 운영 체계를 발표해 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 체계였던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램(GAP)”에 이어, 현재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운영 체계인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을 발표하여 30년까지의 ESD 확산 및 강화 계획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은 2030년까지의 ESD 전략적 목표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의 활동 계획, 관련 이해관계자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역할이며,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수립에 있어서 해당 운영 체계를 참고함으로써 이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어서 세계시민교육, 약칭 GCED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겠다. GCED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태도 및 행동을 다루는 교육이다. 창의성, 혁신, 평화에 대한 헌신, 인권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주제는 1. 교육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2. 홀로코스트, 대학살에 대한 교육, 3. 교육에서의 언어, 4. 국제적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법의 지배 촉진이 있다. 이와 같이 UNESCO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교육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과 세계시민교육은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결성을 고려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도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현황은 상대적으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에 가입된 학교 수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코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글로벌 네트워크로, 해당 네트워크에 가입된 교육기관들은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활동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제주도 내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 가입 학교는 2021년 기준 18개교로, 서울시의 가입 수인 81개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서울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대략 185,000명, 제주도의 재학생 수가 86,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 협동학교 1개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대략 2,300명, 제주도 협동학교 1개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4,800명으로, 2배 이상의 수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도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확대 및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의 강화는 도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도내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그 토대가 될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 확대 및 강화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적, 목표 집단, 내용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그 목적으로 “도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이해 확대를 목표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을 참고하여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목표 집단인 “학습자(도내 중고등학생), 교육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를 분명히 하여 각 이해관계자별 확대 및 강화 방안을 구분해 구체화하며, 교육의 질, 접근성, 거버넌스 세 측면의 향상을 목표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 분야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큰 두 이해관계자,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 학습자,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확대 및 강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이수 단위를 설정해 해당 단위만큼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간 최소한의 비율을 설정해 두어야 하며, 학습 기관 성과 평가에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해 해당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교육자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함을 고려해, 교육자들의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또한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사의 연수 및 평가에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역량 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서울시에 위치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역량 강화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또한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부문 정책 입안자, 교육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내 위치한 유엔훈련조사연구소 제주국제연수센터, 유니타르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니타르에서 실행 중에 있는 워크숍 및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도내 정책 입안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유니타르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높여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 유니타르(UNITAR)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도내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내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의식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하고, 온라인 무료 강의를 제공하여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도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습자, 교육자,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이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계획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 거버넌스를 탄탄히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즉,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합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기구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의 두 교육 이행 현황 지표,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SDG 4.7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습자, 교육자,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구분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서도 대상별 목표 및 평가 지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목표 집단별 교육 확대 및 강화,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를 확실히 하여 양질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이 도민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관련 이행 계획이 구체화되어, 제주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보탬이 됨을 바라며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제주-MGoS 그룹 구성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이행-모니터링 시 의견 청취
- 청년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법제화 및 제도 마련
- 청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협의체 구성
-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제주 4·3의 반영
-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의 교육 확대 및 강화